



2022.12.31.

국회미래연구원 | 연구보고서 | 22-05호

전환기 청년의 미래

이상직·민보경·이채정·김동규·김미선·노법래·백광렬
사사노미사에·조해인·조소연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전환기 청년의 미래

연구진

내부연구진

이상직 부연구위원(연구책임)

민보경 부연구위원

이채정 부연구위원

외부연구진

김동규(미국 텍사스대학교-리오그란데밸리 교수)

김미선(미국 텍사스대학교-리오그란데밸리 교수)

노법래(세명대학교 교수)

백광렬(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사사노미사에(일본 이바라키대학교 강사)

조해인(녹색기술센터 박사후연구원)

조소연(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발 | 간 | 사

이 보고서는 청년 문제를 비교의 관점에서 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이 연구가 강조하듯이 '청년 문제'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청년의 '이행 지연'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만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도 한 특징입니다. 변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어 역동성이 강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려면 비교의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청년의 미래'를 그려보는 작업은 이러한 비교론적 시각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나 문제를 상대적 견지에서 다루려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역사적으로나 비교사회적 시각으로 한국의 청년 문제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청년이 특정한 가치나 인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전제를 두지 않고, 이들의 삶의 조건과 방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보고서의 각 장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는 이상직 부연구위원의 총괄 아래 내부 연구진으로 민보경, 이채정 부연구위원이, 외부 연구진으로 김동규, 김미선, 노법래, 백광렬, 사사노미사에, 조해인 박사와 조소연 대학원생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연구원의 김용희, 이종혁 연구행정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맡아 주셨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보고서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명문인쇄공사의 김영미 주임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청년기를 무엇을 이루기 위한 준비기로서가 아닌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를 갖는 시기로 봐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연구가 청년 연구를 확장해 나갈 때에 단서를 제시하고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고민할 때에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현 곤

서론: 청년 문제를 상대화하기(이상직)	1
제1절 문제 의식	3
제2절 연구 구성	6

제1부 역사적 위치

제1장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변화와 청년 문제의 등장(이상직) ..	11
제1절 근대적 라이프코스과 청년기	13
제2절 라이프코스의 제도화와 성인기 이행 규범 형성	15
1.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형성	15
2. 연령 규범과 계획하는 주체의 등장	18
제3절 라이프코스의 재제도화와 성인기 이행 규범 변화	21
1. 라이프코스 구조의 탈표준화	21
2. 생애 규범의 변화	22
제4절 청년 문제의 등장	25
제2장 청년 개념의 기원과 변천(백광렬)	27
제1절 개념사적 검토의 의의	29

제2절 연구 방법과 자료	32
1. 텍스트 마이닝 분석	32
2. 분석 시기와 자료	34
3. 분석 절차	37
제3절 청년 용어 빈도 분석	39
1. 전체 기사 속의 청년 용어	39
2. 지면 종별 청년 용어	41
제4절 단어 관계 분석	43
1. 기사 제목 분석	43
2. 본문 분석	52
제5절 ‘사회’ 현상에서 ‘문화’ 현상으로	59
제3장 청년 담론의 구조(이상직·조해인)	63
제1절 2000년대의 청년 담론	65
제2절 분석 방법	67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67
2.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68
제3절 청년 용어의 시기별 분포	70
1. 지면 종별 청년 기사	70
2. 워드 클라우드	72

제4절 단어 관계 분석 74

 1. 전체 네트워크 74

 2. 부분 네트워크 81

제5절 경제적 (비)주체로서의 청년 91

제2부 비교사회적 위치

제4장 성인 이행 체제 유형(이상직) 95

제1절 성인 이행 체제의 구성 97

제2절 성인 이행 체제 유형 100

제3절 OECD 국가 비교 104

 1. 2000년대 중반 시점의 성인기 이행 국면 104

 2. 분석 방법 108

제4절 성인 이행 체제의 여섯 가지 유형 109

 1. 주성분 분석 결과 109

 2. 군집 분석 결과 111

제5절 동아시아형: 느슨한 제도 연계와 늦은 이행 117

제5장 청년실업의 구조: OECD 회원국 비교(이채정·노법래) .. 121

제1절 청년실업의 추이와 요인 123

제2절 분석 방법	128
1. 분석 자료	128
2. 시계열 분석	128
3. 유형화 분석	129
제3절 시계열 비교	131
1. 경제성장과 실업의 상관성	131
2. 연령대별 실업률 변화 비교	138
제4절 유형화 결과	145
1. 자기조직화지도(SOM) 분석 결과	145
2. 차원 축약 결과	148
제5절 고용 없는 성장사회와 변동성이 큰 청년실업	152

제6장 성인 이행기 역할 구조와 인식 구조 비교 (이상직·사사노미사에)

제1절 성인 이행기 역할과 인식의 관계	157
제2절 분석 대상과 자료	160
1. 7개 국가의 청년	160
2. 역할 지위	160
3. 성역할태도	161
4. 분석 절차	162
제3절 역할 구조	163

제4절 성역할 태도 167

제5절 전환기 역할-인식의 괴리 176

제3부 삶의 구조와 인식

제7장 청년의 공간 분포와 주거 이동(민보경) 185

제1절 청년의 거주 공간 및 로컬 장소 선택 187

1. 일자리와 노동력 이동 187
2. 주거 여건 188
3. 교육 환경 189
4. 지역 매력 190

제2절 청년의 공간적 분포 192

1. 연령별 지역 분포 192
2. 청년 분포와 지역 특성과의 관계 197

제3절 청년의 주거 이동 199

1. 청년의 주거 이동 패턴 199
2. 청년의 이동 사유 214

제4절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 219

제8장 청년의 불평등 인식(이상직·김미선·김동규) 223

제1절 불평등 인식과 불공정 인식 225

제2절 한국인의 분배 기준 인식	226
1. 네 가지 분배 기준	226
2. 성과 대 노력	228
3. 패자의 우는 소리?	230
제3절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평가	239
1. 측정	239
2. 분석 결과	243
제4절 선발 시스템의 빛과 그늘	247

제9장 청년의 행복감(이상직·김동규·김미선) 249

제1절 가족배경과 삶의 태도	251
제2절 한국인의 행복조사	253
1. 측정	253
2. 분석 방법	261
제3절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행복감 차이	264
1. 행복감, 삶의 의미 인식, 삶의 만족도	264
2. 어느 정도의 부모 학력에서 차이가 나는가	266
제4절 불평등 인식과 여타 요인들	269
1. 불평등 인식과 행복감	269
2. 여타 요인들과 행복감	271
제5절 부모 학력의 또 다른 의미	272

제4부 정책 지형

제10장 청년정책 현황(이채정·조소연) 277

제1절 청년정책의 개념 279

제2절 청년정책의 유형 281

제3절 유형별 청년정책 현황 284

1. 취업지원 284

2. 창업지원 312

3. 주거·금융 316

4. 생활·복지 328

5. 정책 참여 330

제4절 취업지원 중심의 청년정책 331

제11장 정책 효과 분석: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채정·노법래·조소연) 333

제1절 국민취업지원제도 335

제2절 취업 결정 요인 339

제3절 성향점수매칭 방법 342

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342

2. 통계 분석 343

제4절 분석 결과	345
1. PSM 결과	345
2. 회귀분석 결과	348
제5절 시간을 준다는 의미	351
결론: 전환기 청년의 미래(이상직)	353
제1절 연구 요약	355
제2절 연구 함의	359
1. 청년기에서 생애 전반으로	359
2.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으로	361
참고문헌	365
Abstract	385

제1부 역사적 위치

[표 2-1] 기사 제목에서 '청년'과 함께 나오는 단어: 1920년대	44
[표 2-2] 기사 제목에서 '청년'과 함께 나오는 단어: 1930년대	45
[표 2-3] 기사 제목에서 '청년'과 함께 나오는 단어: 1940년대	46
[표 2-4] 기사 제목에서 '청년'과 함께 나오는 단어: 1950년대	47
[표 2-5] 기사 제목에서 '청년'과 함께 나오는 단어: 1960년대	48
[표 2-6] 기사 제목에서 '청년'과 함께 나오는 단어: 1970년대	49
[표 2-7] 기사 제목에서 '청년'과 함께 나오는 단어: 1980년대	50
[표 2-8] 기사 제목에서 '청년'과 함께 나오는 단어: 1990년대	51
[표 2-9] 본문 청년 주위의 공출 명사: 1920년대	53
[표 2-10] 본문 청년 주위의 공출 명사: 1930년대	53
[표 2-11] 본문 청년 주위의 공출 명사: 1940년대	54
[표 2-12] 본문 청년 주위의 공출 명사: 1950년대	55
[표 2-13] 본문 청년 주위의 공출 명사: 1960년대	56
[표 2-14] 본문 청년 주위의 공출 명사: 1970년대	56
[표 2-15] 본문 청년 주위의 공출 명사: 1980년대	57
[표 2-16] 본문 청년 주위의 공출 명사: 1990년대	58

제2부 비교사회적 위치

[표 4-1] 분석 변수	106
[표 4-2] 참고 변수	107
[표 4-3] 성인기 이행 체제 유형별 소속 국가	112
[표 4-4] 성인기 이행 체제 유형별 속성(비표준화 값)	116
[표 5-1] 군집 특성 비교	146
[표 5-2] 군집 속성 비교	148

제3부 삶의 구조와 인식

[표 7-1] 청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매력 요소	191
[표 7-2] 청년인구 비율과 지역특성 변수 개요	197
[표 7-3] 청년 인구 비율과 지역 특성 간 상관분석 결과	198
[표 7-4] 20-24세 가구이동의 수도권 이동 상위네트워크(2021년)	205
[표 7-5] 25-29세 가구이동의 수도권 이동 상위네트워크(2021년)	207
[표 7-6] 30-34세 가구이동의 수도권 이동 상위네트워크(2021년)	208
[표 7-7] 35-39세 가구이동의 수도권 이동 상위네트워크(2021년)	209
[표 7-8] 20-24세 가구이동의 수도권 이동 상위네트워크(2011년)	210
[표 7-9] 25-29세 가구이동의 수도권 이동 상위네트워크(2011년)	211
[표 7-10] 30-34세 가구이동의 수도권 이동 상위네트워크(2011년)	212
[표 7-11] 35-39세 가구이동의 수도권 이동 상위네트워크(2011년)	213
[표 7-12] 전입신고서 상의 이동 사유	214
[표 7-13] 청년 가구 수도권 전입 사유(2021년, %)	215
[표 7-14] 청년 가구 수도권 전입 사유(2011년, %)	217
[표 8-1] '자원분배기준' 인식을 묻는 문항(이상과 현실)	227
[표 8-2] 남성 유직자 전체	238
[표 8-3] 평등인식 항목 간 상관관계	241
[표 8-4] 개인능력주의, 청년, 그리고 불평등 인식: 회귀분석 결과	243
[표 8-5] 개인능력주의, 청년, 그리고 불평등 인식: 20대와 30대 회귀분석 결과	246
[표 9-1] 부모의 최종학력: 응답자 20-39세	254
[표 9-2] 전반적인 행복감과 삶의 의미 빈도 분포	255
[표 9-3] 삶의 주변 환경 만족도 응답 문항과 평균값	256
[표 9-4] 삶의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요인부하값	258
[표 9-5] 통계 요약	260

[표 9-6]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261
[표 9-7] 부모의 최종학력과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OLS 회귀분석	264
[표 9-8] 부모의 최종학력과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OLS 고정효과 회귀분석과 MLM	265
[표 9-9] 아버지 최종학력과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아버지 최종학력 고정효과	267
[표 9-10] 불평등 인식과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OLS 회귀분석	270

제4부 정책 지형

[표 10-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280
[표 10-2] 청년정책의 유형	281
[표 10-3] 취업지원 청년정책	285
[표 10-4] 창업지원 청년정책	312
[표 10-5] 주거·금융 청년정책	316
[표 10-6] 생활·복지 청년정책	328
[표 10-7] 정책 참여 청년정책	330
[표 11-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비교	337
[표 11-2]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가장 도움이 된 부분	339
[표 11-3] PSM 이후 비교집단 평균 간 속성 변화	346
[표 11-4] 회귀분석 결과	348

제1부 역사적 위치

[그림 2-1] 『동아일보』 1920-1999년 전체 기사 수 및 1일 단위 기사 수 추이	35
[그림 2-2] 연도별 기사 수	36
[그림 2-3] 『동아일보』 미발행일 정보	36
[그림 2-4] 제목에 ‘청년’이 들어가는 기사의 연도별 분포(1920-1999년)	39
[그림 2-5] 전체 기사 수 대비 ‘청년’이 들어가는 기사 비율(1920-1999년)	40
[그림 2-6] ‘청년’이 포함된 기사 제목의 지면 종류별 비율 변화	41
[그림 3-1] 분석 과정	68
[그림 3-2] 지면 종별 ‘청년’ 출현 빈도 변화	71
[그림 3-3] 지면 종별 ‘청년’ 출현 비율 변화(%)	71
[그림 3-4] 시기별 워드 클라우드	72
[그림 3-5] 1993-1997 키워드 네트워크	75
[그림 3-6] 1998-2002 키워드 네트워크 1	76
[그림 3-7] 1998-2002 키워드 네트워크 2	76
[그림 3-8] 2003-2007 키워드 네트워크	77
[그림 3-9] 2008-2012 키워드 네트워크	78
[그림 3-10] 2013-2017 키워드 네트워크	79
[그림 3-11] 2018-2022 키워드 네트워크	80
[그림 3-12] 2003-2007 ‘취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82
[그림 3-13] 2008-2012 ‘취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82
[그림 3-14] 2013-2017 ‘취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83
[그림 3-15] 2018-2022 ‘취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83
[그림 3-16] 1998-2002 ‘실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84
[그림 3-17] 2003-2007 ‘청년실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85
[그림 3-18] 2008-2012 ‘청년실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85
[그림 3-19] 2013-2017 ‘청년실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86

[그림 3-20] 2018-2022 '청년실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86
[그림 3-21] 1993-1997 '사회'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87
[그림 3-22] 1998-2002 '사회'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88
[그림 3-23] 2003-2007 '사회'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88
[그림 3-24] 2008-2012 '사회'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89
[그림 3-25] 2013-2017 '사회'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89
[그림 3-26] 2018-2022 '사회'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90

제2부 비교사회적 위치

[그림 4-1] 성인기 이행 지형(OECD 국가): 차원 1과 차원 2	109
[그림 4-2] 성인기 이행 지형(OECD 국가): 차원 1과 차원 3	110
[그림 4-3] 군집분석 결과(거리 측정 방식: ward)	111
[그림 4-4] 성인 이행 체제 유형별 속성(표준화 값)	113
[그림 5-1] 주요 국가 청년실업률 연평균 상승 속도 및 전체실업률 대비 비율(2010-2020년)	124
[그림 5-2]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상관성: 한국	131
[그림 5-3]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상관성: 일본	133
[그림 5-4]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상관성: 미국	134
[그림 5-5]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상관성: 영국	135
[그림 5-6]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상관성: 독일	136
[그림 5-7]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상관성: 스웨덴	137
[그림 5-8] 연령집단별 실업률: 한국	138
[그림 5-9] 연령집단별 실업률: 일본	140
[그림 5-10] 연령집단별 실업률: 미국	141
[그림 5-11] 연령집단별 실업률: 영국	142
[그림 5-12] 연령집단별 실업률: 독일	143
[그림 5-13] 연령집단별 실업률: 스웨덴	144

[그림 5-14] SOM을 활용한 유형화 결과	145
[그림 5-15] 실업을 관련 변인 간 상관구조 검토	149
[그림 5-16] 다차원척도법(MDS)을 활용한 차원 축약 결과	150
[그림 6-1] 성별 7개국 성인 이행기 역할 구조 비교	163
[그림 6-2] 성별 7개국 청년 결혼가치 비교 ①	167
[그림 6-3] 성별 7개국 청년 결혼가치 비교 ②	168
[그림 6-4] 성별 7개국 청년 성역할 태도 비교: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에 대한 찬반 의견	172
[그림 6-5] 성별 7개국 청년 성역할 태도 비교: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에 대한 찬반 의견	174
[그림 6-6] 결혼에 대한 태도와 역할지위	176
[그림 6-7] 성별 역할에 대한 태도와 역할지위 ①	178
[그림 6-8] 성별 역할에 대한 태도와 역할지위 ②	179

제3부 삶의 구조와 인식

[그림 7-1] 20-24세 남녀 인구 분포(2021년)	193
[그림 7-2] 25-29세 남녀 인구 분포(2021년)	194
[그림 7-3] 30-34세 남녀 인구 분포(2021년)	195
[그림 7-4] 35-39세 남녀 인구 분포(2021년)	196
[그림 7-5] 시도 간 전출입 이동(1990-2020년)	200
[그림 7-6] 청년 가구 이동(2021년): 20대와 30대 비교	203
[그림 7-7] 수도권 전입 청년 가구이동(2011년, 2021년)	204
[그림 7-8] 청년 가구의 수도권 전입 사유(2021년)	216
[그림 7-9] 청년 가구의 수도권 전입 사유(2011년)	218
[그림 8-1]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과 현실(성별)	229

[그림 8-2]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연령대별, 성별) 231

[그림 8-3] 대졸자의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연령대별, 성별) 232

[그림 8-4]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교육수준별, 성별) 233

[그림 8-5]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소득수준별, 성별) 234

[그림 8-6]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직업지위별, 성별) 235

[그림 8-7] 직업지위별 소득 분포 236

[그림 8-8] 연령과 소득 수준의 관계(직업지위별) 237

[그림 8-9] 교육기회, 취업기회, 법의 집행, 소득 및 재산, 권력, 성별에 대한 평등인식 · 240

[그림 8-10] 연령대에 따른 개인능력주의의 불평등 인식에 대한 효과 245

[그림 9-1] 삶의 주변 환경 8가지에 대한 만족도: 히스토그램 257

제4부 정책 지형

[그림 11-1] PSM 결과 검토 347

요 약

- 이 연구는 한국 청년 문제의 성격을 역사적·비교적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 시도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 청년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적 조건을 확인하는 한편, 청년의 삶의 특징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 한편으로는 청년의 삶을 규정하는 구조와 제도를,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의 역할과 인식을 함께 살피고자 했다.
- 이 작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다. 청년층의 생애와 관련된 OECD 지표 자료(혼인율, 노동시장참여율, 실업율 등), 인구센서스, 인구이동 통계 자료, 국제사회조사자료(일본 문부성 조사자료), 사회조사자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국회미래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조사 원자료), 동아일보 기사 자료(1920년대~2010년대) 등이다. 자료가 다양한 만큼 회귀분석, 데이터마이닝, 공간분석, 성향점수매칭 등의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했다.
- 분석의 핵심은 ‘20-30대라는 연령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나’를 역사적·비교사회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청년이 어느 지역에서 사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들의 불평등 인식과 삶의 만족도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에 비추어 오늘날 청년정책을 개괄하고 그 취지와 내용에 ‘전환기’라는 문제인식이 담겨 있는지 확인했다.
- 보고서는 4개 부와 11개 장으로 구성된다. 1부는 청년 문제의 성격을 역사적으로 검토한다(1-3장). 2부는 청년 문제의 성격을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검토한다(4-6장). 3부는 청년 삶의 특징을 거주 지역과 인식 측면에서 확인한다(7-9장). 4부는 청년정책의 현황과 효과를 검토한다(10-11장).
- 1장에서는 오늘날 청년 문제가 등장한 맥락을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형성과 변화라는 맥락에서 살피고자 했다. 2장에서는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청년’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를 추적했다. 3장에서는 2000

년대 이래 청년 담론 구조를 포착하고자 했다. 2장과 3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사회에서 청년 개념은 ‘사회’ 현상에서 ‘문화’ 현상으로, ‘경제’ 현상으로 바뀌어 왔다.

- 4장에서는 라이프코스의 일반적인 변화가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특징이 혼합된 사례, 또는 특정 측면이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독자적인 사례로 규정될 수 있다. 교육 제도의 층화 수준이 낮고 교육 과정의 표준화 수준은 높다. 교육은 일반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학교와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고리는 없다. 공채 등 일반화된, 표준화된 입직 경로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교육 기회를 빠른 속도로 확장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어느 수준까지는 계층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으나 형식적으로 기회를 확대할 여지가 없는 오늘날에는 경쟁을 격화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한국의 특징은 청년실업 구조 비교 연구에서도 확인된다(5장). 한국은 ‘고용 없는 성장’을 보이는 사례다. 이러한 이행기적 특성은 청년의 역할 구조와 인식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6장에서는 성인 이행기에 7개 국가의 청년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며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비교했다. 동아시아 국가는 보수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다는 통념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은 서구사회보다 강하게 성역할 분업에 반대하고 있었다. 동아시아 사회의 성불평등 수준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실제와 인식의 괴리가 그만큼 클 것으로 짐작된다.
- 청년의 인구 이동을 역사적으로 검토한 7장의 연구 결과는 청년의 경쟁 구조가 일원화되고 있다는 점을 일정 수준 뒷받침하는 결과다. 전체 인구에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원거리 이동이 크게 감소한 반면, 청년층에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여전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에서는 수도권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25-29세의 이동이 활발하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의 이동 사유는 대부분 ‘직업’과 ‘주택’이었다. 8장과 9장에서는 청년층의 불평등 인식과 행복감 등 주관적 인식 측면을 검토했다. 분배 인식에서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불평등 인식과 개인능력주의 인식의 상관관계는 청년층에서 높았다(8장). 부모학력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자녀의 행복감과

만족도, 삶의 의미 인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달랐다(9장).

- 청년 문제는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것이지만 청년정책의 다수는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0장). 다양한 유형의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취업 지원 정책이 대다수다. 이러한 정책도 대부분은 그 대상이 기준중위소득으로 선별된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를 확인한 11장의 분석은 청년정책이 좀 더 폭넓은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청년에 대한 관점은 ‘청년들을 어떻게 취직시키고, 결혼시킬까’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취직과 결혼이 당연한 생애 경험이었던 이들의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생명을 도구적으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화’가 오늘날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한 가지 함의는 더이상 청년기를 과도기적 단계로, 미숙한 준비 단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청년기의 생활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려고 하기보다 그들이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결정할 수 있는 통로와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서론

청년 문제를 상대화하기

이상직

제1절 문제 인식

제2절 연구 구성

제 1 절 문제 의 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연구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전환기적 국면에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국 청년 문제의 성격을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살피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회변동은 1차적으로 인구 현상의 변화를 지칭한다. 2차적으로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를, 3차적으로는 담론(문화) 체제의 변화를 지칭한다.

이 연구는 라이프코스 연구의 시각을 따른다. 라이프코스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겪는 사건이나 경험, 또는 수행하는 역할로 구성된 이력에서 나타나는 패턴이다. 이 패턴을 특정한 시대적·사회적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것이 연구의 기본 관점이다. 전환기라는 의미도 그런 뜻이다. 근대 사회는 연령을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해 왔다. 그것을 제도와 규범이 뒷받침했다. 이러한 체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 ‘전환기’라는 표현은 ‘연령-역할-제도-규범’으로 짜인 연령체제가 전환되고 있음을 뜻한다.

오늘날 청년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적 시간표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는 청년 생애의 맥락을 다차원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즉 구조와 담론과 제도를, 역할과 인식을 함께 보려는 접근법이다. 이것은 기존 틀로 규범적으로 변화를 평가하기보다는 청년의 삶을 규정하는 연령체제 자체를 상대화해 보려는 시도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연령 자체보다는 역할 관계에 주목한다. 청년이 수행하는 역할 구조의 변화를 포착함으로써 연령대(청년기)의 의미를 재구성·재해석해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청년’을 특정한 연령대로 규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물리적 연령으로는 20-30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 청년의 의미는 특정한 나이와 그에 부과되는 역할 및 역할 규범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관계는 유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되는 생애과정(단계)의 맥락에서 구체화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살릴 수 있는 접근법이 '비교 관점'이다. 이는 역사적·비교사회적 고찰을 뜻한다. '청년'이라는 개념은 근대의 산물이다.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생산기가 구별되면서 그 이전 단계로 청년기가, 그 이후 단계로 노년기가 형성되었다. 청년기에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학생이 되었고, 노년기에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여가(소비)자가 되었다. 오늘날은 이러한 삼분론이 유효한지에 대한, 또는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상황에 있다. 이처럼 오늘 문제의 성격을 알려면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한국 문제의 성격을 알려면 비교 사회적 관점에서 한국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의 청년 문제로 알려진 현상의 상당 측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물론 한국 고유의 특징도 있다. 한국 사례만을 두고 보면 현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별하기 어렵고 그런 만큼 현상의 사회적 함의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 문제의 성격을 확인하는 틀로 성인기 이행 체제 개념을 소개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 청년층의 생애와 관련된 OECD 지표 자료(혼인율, 노동시장참여율, 실업율 등), 인구센서스, 인구이동 통계 자료, 국제사회조사자료(일본 문부성 조사자료), 사회조사자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과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국회미래연구원의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원자료), 동아일보 기사 자료(1920년대~2010년대) 등이다. 자료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할 것이다. 여기에는 회귀분석, 데이터마이닝, 공간분석, 성향점수매칭 등 다양한 통계기법이 포함된다. 자료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장에서 상세하게 소개할 것이다.

분석의 핵심은 '20-30대라는 연령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나'를 역사적으로, 비교사회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청년이 어느 지역에서 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이들의 불평등 인식과 삶의 만족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에 비추어 오늘날 청년정책을 개괄하고 그 취지와 내용에 '전환기'라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지 확인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두 가지다. 첫째, 실제 청년이 살아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그러한 모습의 의미를 상대화해 이해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정상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제도를 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청년(기)을 과도기적 준비 단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년에게 생산자 역할을 부과하기 위해 임금노동을 전제로 지원하는 방식을, 청년에게 재생산자 역할을 부과하기 위해 결혼 관계를 전제로 지원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과연 한국사회가 노동관계와 가족관계에서의 구조 변화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비판적으로 답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 구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보고서는 4개 부와 11개 장으로 구성된다. 1부는 청년 문제의 성격을 역사적으로 검토한다(1-3장). 2부는 청년 문제의 성격을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검토한다(4-6장). 3부는 청년의 삶의 구조를 거주 지역과 인식의 측면에서 확인한다(7-9장). 4부는 청년정책의 현황과 효과를 검토한다(10-11장).

1부는 청년 문제의 성격을 역사적으로 확인한다. 1장에서 3장이 해당한다. 1장(이상직)에서는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형성과 변화라는 거시 맥락에서 ‘청년 문제’ 등락의 맥락을 정리한다. 2장(백광렬)은 동아일보 기사를 1920-1999년 기간으로 분석해 한국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어떤 식으로 표상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확인한다. 3장(이상직·조해인)에서는 같은 동아일보 기사를 분석해 청년 문제가 부각된 2000년대 이래 청년 담론의 구조와 변화 양상을 확인한다.

2부는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한국 청년 문제의 성격을 확인한다. 성인 이행 체제라는 분석틀을 활용해 국가 비교 맥락에서 한국 청년의 삶의 구조를 확인한다. 4장에서 6장까지다. 4장(이상직)에서는 노동·가족 관련 지표를 활용해 ‘성인 이행 체제’라는 측면에서 OECD 국가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5장(이채정·노법래)에서는 한국 청년실업 문제의 성격을 OECD 국가와의 비교 맥락에서 확인한다. 6장(이상직·사사노미사에)에서는 4장의 분석을 심화하는 맥락에서 7개 국가 청년의 역할 구조와 인식 구조를 비교한다.

3부에서는 현재 청년의 삶의 구조와 인식을 확인한다. 7장에서 9장까지다. 7장(민보경)은 인구이동 자료를 활용해 청년층의 이동 상황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이동 관련 요인을 확인한다. 8장(이상직·김미선·김동규)은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해 한국인의 자원분배 인식을 검토하면서 청년층의 능력주의 인식과 불평등 인식의 관계를 살펴본다. 9장(이상직·김동규·김미선)은 청년의 삶의 태도 및 인식이 부모 학력으로 측정된 가정배경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한다.

4부에서는 1부와 2부, 3부에서 확인한 주요 결과를 배경으로 삼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개괄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10장(이채정·조소연)에서는 청년정책의 현황을 정리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매우 좁은 의미에서의 취업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11장(이채정·노법래·조소연)에서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정책 효과를 확인한다.

결론(이상직)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서 연구 결과가 청년 정책과 청년 연구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다.

제 1 부

역사적 위치

제1장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변화와
청년 문제의 등장

제2장 청년 개념의 기원과 변천

제3장 청년 담론의 구조

제1장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변화와 청년 문제의 등장

이상직

제1절 근대적 라이프코스과 청년기

제2절 라이프코스의 제도화와 성인기 이행 규범 형성

제3절 라이프코스의 재제도화와 성인기 이행 규범 변화

제4절 청년 문제의 등장

제 1 절

근대적 라이프코스과 청년기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장에서는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형성 과정과 변동 과정을 개괄하면서 이른바 후기 근대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등장하게 된 일반적 맥락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으로 한국사회 청년 문제의 성격을 역사적·비교사회적 관점에서 확인하는 관점을 세워 보고자 한다.

오늘날 청년의 성인기 이행 과정이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은 근대적 라이프코스라는 이미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전제한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근대라는 시공간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청년 자체가 근대에 형성된 집단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성격과 그것이 만들어진 맥락을 알 필요가 있다.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특징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현대인의 삶의 궤적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태어나면 대략 70-80세까지는 살 것이라 기대한다. 현대인은 이 전제를 내면화해 평소에는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다(엘리아스, 1996: 107). 태어나면 먼저 학교에 간다. 한국에서는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이후 9년은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는다. 대개 고등학교에서 3년을 더 보낸다. 만 6세에서 만 18세까지, 12년을 학교에서 '학생'으로 보낸다. 고등학교 졸업자 상당수는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취업한다. 대학진학자도 몇 년 후에는 모두 취업하리라 예상한다. 대략 이 무렵까지를 '청년'으로 여긴다. 이후 약 60세까지는 '노동자'로 지낼 가능성이 높다. 20대 중반 무렵 취업하면 떠올릴 법한 일이 결혼과 출산이다. 모두가 결혼하고 출산한다는 인식이 약해졌지만 결혼과 출산은 여전히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이르면 20대 초중반에, 늦으면 30대 초중반에 결혼한다. 결혼과 출산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로 여겨진다. 이런 시간표를 따른다면 30대 중후반부터는 노동자이자, 배우자이자, 부모로 살아간다. '성년'의 삶이다. 성년의 삶은 제도적으로는 대략 60대 초중반에 노동시장에서 나오면서 끝난다. 이 과정을 밟은 전형적인 부모라면 은퇴 전에 자녀를 '독립'시켰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자녀가 취업하고 결

혼했을 것이다. 남은 20여 년은 중년 때 모아놓은 돈이나 연금으로 살아갈 것이다. '노년'의 삶이다.

이러한 이미지에는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주요 특징이 드러나 있다. 일생은 뚜렷하게 구획된 여러 단계로 구성된다. 각 국면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된다. 앞의 두 특징은 인구학적으로 볼 때 인구 대부분이 짧은 기간에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한다(Anderson, 1985: 69). 인구 다수가 비슷한 기간의 삶을 살아가며 각 단계의 삶을 비슷한 속도로 거친다는 의미다.

이러한 인구학적 패턴이 문화적 측면에서 삶의 '정상성'을 규정하는 배경이다. 누군가는 위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지 않고, 시간표 자체도 나라나 시기마다 다르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그러한 삶의 궤적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다. 여러 사회 제도와 조직이 이러한 시간표를 전제로 짜여 있다. 이 시간표를 전제로 생애 각 국면에 대한 일련의 의미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 그것을 따르건 따르지 않건 각자는 그 의미 체계에 비추어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계획한다. 오늘날 노동과 가족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는 근거도 우리 마음에 있는 공통의 규범적 시간표에 준한다.

거시 수준에서 라이프코스의 변동은 구조적 변동과 문화적 변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 변동은 라이프코스를 틀 짓는 교육, 직업, 가족 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며 문화적 변동은 생애와 관련된 상징체계의 변화를 뜻한다. 이 두 영역의 변화에 따라 미시 수준에서 사회구성원 각자의 라이프코스가 구성되고, 그것을 꿈꾸고 계획하고 만들고 평가하는 주체가 형성된다(Buchmann, 1989: 15-16).

제2절

라이프코스의 제도화와 성인기 이행 규범 형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형성

거시-구조적 관점에서 근대는 라이프코스가 제도화된 과정이었다. 개인의 삶이 사회적 시공간에서 전개되는 과정이 일련의 공식 규칙으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세 차원의 사회변동이 맞물린 결과로 인구학적 변동을 바탕으로 했다. 그와 함께 생산체제가 변화했다. 두 변동과 맞물려 사회가 조직되었다. 대표 조직이 근대 국가다. 국가는 규칙을 정의하고 강제했다(Mayer and Schoepflin, 1989; Leisering, 2003). 국가 규율에 따라 삶은 제도적으로 정의된 생애 국면으로 구획되었고,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의 이행은 제도적으로 정의된 사건의 경험 여부로 규정되었다.

인구학적 안정성은 라이프코스가 제도화된 생물학적 조건이었다. 아동사망률이 떨어지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이런 변화를 가장 일찍 겪은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에서 1921년에 태어난 남성 10명 중 1명은 5세 전에 죽었고, 1916년에 25세가 된 여성 4분의 1은 65세 전에 죽었다(Anderson, 1985: 73). 1970년대에 태어난 여성은 83%가 65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되었다(p. 72). 양육 기간 축소도 중요한 변화였다. 출생아 수 감소와 출산 간격 압축이 결합된 결과였다.

홉스봄이 “황금시대”(Golden Age)(1997: 359)라고 규정한 1950-60년대로 오면 서유럽 주요국과 미국, 일본 등 일찍 산업화를 경험한 국가들의 인구가 비슷한 삶의 궤적을 밟게 되었다. 고령이 아닌 한 줌처럼 죽지 않고, 다수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 비슷한 때에 출산했다. 사람들은 비슷한 가족 경험을 하게 되었다. 삶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생애가 하위 단계로 구획되었다. 이것을 추동한 요인이 생산체제의 변동이었다. 산업화에 따라 생산 단위가 가족 단위 소생산자에서 기업 단위 대생산자로 전환되었다. 생산 방식은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제조업으로 전환되었다. 노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노동(시간)이 거래되었다. 잠재 노동력을 실제 노동으로 전환하는 문제, 즉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최소 시간으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동과정과 노동력을 조직할 필요가 생겼다. 노동과정이 '합리화'되었다. 과학적 경영원칙에 따라 각 제품 제조에 투여되는 노동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동조직이 정비되었다. 기계 도입으로 속도 개념이 생기면서 기계 작업에 최적화된 노동력이 필요해졌다. 노동력은 관습이나 정이 아니라 과학적 원칙에 따라 충원되어야 했다(마일즈, 1992: 34-37). 노동시장은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복지제도로 노년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었다. 생산성 논리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에 기초한 정년퇴직제도가 도입되어 “생산능력은 있으나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마일즈, 1992: 30) 이들이 “생년월일에 의해 정의되어”(p. 22) 노동시장을 떠났다. 대신 성인 노동자들은 기업 조직에 연공제가 도입되면서 안정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유년은 교육제도로 분리되었다. 전(前) 산업 경제에서 유년은 경제활동에 통합되어 있었다. 부모나 부모를 대신한 어른의 감독과 지도 아래에서 일을 익혔다. 일과 훈련, 교육이 또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이 관계는 자영업이나 공장 하청계약 형태로 생산이 가내에서 이루어졌던 초기 산업화 국면에서도 유지되었다(틸리·스콧, 2008: 164-170). 신기술의 등장으로 노동과정이 재조직되면서 청년들은 집에서 나와 공장에서 일했다(Smelser and Halpen, 1978: 295).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일시적이었다. 영국의 경우 19세기 중후반에는 사회개혁운동과 기술혁신에 따라 젊은 노동자 수요가 줄었다. 대규모 채용이 줄었고 법으로 아동 노동이 금지되었다(김영선, 2014: 212-229).

공장에서 일할 수도 없고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어린이가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1830년대에 공장 내에 학교와 비슷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공장법이 도입되었으나 문제는 완화되지 않았다(엥겔스, 2014: 222-234). 도덕 개혁가들은 별도 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그 기관이 초등학교다. Musgrove(1966: 30)는 19세기에 걸쳐 초등학교가 설립된 과정을 “대규모 위생 작업”으로 평가하면서, 학교를 “거대한 거리 청소 기구”로 표현했다. 근대 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은 사회 통제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 예비 노동자와 군인을 훈육하는 곳이라는 적극적인 기능도 기대되었다. 이것은 “리스크 경감” 기능과도 관련 있었다(야마다, 2010: 72). 산업사회에서 주창한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불확실성을 뜻했다. 불확실성을 줄인 것이 학교였다. 학교는 청년을 노동시장에서 분류하는 기준이 될 신호를 발신하는 선발 기능을 수

행했다. 이제 학교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당연히 거쳐야 할 제도화된 기관이 되었다. 이념형적으로 보면 가족과 노동의 분리는 ‘가족과 복지의 분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과 교육의 분리’와 맞물리는 것이었다.

가족이 경제적 기능을 상실하자 애착이 유대의 토대로 강조되었다. 가족 내 친밀성을 규율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성 윤리가 강조되었고, 남녀 역할이 규정되었다. 여성에게는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돌봄을 책임지는 주부 역할이 권고되었다. 여성의 역할은 노동자에서 주부로 전환되었다. 1820년대에도 뉴잉글랜드 공장주들은 여성을 대규모로 채용했다. 1830년대에는 중간계층의 품위를 지키려면 여성이 임금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내 규칙이 중간계층에서 통용되었다(Smelser and Halpern, 1978: 308).

이 과정을 추동한 사회변동의 원리는 합리화였다. 행위의 의미를 전통이나 종교 등의 ‘비합리적’인 전제에서 찾지 않고 물리적 인과법칙에서 찾는다(베버, 2006: 45-46). 사회의 합리화는 이성적 추론에서 도출된 공식 규칙에 따라 사회관계를 조직하려는 경향이다. 경제 영역에서는 자본주의 시장 확립으로, 정치 영역에서는 민주주의 정체 확립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개인은 가격 신호만 고려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여겨진다. 개인 관계는 비인격적인 시장 관계다. 국민 국가에서 개인은 보편적인 의무와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 국가와 직접 연결된다. 이 관계 또한 비인격적 규칙에 따라 조직된다. 두 영역 모두에서 사람들은 ‘개인’으로 존재한다.

기존 관계에서 떨어져 나온 개인을 규율할 새로운 질서 원리도 합리화였다. 라이프코스 구조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제도화되었다(Buchmann, 1989: 24). 첫 번째는 개인의 삶을 연대기적 나이에 따라 조직하는 것이다. 근대사회 제도(조직) 대부분은 부분적으로나마 연령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임금노동 유무로 규정된 ‘생산 기간’을 기준으로 전과 후를 구분하는 것이 분리 과정의 핵심이었다. 생산 영역에서 생애가 구획되면서 재생산 영역에서도 생애가 표준화되었다.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곧이어 자녀를 2명 내외 출산하는 패턴이 일반화되었다. 정치 영역에서의 의무-권리 규정도 연령과 연계되었다. 연령과 역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연계되었다. 두 번째는 각 생애 국면에서 지위를 배분하고 서로 다른 국면의 지위를 이어주는 틀을 정립하는 것이다. 학력과 직종의 연계, 직종과 연금의 연계가 그 예다.

2 연령 규범과 계획하는 주체의 등장

생애 단계가 연령으로 뚜렷이 구분되자 각 단계에 관한 표준화된 규범과 기대가 광범위한 사회적 승인을 얻었다. ‘아동기’,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가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되었다(Smelser and Halpern 1978: 311). 물리적 연령은 사회적 연령으로 전환되었다(Buchmann, 1989: 25). 만 12세에서 15세로 구획되는 ‘중학생’ 범주에는 ‘본격적인 입시 준비로 접어드는 시기’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다. 중학생은 그 기대에 따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말에는 무수한 행위 규율이 포함된다.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중학생은 이 기대를 의식한다. 열심히 공부하는 (공부를 잘하는) 이는 긍정적이고 확고한 정체감(正體感)을 갖는다. 연령 지위는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부여된, 그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이 승인되는 기반인, 속성을 드러낸다(Buchmann, 1989: 29).”

근대에 와서 라이프코스는 가족, 교육, 노동시장 등 특정한 영역의 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자체 논리를 가진 제도가 되었다(Kohli, 2007: 254). 라이프코스의 구조와 의미가 표준화되자 연령과 연계된 사회적 역할(생애 국면)과 특정 궤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지위를 조합해 전 사회구성원을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아리에스, 2003: 500). 두 축이 ‘법적으로’ 규정된 틀에 따라 ‘공적으로’ 제도화되자 제도화된 역할·지위의 배열로 구성원의 라이프코스 구조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제도화된 의미의 배열로 각자의 삶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¹⁾ 제도로서의 라이프코스는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연령이라는 시간 지표에 따라 예상하고 계획할 수 있게 만든 구조적·규범적 조건이 되었다. 근대적 라이프코스를 미시적으로 조직하는 제도는 가족이었다. 인구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뚜렷이 구획된 여러 단계를 이행하는 라이프 사이클 패턴이 생겨나면서 가족 경험도 동질화되었다(Anderson, 1985: 73).

그것이 이미지화된 것이 근대 가족상이었다. 가족은 부부와 소수의 자녀로 구성되고, 가족 관계의 결합은 정서적 결합으로 여겨지며, 남편은 노동시장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맡는, 그러면서 자녀는 부모의 전적인 후원하에 공식 교육기관

1) 나이와 역할 기대가 촘촘하게 연결되자 사람들은 개별 속성이 아닌 연령 범주에 귀속된 속성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같은 논리가 학교나 자격증에도 적용된다.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로, 어떤 자격증을 가졌는지로 한 사람의 질을 평가한다. 그런데 범주 속성과 개인 속성이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로써 범주에 부여된 의미는 어떤 경우에는 상징 자본으로, 어떤 경우에는 낙인으로 작동한다.

에서 학습에 매진하는 역할 분업으로 유지되는 조직으로 여겨졌다(오치아이, 2004). 근대가족이 모두 ‘근대가족’의 특징을 지니지는 않았고, 전근대 가족도 ‘근대가족’의 특징을 지닌 경우가 있었다. 그럼에도 ‘근대가족’이라 말하는 것은 근대사회에 와서 그런 형태의 가족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이다(오치아이, 2012: 142).

이 점에 주목해 아리에스는 근대사회 형성을 추동한 개인화가 가족화로 귀결되었다고 표현한다(아리에스, 2003: 641). 울리히 벡(1997)은 그것이 여성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봉건 관계에 구속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벡의 시각에서 개인화는 그가 “산업사회의 봉건적 구조”(p. 181)나 “근대적 신분”(p. 181)이라고 표현했던 젠더 관계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표준화된 이행 경험과 규범화된 의미 체계는 각자가 삶을 평가하고 계획하는 준거가 된다.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평가하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전망한다.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려면 어느 대학에서 어느 전공을 택해야 할지 계산할 수 있고,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떤 코스를 밟는 것이 합리적인지 알 수 있다. 실제 이행 여부에 비추어 자기 삶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자기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평가한다. ○○대학의 △△△전공으로 졸업한 이는 자신이 어느 자리에 지원해 볼지 대략 안다. 그것은 노동시장 지위(직종·직위)와 교육제도 지위(학력·학벌)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회구성원이 그 연계를 알기 때문이다. 절대적이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고리는 일정한 객관성을 확보한다. 라이프코스의 제도화는 계획하고 평가하는 주체를 만들었다(세넷, 2009: 33-35).

개인 역시 라이프코스의 표준화에 따라 형성된 또래 집단을 준거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계획한다. 또래의 위치(언제, 어떤 일자리를 잡았는지)와 나의 위치를 비교하고 제도화된 의미로 파악되는 그의 ‘능력’과 나의 ‘능력’을 비교하면서 나의 위치와 가능성을 가늠한다. 나이, 졸업장, 직업명 등이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짤 때 주된 참조점이 된다. 이에 비추어 의지를 더욱 불태우거나 목표를 수정하거나 체념한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성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가능성에 실천을 맞추는 기제가 하비투스다(부르디외, 2001: 310). 사회적으로 규정된 궤적을 배경으로, 자신의 인생 궤적을 근거로 생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희망’과 ‘기회’가 조응할수록, 삶이 계획한 대로 전개될수록 정체성이 확고해진다. “고도로 제도화된 궤적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에 관해 안정된 기대와 열망을 품을 수 있게 한다(Buchmann, 1989: 29).” 제도화된 라이프코스는 개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의식적으로 종합하려는 자전적 노력의 배경이 된다. 개인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궤적을 따르려고 한다. 잘 따를수록 정체성이 확고해지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삶이란(사회적으로) 정해진 프로젝트로 인식되고, 삶의 의미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했는가로 평가된다. “제도의 서사가 자기 삶의 서사가 된다(세넷, 2009: 48).”

실제로 사회는 각 개인의 기대와 예상에, 그에 따른 준비와 노력에 일정 정도 부응했고, 그 결과 미래를 제시했다. 현재가 다소 만족스럽지 않아도 미래에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자리는 달랐지만, 모두가 나름대로 사회적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느꼈다. 모두에게 게임에 참여할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는 참여자들에게 ‘행복’을 주었다(부르디외, 2001: 342-343). 전 세계적으로 1950-60년대에 성인기를 보냈던 이들의 회상에는 “정신없이 살았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앞만 보고 살았다”와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시간은 희망과 기회가 일치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의식된다(부르디외, 2001: 300). 이렇게 보면 그들은 시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민하지 않았던, “충만한 시간”(부르디외, 2001: 322)을 살았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집합적인 희망과 집합적인 기회가 조응했던, 적어도 조응할 것이라고 믿었던 시절에 사회는 시간이 잊힌 곳이였다.²⁾

2) 이런 맥락에서 근대사회는 ‘꿈꿀 수 있는 사회’라고 평가된다. “근대적 사회공간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더 우월한 위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존재론적 상승의 꿈과 이를 추구하는 삶이 합당하고 매력적인 것이라는 도덕적 정당성이 복합적으로 빛어내는 꿈이라는 공적 자원을 생산해 분배하는 시스템이다. (...) 사회세계에서 진행되는 게임에 대한 믿음인 일루지오를 체화함으로써 행위자는 미래의 꿈(목적)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획득하고, 거기에서 주관적 행복, 사회적 미션, 그리고 실존의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다(김홍중, 2015: 48).”

제3절

라이프코스의 재제도화와 성인기 이행 규범 변화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라이프코스 구조의 탈표준화

1980년대부터 구조이자 규범으로서의 라이프코스가 흔들린다는 인식(George, 2003)이 서구에서부터 확산되었다. 교육-노동-은퇴로 이어지는 순차 국면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틀이 흔들렸다. 단선적 시간관이 가족을 단위로 한 성별 분리의 결과였다는 점도 인식되었다. 학교-노동시장의 연계와 (원)가족-(생식)가족의 연계가 약해졌다는 진단이 많아졌다. 개인은 그 전과는 다른 인간상을 요구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전과는 다른 식으로 시간을 의식하게 되었다.

라이프코스 구조 변동의 성격은 “탈표준화”로 요약된다(Bruckner and Mayer, 2005). 일생이 뚜렷이 구획된 여러 단계로 구성되는 가운데 인구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 이내에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행하는 패턴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각 단계를 뒷받침하고 있던 제도 간 연계도 약화되었다.

첫째, 고등교육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교육-노동시장 연계가 약화되었다. 근대적 라이프코스 체제에서 교육은 노동시장 지위를 배분하는 신호체제로 기능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은 노동시장을 전제했다. 고등교육 확대는 일정부분 직업구조 전문화와 개인의 교육 투자 증가를 반영한다. 직업 구조가 전문화되면서 전문 지식과 훈련의 필요성이 커졌고, 그런 지식을 소유한 이들에 대한 보상도 커졌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육 제도와 노동 제도가 늘 순조롭게 연계되지는 않는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자 노동시장 진입 준비 제도인 교육기관의 역할도 흔들렸다. 흔들림의 한 결과는 교육 기간의 연장이었다. 교육 투자가 수요를 압도하면 교육 자격증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경쟁이 심해진다. 격화된 경쟁은 더 많은 교육 투자로 이어지고, 이는 학력 가치를 더욱 떨어뜨린다(부르디외, 1995: 220-230). 그 결과 교육제도와 노동제도의 연계는 전반적으로 느슨해지고 국지적으로는 촘촘해진다. 이런 상황이 1980년대 이래 나타났다.

둘째, 노동시장 자체도 불안정해졌다(백, 1999). 경기침체와 자동화에 따라 표준화된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서 실업 위험이 커졌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직업 능력의 가치가 퇴색했다. 기업이 노동조직과 과정을 외주화하면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급증했다(와일, 2015; 모리오카, 2017). 통신, 운송, 정보 처리 기술 발달로 생산과 소비가 전 지구적 단위에서 이루어지면서 제도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라이시, 2001).

셋째, 가족 제도도 불안정해졌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었고, 결혼 시점도 다양해졌다. 결혼하더라도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었고, 출산하더라도 시점이 다양해졌다. ‘20대 초중반 결혼-20대 중후반 첫 출산-30대 초중반 마지막 출산’이라는 전형적인 시퀀스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정상성’이 해체되기 시작했다(쿤츠, 2009: 10장).

이러한 추이를 관통하는 현상으로 많은 이들이 여성의 역할 변화를 꼽는다. 교육 수준 상승과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성별 분업에 기초한 가족 주기의 안정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일부 여성은 남성이 단독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지 못하자 노동시장에 나왔다. 일부 여성은 기존 성별 분업 모델을 거부하면서 노동시장에 나왔다. 어느 쪽이건 여성이 가족에 기대야 할 유인이 약화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성도 단독 생계부양자 역할에 부담을 느꼈다. 가족임금 시스템의 약화는 만혼화·비혼화로 이어졌다. 만혼화·비혼화는 다시 가족임금 시스템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를 올리히 백은 “여성 라이프코스의 개인화”(백-게른스하임, 2005)나 (남성의 개인화 국면과 조용해) “2차 개인화” 과정으로 평가한다(백, 1997; 홍찬숙, 2015).

2 생애 규범의 변화

단계별로 제도화되었던 라이프코스가 흔들리면서 각 국면에 부여되었던 의미도 약해지거나 변화했다. 더불어 각 국면의 특정 지위를 잇는 문화적 연계 고리도 약해졌다. 교육과 일, 가족의 의미가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교육제도와 노동시장이 연계되어 있을 때에는 교육 자체의 가치가 강조되었다. 연계가

약해지자 교육의 수단적 기능이 강조되었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노동자와 일에 대한 의미를 흔들었다. 근대적 라이프코스를 지탱한 노동시장의 핵심 원리는 ‘평생 고용’과 ‘가족임금 지급’이었다. 요구되는 노동윤리는 ‘금욕’과 ‘한우물파기’였다(세넷, 2002). 한 기업에 대한 충성과 숙련이 인정받았다. 이러한 태도는 실제 생산성 향상과도 부합했다. 그러나 숙련에 대한 인정이 약해지면서 노동의 의미도, 이상적인 노동자상도 변했다(벡, 1999; 바우만, 2010; 세넷, 2002; 2009). ‘한우물을 파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태도로 여겨졌다. 언제 어디서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평가받았다. 노동자라는 정체성 자체가 의미를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사회가 노동하는 주체가 아니라 소비하는 주체를 원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의미다(바우만, 2010). 노동자(정확히는 생산자)로서 물건에 대해 갖기 마련인 애착을 버리고 늘 새로운 것을 원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졌다(세넷, 2009: 169).

결혼의 의미도 극적으로 변했다(쿤츠, 2009; 벡-게른스하임, 2005). 인구 다수가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방식으로 결혼하고 출산했던 패턴이 약화되며 결혼과 출산은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선택은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이면서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였다. 결혼과 출산의 연계도 약해졌다. ‘동거’도 주요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이성애’를 전제한 결혼 개념에도 균열이 생겼다. 이에 대한 평가는 갈리지만 결혼 자체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이런 변화는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구획되어 각각에 부여되었던 의미 체계를 약화시켰다. 특히 근대적 라이프코스 체제 고유의 특징인 ‘청년기’의 의미를 흐렸다. 라이프코스의 단위는 가족에서 개인으로 쪼개졌다. 이제는 가족이 사회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경험이 아니게 되었다. 개인이 생산과 소비의 기본 단위(‘주체’)로 자리 잡았다.

Buchmann(1989: 76)은 개인이 자기 삶을 조직하는 방식에 탈표준화가 미친 영향을 여섯 가지로 꼽는다. 첫째, 비슷한 속성을 가졌더라도 서로 다른 이력을 밟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비교 준거가 약해졌다. 둘째, 개인의 의식적인 행위에 따라 다양한 이력이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셋째, 개인화된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넷째, 다차원적인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섯째, 장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졌다. 여섯째, 미래보다는 현재를 지향하는 경향이 커졌다.

세넷(2009: 7-9)은 이러한 특징을 이상적인 인간상이 변했다는 말로 요약한다. 키워드

는 ‘시간’, ‘재능’, ‘포기’다. 먼저 시간관 변화를 요구받는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일터를 옮기거나 업무를 바꾸어야 하는 맥락은 ‘하루 단위’의 시간관을 요구한다. 특정 기술의 유효 기간이 점차 짧아지면서 지난날의 업적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이 중시된다. 특수 기능과 기술을 장시간에 걸쳐 계발하는 것에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도 일할 수 있다는, 여태 해 보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다짐이 강조된다. 이 두 가지 변화를 관통하는 능력이 ‘포기’다. ‘어떻게 과거와 단절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전의 경험을 하찮은 것으로 간주하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변화는 개인에게 ‘계획의 불가능성’으로 다가온다. 이는 모두에게 적용된다. 하층에게는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상층은 계획 없이도 문제없이 살 수 있다(세넷, 2009: 98). 그러나 꿈과 결과라는 면에서 사람들의 위치는 양극화된다. 장기 계획을 떠받쳤던 공식적 제도가 해체된 상황에서 각자가 가진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꿈을 실현해줄 자본이 되기 때문이다.³⁾ 이것은 사회적 규범력을 행사하는 “공몽”(共夢/公夢)의 소멸(김홍중, 2015: 53)을 뜻한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할 개연성이 커졌다. 바로 앞 세대의 삶이 준거가 되지 못하고 동년배의 삶 또한 실질적인 준거가 되지 못한다. 그만큼 이질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 “희망과 기회가 일치하는 않는”(부르디외, 2001: 300) 상황은 개인과 사회 수준 모두에서 ‘시간’을 의식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전근대-근대’의 전환과 질적으로 다른 전환이 아니다. 벡은 그러한 변화를 근대화를 추동했던 합리화 논리가 더욱 철저히 구현된 결과로 본다(벡, 1997). 약 200년 전부터 서구에 등장한 ‘자유로운 노동’이라는 이상이나 ‘자유로운 결혼’이라는 합리성의 이상이 구현된 결과가 유연 노동과 비혼이라는 것이다(벡, 1997: 4장과 6장).

3) 그러나 탈표준화를 탈제도화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탈표준화는 더욱 강화된 제도화(표준화)의 결과일 수 있다. 학교와 노동시장, 복지제도에 삶이 배태된 인구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학교를 더 오래 다니는 이들이 많아졌다. 가족임금 시스템이 약화되면서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 공적 부조와 연금 대상자들도 더 많아졌다.

제4절

청년 문제의 등장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청년 문제의 등장은 이러한 사회 변동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대적 라이프코스 체제의 형성·변동 과정을 일종의 보편 현상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변동의 수준과 방식, 속도는 국가별로 다르다(Corijn and Klijzing, 2001; Buchmann and Kriesi, 2011; Eurofound, 2014). 근대화 이전의 사회 제도가 다르고, 근대화의 속도와 방식도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노동시장, 가족, 복지제도 등 주요 제도가 연계되는 방식도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 사례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와 함께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여러 사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어지는 2장과 3장이 역사적 관점에서 청년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면 4장과 5장, 6장은 비교사회적 맥락에서 한국 청년 문제의 성격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장

청년 개념의 기원과 변천

백광렬

제1절 개념사적 검토의 의의

제2절 연구 방법과 자료

제3절 청년 용어 빈도 분석

제4절 단어 관계 분석

제5절 '사회' 현상에서 '문화' 현상으로

제 1절 개념사적 검토의 의의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장은 한국 근대사회에서 ‘청년(靑年)’에 대한 관념의 변천을 ‘용어 활용사’라는 관점에서 개관한다. 어떠한 언어공동체가 특정 용어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생활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관념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특정 언어공동체의 관념이 용어로 나타난 것을 개념이라고 부를 수 있다. 동일한 용어라고 해도 그것이 발화되는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와 기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은 언어의 사회성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일이다. 청년이라는 용어도 예외가 아니다. 시대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 용어가 함의하는 사회적 의미 역시 크게 변화해 왔으리라 생각된다. 연구 목적을 위해 이 장에서는 1920년 창간 이래 비교적 일관된 발행 주체와 논조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는 언론매체인 『동아일보』 기사를 분석 자료로 삼아 20세기 한국사회에서 ‘청년’ 개념의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청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개념으로 정착한 것은 일본을 통해 서구 문물이 들어오던 개항 이후 시기부터다(이기훈, 2014).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나 용어가 존재했겠지만, 그것이 특정 용어의 형태로 인구에 회자된 것은 이 시기 이후에 해당한다. 당대 언론매체에는 수많은 ‘청년’ 키워드가 넘쳐났다. 이후 ‘청년’이라는 용어는 한국사회에서 한국인들의 관념을 이루는 한 요소가 되어 그 자체로서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청년이 해당 사회의 생물학적·사회문화적 재생산의 예정자라는 점은 어느 사회에나 해당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대와 의미가 과거의 청년에게 부여된 것과 같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청년이라는 현상과 개념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 개념은 그 자체가 사회변동을 살펴볼 수 있는 한 지표이기도 하다.

전통시대 ‘청년’의 사회적 관념과 개념어로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해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당대의 가치관이 응집되어 나타나는 유

교 경전(『예기』 등)이나 지배층의 문헌 속에서 ‘소년’ 등의 용어를 검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들은 주로 생물학적 예비 재생산자(혼인)로서 나타난다. 지배층의 경우 예비 군자로서 공부하는 학도로 나타난다(이기훈, 2014). 이미 언급하였듯이 ‘청년’ 개념의 흥수가 생긴 것은 개항 이후이다. 이 시기 청년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 이기훈(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청년 개념을 국가주의와 문명주의, 입신출세주의 등 당시 시대적 조류와의 관련 속에서 논하고 있다. 청년의 역할을 청년이 가진 감수성이라는 능력 자원과 관련 짓고, 이러한 청년의 능력이 시민사회와 계급 주체로 대체될 때까지 사회변화의 주력으로 역할했다고 한다.

2000년대 이후 청년은 하나의 ‘세대’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김선기, 2014). 청년 세대는 ‘청년실업’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좌절의 사회적 아이콘이고 생산이 정체된 사회의 표상이 되었다. 청년 담론이 시작된 한말-식민지기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주역으로 청년들에게 큰 기대와 책임이 부여되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이기훈, 2014). 남춘호·유승환(2021)은 일제 식민지기 이후 최근까지의 청년 담론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연구에서 ‘청년’ 개념이 언론에 등장하는 상대 빈도가 역사상 두 차례 폭발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하나가 일제 식민지기이고 다른 하나가 2000년대 이후, 즉 최근이라고 하였다. 근대의 시작과 ‘끝’ 지점에서 청년담론이 폭증한다는 말이어서 흥미롭다. 또한, 초기 즉 일제 식민지기 청년담론이 청년을 ‘단체’와 관련하여 동원하는 구조였던 것에 반해, 2000년대 이후 청년담론은 청년을 ‘세대’와 관련하여 호명하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 같은 차이가 생겨난 과정에 대해 개념사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단체나 세대뿐만 아니라 계급이나 계층, 지역 등 청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집단과 청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남춘호·유승환(2021)의 연구는 이러한 발견을 언론 기사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관련하여 방법론적으로 함의가 크다. 다만, 남춘호·유승환(2021)의 연구는 주로 1970년 이후 자료를 한국 언론재단의 빅카인즈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식민지기(1920~45)의 자료로는 『조선일보』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의 연속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1920년 창간 이래 비교적 연속적인 위상과 논조를 유지해 온 『동아일보』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동아일보』(1920년 4월 1일 창간)와 『조선일보』(1920년 3월 5일 창간)는 3·1운동 이후 제한적으로

열린 언론 공간 속에 창간된 민족지이고,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한국의 유력 보수일간지이다. 식민지기 발행 부수에 관한 한 『동아일보』(기사 건수 1,001,139개)가 『조선일보』(기사 건수 864,110개)보다 분량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식민지기 연구에 유용할 수 있다. 이를 남춘호·유승환(2021)의 『조선일보』 연구와 비교한다면 보다 입체적인 시대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1970년대 이후 한동안 ‘청년문화’에 관한 담론이 언론에 빈출하여 일찍부터 문화연구 분야의 관심이 되어왔다(김창남, 2004; 주창윤, 2006). 그런데 이 같은 청년문화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지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문명’의 수입원(收入源)이 변화하는 사회변동의 시점에서 이 같은 ‘청년문화’ 담론이 분출했다는 논의가 있지만(김창남, 2004; 이영미, 2016), 당대의 ‘청년문화’ 담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청년’ 담론에 대한 분석이 인상비평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문화와 담론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물질적인 토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논의를 위한 객관적 지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와 그 용어의 활용 맥락은 좋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2 절

연구 방법과 자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텍스트 마이닝 분석

어떤 용어가 등장하여 사회적 공인을 받고 개념으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면 그 용어에는 그 사회 사람들이 그 용어와 관련하여 가지는 관념이 담기게 된다. 예를 들어 1920년대 『동아일보』에는 각 지역 ‘청년단’의 창설 소식이 연일 지면을 도배했는데, 여기에는 당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건설과 관련하여 청년에 대해 걸었던 기대가 나타나 있다. 반면, 오늘날 ‘청년실업’이라는 용어가 일상에 회자되는데, 여기에는 생산성이 정체된 사회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무거운 현실이 투사되어 있다.

이처럼 개념이란 당대인의 관념이 용어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개념은 그 자체로 고정불변한 것이라기보다는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이 어떠한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어휘의 의미는 발화 행위의 상황이나 발화 구조 자체에 영향을 받는다. 때로는 유행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바뀌어 가기도 한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1920년대의 청년 개념과 최근의 청년 개념은 용어가 사용되는 환경이 매우 다르다. 그렇다면 청년 개념 자체가 1920년대와 최근의 양 시기에 다른 측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생물학적 연령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에 투사되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이다. 이 글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동아일보』 텍스트에서 ‘청년’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그 용어가 쓰인 전체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 보는 작업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개념사 연구 방법과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을 활용한다. 개념사 연구는 독일 사회사학과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라는 사상 조류가 만나서 탄생한 분야이다.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으로 대표되는 독일 개념사 연구는 18세기 이래 근대 전환기 독일 사회의 변화상을 개념의 의미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코젤렉은 18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에 있어 많은 용어(근대, 진보, 문명, 혁명 등)의 활용례와 의미가 현저하게 달라짐을 발견하였는데, 전통적 의미의 활용례와 현대적 의미의

활용례가 이 시기 동안 외형상 하나의 동일한 단어 속에서 혼용되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옛것과 새로운 것이 교차하는 시기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단어라 하더라도 예전의 활용례와 새로운 활용례는 서로 다른 별개의 맥락 속에 존재한다. 즉 옛것은 점점 사라져 가고 새것이 점점 대두해 가는 말안장과 같은 분포를 이루는 것이 18세기의 특징이었다고 하였다(나인호, 2011: 1부 3장). 이것은 개념을 통해 당대 사람들의 관념을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개념이란 그것이 활용되는 상황 속에서 의미를 부여 받는다는 전제가 있다. 이는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들의 의미가 앞뒤 전후좌우 다른 용어들과의 관계로 규정된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 장에서는 용어의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보고자 한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빅데이터로 존재하는 디지털 텍스트 속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그것의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을 말한다(Wiedemann, 2015; Scholz, 2019).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진단이 있듯이, 전산 매체를 활용하는 인간의 수많은 활동이 빅데이터로 로그화되고 그것을 저장·처리하는 기술이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빅데이터 속에서 구조를 찾아내는 기법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열풍 속에서 종래 수작업의 대상이었던 인문 정보들도 DB화되어 대중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빅데이터 DB에는 인간의 담화 기록인 텍스트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언어를 의미 단위로 분해하여 시멘틱(semantic)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언어의 구조를 객관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한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은 자연 상태의 언어(자연어)를 단어나 어절 등의 의미 단위로 분해한 것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 의미 단위를 토큰(token)이라고도 칭하는데, 자연어 속에서 토큰을 추출해 내는 것(형태소 분석)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빅데이터인 방대한 분량의 자연어 텍스트를 가지고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분석 장치(형태소 분석기)가 필요하다. 영어 등 구미어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의미 단위의 띄어쓰기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어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대체로 순조롭게 토큰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교착어이고 더구나 띄어쓰기와 복합어 조어법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이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청년회’를 하나의 단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년+회’로 볼 것인지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명사와 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

그것을 기계적으로 인식하기도 쉽지 않다. ‘힘차다’ 같은 형용사와 ‘힘’이라는 명사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한자어가 포함된 문장의 경우 한자어만 따로 처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간단하지 않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빅데이터로서의 한국어 자연어 텍스트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토큰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예시한다. 수작업으로 토큰화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는 대용량 자료를 활용하는 본 연구와는 맞지 않는다. 결국 정보의 손실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절차의 효율성과 결과의 신뢰도 양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토큰을 추출해 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2 분석 시기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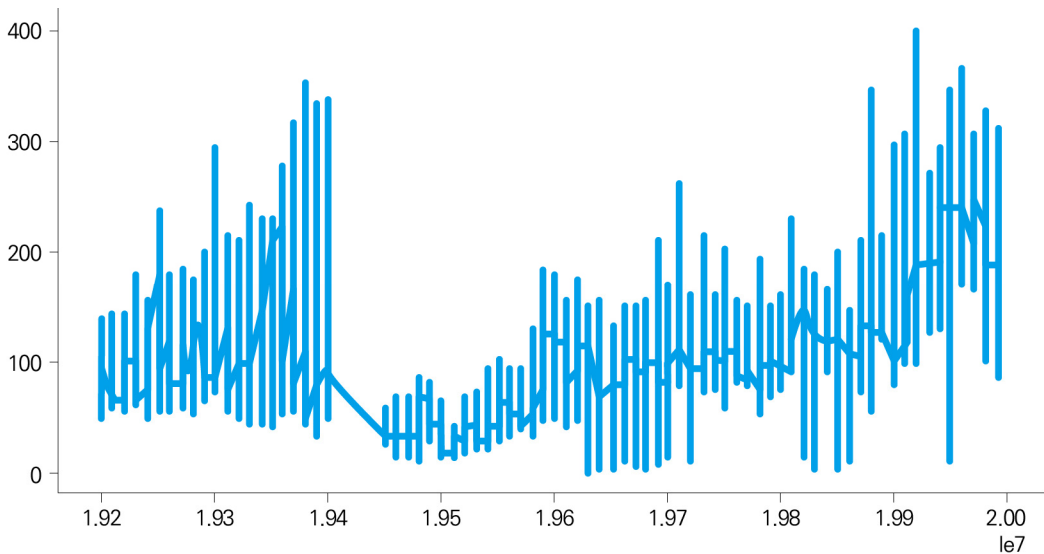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동안 발행 주체가 비교적 일관되었던 신문인 『동아일보』의 기사를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고자 한다.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에 창간하여 정치 상황에 따른 일부 정간(停刊)이나 폐간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대체로 동일한 발행 주체에 의해 연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중앙일간지이다.⁴⁾ 여기서 발행 주체가 ‘대체로’ 동일하다고 한 이유는 어떠한 매체라도 이처럼 오랜 기간을 완전히 동일한 발행 주체 하에 이어져 올 수는 없을 것이란 점을 감안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공적인 여론을 좌우하는 언론에 대한 사주 일가의 오랜 독점과 경영 개입에 공적인 관심과 우려가 제기(김종성, 2020)될 정도로, 발행 주체가 ‘연속적’이다.

위에서 빅데이터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동아일보』 기사도 디지털로 입력되어 일반에 공개되어 있어 원자료 입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 입력 DB가 텍스트 마이닝을 위해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해방 이전 분량의 경우 맞춤법이 통일되지 않아 정확한 토큰을 추출해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글은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행하지는 못한다. 대신, 이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장 내의 모든 품사가 아니라 비교적 명확한 형태로 존재하는 명사만을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4) 『서울신문』이 시계열적으로 더욱 긴 기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발행 주체가 자주 바뀌어서 동일한 신문으로 보기 어렵다. 유사한 기간 발행되고 있는 『조선일보』는 일제 강점기 발행량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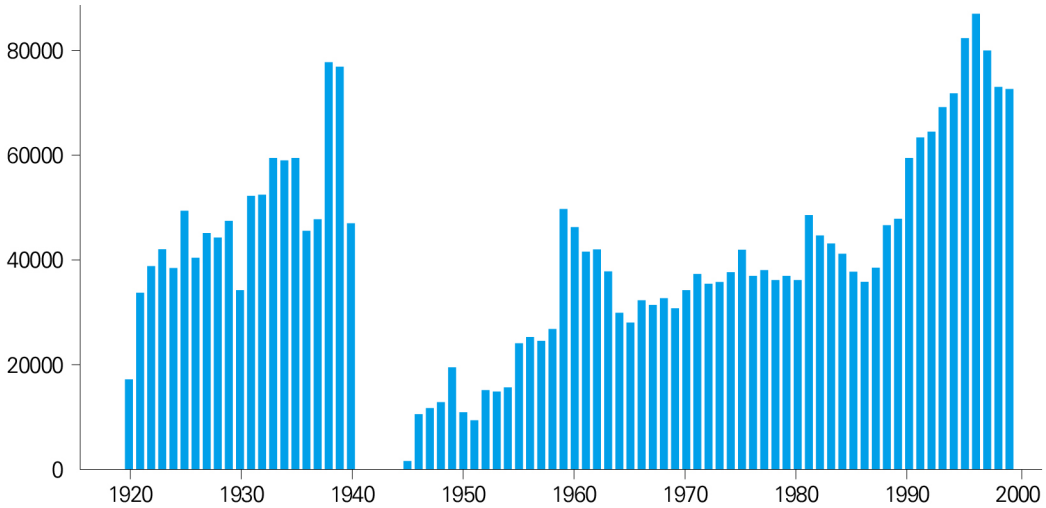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기는 20세기이다. 즉, 『동아일보』가 1920년 4월 1일부터 발행되었기 때문에 분석 시기는 1920년 4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끝 시점을 1999년으로 한 것에 대해 엄밀한 분석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의 초점이 ‘청년’ 개념의 등장과 변화이기 때문에 시작 시점을 ‘청년’ 개념이 등장한 20세기 초로 잡고 그 장기적인 변동 과정의 분석을 20세기까지로 한정하는 것이다. 20세기 이후 경제성장의 만성적 둔화 등으로 인해 청년이 처한 환경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2000년대 이래 청년 담론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이 보고서의 제3장을 참고할 수 있다.

『동아일보』(1920년 4월 1일-1999년 12월 31일) 전체 기사 수는 3,122,438건으로 집계된다.



[그림 2-1] 『동아일보』 1920-1999년 전체 기사 수 및 1일 단위 기사 수 추이

이를 1일 단위로 나누어 보면, 1일 기사 수는 대략 최소 1개, 최대 403개의 분포를 가지며, 시간적 추이는 [그림 2-1]과 같다. 기사의 (양이 아닌) 수에서는 창간 직후인 식민지거나 해방 후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그림 2-2] 연도별 기사 수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그림 2-2] 연도별 기사 수

하지만, 당연하게도 기사 한 건의 크기 차이가 현저하여 이것이 하루치 신문 분량 차이를 만든다.

한편, [그림 2-2]로 보듯이, 기사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적은 (없는) 구간도 보인다. 이를 포함하여 기사 건수에 정치적 상황에 따른 강제 정간, 폐간, 휴간이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기간	내용	사유
1920.04.04. ~ 1920.04.05.	휴간	-
1920.09.26. ~ 1921.01.10.	제1차 무기 정간	사설 '제사문제를 재론하노라' 일본 3종신기 비판
1926.03.07. ~ 1926.04.20.	제2차 무기 정간	국제농민본부로부터의 3·1절 기념 메세지 게재
1930.04.17. ~ 1930.09.01.	제3차 무기 정간	미국 네이션지 주필의 10주년 기념사 게재
1936.08.29. ~ 1937.06.02.	제4차 무기 정간	일장기 말소 사건
1940.08.12. ~ 1945.11.30.	강제폐간	일제강점기
1946.06.27. ~ 1946.07.06.	휴간	경성일보사 인쇄공 파업
1946.09.26. ~ 1946.10.03.	휴간	철도파업
1950.06.28. ~ 1950.10.03.	발행중지	전쟁
1951.01.04. ~ 1951.01.09.	휴간	1·4 후퇴
1955.03.18. ~ 1955.04.17.	제5차 무기 정간	'괴뢰' 오식사건

자료: 동아일보사 홈페이지(<https://www.donga.com/pdf/archive/publish.html>)

[그림 2-3] 『동아일보』 미발행일 정보

1940년대는 일제 말 전쟁기 및 해방 후 정치적 혼란과 한국전쟁 등 정치적 상황에 따른 발행 증지가 분석 대상 기사 건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나머지 기간은 그 정도는 아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분석 시 비율의 조정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다.

3 분석 절차

이 글에서 활용할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 출현 빈도 분석이다. 청년을 위시하여 그와 유사하거나 대치(경합) 관계에 있는 키워드들의 활용 빈도를 살펴본다.

둘째, 공동 출현 용어 분석이다. 시기별로 ‘청년’ 용어와 같은 기사 속에 함께 출현한 용어들을 선별해서 그것의 특성들을 분석해 본다.

셋째,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이다. 공출용어들을 빈도에 따라 다시 정리하여 그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어휘와 주변에 있는 어휘 등을 분류하고 이를 시각화한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개념사를 탐구하기 위한 핵심 작업은 분석 단위와 분석 대상을 확정하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1920년~1999년까지의 동아일보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시기별 비교를 위해 10년 단위로 끊어서 살펴본다. 자료는 기사 1건 단위로 수집되었는데, 기사의 길이는 1줄짜리 사진 설명 기사에서부터 여러 페이지에 이르는 해설기사까지 다양하므로 분석 단위를 표준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길이가 긴 기사의 경우, 1건을 그대로 분석 대상 1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 단어가 들어가는 부분만을 1개의 대상으로 발췌하기로 한다. 즉, ‘청년’ 용어가 나온 부분의 앞뒤 100글자씩을 취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문장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나 맨 마지막 단어만 제외하면 상실되는 단어는 없기에 전체 흐름의 대의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분석 단위에서 분석 대상으로 ‘단어’들을 추출한다. 여기서는 위에 언급했듯이 명사만을 추출하기로 한다. ‘청년’의 맥락을 구성하는 전후 의미는 명사에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관형사나 동사에도 담길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한국어 형태소 분석에서 용언의 의미 변화에까지 신뢰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출하는 명사만으로도 의미 맥락

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석 대상의 추출 과정에 형태소 분석기의 도움을 받았다. 본 연구에 활용된 형태소 분석기는 ‘세종말뭉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KONLPY이다.⁵⁾ 형태소 분석기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말뭉치 학습을 통해 한국어 문장에서 명사 등의 각종 품사를 찾아(tag)준다. 이렇게 1차적으로 단어가 찾아진 결과물을 다시 검수하여 최종적으로 단어 추출을 완료하는 과정을 거친다.

5) 말뭉치(corpus)라는 것은 연구를 위해 언어 텍스트를 컴퓨터 가독형으로 수집해 둔 것을 말한다. 세종말뭉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황용주 최정도(2016)를 참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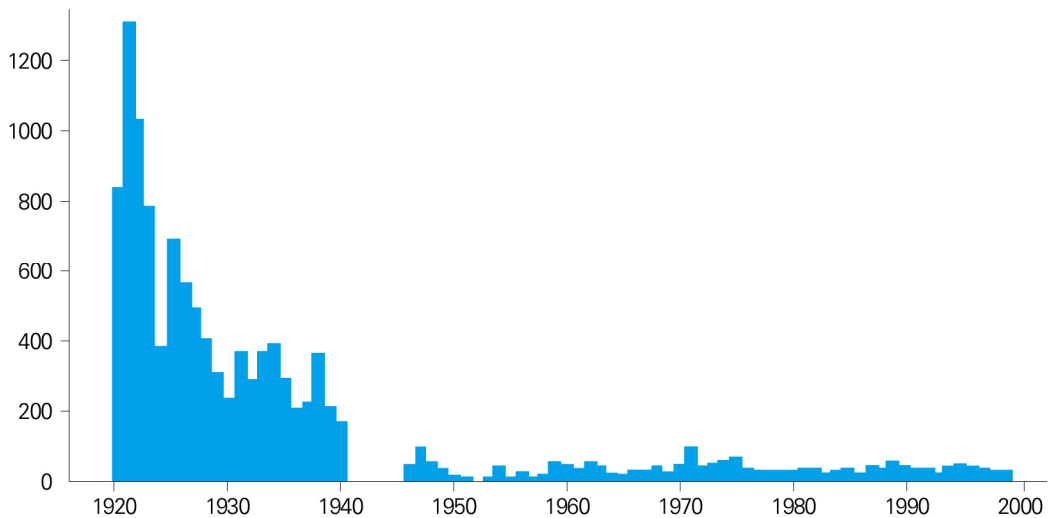
제3절

청년 용어 빈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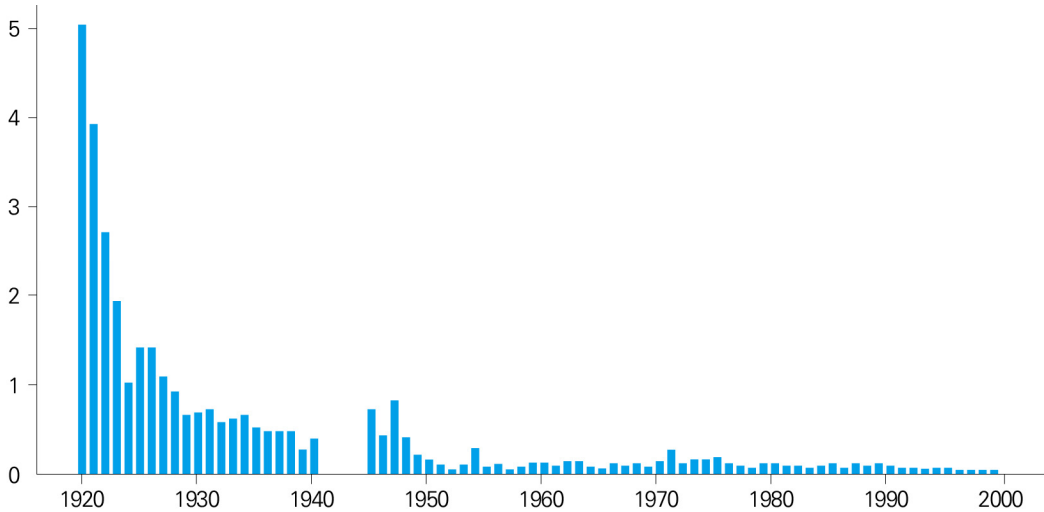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전체 기사 속의 청년 용어

가장 우선적으로, 『동아일보』 기사에는 ‘청년’ 용어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빈도 분석을 해보겠다. 제목에 ‘청년’ 용어가 포함된 기사 수는 11,897개이다. 3백만 건이 넘는 기사 수에 비해 그다지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절대량으로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이다.



[그림 2-4] 제목에 ‘청년’이 들어가는 기사의 연도별 분포(1920-1999년)



[그림 2-5] 전체 기사 수 대비 ‘청년’이 들어가는 기사 비율(1920-1999년)

앞의 두 그림에서 보듯이, 일제강점기와 해방국면에 해당하는 시기(1920~49)까지 ‘청년’이라는 단어의 출현 빈도는 압도적이다. 절대 빈도만이 아니라 전체 기사 수 대비 비율에 있어서도 말할 것이 없다. 특히, 1920년대가 더욱 그러한데, 이것은 아래에서도 살펴 보겠지만, 대부분은 『동아일보』가 각 지역 ‘청년’ 단체 설립과 그들의 활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신문의 시대적 소명 의식과 고유한 지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년’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호명함으로써 이들에게 새로운 사회 건설의 기대를 걸었던 당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일부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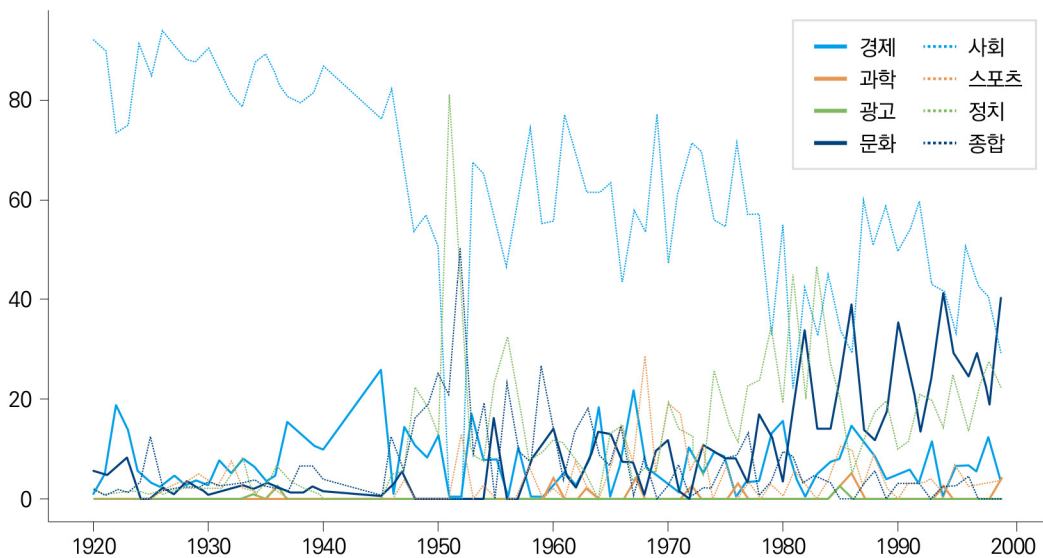
1970년대 일부 시기에 ‘청년’이라는 용어 사용이 증가하는데, 이는 이 시기에 청년문화 논쟁이 벌어진 것과 맞물린다. 이것을 사건적 현상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더욱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 현상으로 보아야 할지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그러나 그간 논의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적어도 『동아일보』에서의 기사 수나 비중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보수 일간지로서의 『동아일보』의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이외의 시기에는 청년 용어가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남춘호·유승환(2021)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다시 청년 용어의 사용 빈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2000년 이전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동아일보』에 따르면, 해방 이후부터 2000년 이전까지 청년이라는 용어 사용의 상대적 빈도는 그 이전에 비해 월등히 적

다. 다시 말해서, ‘청년’이라는 용어는 한말 개화기에 한국사회에 등장하여 1920년대 언론에서 각종 청년단체의 발기와 관련하여 폭발적으로 등장하다가 1950년대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든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건너뛰어 2000년대 이후 다시 폭발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폭발은, 이후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20년대의 ‘청년단체설립’이라는 맥락과는 무관하게 ‘청년실업’ 등의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다. 수면 아래에서 50년간을 지나는 동안 어떤 의미의 변화를 겪은 것일까.

2 지면 종별 청년 용어

1999년까지의 『동아일보』는 창간 시에 구분한 신문 지면 분류를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즉, 창간 당시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정치’, ‘종합’ 면으로 분류하였는데, 이후 ‘과학’, ‘광고’, ‘기타’가 추가된 정도이다. 지면 분류의 기준을 엄밀하게 검토하기는 어려우나, 이것이 신문 편집의 개략적인 방향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할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그림 2-6]은 ‘청년’ 용어가 사용된 기사의 지면 종별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2-6] ‘청년’이 포함된 기사 제목의 지면 종류별 비율 변화

시종일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지면 종은 사회면이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각종 '단체' 결성이 사회면에 보도되기 때문이다. 50년대 그래프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시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했던 시기로 불안정의 원인을 명확히 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70년대 이후 문화면의 비중이 증가한다. 이것은 70년대에 청년문화 관련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김창남, 2004; 주창윤, 2006).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더욱 비중이 증가하다가, 90년대 이후가 되면 한때나마 사회면과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청년과 관련된 기사가 더이상은 '사회'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문화' 현상에 '불과'하게 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한편, 80년대 말-90년대 초에 정치면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은 이 시기 학생운동의 고조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운동은 1984년 유화조치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80년대 정치계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최연구, 1990).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청년' 개념은 '사회' 현상에서 '문화' 현상으로 변화해 갔다는 남춘호 외(2021)의 발견을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후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대 이후 청년 개념은 경제 현상으로도 옮겨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단어 관계 분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기사 제목 분석

‘청년’ 용어는 다른 단어와의 관련 속에서 개념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빈도 분석을 넘어서 청년 개념과 함께 출현하는 단어들(공빈출 단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앞의 빈도 분석에 활용하였던 기사 제목을 가지고 그 속에 청년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겠다.

1920년대에 청년 용어는 6,805개의 기사 제목에 사용되었다. ‘청년’과 함께 사용된 명사는 모두 27,436개이다. 중복이 많으므로 이를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청년’이다.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어휘는 ‘청년회’인데, 이외에도 ‘각지’, ‘총회’, ‘강연’, ‘연합’, ‘련맹’ 등 대다수의 고빈도어는 각종 단체와 관련된 단어들이다. 또, ‘기독교’, ‘천도교’ 등은 이러한 단체의 배경으로서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원산’, ‘광주’, ‘마산’ 등의 지역명도 지역의 단체와 관련된 단어이다. 남춘호·유승환(2021)도 지적하였듯이 일제 식민지기에 청년은 주로 ‘단체’와 관련하여 호명되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표 2-1] 기사 제목에서 '청년'과 함께 나오는 단어: 1920년대

	0	1	2	3	4	5	6	7	8	9
1	청년	동맹	녀자	정기회	원산	사건	천도	준비	광주	발
2	청년회	창립	활동	여자	괴	사업	임사회	입	토론	평양
3	단체	대회	련맹	결의	소인	거	신흥	혁신	마산	전도
4	각지	집회	운동	주최	발기	이	지부	건축	문제	축구
5	총회	회관	조선	위원회	리	임시	연합회	창	양회	명
6	회	기타	천도교	기염	를	강습	순회	기성회	성황	고여
7	강연	검거	로	면려	야학	국제	운동회	의법	대구	웅변
8	기독교	엿윗	기념	개최	권총	청년당	과	금지	일	음독
9	의	연합	단	강	회토	은	통영	목포	설치	입회
10	창입	조직	정기	임원	자살	논회	서울	토론회	무산	부산

주: 세로 1~10까지 숫자는 일의 자리, 가로 1~9의 숫자는 십의 자리임. 예를 들어, '동맹'은 11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임.

간간이 권총, 자살 등의 용어가 이 시대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청년의 자살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시대였다. 42번째 '괴'는 대부분 '괴청년'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깊다. 신상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의 범법적 존재에 대해 청년이라는 기표가 관련되고 있는 것 역시 이 시기의 특징이다.

[표 2-2] 기사 제목에서 '청년'과 함께 나오는 단어: 1930년대

	0	1	2	3	4	5	6	7	8	9
1	청년	회	코	룩	여명	오명	이명	등	결항	강연
2	검거	대회	회관	력사	입	학교	동맹	시	농구	함
3	이	철도	권총	과	련맹	도	렬차	출현	김	피검
4	의	괴	은	조선	돌연	취조	습격	액수	총회	단체
5	자살	를	사건	롱구	야학	일	사명	잠입	미수	출동
6	청년회	비관	명	석방	농촌	연합	전	액사	청년실업	본사
7	활동	일명	경찰	쇄	중건	삼명	평양	실직	량	기독교
8	단	강습	닉사	조직	기독교	리	결성	우승	운동	전조선
9	로	개최	부	생활	청년당	투신	중앙	녀자	후원	체포
10	음독	주최	삭	긴장	학생	격문	또	합	천도교	신병

주: 세로 1~10까지 숫자는 일의 자리, 가로 1~9의 숫자는 십의 자리임. 예를 들어, '동맹'은 11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임.

1930년대에 기사 제목에 '청년'이 들어가는 사례 수는 2,926개이고, 거기에 청년과 더불어 15,503개 명사가 공출한다. 1930년대는 1920년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단체 관련 단어보다 사회 실정을 나타내는 단어의 순위가 상승한다. 한편 '학생'이 등장하였다(40위). '농촌'이나 '야학'은 '농촌계몽운동'이나 '야학운동' 등 총독부 및 민족운동 단체가 벌인 운동들과 관련이 있다. 즉, 당대의 사건사적 현상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표 2-3] 기사 제목에서 '청년'과 함께 나오는 단어: 1940년대

	0	1	2	3	4	5	6	7	8	9
1	청년	이	설치	대동 청년단	중견	총회	보국	모집	배	무장
2	의	대회	녀자	입	녀	철도	표창	파견	기생	발
3	단	민족	기념	기독교	연소	연합	애국	협의	검거	독학
4	결성	훈	여자	단원	지부	코	담화	간부	한국	대원
5	청년회	거행	훈련소	강습	성황	조직	해	포노	동년	응변
6	조선	로	청년당	과	선발	씨름	성명	약부	월동	입소
7	단체	자살	조선민족 청년단	개최	전국	후원	학생	전적	괴	농가
8	회	통합	음독	농촌	회관	고여	단부	독촉	일생	하라
9	단결	동맹	운동	주최	건국	훈련	확충	농구	나	명부
10	를	은	련맹	연맹	소	성대	우량	력사	통영	씨

1940년대에는 청년이 포함된 기사제목이 405개다. 2,345개 명사가 공출한다. 1930년대부터 등장한 학생은 67위이다. 애국, 보국 등 일제 말기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조선민족청년당', '대동청년단' 등의 단어가 빈출한 것으로 나오는 것은 이 신문이 이 시기에 있었던 특정 사건의 진행 과정을 연일 보도한 것 때문이다.

한편,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1940년대는 일제 말기의 전쟁과 해방 후 혼란기, 한국전쟁 등으로 전체적인 기사 건수 자체가 부족한 시기이다. 이 때문에 '청년' 단어를 포함하는 기사 수 역시 그 절대량에서 부족해진다. 1930년대에 2,926개이던 것이 1940년대에는 405개로 1/7 이상 감소한 것이다.

[표 2-4] 기사 제목에서 '청년'과 함께 나오는 단어: 1950년대

	0	1	2	3	4	5	6	7	8	9
1	청년	명	운동	단결	통합	기자	간부	총	어제	신분
2	의	인	구속	코	동독	세	년	일본	오	피쇄
3	이	대표	추진	국회	도	부	변사	민주당	공산	부명
4	단	단체	조직	학생	책	닉사	서울	성황	재건	룩
5	대회	방위	항	체포	장관	대책	등	결성	사선	출신
6	로	결정	명단	리	반공	통일	괴	집	편입	의기
7	청년회	렬차	회	손	원호	해제	해	일명	재일	포항
8	를	수용	석방	발족	입	폐막	상의	기구	묘연	앞서
9	한국	환영	사설	회의	사건	의거	과	즉사	교	리박사
10	은	국제	자유	입대	애국	통영	또	담	월	실련

1950년대에 청년이 포함된 기사는 205건이고, 이 기사들의 제목에 청년과 함께 공출하는 명사는 모두 1,259개이다. 위에서도 계속되는 경향으로 '학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34위). 시대적 특징으로서 '반공', '통일' 등의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라는 단어가 청년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20위)하였다(1920년대에 한 번 등장하기는 했지만 낮은 순위였다). 이것은 한국전쟁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5] 기사 제목에서 '청년'과 함께 나오는 단어: 1960년대

	0	1	2	3	4	5	6	7	8	9
1	청년	연행	자살	변사	습격	정신	동맹	녀	범	대표
2	이	를	등	자	수배	집	범인	사회	민주	부
3	의	월	변시	경찰	은	절명	산	패싸움	행방	삭
4	구속	로	자유	원	기도	탈출	발기	난동	동독	앞
5	두	검거	청년당	만	체포	혁명	재건	사	처녀	정치
6	명	도	운동	김	준	민정당	세계	음독	연맹	작품
7	국제	대회	네	년	돌	닉사	사설	첫	요청	령
8	청년회	사건	씨	부장	대학	호텔	소녀	개	미수	립건
9	세	한국	과	봉	정부	권총	석방	쇄	구국	초청
10	일	서독	단	데모	강도	월남	독	착란	즉사	조직

1960년대에 '청년'이 언급되는 기사는 341건이며, 기사 제목에 청년과 함께 출현한 명사는 2,012개이다. '학생'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계 있는 '대학'은 48위에 올라 있다. 시대상을 나타내는 말로는 '데모'의 등장을 눈여겨 볼 수 있다(40위). 1950년대부터는 '국제'라는 단어가 7위로 급부상한다. '자유'(24위), '민주'(82위) 등의 단어도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방 후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고, 4·19 이후 서구적 정치 사조의 영향이 점점 커지던 현실이 청년에 대한 관념과 교차하고 있다.

[표 2-6] 기사 제목에서 '청년'과 함께 나오는 단어: 1970년대

	0	1	2	3	4	5	6	7	8	9
1	청년	민정	서울	일본	평양	체포	단	주인	사무실	봉사
2	명	여명	로	화염병	서독	사랑	석방	집	김	방화
3	청년회	북한	작가	폭행	연	대학생	파견	녀	씨	인전
4	기독교	회	전국	경찰	불교	당사	회원	총회	조직	전화
5	협	의	소	년	영	도전	비난	캠프	광주	교유
6	중공	학생	등	세	불	난입	테니스	망명	레이건	간
7	시위	세계	두	일	창	단체	총재	속	칼	피살
8	대회	이	운동	구속	국제	사	피습	대표	독사	학
9	괴	한국	성명	위	전	습격	수배	학교	교황	새
10	백	축전	사건	미술	탈출	연행	성당	교회	만난	술

1970년대에 '청년'이 언급되는 기사는 482건이며, 공출 명사는 3,333개이다. 민주가 6위이고, 시위가 7위이며, 국제가 48위이다. 대학생이 53위로 등장한다. 기대와는 달리, '청년문화'와 관련된 기사 제목은 그다지 등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7] 기사 제목에서 '청년'과 함께 나오는 단어: 1980년대

	0	1	2	3	4	5	6	7	8	9
1	청년	민정	서울	일본	평양	체포	단	주인	사무실	봉사
2	명	여명	로	화염병	서독	사랑	석방	집	김	방화
3	청년회	북한	작가	폭행	연	대학생	파견	녀	씨	인전
4	기독교	회	전국	경찰	불교	당사	회원	총회	조직	전화
5	협	의	소	년	영	도전	비난	캠프	광주	교유
6	중공	학생	등	세	불	난입	테니스	망명	레이건	간
7	시위	세계	두	일	창	단체	총재	속	칼	피살
8	대회	이	운동	구속	국제	사	피습	대표	독사	학
9	괴	한국	성명	위	전	습격	수배	학교	교황	새
10	백	축전	사건	미술	탈출	연행	성당	교회	만난	술

1980년대에 '청년'이 들어가는 기사 수는 351건이며, 기사 제목에는 2,401개 명사가 공출하고 있다. 시위가 7위이고, 학생이 16위이다. 북한, 화염병, 구속, 성당, 교회 등 시 대상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표 2-8] 기사 제목에서 '청년'과 함께 나오는 단어: 1990년대

	0	1	2	3	4	5	6	7	8	9
1	청년	단	꿈	소	미술	창	주년	인간	남북	정치
2	명	삶	밤	자살	위	기독교	사	주연	딸	발
3	한국	사랑	사회	대상	국제	해외	우리	감사	로	독
4	대회	화염병	학생	돌	영	불	교포	서울	집단	의소
5	청년회	문화	피습	개최	한인	지구	당사	불교 청년회	친구	전화
6	씨	여명	중	녀	김	북	폭행	유럽	집	세미나
7	일	조직	민	세	연	회	그린	사무실	요청	군
8	등	민주	봉사	오후	창립	북한	전	귀가	망명	전국
9	의	운동	회장	대구	때	행사	내각	결혼	편지	시대
10	전태일	괴	세계	협	길	선언	영화	입양	백	전환

1990년대에 '청년'이 들어가는 기사 수는 382건이며, 공출 명사는 2,819개이다. '화염병', '남북' 등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단어가 등장하며, '학생'은 24위를 차지한다. '문화'가 15위로 등장하는데, 순위권에 문화가 등장한 것은 1990년대 들어 처음 나타난 현상으로 괄목할 만한 사실이다.

2 본문 분석

앞에서 1920-1999년간 '청년'이 등장하는 기사 제목 11,897개를 활용하여, 그 속에 청년과 함께 등장하는 명사들을 분석해 보았다. 3백만 건에 이르는 전체 기사에 비해 11,897개 사례는 그다지 많다고 하기 어렵다. 사례 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 기사 제목이 아니라 본문도 분석해 보았다. 즉 기사 제목만이 아닌 제목을 포함한 기사 본문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언급된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했다. 이는 기사 제목만으로 분석한 데에 따르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로도 작용할 것이다.

이 같은 원칙으로 먼저 청년이 본문에 단 1회라도 등장하는 기사를 추출해 보면 모두 80,056건이다. 여기서 본문은 제목까지도 포함한다. 즉, 제목에만 '청년'이 들어가는 경우도 이 수치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기사 속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단 일회성으로만 언급될 수도 있고, 여러 번 반복노출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량이 매우 많은 기사에 청년은 몇 번 등장하지 않거나 극단적인 경우 단 1회 등장하기도 하므로 기사 전체의 모든 단어를 청년과 공출하는 단어라고 파악하는 것은 신뢰도를 낮출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청년 앞뒤로 (한자를 포함하여) 15자까지의 범위 내의 단어만을 공출어휘로 추출하기로 한다. 공출어휘 검색범위를 앞뒤 15자(합해서 30자)로 한 것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사 제목의 평균 길이(한자 포함 글자 수)가 25자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길이로 선정한 것임을 밝힌다. 다시 말해서 제목 정도의 길이로서 '청년'과 유관한 의미의 문장이나 어절을 이를 가능성이 높은 분량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 단어는 모두 142,480개이다. 그리고 '청년' 단어의 앞뒤 15자 범위 내에 등장하는 공출 명사를 모두 추출해 보면, 904,849개이다. 이제 이들을 앞선 기사 제목 분석에서와 같이 10년 단위로 끊어서 비교해 본다.

[표 2-9] 본문 청년 주위의 공출 명사: 1920년대

순위	어휘	출현횟수	순위	어휘	출현횟수
1	(‘청년’, 'Noun')	34301	11	(‘하야’, 'Noun')	2437
2	(‘청년회’, 'Noun')	22320	12	(‘중앙’, 'Noun')	2155
3	(‘의’, 'Noun')	6821	13	(‘단체’, 'Noun')	2055
4	(‘회’, 'Noun')	4595	14	(‘은’, 'Noun')	2008
5	(‘회관’, 'Noun')	3881	15	(‘이’, 'Noun')	2000
6	(‘동맹’, 'Noun')	3788	16	(‘단’, 'Noun')	1676
7	(‘를’, 'Noun')	3061	17	(‘기독교’, 'Noun')	1639
8	(‘로’, 'Noun')	2654	18	(‘청’, 'Noun')	1571
9	(‘조선’, 'Noun')	2482	19	(‘녀자’, 'Noun')	1541
10	(‘주최’, 'Noun')	2480	20	(‘종로’, 'Noun')	1478

[표 2-10] 본문 청년 주위의 공출 명사: 1930년대

순위	어휘	출현횟수	순위	어휘	출현횟수
1	(‘청년’, 'Noun')	27151	11	(‘검거’, 'Noun')	1775
2	(‘청년회’, 'Noun')	6299	12	(‘하야’, 'Noun')	1763
3	(‘의’, 'Noun')	3180	13	(‘명’, 'Noun')	1706
4	(‘일’, 'Noun')	2271	14	(‘조선’, 'Noun')	1629
5	(‘이’, 'Noun')	2264	15	(‘회’, 'Noun')	1626
6	(‘동맹’, 'Noun')	2134	16	(‘주최’, 'Noun')	1368
7	(‘단’, 'Noun')	2129	17	(‘종로’, 'Noun')	934
8	(‘회관’, 'Noun')	2118	18	(‘은’, 'Noun')	916
9	(‘기독교’, 'Noun')	1919	19	(‘그’, 'Noun')	839
10	(‘중앙’, 'Noun')	1788	20	(‘를’, 'Noun')	833

1920년대에 모두 30,297개의 기사가 ‘청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전체 80,056개 중에서 38%에 해당한다. 또, 전체적으로 청년 단어 주위의 904,849개 명사 토큰 중에서 353,705개의 명사 토큰이 20년대에 몰려 있다. 이는 기사 제목과 유사한 경향이다. 이 시기 ‘청년회’, ‘단체’, ‘중앙’, ‘조선’, ‘회’ 모두 청년이 ‘사회단체’로서 호명되

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도 기사 제목 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흐름은 1930년대 까지 이어진다(255,486개 명사 토큰).

‘종로’, ‘기독교’ 등의 어휘가 청년 주위에 몰려 있다는 것은 청년 열풍을 주도한 것이 특정 종교의 청년단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2-11] 본문 청년 주위의 공출 명사: 1940년대

순위	어휘	출현횟수	순위	어휘	출현횟수
1	(‘청년’, 'Noun')	5268	11	(‘기독교’, 'Noun')	287
2	(‘단’, 'Noun')	737	12	(‘종로’, 'Noun')	242
3	(‘청년회’, 'Noun')	562	13	(‘기독교’, 'Noun')	213
4	(‘의’, 'Noun')	545	14	(‘를’, 'Noun')	207
5	(‘단체’, 'Noun')	533	15	(‘동맹’, 'Noun')	185
6	(‘이’, 'Noun')	433	16	(‘애국’, 'Noun')	176
7	(‘일’, 'Noun')	404	17	(‘하야’, 'Noun')	175
8	(‘조선’, 'Noun')	387	18	(‘시’, 'Noun')	175
9	(‘회관’, 'Noun')	359	19	(‘결성’, 'Noun')	175
10	(‘회’, 'Noun')	327	20	(‘명’, 'Noun')	166

1940년대 역시 기사 제목 분석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46,309개 명사 토큰이 추출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사량 자체가 부족하므로 ‘청년’ 단어의 출현 횟수 또한 매우 부족하다. 1920-30년대와 마찬가지로 청년회, ‘단’ 등의 단체를 나타내는 단어가 공출하고 있다. ‘애국’이 16위인 것은 시대상(일제 말기)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기사 제목에서 본 바와 다르지 않다.

[표 2-12] 본문 청년 주위의 공출 명사: 1950년대

순위	어휘	출현횟수	순위	어휘	출현횟수
1	(‘청년’, 'Noun')	9820	11	(‘애국’, 'Noun')	406
2	(‘의’, 'Noun')	1246	12	(‘회관’, 'Noun')	368
3	(‘이’, 'Noun')	1173	13	(‘회’, 'Noun')	364
4	(‘단’, 'Noun')	885	14	(‘조선’, 'Noun')	361
5	(‘청년회’, 'Noun')	747	15	(‘삼’, 'Noun')	358
6	(‘단체’, 'Noun')	736	16	(‘기독교’, 'Noun')	287
7	(‘일’, 'Noun')	707	17	(‘그’, 'Noun')	286
8	(‘명’, 'Noun')	496	18	(‘기독교’, 'Noun')	280
9	(‘은’, 'Noun')	463	19	(‘종로’, 'Noun')	269
10	(‘를’, 'Noun')	413	20	(‘과’, 'Noun')	258

1950년대의 공출 단어는 83,120개이다. ‘청년회’가 ‘청년’과 순위권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이것은 청년이 청년회만이 아니라 다른 단어와 결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전히 단체와 결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40년대에 ‘애국’이라는 단어가 16위에 있었지만, 50년대에도 여전히 그보다 더 높은 11위에 위치한다. ‘애국’+‘청년’이라는 기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례를 더 깊이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애국’이 ‘청년’과 관련된 것이 40년대 이후의 경향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요구로 등장한 청년이라는 개념이 국가주의적으로 전유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이기훈(2014)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이 우파적인 관념과 결합한 시대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표 2-13] 본문 청년 주위의 공출 명사: 1960년대

순위	어휘	출현횟수	순위	어휘	출현횟수
1	(‘청년’, 'Noun')	8127	11	(‘씨’, 'Noun')	291
2	(‘의’, 'Noun')	1034	12	(‘한국’, 'Noun')	278
3	(‘이’, 'Noun')	1014	13	(‘은’, 'Noun')	277
4	(‘청년회’, 'Noun')	501	14	(‘학생’, 'Noun')	220
5	(‘명’, 'Noun')	472	15	(‘삼’, 'Noun')	217
6	(‘그’, 'Noun')	402	16	(‘세’, 'Noun')	204
7	(‘일’, 'Noun')	399	17	(‘명의’, 'Noun')	197
8	(‘가량’, 'Noun')	353	18	(‘청년당’, 'Noun')	194
9	(‘를’, 'Noun')	317	19	(‘과’, 'Noun')	181
10	(‘단’, 'Noun')	317	20	(‘것’, 'Noun')	180

[표 2-14] 본문 청년 주위의 공출 명사: 1970년대

순위	어휘	출현횟수	순위	어휘	출현횟수
1	(‘청년’, 'Noun')	7628	11	(‘씨’, 'Noun')	248
2	(‘이’, 'Noun')	834	12	(‘단’, 'Noun')	248
3	(‘명’, 'Noun')	694	13	(‘학생’, 'Noun')	245
4	(‘의’, 'Noun')	633	14	(‘를’, 'Noun')	243
5	(‘청년회’, 'Noun')	531	15	(‘일’, 'Noun')	227
6	(‘한국’, 'Noun')	345	16	(‘은’, 'Noun')	212
7	(‘등’, 'Noun')	318	17	(‘세’, 'Noun')	208
8	(‘그’, 'Noun')	292	18	(‘명의’, 'Noun')	190
9	(‘가량’, 'Noun')	279	19	(‘총’, 'Noun')	178
10	(‘회’, 'Noun')	254	20	(‘것’, 'Noun')	170

1960년대에는 67,586개의 명사 토큰이 추출되었다. 단체를 나타내는 단어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으며, 20위권 내에 처음으로 ‘학생’이 등장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점차로 단체와 관련되어 이해되던 청년이 ‘학생’과 관련되어 표상되는 것으로 변해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1970년대는 65,111개의 명사 토큰이 추출되었다. 학생(13위)이 등장하는 등 60

년대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70년대에 ‘청년 문화’ 논쟁이 있었지만, 텍스트 속에서는 청년과 더불어 ‘문화’가 자주 노출되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70년대에 ‘문화’가 30위로 등장한다. 이것은 60년대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현상이다. 이 시기가 되어 비로소 ‘청년 문화’라는 개념어가 일상화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전히 이는 사건사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타 ‘민주’ 등의 단어가 60년대 이후 등장한 것도 기사 제목 분석에서 본 것과 유사하다(60년대 87위, 70년대 32위). ‘국제’, ‘사회’ 등의 단어도 등장하고 있다.

[표 2-15] 본문 청년 주위의 공출 명사: 1980년대

순위	어휘	출현횟수	순위	어휘	출현횟수
1	(‘청년’, 'Noun')	9349	11	(‘세계’, 'Noun')	327
2	(‘학생’, 'Noun')	833	12	(‘그’, 'Noun')	325
3	(‘이’, 'Noun')	773	13	(‘축전’, 'Noun')	322
4	(‘명’, 'Noun')	760	14	(‘제’, 'Noun')	304
5	(‘등’, 'Noun')	580	15	(‘씨’, 'Noun')	290
6	(‘청년회’, 'Noun')	549	16	(‘연합’, 'Noun')	274
7	(‘회’, 'Noun')	503	17	(‘조직’, 'Noun')	269
8	(‘한국’, 'Noun')	500	18	(‘총’, 'Noun')	250
9	(‘의’, 'Noun')	483	19	(‘운동’, 'Noun')	247
10	(‘여명’, 'Noun')	339	20	(‘서울’, 'Noun')	246

1980년대에는 83,980개의 명사 토큰이 공출하고 있다. 청년=학생이라는 관념이 일반화되어 갔다고 여겨진다. 일제 식민지기에 없던 ‘한국’이라는 단어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수위권으로 등장하는 것이 관찰된다. 국제가 아니라 ‘세계’가 11위로 등장하고 있으며, ‘운동’, ‘서울’ 등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식민지기에 ‘종로’라는 지역명이 수위권에 있었던 것에 비할 때, ‘서울’의 위상이 전국적으로 보통명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종로는 이 시기 특정 종교의 청년 단체명과 연관성이 깊다. 서울도 이와 유사한 청년 단체의 지역명인 경우가 많다). ‘민주’는 30위이다.

[표 2-16] 본문 청년 주위의 공출 명사: 1990년대

순위	어휘	출현횟수	순위	어휘	출현횟수
1	(‘청년’, 'Noun')	7955	11	(‘의’, 'Noun')	326
2	(‘청년회’, 'Noun')	663	12	(‘단체’, 'Noun')	271
3	(‘이’, 'Noun')	623	13	(‘층’, 'Noun')	261
4	(‘등’, 'Noun')	547	14	(‘것’, 'Noun')	235
5	(‘한국’, 'Noun')	489	15	(‘연합’, 'Noun')	234
6	(‘조직’, 'Noun')	380	16	(‘단’, 'Noun')	227
7	(‘명’, 'Noun')	360	17	(‘세’, 'Noun')	221
8	(‘그’, 'Noun')	357	18	(‘회장’, 'Noun')	211
9	(‘학생’, 'Noun')	353	19	(‘를’, 'Noun')	202
10	(‘회’, 'Noun')	343	20	(‘여명’, 'Noun')	200

1990년대에는 75,163개의 공출 명사가 추출되고 있다. 다시 청년회라는 단어가 다수 출현한 것이 눈에 띄지만 다른 단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다. 학생이라는 단어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이 표에는 보이지 않지만, ‘문화’(36위, 162회), ‘사랑’(36위, 162회) 등의 단어가 공출하기 시작했다. 문화는 70년대 등장한 이래 80년대(51위)에 이어 지속적으로 청년과 결합하고 있다.

이상에서 『동아일보』 기사 본문 전체를 대상으로 청년이라는 단어와 공출하는 단어들을 찾아보았다. 이 작업으로 확인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기사 제목에서 분석한 결과와 유사했다. 하지만 일부 현상에서는 그 결과가 보다 극명하게 확인된다.

제5절 '사회' 현상에서 '문화' 현상으로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장에서는 '청년' 개념에 대한 20세기 한국 사회의 관념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920-1999년의 언론 기사(『동아일보』)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통해 청년 용어로 나타난 당대의 관념과 이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청년 개념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편의상 10년을 단위로 나누어 본 분석에 따르면, 청년 용어를 둘러싼 변화는 크게 1920-30년대, 1940-50년대, 1960-70년대, 1980-90년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1920-30년대는 단연 '청년단체'의 시대였다. 이 시기는 청년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고 퍼져나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청년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맥락은 청년단체였다. 청년단체와 더불어 청년과 공출하는 것으로 상위권에 랭크된 용어로 기독교, 종로 등이 있었다. 이것은 이러한 청년단체들이 주로 기독교 계통에 의해 운영된 정황을 말해준다. 한편, 이와 더불어 괴청년, 자살, 검거 등의 용어도 청년과 공출하고 있는 것은 당대 청년들이 처한 어두운 상황을 보여준다. 청년의 자살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40-50년대는 정치적 상황의 영향이 매우 컸다. 우선, 신문 자체의 미발행이 많아서 분석 대상의 규모가 작는데, 이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공출어에 '애국'이 20위권 안에 등장하는 점이 30년대, 40년대 모두에 공통적인데, 이는 다른 시기에는 없는 현상이다. 청년에 드리운 국가주의의 그림자를 보여준다. 청년은 사회를 새롭게 건설해 나갈 존재로 큰 기대를 모으면서 호명되었으나, 전쟁시기가 되면서 애국과 결합하는 말이 되었고, 이는 해방 후로도 이어져서 40-50년대 내내 청년은 애국과 더불어 나란히 떠오르는 용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60-70년대가 되면 청년 주변을 맴돌던 '단체' 관련 용어들이 사라진다. 대신에 등장한 용어는 '학생'이다. 학생이라는 공출어는 80년대에는 가장 많이 공출하는 어휘가 된

다. 80년대만큼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90년대에도 여전히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9위). 즉, 학생이라는 단어가 청년과 더불어 등장한 것이 60년대 이후이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화되어 마침내 학생은 ‘청년회’보다도 더 자주 공출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로써 보건대, 청년은 일제 식민지기에 ‘사회단체’를 형성하는 주체로 호명되었다가 해방 이후 ‘학생’과 서서히 기의를 공유하는 개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방 이후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청년’ 용어가 잘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학생’ 등의 용어가 청년을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청년이 문화와 관련하여 논의된 것이 1970년대의 주요 특징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통기타와 청바지, 생맥주 등으로 대표되는 70년대 ‘청년문화’에 관한 논의가 자주 회자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동아일보』에 등장한 기사 수를 통해 볼 때, ‘청년’이 문화와 관련하여 논의된 것은 더 이후의 일이다. 물론, ‘청년 문화’와 관련한 새로운 조어법이 70년대에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관념으로 활발히 사용된 것은 더 늦은 시기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남춘호·유승환(2021)의 발견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청년은 세대와 결합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을 종합한다면, 청년에 대한 지난 20세기 한국사회의 관념은 도입→제도화→다양화(혹은 ‘폭발’) 등 생성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청년’을 둘러싼 한국인의 관념은 개항 이후 특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청년’이라는 용어를 만나 ‘청년’ 개념을 형성시켰다. 이후 이 개념은 한국사회의 일부가 되어 존재해 왔다. ‘청년’이 처음 등장하여 자리를 잡을 무렵인 1920-30년대에 청년은 새로운 단체(society!)를 만드는 강한 열정을 지닌 존재로 그려졌다. 그러나 1940-50년대에는 청년에 ‘애국’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결부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학생’이라는 말이 청년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때부터 청년이라는 말의 등장 빈도는 학생이라는 말의 등장 빈도가 늘어가는 것에 비례해서 줄어갔다. 오늘날에도 청년이 ‘□□청년단’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어는 어딘지 모르게 시대에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한때는 ‘청년학생’이라는 말이 유행했지만, 오늘날 그러한 조어는 자주 쓰이지 않는다.

이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년이라는 개념은 시대상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아 왔다. 이것은 청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사회의 요구 등이 청년 개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의 쓰임과 공출 단어 등을 살펴봄으로써 청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청년과 특별히 결부된 몇 가지 특정 개념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괴~’, ‘권총’ ‘자살’ ‘미수’ 등의 어휘는 비교적 초기 시기에 청년과 공출하였는데, 이는 신상을 파악할 수 없는 익명의 범죄적 존재에 대해 ‘청년’이라는 기표가 활용되었음을 의미하며 하나의 시대 사회상을 보여주는 징후일 수도 있다. 이 장에서 발견의 결과로 언급한 ‘학생’이나 ‘문화’ 등의 공출어 역시 각 사례와 더불어 심층 분석을 해 본다면 시대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관념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이 점을 시도하지 못한 것은 대량의 자료를 정리하는 시론적 성격을 지닌 본 연구의 한계다.

제3장

청년 담론의 구조

이상직·조해인

- 제1절 2000년대의 청년 담론
- 제2절 분석 방법
- 제3절 청년 용어의 시기별 분포
- 제4절 단어 관계 분석
- 제5절 경제적 (비)주체로서의 청년

제 1절

2000년대의 청년 담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장에서는 앞 장 분석의 연장선에서 2000년대 이래 ‘청년’에 대한 시대적 관심의 성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앞 장에서와 같이 『동아일보』 기사를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22년 사이 ‘청년’을 제목에 담은 신문 기사의 제목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2000년대 청년 담론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1990년대 초중반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앞 장과 분석 시기가 일부 겹치지만 하위 시기 구분의 성격이 다르기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장의 분석 시기는 지금은 Z세대의 부모가 된 1970년대생이 청년이었던 1990년대부터 MZ세대가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까지의 대략 30년이다. 1990년대 초는 시기 그 자체로도 청년 담론 형성에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 정치적 투쟁에 참여하던 대학생들이 이 시기에 대중문화 소비 주체로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기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 담론이 정치적 성격에서 문화적(소비적) 성격으로 전환된 시기이기도 했다.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연구가 등장한 시기도 이 무렵이다. 1993년에는 ‘신세대’라는 말이 유행하며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라는 상징적인 제목의 책이 출간되기도 했는데, 이는 청년이 문화적 주체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위기가 바뀐 계기가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였다. 1998년 경제위기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져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주목받았다. 이후 청년은 경제적(문제)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요컨대 청년 담론 전환의 1차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1990년대 초중반이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청년 담론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전 시기까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즉 1990년대 초중반이라는 시기는 2000년대 이후 청년이 ‘경제적(비)주체’로 자리매김되는 맥락과의 비교 시기로서 의미를 갖는다.

하위 분석 기간을 정권에 따라 구분한 것은 정권의 성격 변화도 청년 담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권에 따라 담론의 특징이 전적으로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정치적 동원 대상으로 청년을 호명하는 방식과 그와 연계된 청년 정책의 기조는 정권에 따라 일정 수준 달랐다. 이를 고려해 김영삼 정부가 시작된 해인 1993년을 기점으로, 정권별로 기간을 구분하여 담론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권별 정책이 '청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 거시적으로 살펴본다.

제2절 분석 방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이 장의 분석 기법으로 활용한 것은 텍스트 마이닝이다. 텍스트 마이닝은 데이터 마이닝의 한 종류로,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이나 관계를 추출해내는 과정이다. 신문사들의 상반된 입장이나 이념을 분석하거나 신문 기사 주제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표현을 분석하고, Corpus를 활용해 담론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주제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해 ‘청년’이 다루어진 주제의 시대적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는 여럿 있었으나 정권별로 분류하고 정권별 정책과 연관을 짓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국내 신문의 기사 중 ‘청년’이 제목에 언급된 기사를 수집해 텍스트 마이닝으로 직접 분석하였다. 신문사별 정치 성향을 고려해 보수 및 진보 언론을 대표하는 신문사를 균등하게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지면의 종류에 따라 기사를 분류하고 시대별로 새롭게 만들어진 지면 종을 추출해 내는 작업이 동아일보 아카이브에서 가장 용이해 본 연구에서는 동아일보 아카이브를 활용했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관련 주제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정권 시기별로 키워드 연결망을 그려 정권에 따라 달라진 청년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1993년부터 2022년 6월 사이에 제목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동아일보 기사 4,107건을 수집했다. 각 정권에 따라 변화해 온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3년부터 역대 정부의 임기 기간별로 자료를 분류했다.



[그림 3-1] 분석 과정

[그림 3-1]은 분석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수집된 문서 집합체를 전처리했다.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은 문장을 띄어쓰기한 문장으로 변환하고, 한글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해 불용어나 문서 전체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노이즈 등을 제거했다. 그 후 텍스트를 토큰(token)이라는 작은 단위로 분리하는 함수를 뜻하는 ‘토큰나이저’를 활용해 문장을 단어 단위로 분해했다. 토큰화 작업 후에도 노이즈 데이터를 체크하고 불용어 사전을 업데이트하면서 다시 정제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2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먼저, 토큰화된 단어들의 빈도수를 분석해 역대 정부별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그렸다. 모든 문서에 ‘청년’이 언급되어 있기에 시각화 작업의 최종 단계에서는 ‘청년’을 삭제했다. ‘청년’을 제거하지 않으면 워드클라우드상에서 ‘청년’의 비중이 너무 커 다른 단어들의 비중을 구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키워드 추출과 키워드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위해 다음의 작업을 거쳤다.

키워드 네트워크는 키워드를 나타내는 노드(node)와 키워드 간의 링크를 나타내는 엣지(edge)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기사 제목에 등장한 키워드 간에 링크를 만들고 다른 기사에서 동일한 키워드를 잇는 링크가 발견될 경우, 본 링크 즉 엣지(edge)의 가중치(weight)를 1씩 추가했다. 키워드 간의 연결 정보를 이용해 클러스터링(clustering) 작업을 하기 위해 Louvain algorithm을 이용했다. 이 방식은 1) modularity(모듈성) 계

산법과 2) 네트워크의 계층적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큰 네트워크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확도 높은 클러스터링 작업을 수행한다. 클러스터(cluster) 내부 링크(link)와 클러스터 간 링크의 밀도를 비교해 모듈성 변화량을 나타내고, 이 변화량이 가장 큰 쪽으로 상승하는 클러스터에 노드를 배속시키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반복 작업을 수행한다(modularity, 모듈성 계산). 이후 생성된 클러스터를 하나의 블록(block)으로 합쳐 노드(node)로 취급하고 링크 가중치(link weight)도 합쳐 하나의 링크로 표현한 뒤, 만들어진 새로운 네트워크(network의 계층적 구조 이용)로 다시 모듈성 변화량을 체크한다. 이런 작업은 모듈성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된다.

클러스터링의 최종 산물은 Gephi 소프트웨어의 Force Atlas 2를 적용해 시각화했다.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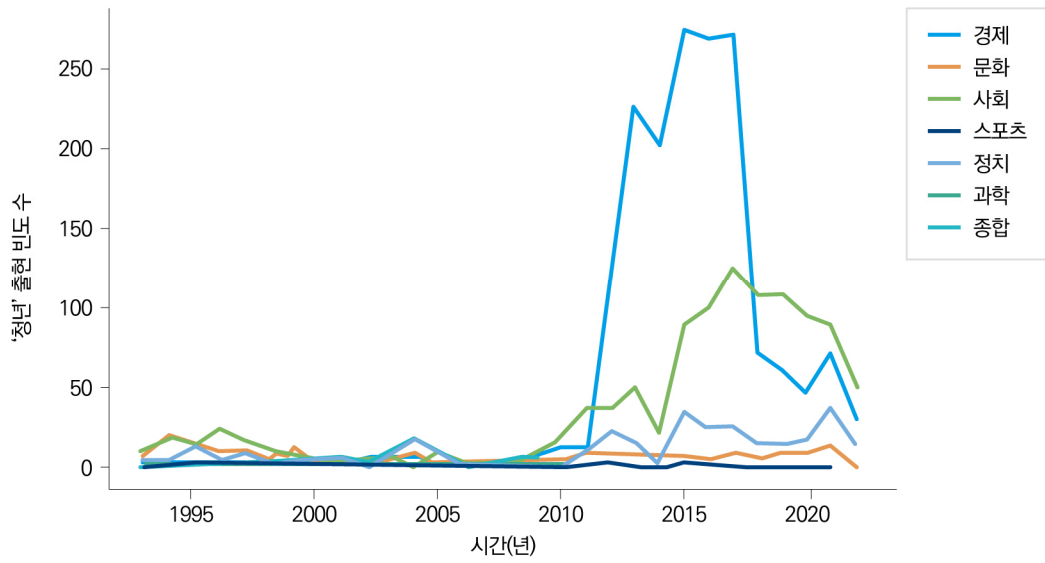
청년 용어의 시기별 분포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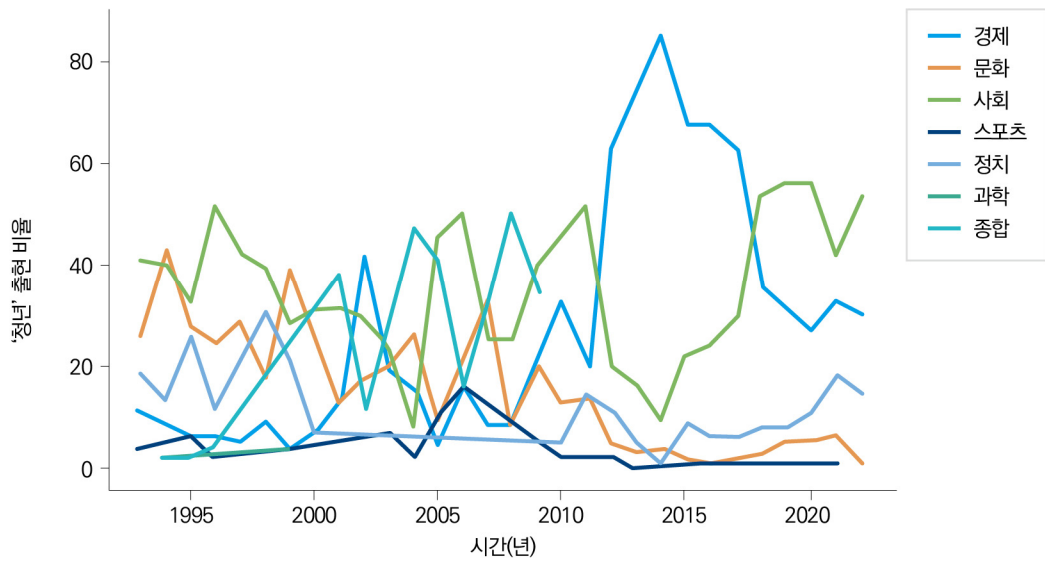
1 지면 종별 청년 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1990년대 이전 시기와 달리 2000년도에 들어서면 지면 분류에서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사회’, ‘정치’, ‘경제’와 같은 전형적인 지면 분류를 넘어서 ‘청년 특성기’, ‘청년드림’, ‘청년이라 죄송합니다’, ‘2020 행복원정대: 워라벨을 찾아서’,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청년드림/서비스 가시 뽑아야 일자리 새살 돋는다’와 같은 ‘청년’을 타겟으로 한 지면의 종류가 새롭게 등장한다.

제2장에서 조사한 지면 종에 한정해, 해당 시기에 지면 종별 기사 수 및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그림 3-2]와 [그림 3-3]). 절대 숫자의 변화로 봤을 때, 2010년에 들어서면서 경제면에 ‘청년’의 출현이 급증함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회’, ‘정치’면이 뒤를 이었다. 지면 종별 ‘청년’ 출현의 비율을 보았을 때 1993년부터 2010년까지는 ‘사회’면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10년 이후가 되면 ‘경제’면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문화’면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에 높았다가 시간이 흐르며 꾸준히 줄어들었다.



[그림 3-2] 지면 종별 '청년' 출현 빈도 변화



[그림 3-3] 지면 종별 '청년' 출현 비율 변화(%)

2 워드 클라우드

다음으로 시기별로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글자 크기가 가장 큰 단어)를 살펴보자.



[그림 3-4] 시기별 워드 클라우드

정권을 단위로 하위 시기를 구분해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보았다. 1993년부터 1997년 사이에는 ‘청년회’가,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청년실업’이, 2008년과 2012년 사이에는 ‘일자리가, 2013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취업’과 ‘일자리’의 빈도수가 높았다. 1998년 경제위기 전과 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999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가장 자주 언급된 ‘청년실업’이 2008년도부터 ‘일자리’와 ‘취업’으로 대체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제4절 단어 관계 분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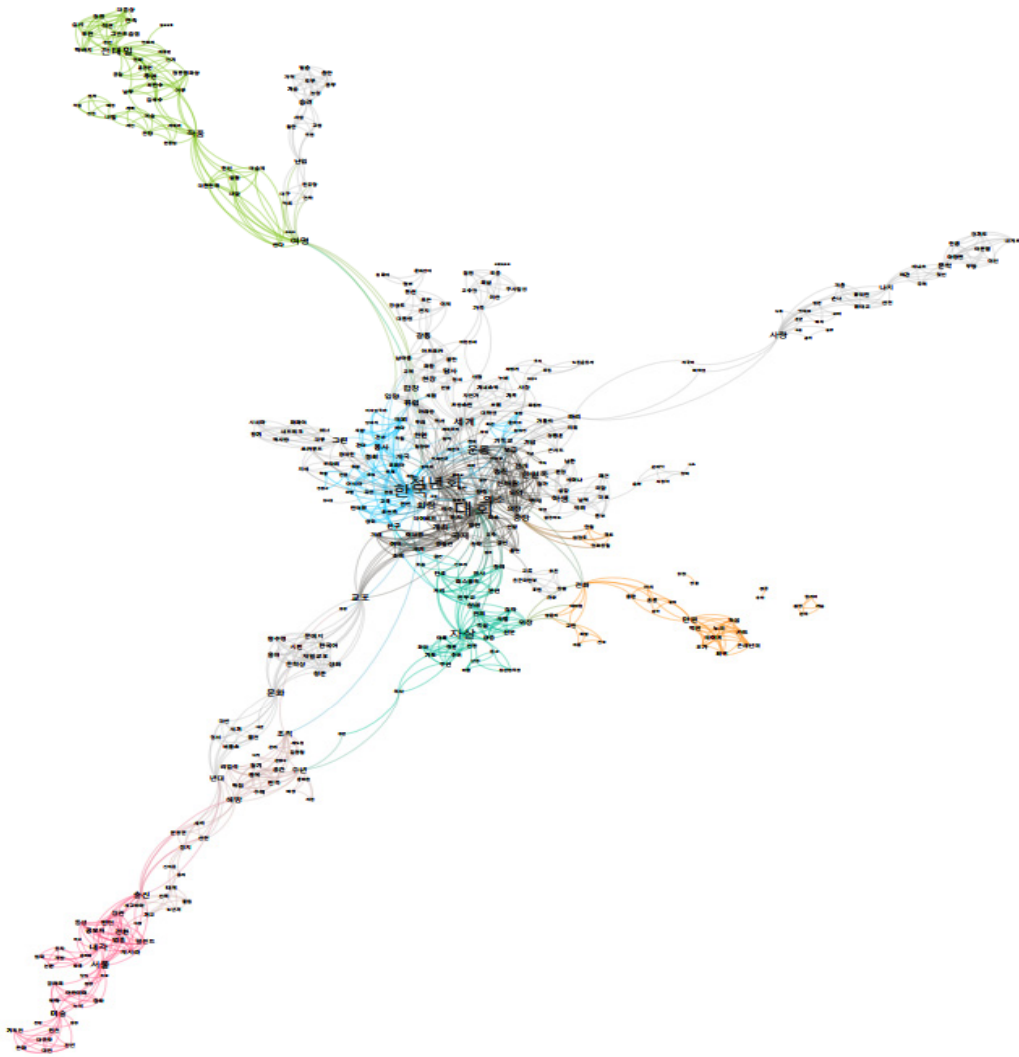
1 전체 네트워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해 키워드 간 관계를 조사했다. 먼저, 연결 정도를 확인해 특정 단어가 단어 관계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중심적 역할을 할수록 ‘중심성’이 크다고 하는데, 네트워크 구조상에서는 해당 단어가 중심에 놓이게 된다. 두 단어가 상호 연결되어 빈번하게 동시 출현하는 횟수가 많다면, 둘을 연결하는 선의 크기가 굵게 그려진다. 앞에서 빈도수가 높은 ‘핵심어’를 확인했다면, 여기에서는 특정 단어의 ‘중심성’을 확인한다. 추가 분석으로 클러스터링 작업 후 만들어진 키워드 군집(community)의 특성을 분석해 단어 군집 간 관계와 군집 내 단어 간 관계도 살펴보았다.

1993년부터 2002년 사이([그림 3-5], [그림 3-6], [그림 3-7])에는 ‘한국’과 ‘청년회’가 높은 중심성을 지닌다. 그리고 중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문화’와 ‘영화’가 빈번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시기별 차이도 있다. 1993-1997년에는 청년회-운동과 청년회-한국을 연결하는 선이 굵었던 반면, 1998-2002년에는 청년회-한국의 연결선이 얇아졌고 청년회-사회라는 단어 조합이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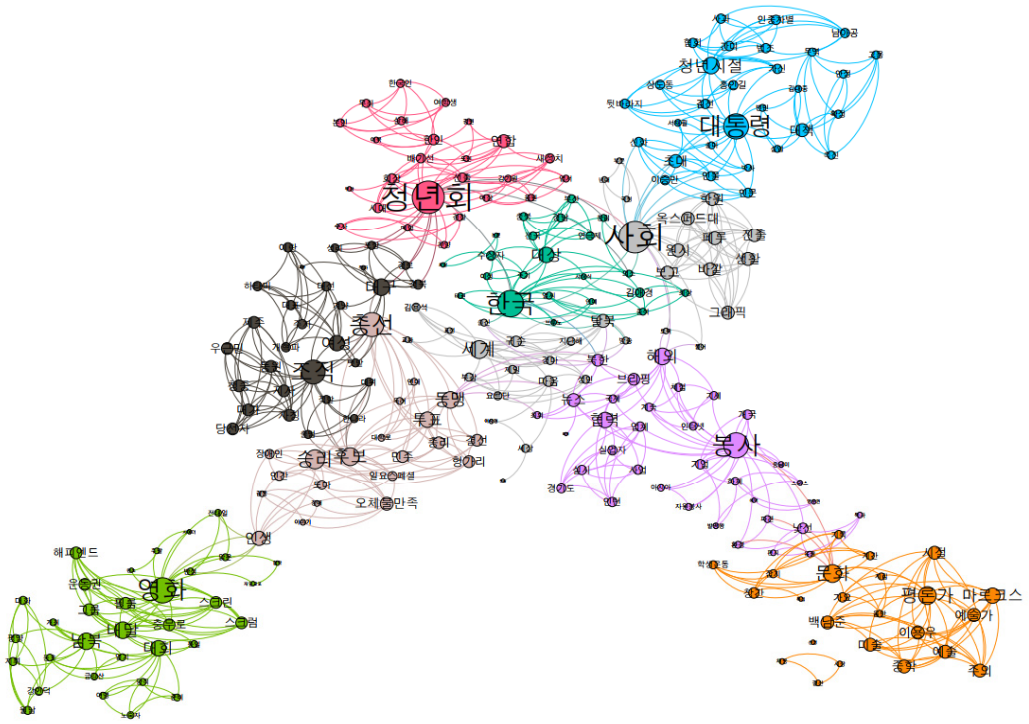
2003-2007년에 들어서면 ‘청년회’는 이제 외곽에 위치하고 ‘청년실업’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청년실업’은 ‘사회’, ‘취업’, ‘창업’, ‘경제’와 연결된다([그림 3-8]). 청년이 당시 한국의 경제사회 측면 전반에서 대두된 이슈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2012년에는 ‘청년실업’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일자리’, ‘취업’, ‘창업’이 중심으로 위치한다. 처음으로 ‘미래’, ‘진로’가 해당 군집의 오른쪽 윗부분 중심어로 드러난다([그림 3-9]). 이와 같은 현상은 2013-2017년에도 동일하다. 이외에 확인할 수 있는 단어는 ‘희망’, ‘수당’ 등이다([그림 3-10]). 2018-2022년에는 중심에 ‘지원’, ‘취업’, ‘일자리’가 있다([그림 3-11]). 2013-2017년에는 ‘일자리’, ‘취업’, ‘창업’이 서로 다른 색의 각기 다른 군집에

위치했으나 2018-2022년에는 ‘지원’, ‘취업’, ‘일자리’가 같은 군집으로 묶여 있다. ‘창업’은 2018-2022년에 와서 상대적으로 중심 지위를 잃었다. 하지만 속한 군집(파란색) 속에서는 많은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핵심어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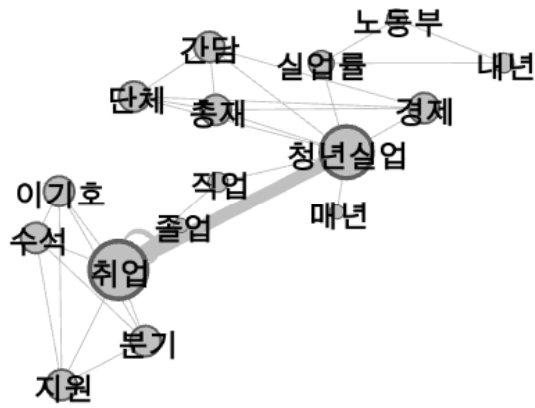


[그림 3-5] 1993-1997 키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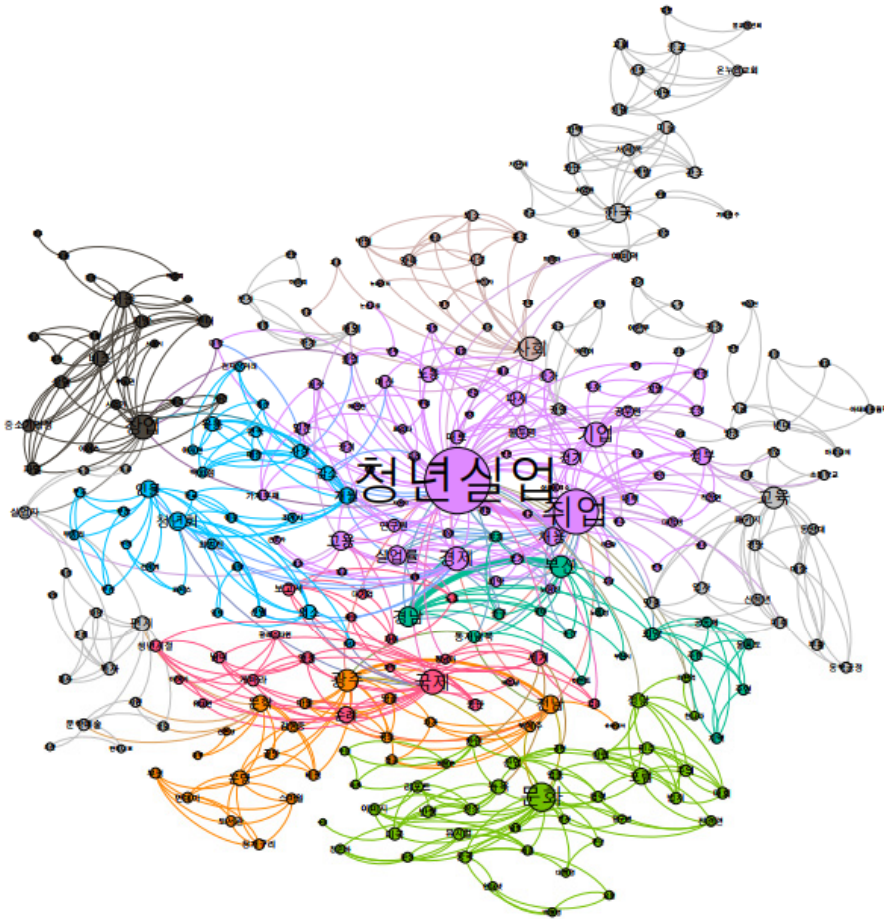
6) [그림 3-6]과 [그림 3-7]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워드 클라우드 그림에서 같은 기간(1998-2002년)에 확인된 ‘청년실업’ 단어가 위 네트워크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청년실업’은 [그림 3-6]에 담겨 있는 메인 군집과는 분리되어 있는 작은 군집에 위치한다. 이는 ‘청년실업’이 당시 높은 빈도수를 보인 다른 키워드와 연계되기보다는 분리된 토픽에서 언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군집은 그림의 해상도를 고려해 [그림 3-7]로 별도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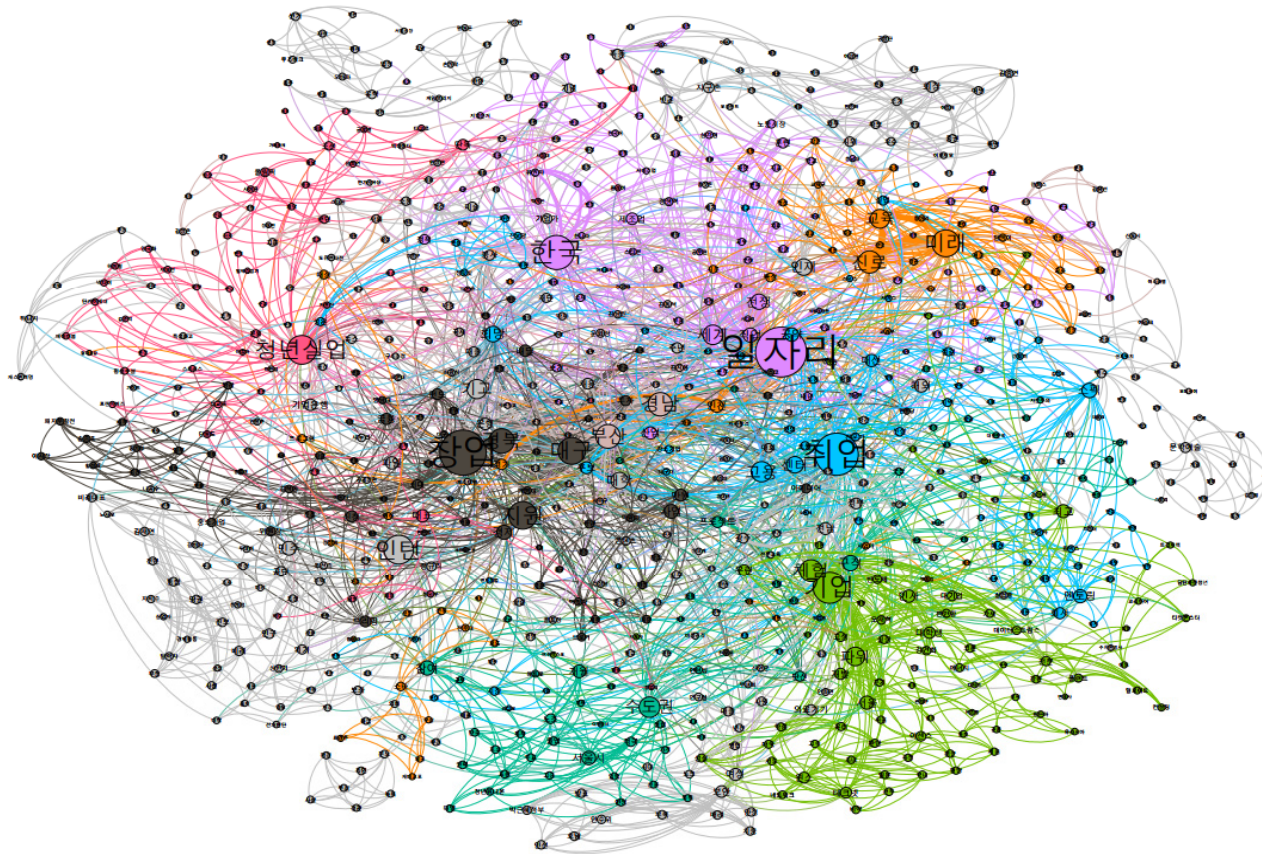
[그림 3-6] 1998-2002 키워드 네트워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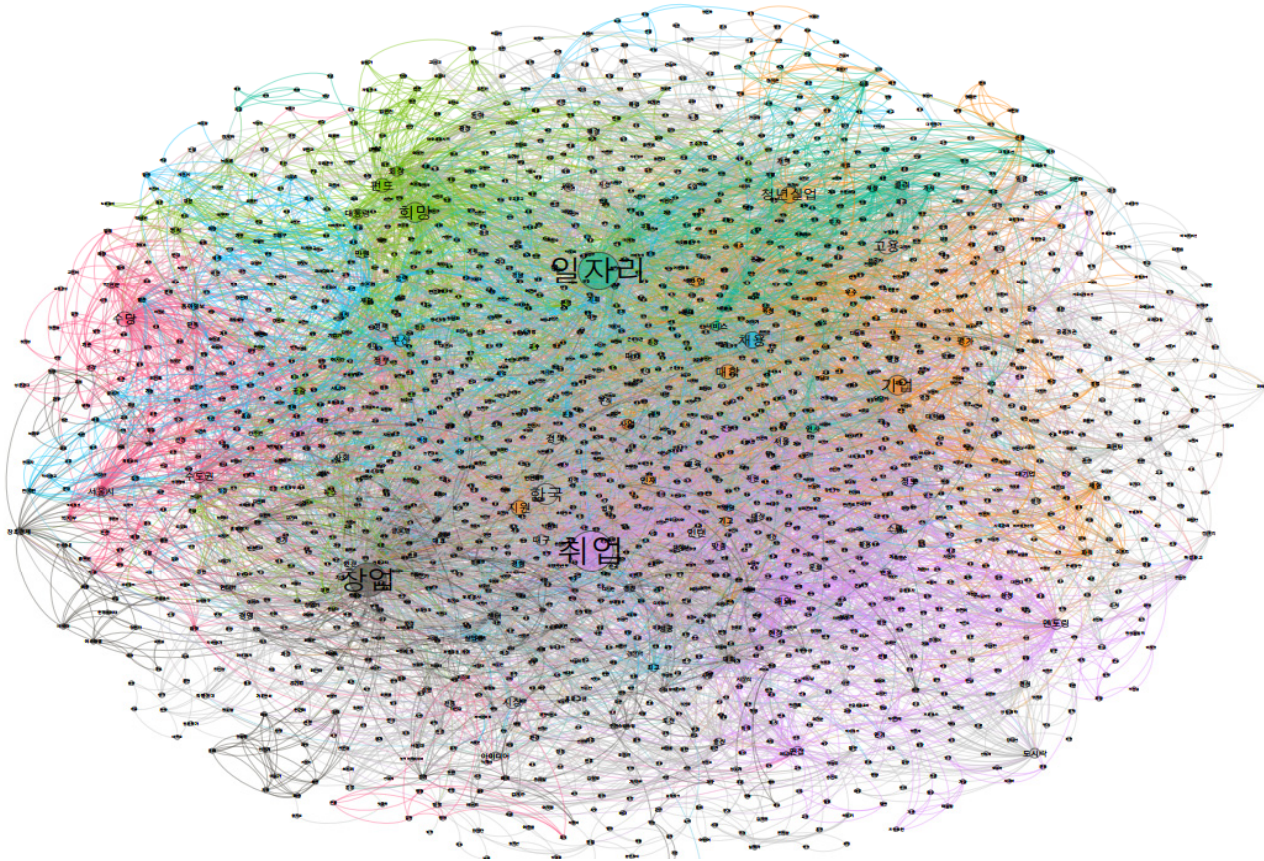
[그림 3-7] 1998-2002 키워드 네트워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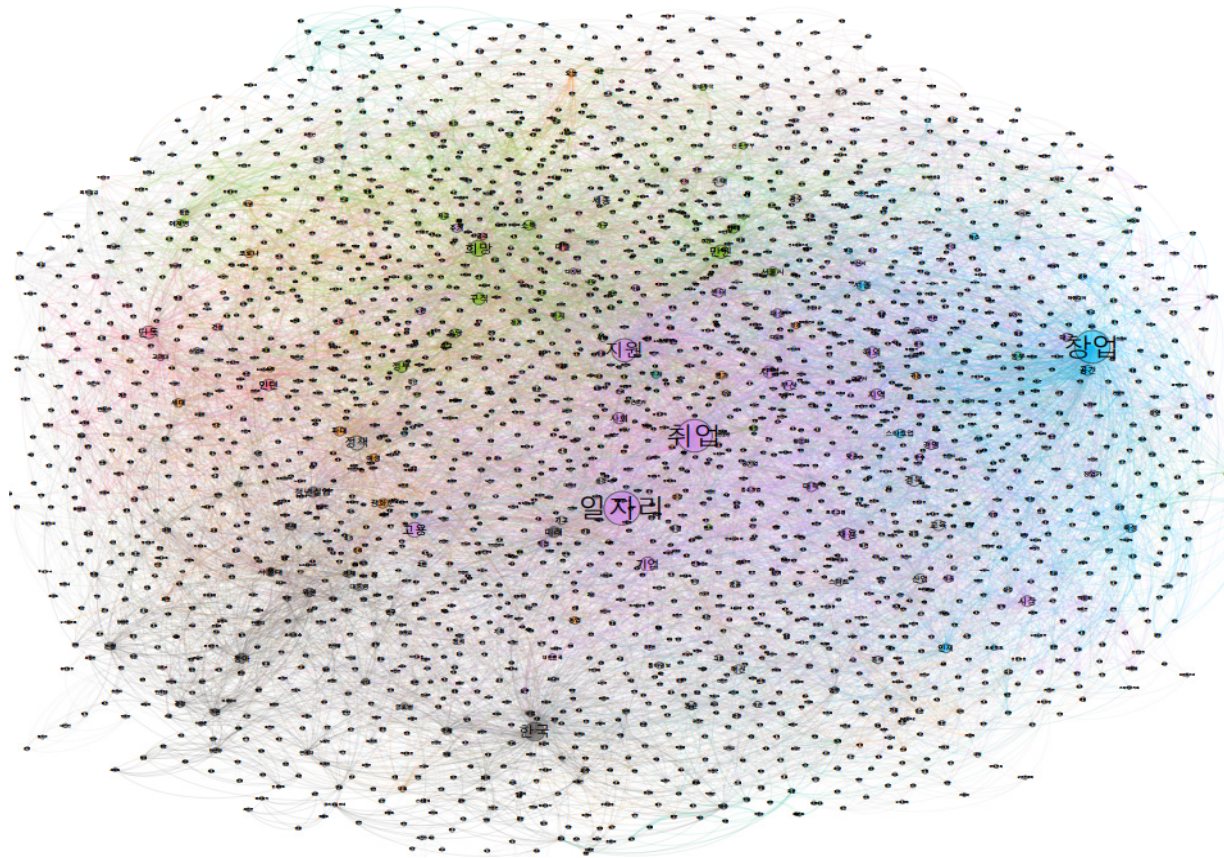
[그림 3-8] 2003-2007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3-9] 2008-2012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3-10] 2013-2017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3-11] 2018-2022 키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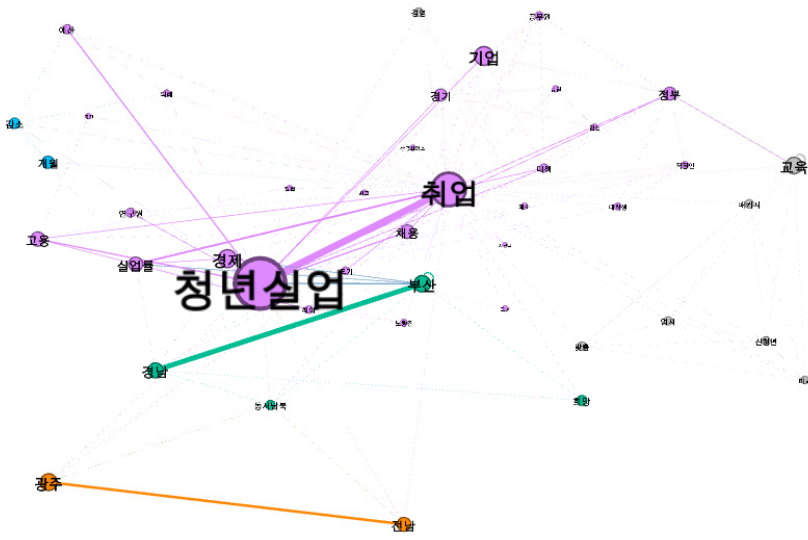
2 부분 네트워크

가.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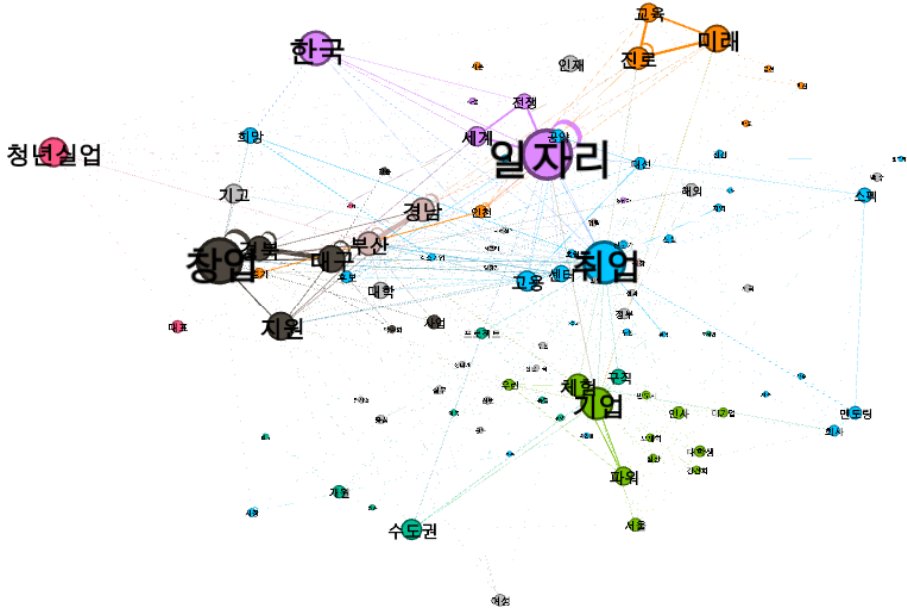
그렇다면 초점을 좁혀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구조를 살펴보자. 시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발견되는 단어인 ‘취업’, ‘청년실업’, ‘사회’가 시대별로 어떠한 네트워크를 갖는지 확인했다.

먼저 ‘취업’을 중심으로 했을 때 주변 키워드의 조합이 시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았다([그림 3-12]~[그림 3-15]). 전체 변화를 살펴보면, 2003-2007년에 비해 이후 시기에 주변 키워드의 수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단어 간의 연결도 더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이 다른 분야에서도 높은 빈도로 언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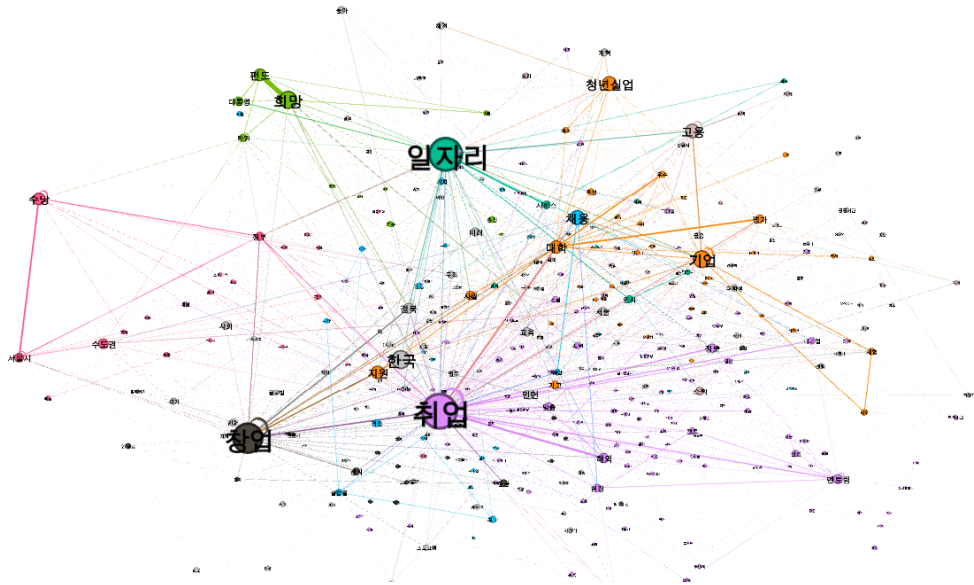
2003-2007년에는 ‘취업’과 ‘청년실업’이 동시 출현하는 횟수가 많았는데, 2008-2012년에는 ‘취업’과 ‘청년실업’이 서로 다른 군집에서 발견된다.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출현함을 알 수 있다. 2008년에서부터 2017년까지에서는 ‘기업’이 ‘취업’의 연관 단어로 발견되었다. 2018-2022년의 특징은 ‘지원’이 이 시기에 처음 등장했다는 것이다. ‘지원’은 ‘일자리’와 ‘취업’과 같은 군집에서 발견된다. 이 세 단어의 동시 출현이 해당 시기 동안 잦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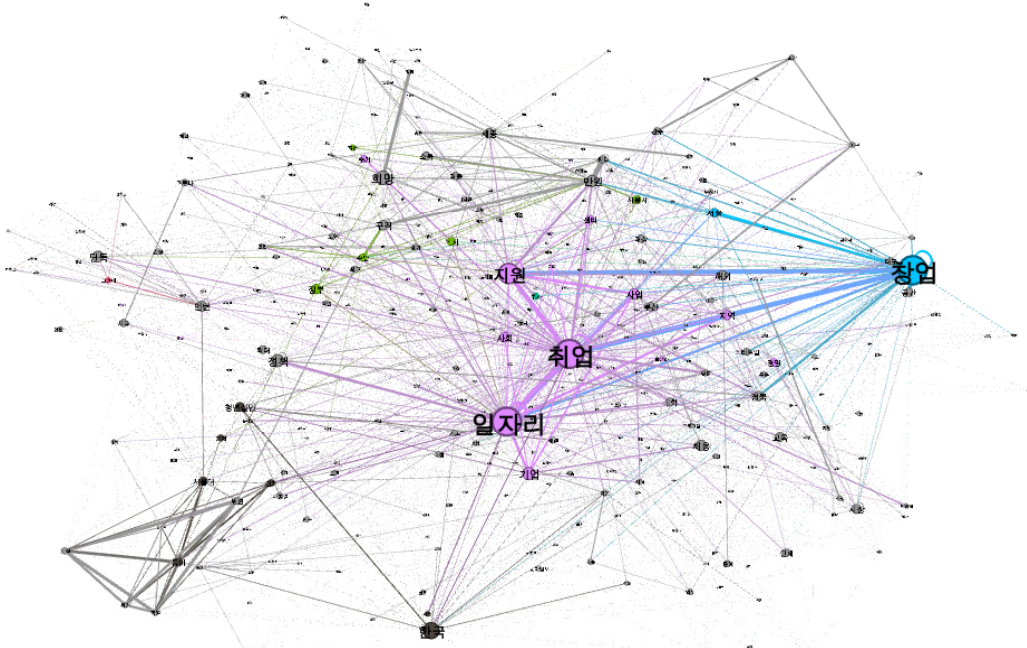
[그림 3-12] 2003-2007 '취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3-13] 2008-2012 '취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3-14] 2013-2017 '취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3-15] 2018-2022 '취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나. 청년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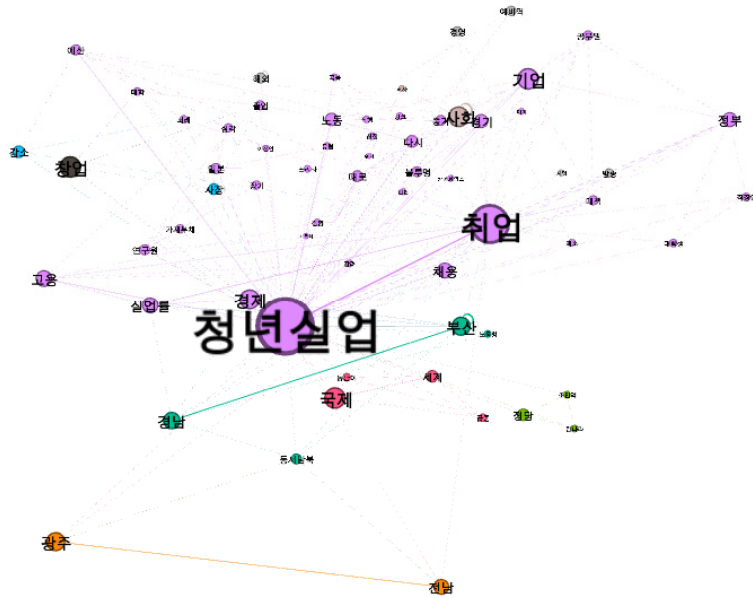
다음으로 ‘청년실업’을 대상으로도 네트워크의 시대별 변화상을 살펴보았다([그림 3-16]~[그림 3-20]).

1998-2002년에는 ‘청년실업’이 발견되지 않았고 ‘실업’이 키워드로 발견되어 이를 대상으로 주변 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그림 3-16]). 1998-2002년에는 ‘실업’과 ‘대책’, ‘대통령’이 같은 군집에 속해 있음을 볼 수 있다. 2003-2007년에는 ‘청년실업’이 중심어가 된 군집에 ‘취업’과 ‘정부’, ‘기업’, ‘경제’ 등이 발견된다([그림 3-17]). 2008-2012년에 오면 ‘청년실업’은 해당 군집의 중심어로 남아있으나, 2003-2007년과 비교해 ‘창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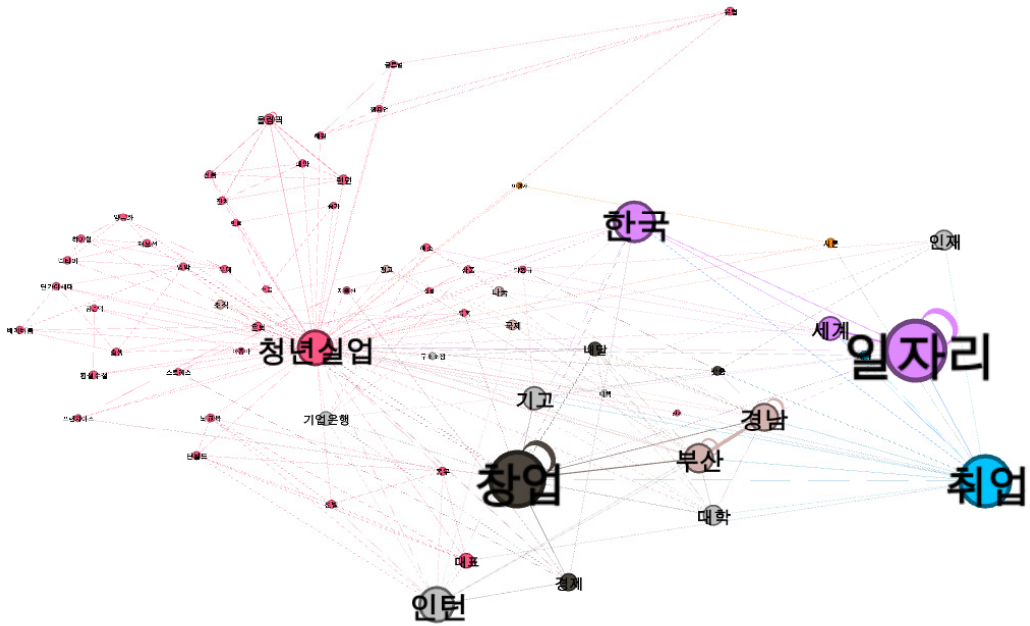


[그림 3-16] 1998-2002 '실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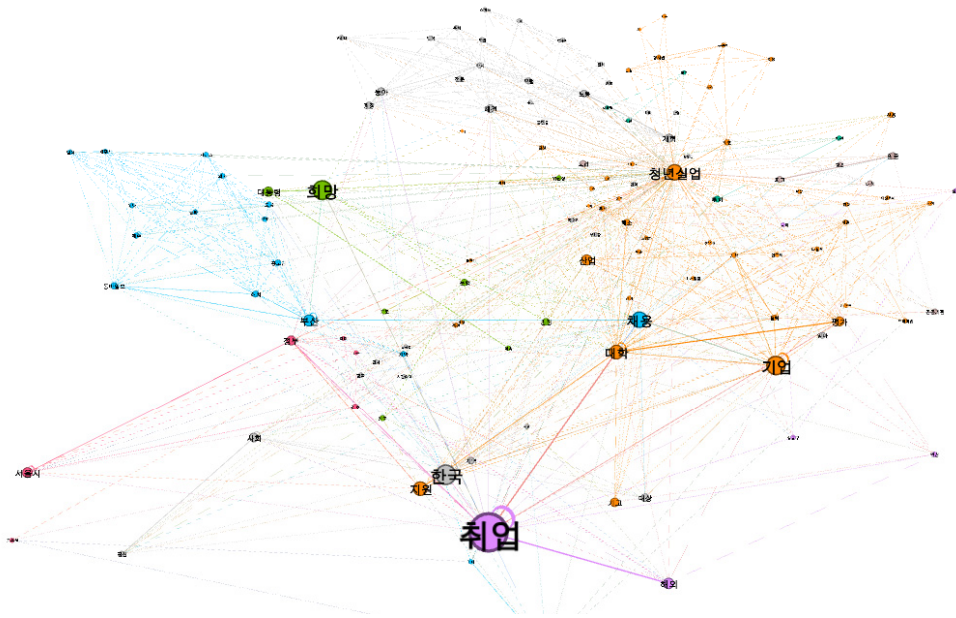
2013-2017년에 오면 ‘희망’이 ‘청년실업’과 이어지고, ‘정부’, ‘지원’, ‘채용’과 함께 ‘취업’이 중심어로 떠오른다([그림 3-19]). 2018-2022년에 와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고용’과 ‘일자리’, ‘취업’, ‘창업’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고, 새롭게 ‘스타트업’과 같은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3-20]). 2013-2017년에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서울’ 등의 지역명이 발견된 것과 달리 2018-2022년에는 특정 지역명이 중심어로 떠오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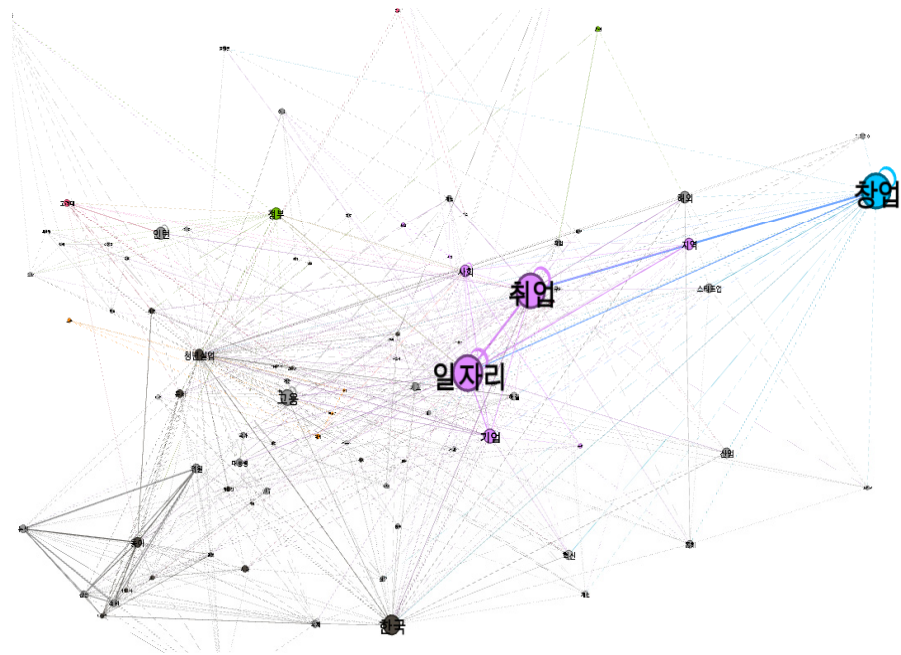
[그림 3-17] 2003-2007 ‘청년실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3-18] 2008-2012 ‘청년실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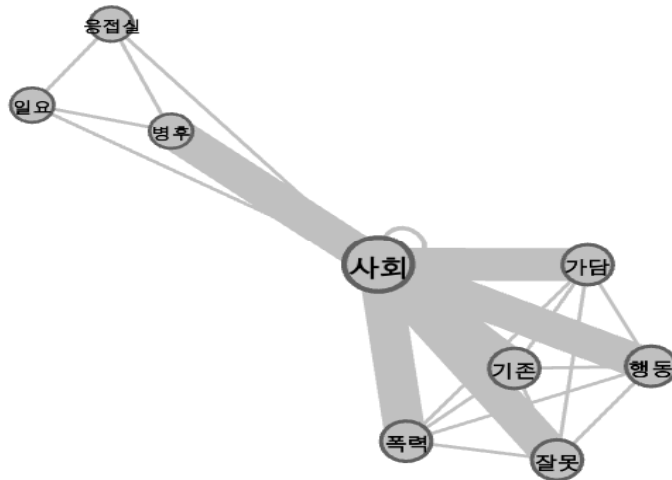
[그림 3-19] 2013-2017 '청년실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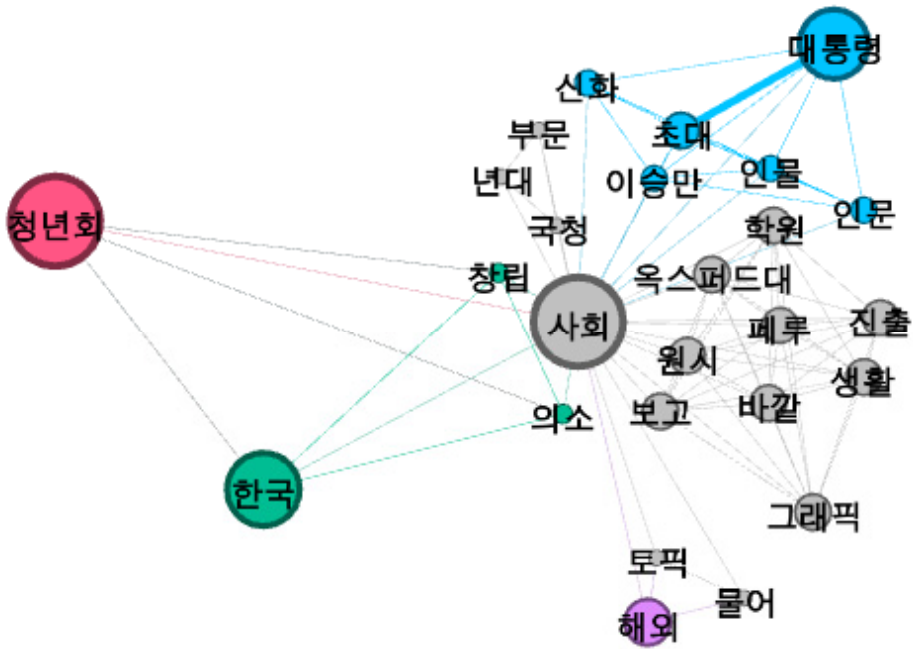
[그림 3-20] 2018-2022 '청년실업'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다.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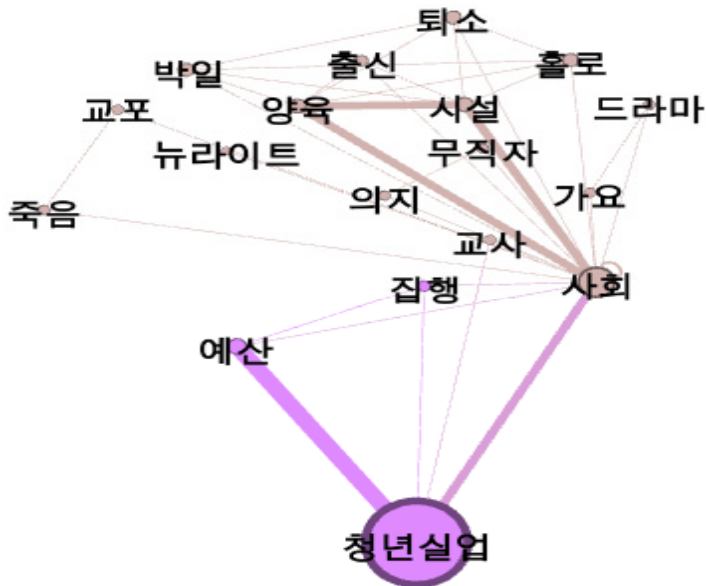
‘사회’를 대상으로도 네트워크의 시대별 변화상을 살펴보았다([그림 3-21]~[그림 3-26]). 1993-2002년 기간에는 ‘사회’가 ‘청년회’나 ‘행동’, ‘대통령’ 등과 연결되는 반면, 2003-2007년에는 ‘사회’가 처음으로 ‘청년실업’과 연결된다. 2008-2012년에는 ‘사회’가 ‘시민’이나 ‘현안’ 등의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그림 3-24]). 2013-2017년에 오면 ‘사회’는 ‘일자리’나 ‘창업’ 등과 이어진다([그림 3-25]). 2018-2022년에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 앞선 시기에서 ‘사회’가 ‘일자리’ 및 ‘취업’과 다른 군집에 속했다면 이 시기에서는 이들 단어가 같은 문맥에서 발견된다([그림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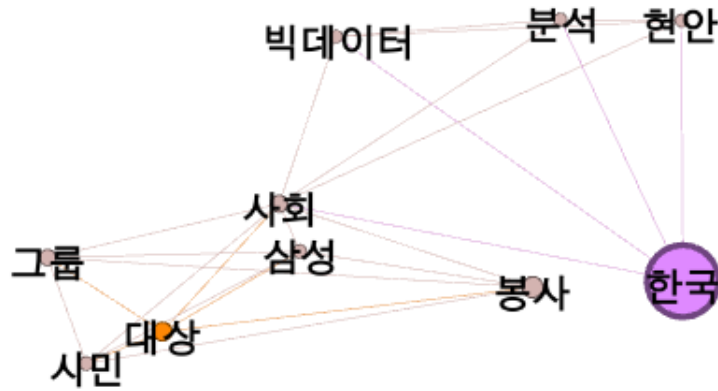
[그림 3-21] 1993-1997 ‘사회’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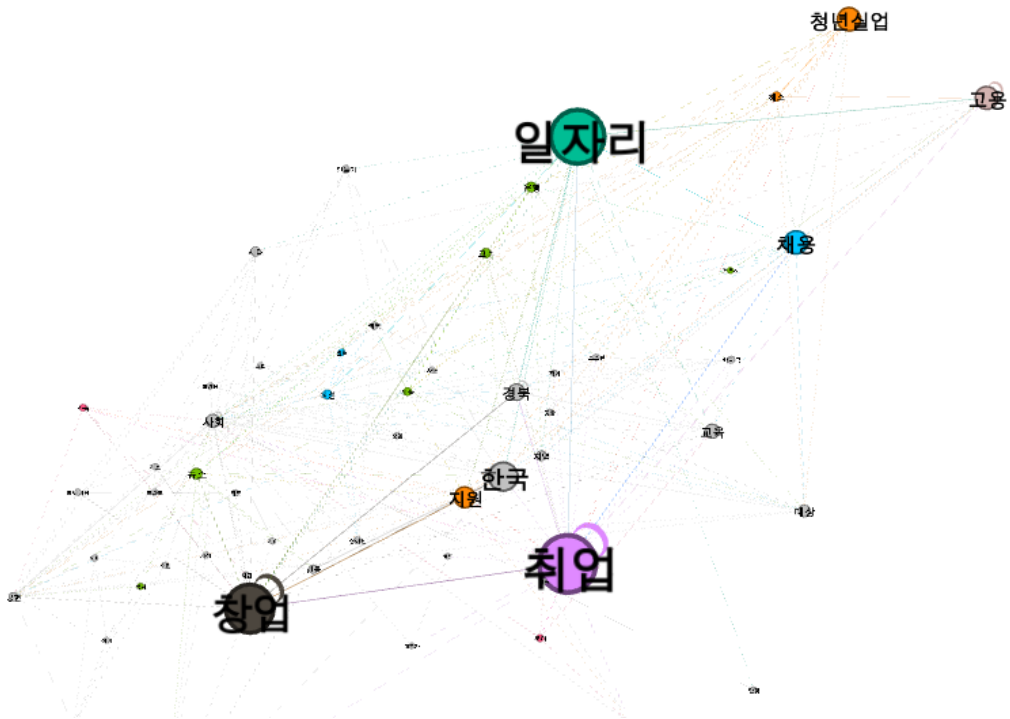
[그림 3-22] 1998-2002 '사회'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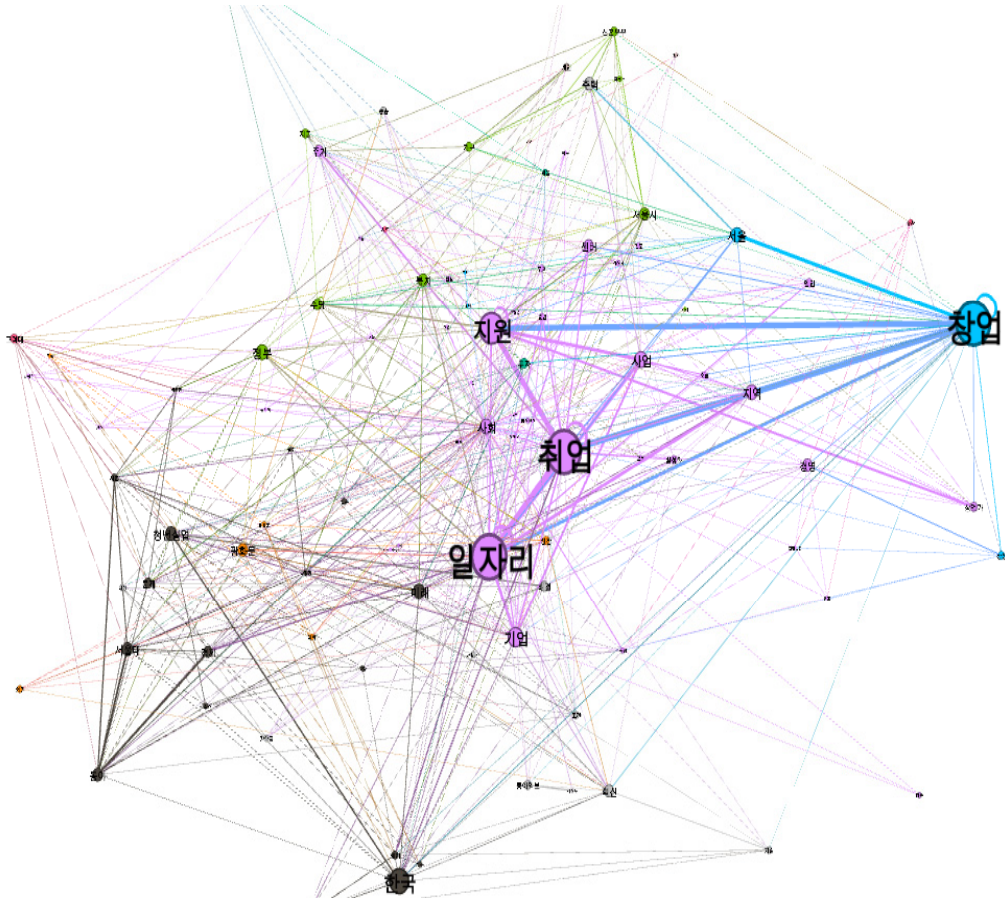
[그림 3-23] 2003-2007 '사회'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3-24] 2008-2012 '사회'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3-25] 2013-2017 '사회'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3-26] 2018-2022 '사회' 부분 키워드 네트워크

제5절

경제적 (비)주체로서의 청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장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자.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1990년대와 달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년실업’, ‘취업’, ‘불투명’, ‘백수’, ‘창업’, ‘실업률’ 등의 단어가 발견되는 점이다. 이 흐름은 2020년대까지 이어진다. 이는 여전히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청년’에 대한 주된 담론이 ‘실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권별 ‘청년실업’ 대응 대책이 키워드 네트워크에 드러나기도 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는 ‘해외’-‘저개발국가’-‘봉사’의 개념군이 등장했다. 해외 취업을 장려하기 시작한 2003년도 이후부터는 ‘해외’가 ‘청년실업’, ‘고용’ 문제와 연계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이 시행되었던 2008-2012년에는 ‘해외’ 연관 단어가 ‘진설’, ‘중동’, ‘기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일에 청년이 자주 호명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2017년에는 네트워크 속 ‘해외’가 다른 시기에 비해 더 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기 정부의 청년 해외 취업 촉진 전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이 시기에 ‘해외’ 관련 사업이 더 활발히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2008-2012년 전까지는 ‘청년실업’이 주된 단어였지만, 해당 시기부터 ‘일자리’가 주된 단어로 자리매김한다. 이는 당시의 일자리 보강 프로그램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처음으로 ‘여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취업연계 강화 방안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2013-2017년에는 네트워크상에서도 ‘여성’-‘일자리’-‘직장’-‘희망’이 드러난다. 2018-2022년 네트워크의 특징은 ‘취약’이란 단어가 본 연구에서 관찰한 시기를 통틀어 처음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취약’은 ‘주거’나 ‘일자리’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시기에 비해 ‘취약 계층’ 지원, ‘인권’, ‘노동’, ‘권리’ 강화에 더 집중한 해당 정권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정책의 주제와 논지를 파악하고 직접 영향을 받는 분야 및 계층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실업’을 둘러싼 주변 군집의 키워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서울’, ‘부산’, ‘전남’ 등과 같이 수도권과 지방이 분리되어 언급되기 시작하는 현상, 그리고 ‘은퇴’, ‘베이비부머’와 같은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청년 세대의 부모 세대를 일컫는 경향이 그 예이다. 2000년대에 와서 수도권과 지방 지역이 분리되어 언급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경향이다. 2008-2012년에 ‘청년실업’-‘일자리’가 ‘부산’-‘경남’과 연계되고 ‘구직’이 ‘전남’과 연계되는 한편, ‘창업’-‘취업’은 ‘수도권’과 연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다른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은퇴’와 ‘베이비부머’가 ‘청년실업’의 주변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나 ‘창업’을 중심으로 ‘채무’, ‘패자’ 등의 단어가 발견되는 것은 ‘청년실업’에 대한 한국사회의 문제의식 범위가 청년 집단의 문제에서 세대 관계의 문제로 확장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2부

비교사회적 위치

제4장 성인 이행 체제 유형

제5장 청년실업의 구조: OECD 회원국 비교

제6장 성인 이행기 역할 구조와 인식 구조 비교

제4장

성인 이행 체제 유형

이상직

제1절 성인 이행 체제의 구성

제2절 성인 이행 체제 유형

제3절 OECD 국가 비교

제4절 성인 이행 체제의 여섯 가지 유형

제5절 동아시아형: 느슨한 제도 연계와 늦은 이행

제 1절 성인 이행 체제의 구성⁷⁾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지금까지 담론의 측면에서 한국사회에서 ‘청년’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청년문제’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를 확인했다. 이 장에서는 오늘날 한국사회 ‘청년문제’의 성격을 비교사회적 맥락에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2000년대 중반 이래 한국사회에서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청년 문제의 한국적 맥락에 대한 탐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학교-노동시장 이행 과정과 가족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에서 일정 부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동시에 한국 고유의 특징도 있다. 그러나 한국 사례만을 두고 보면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별하기 어렵고, 그런 만큼 이 현상의 사회적 함의도 충분하게 논의하기 어렵다. 비교사회적 작업은 5장과 6장에까지 이어진다. 이 장의 취지는 이후 장에서 제시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기본 틀을 제시하고 이 틀에 따라 주요 국가들을 분류해 보는 것이다.

성인기 이행 양상을 국가 단위에서 비교·해석하는 틀로 유용한 것이 성인 이행 체제 개념이다(Walther, 2006; Raffe, 2008).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에 관한 유럽 주요 국가 비교 연구에서 형성된 이 개념은 한국 청년 집단이 자리한 시공간적 맥락을 비교사회론적 관점에서 확인하는 데에 유용하다.

“성인 이행 체제”(regimes of youth transitions)는 한 사회의 성원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특정한 이행 패턴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배열을 아울러 지칭한다(Walther, 2006). 제도적 배열에는 산업 구조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출생과 사망, 인구 이동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요인, 연령-역할 규범과 같은 문화적 요인을 포함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제도적 조건으로 한정(Breen and Buchmann, 2002)한다.

이행 체제는 크게 세 개의 하위 제도 영역으로 구성된다(Breen and Buchmann, 2002; Mayer, 2005; Walther, 2006; Buchmann and Kriesi, 2011: 492). 먼저 교

7) 1절과 2절의 내용은 이상직(2020)의 25-29쪽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육-훈련 체제가 있다. ‘한 사회에서 아이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이 교육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질문이다(Allmendinger, 1989). 다음으로 생산-고용 체제가 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고용하는가’와 ‘고용된 이들 간에 자원과 지위를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가’가 고용 체제를 규정하는 핵심 질문이다(박준식, 2001: 67; 정이환, 2013: 17-18). 마지막으로 복지체제가 있다. 에스핑-안데르센은 “고용과 임금, 거시경제 조정과 같은 쟁점을 포괄하는 (...) 경제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데에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2007: 18)에 주목해 복지체제를 규정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 즉 탈상품화를 보장하는 수준과 방식을 규정하는 제도적 배열이다.

이 세 제도 영역은 서로 맞물려 있다. 교육·훈련 시스템 비교 연구에서 고려하는 측면은 두 가지다. 교육 과정의 층화 수준과 교육 내용의 성격이다. 층화 수준은 특정 코호트가 다양한 교육 수준에 어떤 식으로 배치·분류되는지로 평가할 수 있다. 보통 특정 코호트 중 최대 년수의 교육을 받은 이들의 비중이나 교육 수준별 진학률 등으로 측정한다. 교육 내용의 성격은 교육 과정의 중앙집권화 정도와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정도 및 성격으로 규정한다(Allmendinger, 1989; Kerckhoff, 1996; Muller and Gangl, 2003). 교육체제의 층화 수준이 낮으면 교육 프로그램에서 일반 교육 비중이 크지만, 층화 수준과 교육과정 표준화 정도는 독립적이다.

노동시장 구조는 교육제도 구조와 일정 정도 대응한다. 상대적으로 교육제도의 층화 수준이 낮을 경우 내부 승진 장기고용 시장과 자유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은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내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자유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전자에서는 직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사해 입사 이후에 직무 관련 훈련을 받는다. 이 경우 기업 단위의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직종 내에서도 기업에 따라 지위 차이가 클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교육제도의 층화 수준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문직 노동시장과 연고노동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공식적인 직업 안정성은 부족하나 직종 단위의 노동시장에서 개인 단위로 이력이 형성될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직종 단위의 차이가 클 가능성이 높다. 영미권 국가들이 첫 번째 방식의 사례라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대륙 유럽 국가들이 두 번째 방식의 사례다. 북유럽 국가는 이 사이에 위치한다.

이것이 사회 전체의 성인기 이행 타이밍 및 층화 수준에 함의하는 바는 양가적이다. 개방성과 유연성 면에서는 영미식 시스템이 우세하다. 그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높다. 그러나 '교육-직업' 불일치 가능성은 영미식 시스템에서 더 크다. 이행 시점은 대륙 유럽식 시스템에서 이를 가능성이 높다. 청년의 직업 열망과 기술 습득이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직업적 사회화"(Hamilton, 1990) 과정이 좀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제2절 성인 이행 체제 유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행 체제와 이행 패턴의 관계를 이념형으로 도식화하면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Breen and Buchmann, 2002; Walther, 2006; Buchmann and Kries, 2011). 시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가족주의 유형이다.⁸⁾

유형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행 체제론은 대개 에스핑-안데르센이 정교화한 복지체제 유형론에 기반한다. 이행 체제론이 비교 연구 분석틀 개발 맥락에서 나온 것인 만큼 사례 국가들은 주로 유럽 국가다. 시민주의 유형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보수주의 유형에는 대륙유럽 국가들이, 자유주의 유형에는 영국과 미국이, 가족주의 유형에는 남유럽 국가들이 사례로 꼽힌다.

시민주의 유형에서는 교육체제가 비선별적이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그에 따라 고등교육 진학자 비율이 높다. 그러면서 시장의 구체적인 수요나 개별적 학습 요구에도 반응하는 유연함도 갖추고 있다. 보편 시민권 지위에 따라 복지에 관한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개인의 지위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교적 무관하다. 18세 이상이면 같은 혜택을 누린다. 고용체제에서 가장 큰 특징은 공공 섹터의 비중이 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성역할 분리 수준이 낮다. 요약하면, 시민주의 유형에서는 ‘개인’을 단위로 보편 권리가 보장되어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이행 경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에 따라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집을 일찍 떠나며 이른 시기에 동거하기도 한다. 결혼과 출산은 늦고 그 시기도 넓게 퍼져 있다. 평생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어 비교적 일찍,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실업 수당도 사용 가능해 가족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8) Walther(2006: 124-125)는 보편주의적, 자유주의적, 고용중심적, 준보호적(sub-protective) 이행 체제로, Buchmann과 Kriesi(2011: 492)는 시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남유럽형으로 이름 붙였다. 그러나 내용 차이는 없다. 이 글에서는 차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이름 붙일 것이다.

자유주의 유형에서는 교육, 노동시장, 복지체제가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짜여 있다. 권리는 개인 단위로 부여된다. 교육은 의무 교육 기간인 16세 이후에 다양한 형태로 분화된다. 그러나 이는 직업 특수 교육이 아닌 일반 교육에 가깝다. 그러한 틀에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논리가 강조된다. 복지는 매우 한정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지급된다. 노동시장은 시장 원리가 관철되어 매우 유동적인 구조를 띠며, 특정 직업과 자격 조건의 연계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다수에게 개방되어 있고, 그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다. 그러나 전반적인 노동조건은 불안정하다. 상대적으로 일찍 교육을 마치지만 노동시장 진입 과정은 불안정하다. 영국의 경우 졸업, 취업, 분가가 비교적 일찍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결혼과 출산 또한 이른다.

보수주의 유형에서 교육, 노동시장, 복지체제의 목표는 가족, 특히 남성 가장의 지위를 보전하는 것이다. 교육은 선별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청년들은 직업 전망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분할된 경로를 밟는다. 일례로 독일은 1/3이 초등교육을, 1/3이 중등교육을, 1/3이 고등교육을 받는다. 각 과정은 표준화되어 있고, 그에 상응하는 노동시장 영역과 연계되어 있다. 노동시장 구조는 높은 수준으로 규율되고 보호받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으로 분절되어 있다.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복지제도 또한 직업 지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노동시장과 복지제도가 남성 가장의 지위를 보호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지 않다.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은 비교적 일찍,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만 분가는 상대적으로 늦으며, 동거보다는 결혼 비중이 크다.

가족주의 유형에서는 가족이 교육-노동-복지체제를 규율하는 기본 단위다. 교육은 일반 교육 위주이고, 직업 교육은 발달해 있지 않다. 국가의 복지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가장을 실업에서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표여서 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그에 따라 졸업에서부터 노동시장 진입 사이의 유예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이 시기에 지원은 없어서 불안정한 일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시장은 고도로 분절되어 있고 직업 훈련의 미발달로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낮다. 여성은 공립 육아시설이나 보육 지원 제도 미비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교육이 노동시장 이행의 필요조건으로 여겨지면서 교육수준이 높아졌지만 그에 조응하는 일자리는 부족해 교육-직업 불일치 수준이 높다. 이 유형에서 전형적인 성인기 이행 패턴 변화 경향은 교육 종료, 취업, 결혼, 출산의 전반적인 지연이다. 내부 노동시장 보호 수준이 높은 반면 교

육 훈련의 기회는 없어 청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 한편,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경제적 자립을 기대하고 출산과 결혼을 묶어서 생각하는 문화 기류에 따라 분가와 결혼, 출산이 전반적으로 지연된다. 이런 점에서 노동시장의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인 노동시장 지위에 진입하는 등 한번 궤도에 오르면 분가, 결혼, 출산이 단기간에 이루어진다. 즉 이행의 양극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기술한 성인 이행 체제와 그에 따른 이행 패턴은 이념형이다. 각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끼리의 차이도 크다. 유형의 성격도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제시한 이행 체제-이행 패턴의 개념과 이념형적 유형들은 한국 청년의 성인기 이행 패턴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에, 나아가 여러 국가의 성인기 이행 패턴의 성격을 해석하는 데에 준거가 될 수 있다. 제도의 지속과 변화를 논하는 많은 연구(Hall and Taylor, 1996; Hall and Soskice, 2001; Mahoney and Thelen, 2010)에서 제도의 상호 의존성이나 역사적 경로의 구속력을 강조하듯이 거시적 제도의 짜임이 급격하게 큰 폭으로 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한국 사례가 다뤄지는 방식을 검토하면,⁹⁾ 여기에서도 한국은 어느 한 유형에 배타적으로 귀속되기 어려운 사례일 것이라 예상한다. 그럼에도 앞에서 소개한 네 유형 중에는 ‘가족주의’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예상한다. 시민주의 유형과 자유주의 유형에서는 ‘개인’이 라이프코스 형성의 기본 단위인 반면, 보수주의 유형과 가족주의 유형에서는 ‘가족’이 기본 단위다. 국가가 가족을 얼마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느냐로 보수주의 유형과 가족주의 유형을 구별할 수 있다. 보수주의 유형에서는 가족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자리잡혀 있다면 가족주의 유형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미약하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족 단위로 성인기로 이행하고 그 가족에 대한 사회 제도의 뒷받침은 약하다고 알려져 있다(장경섭, 2009). 그렇다면 실제 자료에서 성인 이행기 역할 구조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하에서 제시하려는 것이다.

9)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독자적인 ‘동아시아(유교주의) 유형’에 속한다는 입장(Jones, 1993)과 기존 세 유형(자유주의, 시민주의, 보수주의) 중 보수주의 유형에 속한다는 입장(에스핑-안데르센, 2007)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 유형의 혼합으로가 아니라 독자 유형으로 보는 입장은 소수다. 기존 유형론 내에서 한국의 자리를 매기려는 입장이 우세하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혼합형으로 보면서도 결국에는 자유주의 유형에 속한다는 입장(조영훈, 2001)과 보수주의 유형에 속한다는 입장(에스핑-안데르센, 2007; 남찬섭, 2002)으로 나뉜다. 이런 논쟁이 산업화 시대에 기초한 복지국가 유형론에 기초하고 있어 후기산업사회의 제도적 틀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양재진, 2003). 특정 유형을 미(저)발달 단계의 증상으로 보는지 다른 유형의 특징으로 보는지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시장 비중이 큰 것을 자유주의 논리 관철의 결과로 보는지 가족주의 논리 관철의 결과로 보는지의 차이이다.

여기에서는 교육-훈련 체제의 특징을 포착하는 지표와 생산-고용체제의 특징을 포착하는 지표를 선정해 각국의 특징을 비교한다. 복지체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성인기 이행 국면과는 관련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가족이행 관련 지표를 추가했다.

제3절

OECD 국가 비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성인기 이행 국면을 규정하는 차원은 두 가지다. 학교-노동시장 이행(이하 ‘노동이행’)과 (원)가족-(생식)가족 이행(이하 ‘가족이행’)이다. 각각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을 나타낸다.

학교-노동시장 이행 측정 지표는 평균졸업연령과 학업-일 병행자 비중, 졸업 후 취업 까지 걸린 기간, 졸업 후 1년 시점의 고용률, 고용된 일자리 중 임시직 비중, 니트(NEET) 비중이다. 이는 언제 학교를 떠나 언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지, 어떤 자리에 얼마나 많이 진입하는지와 같은 학교-노동시장 이행 타이밍과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가족이행 측정 지표는 평균분가연령과 평균초혼연령, 평균출산연령이다. 이는 언제 부모 가구에서 나와 언제 새로운 가구를 만드는지와 같은 가족 이행 타이밍과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그 외에 부모와 함께 사는 이들의 비중이나 조출산율, 초혼인율, 혼외출산 비중 정보도 수집했다. 이 중 상당수는 남녀로 구분된다.¹⁰⁾

1 2000년대 중반 시점의 성인기 이행 국면

대상은 OECD 회원국이다. 2019년 8월 기준 37개국 가운데 29개국이 분석 대상이다.¹¹⁾ 비교 시점은 2000년대 중후반이다. 졸업, 결혼, 출산 등 경험의 성격에 따라 주요 해당 연령대가 다르고 지표의 대상 연령대도 다른 점을 고려해 특정 연도로 고정하지는 않았다. 일례로 평균분가연령은 2005년도 조사 정보를 사용했고, 결혼·출산연령 정보는 2010년도 정보를 사용했다. 두 사건을 이행하는 시점 차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10) 지표를 선정하면서 자료의 가용성도 고려했다. ‘한국 정보가 있어야 한다’가 첫 번째 기준이다. 만 15-29세 인구 중 NEET 비중(2000-2018년), 파트너와 사는 이들 중 동거 관계 비중, 결혼 여성의 상황별 고용률 등은 유용한 지표이지만 한국 정보가 없어 제외했다. ‘최대한 많은 나라의 최대한 긴 기간을 포괄한다’는 것이 두 번째 기준이다. 이 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는 제외했다.

11) 8개국(뉴질랜드,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은 결측치가 많아 제외했다. 29개국 중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6개(노르웨이, 대한민국, 미국, 스위스, 아이슬란드, 일본)이다.

비교 시점을 2000년대 중반으로 잡은 맥락은 두 가지다. 첫째, 1970-80년대 출생자들이, 특히 1980년대생이 이행한 시기가 이 무렵이기 때문이다. 핵심 이행 기간이 20대 중 후반이라고 보면 1970-80년대생의 이행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중후반이 된다. 1981년생을 예로 들면, 이들이 만 25세인 때가 2006-07년이다.¹²⁾ 2000년대 중후반은 1998년 경제위기 이후 20년의 중간 시점이기도 하다.¹³⁾ 둘째, 2000년대 후반부터 가용 정보의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위기의 여파를 분석하기 위해 OECD와 유럽연합에서 2008년 직후 국가 단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는 청년 실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커져 학교-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지표도 다수 포함되었다.

자료는 OECD가 제공하는 가족, 교육, 노동시장 관련 지표 정보다. 유럽연합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활용했다. OECD 회원국 상당수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다. 대다수 지표 정보는 OECD 통계 데이터베이스¹⁴⁾와 유럽연합 통계 데이터베이스¹⁵⁾에서 추출했다. 여기서 확인하지 못한 일부 지표 정보는 OECD가 발간하는 정기보고서나 특별보고서에서 확인했다. 지표가 아니라 특정 국가 정보가 없는 경우 먼저 개별 국가의 통계청 자료로 확인하고 다음으로 2차 문헌(논문이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로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 없었던 정보는 다른 관련 변수들로 도출한 회귀식에 근거해 추정했다.

12) 보통 '청년'으로 구획하는 만 15-29세를 기준으로 하면 2000년에는 1970-85년생이 해당하고, 2005년에는 1975-90년생이 해당한다. 만 15-34세를 기준으로 하면, 2005년에 1970-89년생이 해당한다.

13) 각국마다 사회변동의 시간표가 달랐고 그에 따라 코호트별 특징도 다를 텐데 이들을 같은 시점에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서구권 국가의 경우 더 이른 시점을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후기 근대로의 전환이 더 빨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점 차이가 갖는 맥락을 잘 파악하지 않는다면 이 시점에서 확인한 국가별 차이가 각국의 성인기 이행 체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변동 과정의 국면 차이를 반영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은 한국 고유의 이행 체제의 특성에 전환기적 맥락이 부과되어 더 극단적인 값을 갖게 된 경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00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서구에서도 1960년대 후반-1970년대생을 기점으로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변화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14) <https://data.oecd.org> 주로 가족, 교육, 노동 관련 지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15)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유럽연합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를 수집한 조사는 두 개다. 가족이행 정보는 EU-SILC(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조사 자료에서, 노동이행 정보는 EU-LFS(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의 2009년도 추가 모듈(15-34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EU-LFS ad hoc module on youth entry to the labour market] 조사 자료에서 추출했다.

[표 4-1] 분석 변수

영역	변수명	시점	설명	출처
가족	분가연령(남)	2005	부모 가구를 떠난 연령 추정 평균(15-34세) ¹⁶⁾	eurostat
	분가연령(여)	2005		
	초혼연령(남)	2010	평균	oecd
	초혼연령(여)	2010	평균	
	출산연령(첫째)	2010	평균	oecd
	출산연령(전체)	2010	평균	
학교	평균졸업연령(남)(15-34세)	2009	3-5년 내 졸업한 자의 졸업연령 평균	eurostat
	평균졸업연령(여)(15-34세)	2009		
	학생 중 노동 병행자 비중(%)	2009	15-34세	
노동시장 (청년)	구직기간(남)(개월)	2009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기간 평균(15-34세)	eurostat
	구직기간(여)(개월)	2009		
	졸업 1년 시점 고용률(남)(%)	2009	15-34세	
	졸업 1년 시점 고용률(여)(%)	2009		
	니트 중 대졸자 비중(%)	2018	25-29세	oecd
	대졸자 중 니트 비중(%)	2013-14	15-29세	oecd

변수들은 분석에 직접 활용한 변수와 그 외 변수로 나뉜다. [표 4-1]이 분석에 활용한 변수 목록(이하 ‘분석 변수’)이다. 그 외 변수(이하 ‘참고 변수’)는 분석에 활용한 변수의 결측치를 추정하는 데 활용했거나 군집 유형별 특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간접 지표로 활용했다. [표 4-2]가 참고 변수 목록이다.¹⁷⁾

16) 분가 경험이 있는 사람의 최초 분가 연령의 평균으로 정의한다.

17) 부모동거비율은 평균분가연령을 추정할 때 사용했다. 조혼인율과 함께출산율, 혼외출산비중은 성인 이행 체제 유형별 특징을 확인할 때 참고 정보로 언급할 것이다. 평균교육종료연령은 OECD 자료이지만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분석 변수의 결측값을 채울 때에 활용했다. 중등교육수료자 비중과 고등교육수료자 비중도 평균졸업연령과 관계 있다. 평균졸업연령을 추정할 때에 활용했다. 중등교육 내 직업교육 비중은 일-학업 병행자 비중 변수와 관계 있다. 20-34세 고용률은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임시직 비중이나 니트 비중 등도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일반의 특징을 보여주는 지표로 성별임금격차와 노동시간을 확인했다.

[표 4-2] 참고 변수

영역	변수명	시점	설명	출처	
가족	부모동거비율(남)(%)	2005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 비중(25-34세)	eurostat	
	부모동거비율(여)(%)	2005			
	조혼인율(‰)	2010		oecd	
	합계출산율(명)	2010		oecd	
	혼외출산비중(%)	2010		oecd	
학교	평균교육종료연령	2006	15-29세	oecd	
	중등교육수료자 비중(남)(%)	2010	25-34세	oecd	
	중등교육수료자 비중(여)(%)	2010		oecd	
	고등교육수료자 비중(남)(%)	2010		oecd	
	고등교육수료자 비중(여)(%)	2010		oecd	
	학생 중 노동 병행자 비중(%)	2011	16-29세	oecd	
	학생 중 노동 병행자 비중(%)	2013-14	15-29세	oecd	
	중등교육 내 직업교육 비중(%)	2013		oecd	
노동시장 (청년)	고용률(남)(%)	2005	20-24세	oecd	
	고용률(여)(%)	2005			
	고용률(남)(%)	2005	25-29세		
	고용률(여)(%)	2005			
	고용률(남)(%)	2005	30-34세		
	고용률(여)(%)	2005			
	청년 고용 중 임시직 비중(남)(%)	2005	15-24세		oecd
	청년 고용 중 임시직 비중(여)(%)	2005			oecd
	청년 임시직 중 여성 비중(%)	2005			oecd
	니트(남)(%)	2005	25-29세		oecd
	니트(여)(%)	2005			oecd
	니트(전체)(%)	2007	15-24세		oecd
노동시장 (일반)	성별임금격차(%)	2006	전일제 고용자(전연령) 중위 임금 기준	oecd	
	40시간 이상 노동(남)(%)	2005	고용자 전체(전연령)	oecd	
	40시간 이상 노동(여)(%)	2005	고용자 전체(전연령)	oecd	

분석 변수와 참고 변수를 구별한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 이행 타이밍을 나타내는 변수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참고 변수는 분석 변수의 결측치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추렸다. 둘째,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했다. 변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지만, 숫자가 너무 많으면 차원을 축약했을 때 각국의 자리를 해석하기 어려워진다. 해석의 용이성을 감안해 특성을 한두 가지로 한정하고, 그 성격을 보여주는 여러 변수 중 대표 변수 하나를 택했다.

2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2가지다. 첫째,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이다. 주성분 분석의 주요 목적은 상관관계가 있는 여러 변수를, 원 자료의 정보를 최대한 담은 서로 관련이 없는 소수의 변수로 대체하는 것이다. 복잡한 상호 연관 관계로 얽여 있는 20-30개의 변수를 서로 관련이 없는 2-3개 변수(차원)로 대체(축약)하면 자료의 구조를 볼 수 있다(Bartholomew et al., 2008: 117). 이런 특징은 여러 변수 정보를 가족이행 구조와 노동이행 구조라는 두 차원으로 축약하고 그 공간에 각국의 자리를 매겨보려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둘째,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이다. 이 분석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개체끼리 한 집단으로 묶는다. 가족이행 측면과 노동이행 측면을 결합한 성인기 이행 구조로 볼 때 각국이 어떻게 묶이는지 확인하면 '성인 이행 체제'의 성격을 구별할 수 있다. 사용 변수는 주성분 분석에서 활용한 변수와 같다. 군집 분석에서는 투입 변수 값을 z값으로 표준화했다. 척도가 다르면 유형화 과정에 특정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1/n$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주성분 분석으로 확인하려는 차원이 이 글에서 말하는 노동이행 구조와 가족이행 구조이고, 둘을 합친 것이 성인기 이행 구조다. 군집 분석으로 도출한 유형이 이 글에서 말하는 '체제'다. 그러니까 유형별 속성이 곧 체제의 속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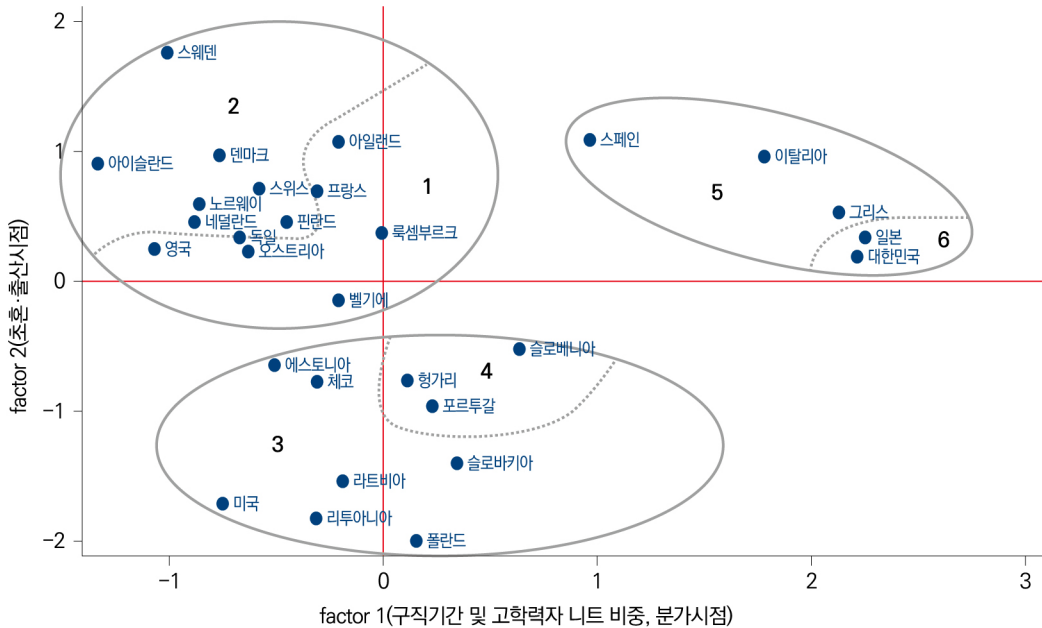
제4절

성인 이행 체제의 여섯 가지 유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주성분 분석 결과

[그림 4-1]은 [표 4-1]에서 소개한 변수 15개의 정보를 2개 차원으로 축약한 공간에 각 국이 자리한 위치를 나타낸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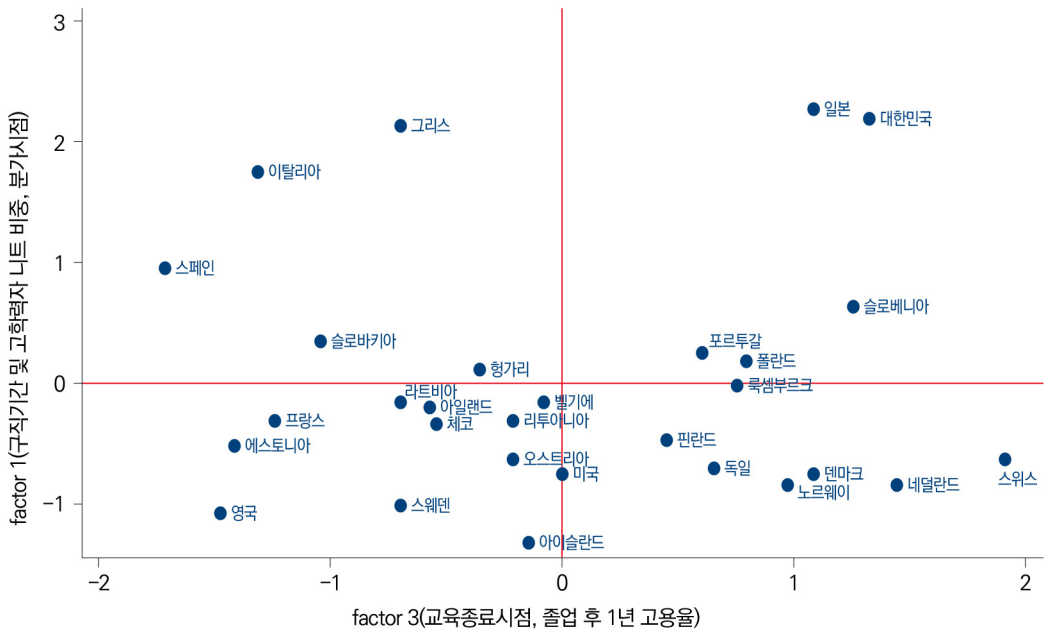


[그림 4-1] 성인기 이행 지형(OECD 국가): 차원 1과 차원 2

주: 수직교차를 유지한 채 축 회전(varimax)

18) x축과 y축은 각각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을 나타낸다. 첫 번째 축은 분가 시점과 구직 기간, 고학력자 니트 비중과 관련 있다. 특히 분가 시점, 구직 기간과 관련 있다. 두 번째 축은 결혼·출산 시점과 관련 있다. 그러니까 x축은 노동시장 이행 차원을 나타내고, y축은 가족이행 차원을 나타낸다. 여기서 분가 시점과 구직 기간, 고학력자 니트 비중 변수가 한 차원을 구성한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그만큼 이들 변수가 관련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x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수록 구직 기간이 길고 고학력자 니트 비중이 크다. 분가 시점은 낮다. x축에서 가장 오른쪽에 자리한 국가는 일본이고, 가장 왼쪽에 자리한 국가는 아이슬란드다. y축을 기준으로 보면, 위쪽에 있을수록 결혼·출산 시점이 낮다. y축에서 가장 위에 자리한 국가는 스웨덴이고, 가장 아래에 자리한 국가는 폴란드다.

[그림 4-1]에서 한국은 오른쪽 상단(1사분면)에 자리한다. 근처에 일본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있다. 구직 기간이 길며 고학력 니트 비중이 높다. 분가 시점과 결혼·출산 시점도 상대적으로 늦다. 반대쪽에는 미국이 있다. 구직 기간이 짧으며 고학력 니트 비중이 적다. 분가 시점과 결혼·출산 시점은 상대적으로 이른다. 왼쪽 상단(2사분면)에는 가장 많은 국가들이 몰려 있는데 주로 북유럽, 서유럽 국가다. 구직 기간이 짧으며 고학력 니트 비중도 낮다. 분가 시점도 이른 편이다. 그러나 결혼·출산 시점은 전체 평균보다 늦다. 분가 시점이 이르면서 결혼·출산 시점이 늦는 경향은 특히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오른쪽 하단(4사분면)에는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동유럽 국가가 자리한다. 구직 기간이나 고학력 니트 비중은 평균을 약간 웃돈다. 분가 시점이 전체 평균보다 늦지만 결혼과 출산은 빨리 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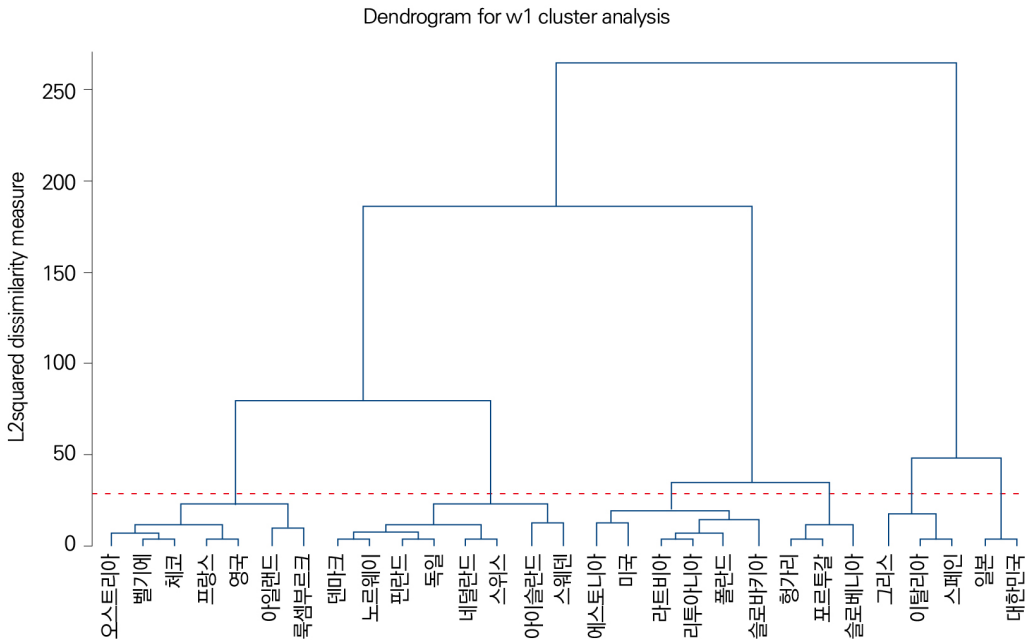
[그림 4-2] 성인기 이행 지형(OECD 국가): 차원 1과 차원 3

주: 수직교차를 유지한 채 축 회전(varimax)

첫 번째 차원과 세 번째 차원을 교차한 공간(그림 4-2)에서는 동아시아 국가와 남유럽의 거리가 상당하다.¹⁹⁾ 남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보다 교육수준이 낮고, 고용률도 낮다. 차원 3에서 한국과 일본은 오히려 북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자리에 있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구직기간이 짧고, 고학력자 니트 비중이 적으며, 분가 시점이 이르다.

2 군집 분석 결과

[그림 4-3]은 가족이행, 노동이행 관련 변수를 모두 투입해 군집 분석한 결과다. 여기에서는 6개 집단으로 구분한 수준에서 각 집단의 속성을 확인한다.²⁰⁾



[그림 4-3] 군집분석 결과(거리 측정 방식: ward)

19) 세 번째 차원은 교육종료시점 및 졸업 후 1년 시점 고용률과 관계 있다.

20) 모든 변수 값을 z값으로 표준화해 사용했다. 계층적 군집화 방법을 썼고, 거리는 ward 연결 방식으로 했다. 계층적 군집화 방식은 특정 국가가 속하는 자리를 여러 수준에서 보여준다. 한국은 3개 집단으로 구분되는 수준에서는 집단 3에 속하고, 6개 집단으로 구분되는 수준에서는 집단 6에 속한다. [그림 4-3]은 그러한 '계열'을 보여준다. 적절한 군집 개수를 정하는데 참고할 만한 통계치가 있기는 하나 여기에서는 정확한 군집 개수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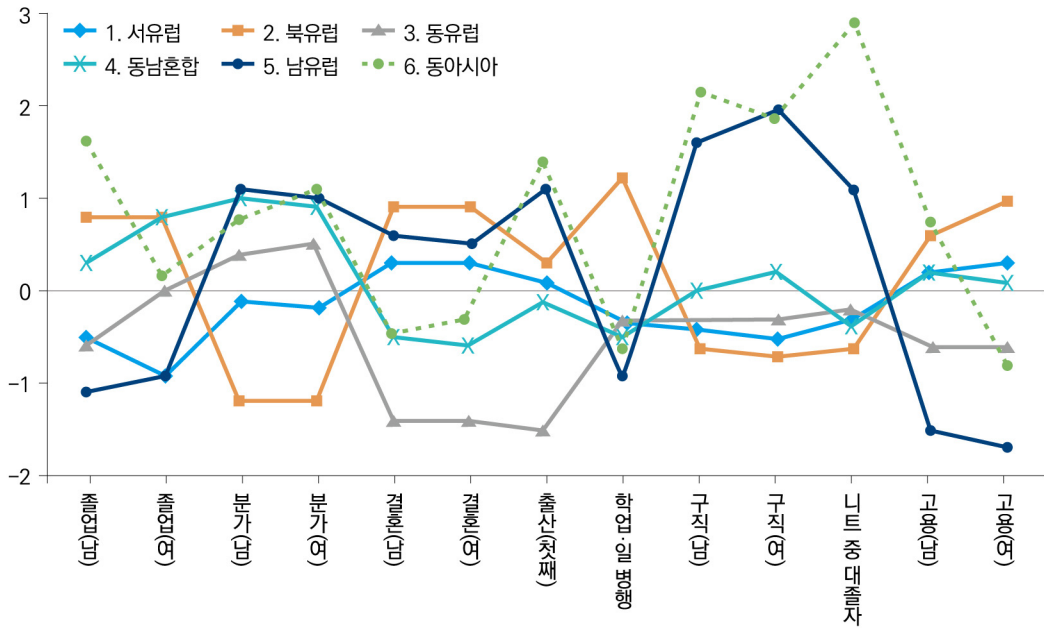
[표 4-3] 성인기 이행 체제 유형별 소속 국가

유형		소속 국가
수준 1	수준 2	
북서유럽	서유럽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체코
	북유럽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동유럽	동유럽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미국
	동남혼합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헝가리
남유럽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동아시아	동아시아	한국, 일본

주: 지도상 북서쪽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순서대로 국가명 정렬

집단 1(서유럽군)에는 북서쪽 섬나라인 아일랜드와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를 제외한 서유럽 국가(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체코)가 포함된다. 집단 2(북유럽군)에는 북유럽 국가(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가 포함된다. 집단 3(동유럽군)에는 동유럽 국가(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미국이 포함된다. 집단 4(동남유럽혼합군)에는 남유럽 국가인 포르투갈과 지중해 슬로베니아, 헝가리가 포함된다. 집단 5(남유럽군)에는 남유럽 국가(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가 포함된다. 집단 6(동아시아군)에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다.²¹⁾

21) 유형 경계와 지리적 경계가 꼭 대응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각 유형에 속한 국가 다수가 위치한 지리적 범위를 유형 이름으로 붙였다.



[그림 4-4] 성인 이행 체제 유형별 속성(표준화 값)

[그림 4-4]는 성인기 이행 구조의 유형별 특징을 나타낸다.²²⁾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군은 졸업과 취업, 분가와 결혼, 출산 등 주요 이행 사건을 경험하는 시점이 전반적으로 늦다. 교육종료시점이 늦은 편이다. 교육종료시점의 평균은 북유럽형과 비슷하지만 남녀 차이가 크다. 남녀 차이는 일본에서 크다. 분가 시점도 늦는 편이다. 여성이 더 늦다. 결혼 시점은 평균에 가깝다. 그러나 동거가 제도화된 북서유럽 국가와 결혼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청년이 특별히 일찍 결혼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산 시점이 가장 늦은 편이라는 점도 이러한 짐작을 지지한다. 한편, 분가, 결혼, 출산 시점이 몰려 있다.

이런 시간표는 학교-노동시장 연계 성격과 관련 있어 보인다. 평균교육종료시점이 늦다는 것은 고등교육이수자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2018년 기준 한국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2008년 이래 OECD 회원국 중 1위다. 2018년 OECD 국

22) 군집 분석에 투입된, 값을 표준화한 변수의 유형별 평균값을 제시한다. 따라서 유형별 차이를 표준화된 척도로 비교할 수 있다. 즉, y축의 값은 절대위치가 아닌 상대위치를 보여주는 값이다. 절댓값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2 또는 3에 가까운 값은 보통 특잇값으로 간주한다. 한국과 일본이 속한 동아시아형을 나타낸 선을 알아보기 쉽도록 굵은 점선으로 표현했다. 그림을 좀 더 단순화하기 위해 상호 관련성이 높은 변수 2개(출산연령(합계), 대졸자 중 니트 비중)는 생략했다.

가 평균은 44.3%다.²³⁾ 고등학교 졸업자 다수는 대학에 가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일반 교육’으로 채워진다. 학업-노동 병행자 비중이 낮은 맥락이다. 교육수준은 높지만 특정 직종·직업과 관련된 특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기에 구직 기간이 길다. 특히 한국은 채용 방식에서 ‘공채’²⁴⁾ 비중이 크다(대한상공회의소, 2013; 이진구·이효중·박상훈, 2016).²⁵⁾ 청년층이 선호하는 민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은 대부분 공채 형태로 이루어진다. 채용을 목표로 준비하는 이들까지 고려하면 공채의 영향력은 채용 규모보다 크다. 한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비중도 상당하다. 따라서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다. 특히 대졸자는 대부분 수험생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²⁶⁾ 이러한 특수한 일반 집단의 존재가 높은 고학력자 니트 비중을 일정 정도 설명한다.²⁷⁾ 물론 졸업 후 1년 시점에서의 고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남녀 격차가 매우 크다. 또 평균 근속기간이 매우 짧아²⁸⁾ 고용률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북유럽군은 이런 모습과 정반대로 나타난다. 유사한 점은 평균 교육종료연령이다. 교육수준이 높기에 종료시점이 늦다. 이 외에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반대 위치에 있다. 교육종료연령만 하더라도 북유럽형은 동아시아형과 달리 남녀 차이가 없다. 분기 시점은 매우

23) “OECD 교육지표 2019,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9년 9월 10일).

24) 공개경쟁채용의 졸업말로 특별채용에 대응하는 말이다. 일정한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통 정기적으로 신입사원을 뽑을 때 활용된다.

25)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종퇴 청년층의 주된 취업경로는 고졸 이하인 경우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응모”(32.0%)와 “가족, 친지 소개(추천)”(31.2%)이었고, 대졸 이상인 경우 “공개시험”(27.2%)과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응모”(26.3%)였다(“2010년 5월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10년 7월 30일).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응모’도 사실상 시험을 전제한 공개모집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감안하면, 대졸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공채’ 형식으로 입사한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1차) 결과에 따르면, 대졸자의 입직경로에서 (‘공개 및 수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의 비중은 52.5%에 이른다. “공무원시험 혹은 교원시험 등에 합격하여’의 5.6%를 합하면, 거의 60%에 이른다. 다음으로 비중이 큰 방식은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추천”(15.7%)과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9.8%)이었다. 남녀 차이가 크지는 않다(김두순·이주현·이성재·김지은, 2011: 42).

26) 2016년 기준 대졸 이상 미취업자의 68.7%가 이른바 ‘공시생’(공사, 임용고시, 사법시험 등 5급 이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준비자)이다(정성미, 2017: 14). 2007년에는 71.7%였다.

27) 2019년 5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인구 약 900만명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470만명(51.5%)이다. 이 중 “지난 1주간 취업시험 준비자”는 71만 4천명으로 15.3%이다(“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2019년 7월 16일자 보도자료). 여기에 실업자를 포함하면 시험준비자 비중은 더 늘어난다. 정성미(2017)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청년 미취업자(실업+비경황)의 41.6%가 취업 관련 시험준비자다. 이 중 ‘공시생’은 21.2%에 이른다. 이는 2007년의 시험준비자 비중(28.2%) 및 ‘공시생’ 비중(15.1%)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28) 2010년 5월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경험이 있는 이들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9개월로, 약 1년 6개월에 불과하다(통계청 2010년 7월 29일자 보도자료).

이르다. 결혼시점은 늦는 편이지만, 동거를 포함하면 새로운 가구를 만드는 시점도 늦다고 볼 수 없다. 출산 시점도 늦는 편은 아니다. 청년 노동시장 관련 지표를 보면, 학업-노동 병행 비중이 다른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구직기간은 짧은 편이고, 고학력자 니트 비중도 작은 편이다. 고용률도 높고, 남녀 차이도 적다.

동아시아군과 가장 유사한 유형은 남유럽군이다. 두 유형의 차이는 교육수준이다. 남유럽형은 교육수준이 낮다. 고용률도 낮다. 이것을 제외하면 지표 대부분에서 특징이 유사하다. 분가, 결혼, 출산 시점이 늦고, 구직 기간이 길며, 니트 비중이 높다.

가족이행 측면에서 시점이 가장 빠른 유형은 동유럽군이다. 결혼·출산 시점이 이르다. 동남유럽혼합군은 늦은 분가 시점이 특징이다. 서유럽군의 특징은 이른 교육종료시점이다. 일찌감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대륙 유럽 국가의 특징이다. 세 집단 모두 여기서 각각 언급한 것 이외 지표에서는 평균 수준을 보인다.

[표 4-4]는 변수의 실제 척도를 복원한 값으로 각 유형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또 앞의 그림에는 포함되지 않은 참고 변수의 평균도 제시되어 있다. 일례로 동아시아형은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인 조혼인율이 높은 편이나 합계출산율은 가장 낮다. 혼외출산비중은 2.1%에 지나지 않는다. 북유럽형은 혼외출산 비중이 약 45%다. 일-학업 병행 비중과 관계가 있는 '중등교육 내 직업교육 비중' 지표에서도 일관된 차이가 나타난다. 동아시아형은 20%이지만, 북유럽형은 53%이다. 니트 비중도 동아시아형이 가장 높다. 특히 여성의 니트 비중은 33%에 이른다.²⁹⁾

29)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을 같은 자리로 소개했지만, 두 나라의 차이도 엄연히 있다. 일본은 분가 시점이나 교육종료시점, 초혼시점 등에서 한국보다 다소 이르다. 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비중이나 중등교육에서 직업교육이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보다 높다. 니트 인구 비중도 약간이지만 낮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군을 구성하는 특성 전반에 걸쳐 일본이 한국보다 수준이 낮다.

[표 4-4] 성인기 이행 체제 유형별 속성(비표준화 값)

구분	영역	변수	성인 이행 체제 유형					
			서부유럽	북부유럽	동부유럽	동남혼합	남부유럽	동아시아
분석 포함 변수	가족	분가(남)	26.3	23.1	28.0	29.7	30.1	29.3
		분가(여)	24.2	21.7	26.1	27.2	27.6	27.8
		결혼(남)	32.3	33.4	29.2	30.9	33.0	31.1
		결혼(여)	29.9	30.9	26.8	28.3	30.2	28.9
		출산(첫째)	28.3	28.6	26.3	28.1	29.6	30.0
		출산(전체)	30.1	30.5	28.7	29.7	31.0	31.2
	학교	졸업(남)	21.0	22.3	20.9	21.8	20.4	23.1
		졸업(여)	21.2	22.6	22.0	22.7	21.2	22.1
		학업-일 병행	19.6	48.4	20.2	17.0	9.6	14.6
	노동시장 (청년)	구직기간(남)	5.0	4.5	5.4	6.3	10.8	12.5
		구직기간(여)	4.6	4.2	5.0	6.3	10.5	10.2
		고용률(남)	78.4	81.6	72.2	78.8	65.1	83.0
		고용률(여)	75.6	81.1	68.2	74.0	59.3	66.6
		니트 중 대졸자	9.0	6.0	10.4	8.7	24.0	42.5
		대졸자 중 니트	9.9	7.4	13.2	16.1	30.1	28.2
참고 변수	가족	조혼인율	4.2	5.1	5.3	3.5	4.1	6.0
		조출산율	1.8	1.8	1.5	1.4	1.4	1.3
		혼외출산 비중	42.3	44.7	37.3	45.9	21.5	2.1
	학교	중등교육이수(남)	48.7	49.4	57.5	53.6	40.1	36.6
		중등교육이수(여)	42.4	42.5	46.4	46.1	39.7	31.3
		고등교육이수(남)	36.6	33.4	29.2	20.7	25.8	55.5
		고등교육이수(여)	43.9	43.5	45.1	34.3	35.8	62.8
		중등교육 내 직업교육	50.3	53.0	48.6	46.0	46.1	20.4
	노동시장 (청년)	고용률(20-24세 남)	61.3	68.0	56.4	53.5	52.1	53.1
		고용률(20-24세 여)	53.6	64.9	44.0	42.8	38.9	61.1
		고용률(25-29세 남)	85.4	83.2	81.9	82.1	78.9	81.2
		고용률(25-29세 여)	72.2	74.7	64.6	70.3	61.4	66.7
		고용률(30-34세 여)	90.5	89.3	84.5	89.8	88.7	91.0
		고용률(30-34세 남)	71.8	76.4	70.4	76.4	64.2	53.7
		임시직 비중(남)	26.9	40.9	21.8	39.5	42.4	35.4
		임시직 비중(여)	26.8	42.1	20.1	45.3	44.2	29.1
		임시직 중 여성 비중	46.5	49.9	39.3	45.0	43.2	53.2
		니트(남)	10.0	8.8	16.2	11.0	14.5	12.6
니트(여)	23.0	15.8	32.2	22.7	31.6	32.8		
노동시장 (일반)	성별임금격차	14.4	15.1	17.5	7.3	11.0	36.4	
	40시간 이상 노동(남)	64.8	58.8	89.5	89.8	81.9	83.3	
	40시간 이상 노동(여)	38.1	27.7	77.1	79.4	55.6	62.4	

주: 단위 정보는 [표 4-1]과 [표 4-2]를 참조.

제5절

동아시아형: 느슨한 제도 연계와 늦은 이행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앞의 분석 결과를 해석해보자. 주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 비교 연구를 검토하면 국가군 간 차이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되고, 해석된다. 문화적 차이와 제도적 차이, 인구구성비 차이가 그것이다. 그 중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제도적 차이다(Breen and Buchmann, 2002).

비교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행의 타이밍이다. 다른 하나는 이행의 계층화 측면이다. 두 측면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연결되는 방식이 곧 성인 이행 체제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논리적으로 보면 각 사회는 크게 두 가지 이념형 사이에 위치한다. 평균적으로 볼 때 이행 타이밍이 가장 이른 경우는 모두가 그것을 일찍 이행할 때다. 가장 늦는 경우는 모두가 그것을 늦게 이행할 때다. 그 사이에 차례대로 이행할 때의 타이밍이 자리할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가능성은 제외한다. 그런 사회는 없기 때문이다. 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두가 늦게 이행하는 두 번째는 평등하고 타이밍이 서로 다른 세 번째는 불평등하다. 한국은 두 번째에 가깝다. 그런데 두 번째는 과연 평등한 것일까? ‘비이행’을 고려하면 차이는 두 번째에서 더 클 수도 있다. 세 번째에서는 이행 타이밍이 다른 것이지만, 두 번째에서는 이행 여부가 차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이행 가능성을 품고 같은 길을 최대한 함께 가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길이 갈리는 사회와 각자가 서로 다른 이행 가능성을 품고 일찌감치 다른 길을 나름대로 가는 사회의 차이다. 기회가 평등하지만 결과는 크게 불평등한 사회와 기회가 다소 불평등하고 결과도 다소 불평등한 사회의 차이다. 학교-노동시장 연계가 느슨한 사회가 두 번째에 가깝고, 연계가 촘촘한 사회가 세 번째에 가깝다.

대표적인 비교 사례로 미국과 독일을 꼽을 수 있다. 학교-노동시장 연계가 느슨한 사회의 예인 미국은 다수가 대학에 진학한다. 교육 체제의 층화 수준이 낮다. 교육은 분권화되어 있으나 교육과정은 일반적이다. 고졸자의 다수는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접속해 20대 중반까지 “버둥거리는 시기”를 견딘다(Osterman, 1980). 여기서는 고등학교 졸업장

도 큰 의미가 없다. 중퇴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졸업장은 1차 노동시장에서나 의미 있다(Hamilton, 1990: 3). 이런 의미에서 교육제도와 노동제도는 매우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결과 노동시장 초기에 이직이 잦다. 훈련은 직장에서 이루어진다. Maurice, Sellier and Silvestre(1986)가 말한 “조직 공간”(organizational space)의 특성을 띤다.

학교-노동시장 연계가 촘촘한 사회의 예인 독일은 다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 고졸자는 견습기간 3년을 거친 18세 무렵에 성인 직업으로 진입한다(Hamilton, 1990: 4). 일자리는 도제훈련의 수료자격에 따라 배분된다. 노동시장은 직종별로 촘촘하게 분화되어 있고, 각 직종별로 그에 대응하는 교육훈련과 자격증이 요구된다. 자격증은 동일 직종에서 널리 인정된다. “자격 공간”(qualificational space)이라는 표현(Maurice, Sellier and Silvestre, 1986)은 그러한 특징을 포착한 말이다.

일본은 미국에 가까우면서도 일부 독일의 특징이 혼합된 사례로 평가된다. 교육 제도의 층화 수준이 낮고 일반교육 중심이라는 점에서 교육 제도는 미국과 유사하지만, 미국과 달리 학교와 노동시장을 직접 연결하는 ‘학교 추천제’라는 제도적 고리가 있다(Rosenbaum and Tariya, 1989).³⁰⁾ 이를 통해 청년이 미국과 같이 자유노동시장에 접속하지 않고 독일과 같이 장기고용 내부노동시장에 접속해왔다고 평가된다. 그렇다고 독일처럼 직종별 훈련 자격에 따라 일자리를 배분하는 것은 아니다. 학력과 학업 성적에 따라 배분된다. 직접 연계를 통해 취업하므로 연령 제한이 엄격하고, 평생학습 기회는 단혀 있다.

교육 제도의 층화 방식과 노동시장 제도의 층화 방식을 연계하는 고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 제도가 특정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제공하는 정도다. 특정 수준의 졸업장이 주는 신호의 구체성 수준이다. 교육 제도가 노동시장 제도에 보내는 신호의 구체성 측면에서 보면, 독일은 가장 구체적이고, 미국은 가장 일반적이다. 일본은 중간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의 교육 제도가 노동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졸업장 자체보다 졸업한 학교나 성적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직업 이행 과정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의 유무다. 이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가장 수준이 높다. 여기에서도 미국이 가장 낮다. 독일이 중간 수준이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독일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이는 특성과 가깝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특징이 혼합된 사례로, 또는 특정 측면이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독자적인

30) 그러나 이 장치가 1990년대 후반부터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다(Brinton, 2010).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교육 제도의 층화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교육 과정의 표준화 수준은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 교육 과정이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표준화되어 있다. 한편 대규모 공채 제도 등과 같은 일본의 특징이 있기도 하다. 높은 교육열과 진학률로 드러나는 한국 고유의 특징도 있다.

Kerckhoff(1996: 49)는 교육 제도와 노동 제도 연계 방식과 계층화 양상의 관계를 네 가지 가설로 구체화한 바 있다. 첫째, 커리어가 좀 더 촘촘하게 구조화된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일찍 교육·직업 전망을 구체화·현실화할 것이다. Hamilton은 1980년대 후반 독일과 미국의 교육-노동시장 시스템의 연계 성격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독일의 청소년이 16세 정도가 되면 현실적인 전망을 품고 특정한 일에 종사하게 되는 데 비해, 미국 고등학생의 직업적 열망은 낙관적이고 비현실적”(1990: 12)이라고 양국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을 평가한 바 있다. 둘째, 커리어가 좀 더 촘촘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처지를 쉽게 수용할 것이다. 셋째, 커리어가 좀 더 긴밀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세대 간 이동이 덜 활발할 것이다. 커리어가 일찍 결정될수록 가족배경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넷째, 커리어가 긴밀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내부노동시장의 영향력이 약할 것이다. 기업 간 이동이 더 활발할 것이다.

Kerckhoff(1996)는 학교-노동시장 연계의 여러 차원을 두 가지 속성—촘촘하거나 느슨하거나—으로 축약한다. 이 분류에서 한국은 분명 느슨한 사례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늦게 교육·직업 전망을 구체화·현실화할 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학생들이 그 처지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는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할 것이다. 넷째, 한국 사회에서는 내부노동시장이 뚜렷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 간 이동은 활발하지 않을 것이다.

경로가 일찌감치 갈리는 사회는 공식적으로 층화되어 있는 사회다. 각 경로가 나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각 경로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아주 크지 않다면 그 사회는 안정적으로 층화된 사회다. 모두가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고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회는 층화되어 있다. 그러나 각자의 꿈이 나름의 방식으로 구현되고, 나름의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 체제에서 시험은 어떤 직업적 역할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는 ‘자격 시험’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경로가 나중어야 갈리는 사회는 비공식적으로 층화되어 있는 사회다. 모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0% 가까이가 대학에 진학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가 열려 있다.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같은 꿈을 꿀 수 있다. 이것이 역동성을 낳는 맥락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계가 작동한다. 학군, 학교, 성적 등으로 짜인 위계구조가 촘촘하게 작동하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더욱 일관된, 다수가 포함되는 위계구조를 만들어낸다. 단일한 위계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교에 따른 압박감을 훨씬 크게 느낀다. 실패감 또한 훨씬 크게 느낀다. 이 단일 위계구조를 조율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선발 시험’이다.³¹⁾ 선발 시험의 목적은 준비된 지위와 역할 수행에 합당한 일정 수의 사람만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 체제에서 교육 팽창은 “시험에 의한 잠재적·현재적 선발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아마노, 1992: 31)한다. 이는 거꾸로 시험이 수행하는 사회적 선발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전자 사회에서는 계층 구조가 눈에 보이지만, 안정적이다. 나름의 위치만 지키면 무난하게 살 수 있다. 후자 사회에서는 계층 구조가 눈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위계는 더욱 강력하게 일상을 규정한다. 매우 불안정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실패자에게는 가혹하다. 이런 의미에서 어느 한쪽이 더 불평등한 사회이고 그렇지 않은 사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불평등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Brzinsky-Fay, 2007)이다.

한국은 후자 사회의 역동성을 잘 보여준 사례다. 뜨거운 교육열과 이에 상응하는 기회의 확대로 한국의 교육-노동시장 시스템은 일정 기간까지는 계층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기회가 형식적으로나마 보편화되면 이 시스템은 비공식적으로 계층화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김영화, 2000). 형식적으로 기회를 확대할 여지가 없는 가운데 일원화된 경쟁의 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기회 확대 이전보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이다(김두환, 2015; Kim and Choi, 2015). 그에 따른 결과의 격차도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행 시점이 극단적으로 늦는 한국의 특징은 이러한 형식적 평등화와 실질적 계층화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환기에 한국 청년의 성인기 이행 국면이 자리한다.

31) Allmendinger(1989: 236)는 노르웨이와 독일, 미국의 교육-노동시장 연계를 비교한 글에서 미국과 독일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미국에서 선택의 범위는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선택의 범위는 차등적인 교육의 질로 인해 제약된다. 반면, 독일은 교육연수가 계층화되어 선택의 범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동일 수준에서는 훈련의 질이 같다. 따라서 그 과정과 연계된 미래의 가능성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제5장

청년실업의 구조: OECD 회원국 비교

이채정·노법래

제1절 청년실업의 추이와 요인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시계열 비교

제4절 유형화 결과

제5절 고용 없는 성장사회와 변동성이 큰 청년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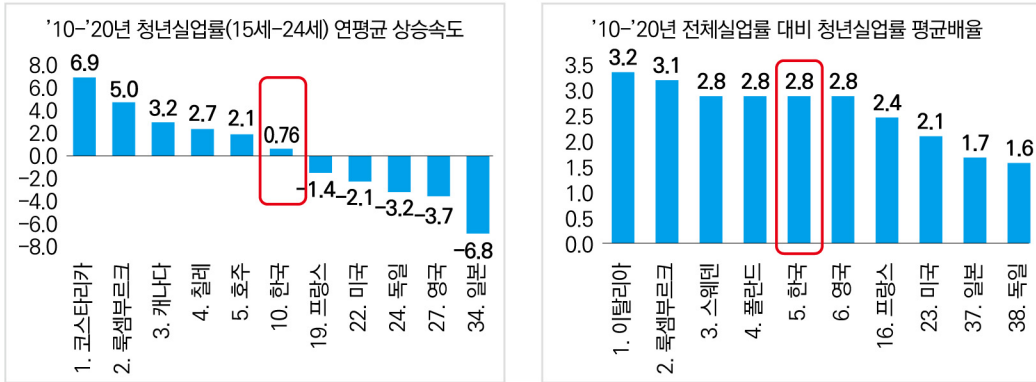
제 1절 청년실업의 추이와 요인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4장에서 청년의 성인 이행기를 규정하는 제도적 배열 측면에서 한국의 특징을 확인했다면, 이 장에서는 ‘청년실업’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특징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OECD 회원국의 청년실업 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실업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최경주, 2017; 허만형, 2021). 한국의 청년실업은 증가 속도나 전체 실업률 대비 배율을 고려할 때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세부터 24세까지의 실업률을 청년실업률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0~2020년 청년실업률 연평균 상승률은 코스타리카가 6.88%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0.76%로 38개국 중 10위를 기록하였다. 룩셈부르크(5.00%), 캐나다(3.23%), 칠레(2.66%), 호주(2.12%) 등이 한국을 앞섰고, OECD 평균치는 -1.40%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배율의 경우, OECD 평균은 2.08배, 한국은 2.82배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탈리아(3.24배), 룩셈부르크(3.11배), 스웨덴(2.85배), 폴란드(2.84배)에 이어 5위 수준이다. 한편, 2010~2020년 평균으로 비교할 때, 한국의 전체 실업률은 3.6%, 청년실업률은 10.1%였다. 이는 이탈리아(10.6%, 34.4%), 룩셈부르크(5.7%, 17.6%), 스웨덴(7.5%, 21.5%), 폴란드(7.0%, 19.3%)보다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한국경제연구원, 2021).

(단위 : %)



[그림 5-1] 주요 국가 청년실업률 연평균 상승 속도 및 전체실업률 대비 배율(2010-2020년)

출처: OECD 자료를 기초로 한국경제연구원(2021)이 분석

한국의 경우 국내 통계에서는 15세부터 29세까지의 실업률을 청년실업률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국내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에 해당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7.8%로 전년 대비 1.2%p 하락했다. 청년이 체감하는 실업률을 의미하는 확장실업률은 2022년 3월 기준 20.1%로 2021년 3월 25.4%, 2020년 3월 26.6%와 비교하면 낮다. 그러나 여전히 공식 통계와 달리 일하고 싶은 청년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확장실업률은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구직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도 함께 계산한다. 즉,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장기간 취업준비를 하는 공무원 준비생도 포함되는 실질적인 실업지표에 해당한다.

2021년 5월 기준 경제활동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9.1%(85만 9,000명)로, 2020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시험 준비분야는 일반직공무원이 32.4%로 가장 많았고 일반기업체(22.2%), 기능분야 및 기타(18.9%) 순으로 취업준비생 3명 중 1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구직단념자도 증가하고 있다. 구직단념자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1년 이내 구직 경험이 있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지난 4주간 구직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2021년 구직단념자는 62만 8,000명

으로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60만 5,000명)에 비해 3.8% 늘어난 규모이다.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는 2021년 기준 12만 8,000명으로 2020년보다 1만명(8.1%) 가량 증가했다. 전체 장기실업자 중 20대는 3만 7,000명, 30대는 2만 8,000명으로, 장기실업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6만 5,000명이 20-30대 청년층에 해당하였다.

청년실업의 영향요인은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Tomic, 2018). 일반적으로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GDP가, 비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청년실업의 영향요인으로 주목받는 변수이다. 비경제적 요인은 경제성장의 둔화로 노동시장의 청년실업자 흡수 여력이 약할 때 중요성이 부각된다(Patel, Graham, & Chowa, 2020). 이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규제 완화와 관련 복지정책 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관찰된다(허만형, 2021). 특히,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경기 상관성이 낮아(김태봉·박근형, 2020) 비경제적 요인이 청년실업 개선에 좀 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Selenko & Pils, 2019).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성장, 저축률, 재정투입 규모,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변수가 제시되고 있다(허만형, 2021). 대체로 경제성장은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청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경제성장은 청년실업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yrak & Tatli, 2018; Tomic, 2018; Wajid & Kalil, 2018).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경제성장은 청년실업률을 항상 낮추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Marconi, Beblavy, & Marselli, 2016)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령대에 따라 경제성장의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Bruno et al., 2017)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청년실업률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으로 저축률이 제시되기도 한다. 저축은 투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요인으로, 궁극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청년실업과 저축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통계적 유의미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ayrak & Tatli, 2018). 정부의 재정 투입도 청년실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uno et al., 2017). 재정 규모를 늘리면 청년실업률이 줄어들고, 긴축재정을 시행하거나 재정위기에 직면하면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현상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Choudhry, Marelli, & Signorelli, 2012). 한편, 인플레이션과 청년실업률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Prarama & Purmiyati, 2020). OECD 회원국의 청년실업 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Bayrak & Tatli, 2018).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에는 최저임금, 고용기회 균등, 노조, 산재 및 고용보험 등과 같은 제도가 포함된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 증대를 추진하는 청년보장 프로그램 등도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의 유형에 해당된다(장효진, 2017; Bayrak & Tatli, 2018). 많은 국가들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청년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구직 및 창업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유형화된다(Crisp & Powell, 2017).

실증분석 결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입은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체적 결론은 어떤 연구방법론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소 상이했다(허만형, 2021). EU의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청년고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안정 효과를 유발한다(Focacci, 2020)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단기적으로는 청년실업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Speckesser, Gonzalez Carreras, & Kirchner Sala, 2019). 또한,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특정 집단을 수혜집단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더라도 크지 않으며 일정 부분의 대체효과만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었다(Martin & Grubb, 2001). 또한, 비용-편익 차원에서 청년실업률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미래의 고용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Betchermann, Olivas, & Dar, 2004)는 연구도 있었다.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는 청년보장 프로그램을 청년창업지원, 청년구직지원, 청년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책 효과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창업, 구직지원, 일자리창출과 같은 청년보장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서 분석할 경우 대체로 청년실업 개선에 의미 있다는 결과(Focacci, 2020; Selenko & Pils, 2019)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청년보장 프로그램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프로그램 별로 효과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청년실업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riana-Cristina, 2014). 청년구직지원 프로그램은 교육이나 생활 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 그룹에서는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 그룹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Betcherman et al., 2007). 또한, 청년일자리창출 프로그램만으로는 청년실업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ique, Vea, & Strecker, 2015). 그러나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이 이에 맞는 교육 및 직업훈련과 연결될 때에는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Aceleanu, Serban, & Burghilea, 2015).

이처럼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또한, 대체로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포괄한 경우에는 정책효과가 있지만 청년보장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별 프로그램의 개별적 정책효과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여부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다양한 외생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일례로, 인구구조는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구 규모, 경제활동인구 규모, 경제활동인구에서의 청년 비중은 청년실업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다양한 경험적 연구(한영빈, 2020; Choi, 2017; Tomic, 2018)에서 논의되었다. 또한, 인구 규모 및 경제활동인구 규모와 청년실업률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결과(Jimeno & Diego, 2002)가 도출되었다(허만형, 2021).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OECD 회원국의 청년실업의 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청년실업을 따로 떼어 관련 경제적 요인의 영향과 정책적 개입의 영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는 청년실업을 둘러싼 다양한 외생적 요인을 포함할 수 없다. 이러한 접근방식으로는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요인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나 정부의 사회지출 배분 방식, 사회정책별 전체 인구 대비 정책 대상 비중 등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OECD 회원국의 청년실업 구조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제2절 분석 방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분석 자료

이 장에서 다루는 분석 자료는 OECD와 ILO 등을 통해 수집한 국가 비교 자료이다. 분석 대상 국가는 OECD 회원국으로 정하였다. 이는 분석의 목적상 일정 수준 이상의 제도적 발전을 이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석은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계열 분석과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화 분석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 선정하였고, 여타의 국가는 영미권, 대륙유럽, 북유럽 국가 가운데 대표적인 성격을 지니는 국가로 판단하여 정하였다. 분석 시기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이다.

2 시계열 분석

시계열 분석은 크게 시계열적 상관성 검토와 시계열 분해를 통한 추세 분석의 두 단계로 수행된다. 단계별 주요 사항과 분석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계열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rolling correlation(RC)을 통해 경제성장과 실업률 간의 시계열적 상관성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검토하는 것이다. RC는 복수의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각 변동 추이에서 상관성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방법이다. 상관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 시점별로 상관계수를 구하는 범위(window)를 설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관측점의 수를 고려하여 5년을 범위로 설정하고 상관성의 변화를 매년 추적하였다.

시계열적 상관성을 살펴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관련성에서 각 국가 사례에서 관찰되는 공통점과 국가별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고용 없는 성장’과 같은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간 관련성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계열 분석의 두 번째 단계는 시계열 분해를 통해서 청년실업률(15세~24세)과 기타 연령 집단(25세~75세) 실업률의 추이를 비교하는 것이다.³²⁾ 본 분석에서는 시계열 구조가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 이를 시계열적 요소별로 분해하고 전반적 추세를 검토하는 데 용이한 STL(Seasonal and Trend Decomposition Using Loess)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시계열 분해를 통해서 청년 실업과 기타 인구 집단 실업의 전반적인 변동 과정을 파악하고 양자 간 시계열적 유사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찰되는지 확인하며 그 수준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청년 실업의 변동이 지니는 고유성이 있는지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유형화 분석

본 연구에서 유형화 분석은 두 단계를 걸쳐 수행된다. 각 단계의 분석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의 첫 번째 단계인 유형화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직화 지도’(self-organizing map, SOM)³³⁾를 활용하기로 한다. SOM은 고차원의 다변량 데이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례의 유사성을 2차원의 평면 그리드(grid)상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유형화 결과의 시각적 검토를 통해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유형화 연구에서 유형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주요한 판단 사항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형의 수를 엄밀하게 도출하기보다는 유형화를 통해 실업률과 관련되는 주요 차원을 이해하고 예

32) 청소년·청년의 개념이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비교가능한 데이터가 제공되는 24세 미만으로 설정하였으며, 비청년의 나이를 75세까지 설정한 것은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65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정책이 확대되는 등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33) 자기조직화지도는 대뇌피질 상 시각피질의 학습과정을 모델화한 머신러닝 기법의 하나로, 자율학습에 의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차원(2차원 내지 3차원) 격자에 고차원 데이터의 각 개체들이 대응하도록 인공신경망과 유사한 방식의 학습을 통해 군집을 도출해내는 기법으로, 차원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와 군집화(clustering)를 동시에 수행한다. 고차원의 데이터 원공간에서 유사한 개체들은 저차원에 인접한 격자들과 연결되며, 저차원 격자에서의 유사도는 고차원 입력 공간에서의 유사도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학습된다.

외 사례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유형 수를 탐색적으로 15개로 설정하였다.

유형화 분석의 두 번째 단계는 차원 축약(dimensional reduction)이다. 유형화 결과를 놓고 차원 축약을 거침으로써 분석 결과를 보다 쉽게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흐름과 속성을 달리하는 케이스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포착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유형화에 포함되는 변수의 상관구조를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통해 탐색적으로 검토한 후,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활용해 유형화 결과를 요약·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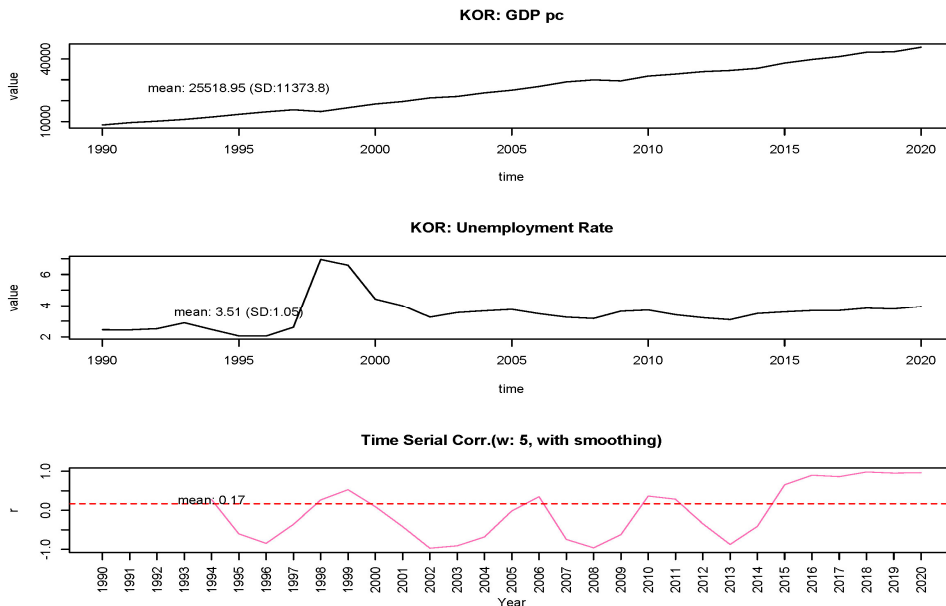
제3절 시계열 비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경제성장과 실업의 상관성

가. 한국

[그림 5-2]는 한국의 1인당 GDP 변화와 실업률 추이 양자의 시계열적 상관성을 rolling correlation을 활용하여 검토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Rolling correlation 계산에서 연관성 검토의 시간적 범위(window)는 5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림의 첫 행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은 꾸준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1997년과 2008년이 성장 추세가 주춤했던 주요 시점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행의 실업률 추이의 경우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가 존재하는 가운데 1997년 경제위기 시점에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졌다가 2002년 이후부터는 안정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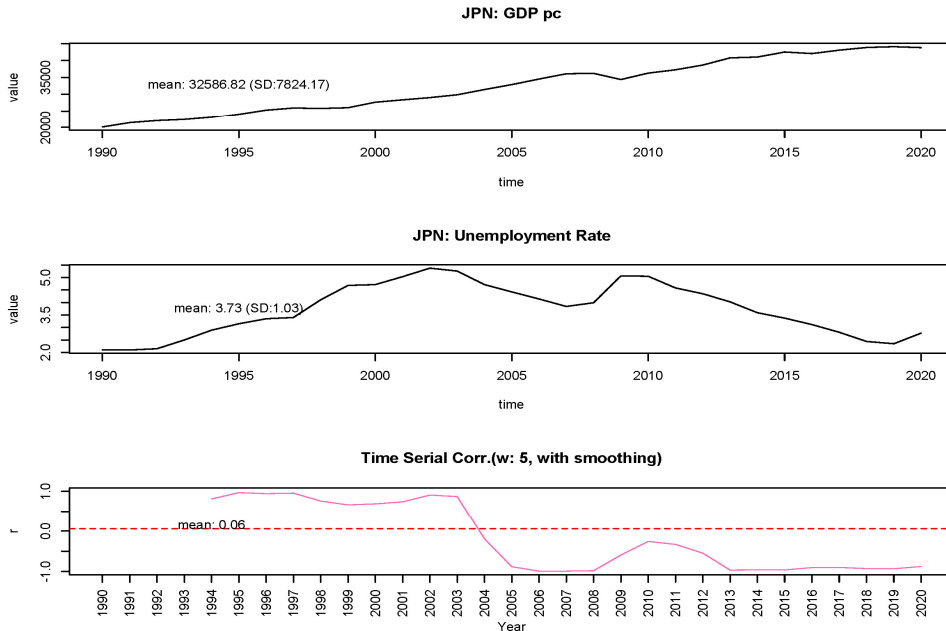
[그림 5-2]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상관성: 한국

마지막 행의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상관성은 시기에 따라 높은 수준의 부적 방향에서 약한 정적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변동하는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5년 이후부터는 강한 정적 상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 시기 전체에 걸친 상관성의 평균은 $r = .17$ 로 나타났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 시점에서 두 지표가 강한 음의 상관을 보이는 것은 경제성장의 감퇴와 실업률의 상승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2년과 2013년 전후에 관찰되는 강한 음의 상관은 경제성장 추이가 일정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실업률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음의 상관은 경제위기와 부분적인 회복 시점에서 동시에 관찰되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안정되게 관찰되는 높은 정적 상관성은 경제성장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이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 즉, 2015년 이전 시점에서는 경제성장과 고용이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동시에 반응한다면, 2015년 이후부터는 경제성장이 고용 지표의 개선을 견인하지 않는 양상이 포착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나. 일본

[그림 5-3]은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의 상관성을 검토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0년 이전 시점에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시점과 2008년에 지표가 악화하는 시점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실업률의 경우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점점 상승하던 실업률이 2007년 시점까지 다소 감소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후 2010년부터는 다시 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이 관찰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본격화되는 2020년에 실업률이 다소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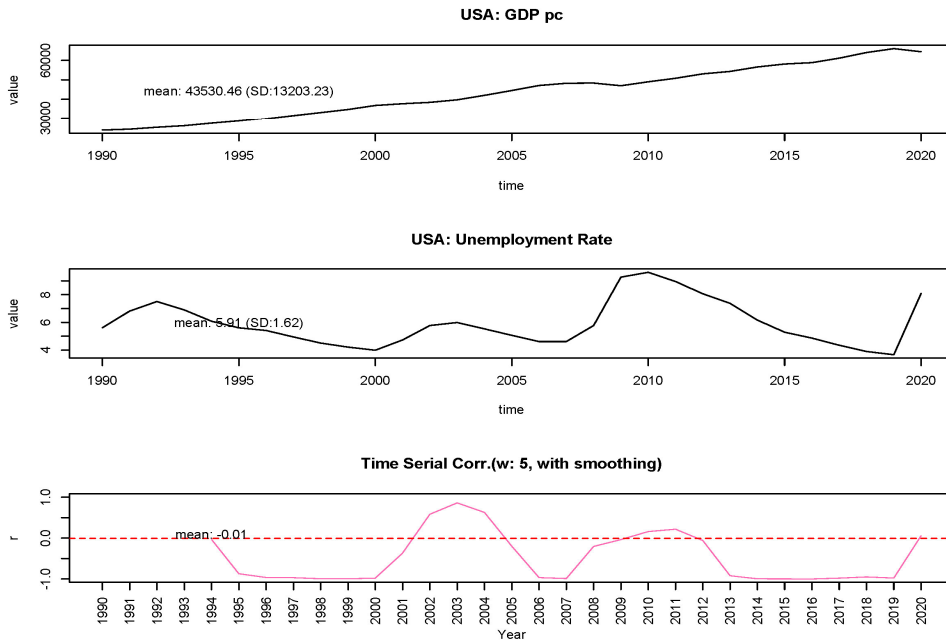


[그림 5-3]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의 상관성: 일본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의 상관 구조는 2004년을 기점으로 대별되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다. 2004년 이전 시점에서 두 지표는 안정되게 정적 상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실업률이 빠르게 높아지는 정황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2005년 이후부터는 비교적 일관되게 강한 음의 상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은 경제성장 추이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업률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과 관련된 것과 관련이 있다. 2004년을 기점으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관 관계로 인하여 전체 상관수준은 0에 가까운 $r=0.06$ 으로 집계되었다.

다. 미국

[그림 5-4]는 미국의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변화와 그 시계열적 상관성을 검토한 결과이다. 미국의 경우 외환위기를 경험한 2008 전후에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점진적인 회복세로 이행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의 경우 등락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점인 2020년에는 다시 급속도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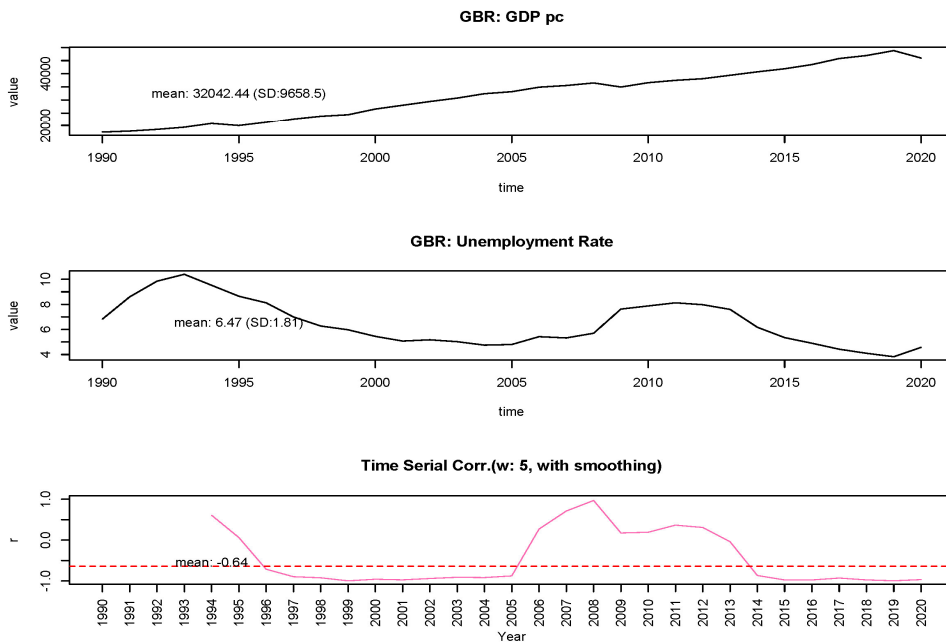


[그림 5-4]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상관성: 미국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관련성이 시기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2003년을 전후로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 2010년 전후로 약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시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강한 음의 상관을 유지하는 시기가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의 하락과 실업률의 증가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상관성의 방향이 양을 향해 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 영국

[그림 5-5]에서는 영국의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추이와 상관성을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국은 전반적인 경제성장 추이 가운데 1995년 시점과 2019년에 각각 성장 감퇴가 나타나며,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020년에도 성장 감소가 관찰된다. 실업률의 경우 1993년 전후로 상승세를 보이며, 2009년부터 2013년 사이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패턴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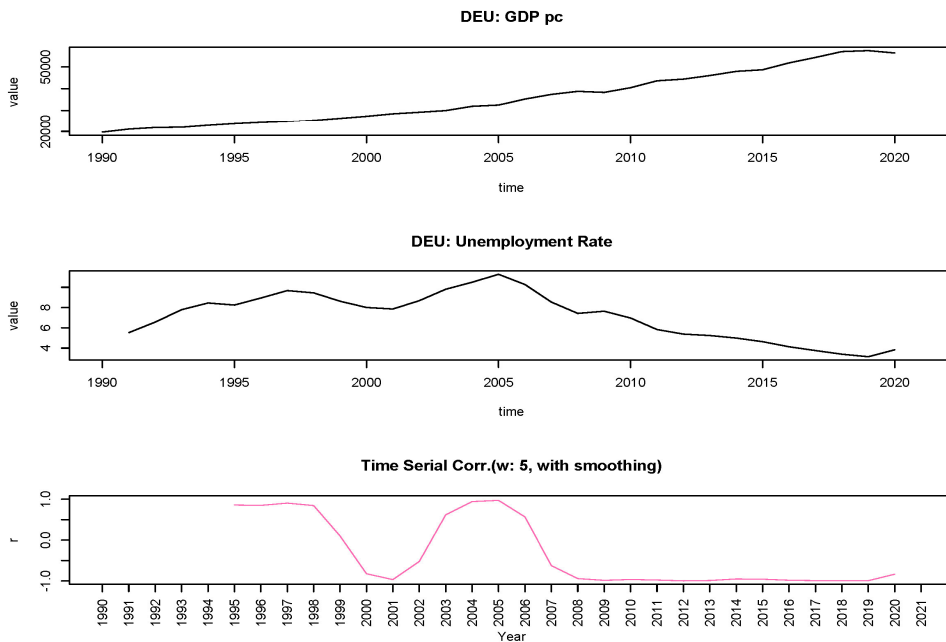


[그림 5-5]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상관성: 영국

영국의 경우 두 지표의 상관성이 전반적으로 강한 음의 방향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전후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던 시점에서 양의 상관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기간의 상관성은 $r = -.64$ 로 비교적 높은 부정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독일

[그림 5-6]에서 관찰되는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변화는 시기와 변화 수준에서의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경제성장의 경우 2005년과 2015년, 그리고 2020년에 주춤하는 시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추이를 보인다. 실업률의 경우 2005년을 정점으로 상승과 하락이 관찰된다. 다만 2005년 이후의 실업률 하락은 이전 시점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이행하는 패턴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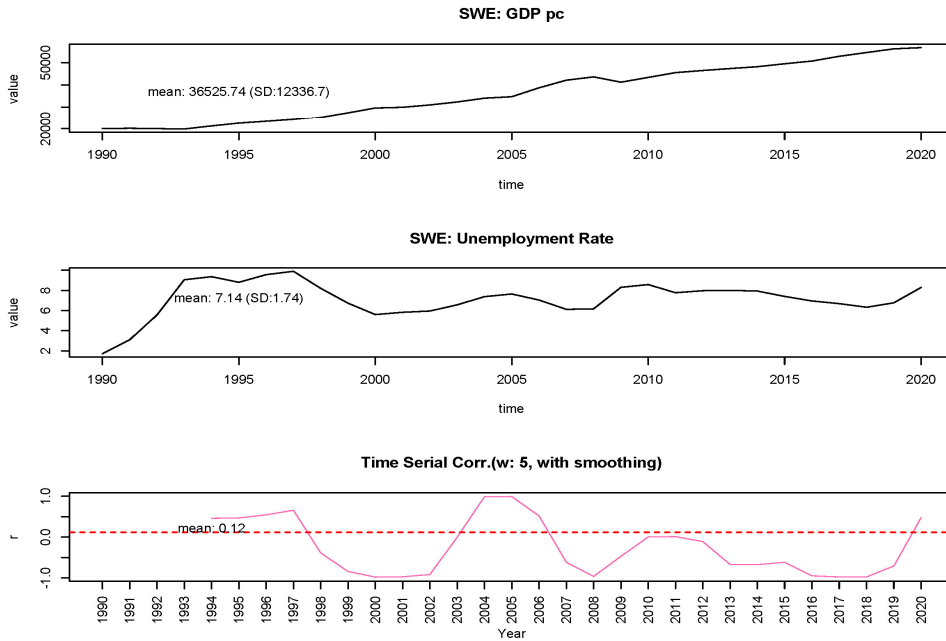


[그림 5-6]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상관성: 독일

독일과 일본의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전반적인 시계열적 유사성은 상관성에서도 유사한 양상이다. 2000년에 양자의 관련성이 음의 상관으로 이행하는 예외적 상황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2005년을 기점으로 이전 시점에는 높은 양의 상관을 보이다가 이후 안정적인 음의 상관을 유지하고 있다.

바. 스웨덴

[그림 5-7]에서 나타난 스웨덴의 특징은 2008년을 제외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유지함에 있다. 1990년부터 빠르게 상승한 실업률이 이후 6%~8%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며, 2020년에 다시 높은 상승 추이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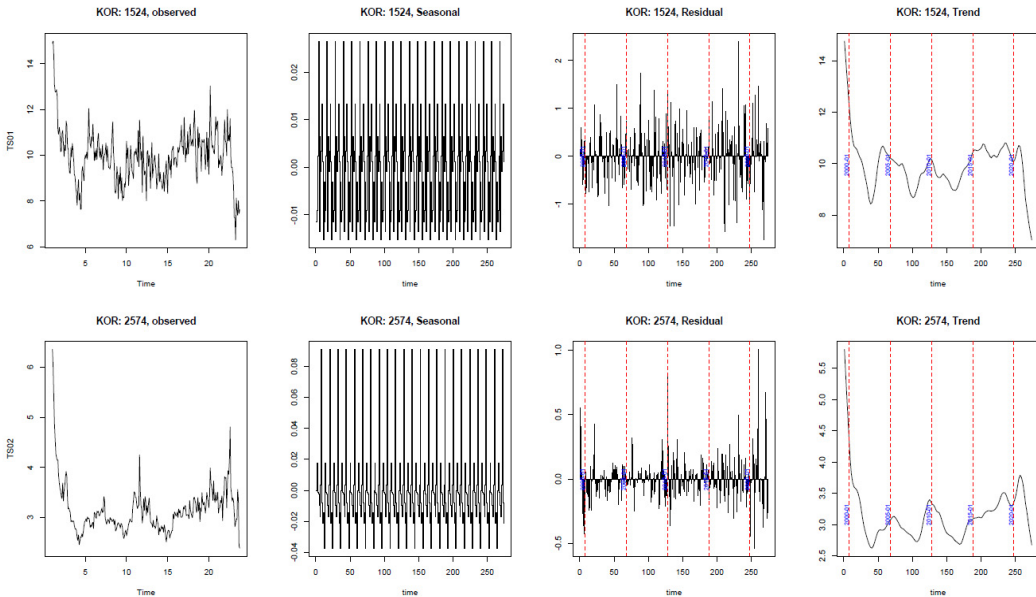
[그림 5-7]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상관성: 스웨덴

시계열적 상관성은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그 안에서 등락이 있기 때문에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을 오가는 패턴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r=0.12$ 로 약한 양의 상관으로 집계되었다.

2 연령대별 실업률 변화 비교

가. 한국

[그림 5-8]은 한국의 연령집단별 실업률 변화를 분해하여 비교한 결과를 담고 있다. 첫 번째 행은 15세~24세 청년 실업률을 나타내고, 두 번째 행은 25세~74세 집단의 실업률을 나타낸다. 첫 번째 열은 실제 추이를 제시한 것이며 분석의 시간 단위는 월(month)로 하였다. 시계열 분해는 계절적 변동(seasonal)과 추세(trend), 잔차(residual)로 나뉘었다. 계절적 변동을 다루는 시간 범위는 1년(12개월)으로 설정하였다. 가용한 데이터의 제한으로 국가별로 관찰 시기가 상이한데, 이를 나타내고자 잔차와 추세 그림에 점선으로 다섯 시기(2000년 1월, 2005년 1월, 2010년 1월, 2015년 1월, 2020년 1월)를 별도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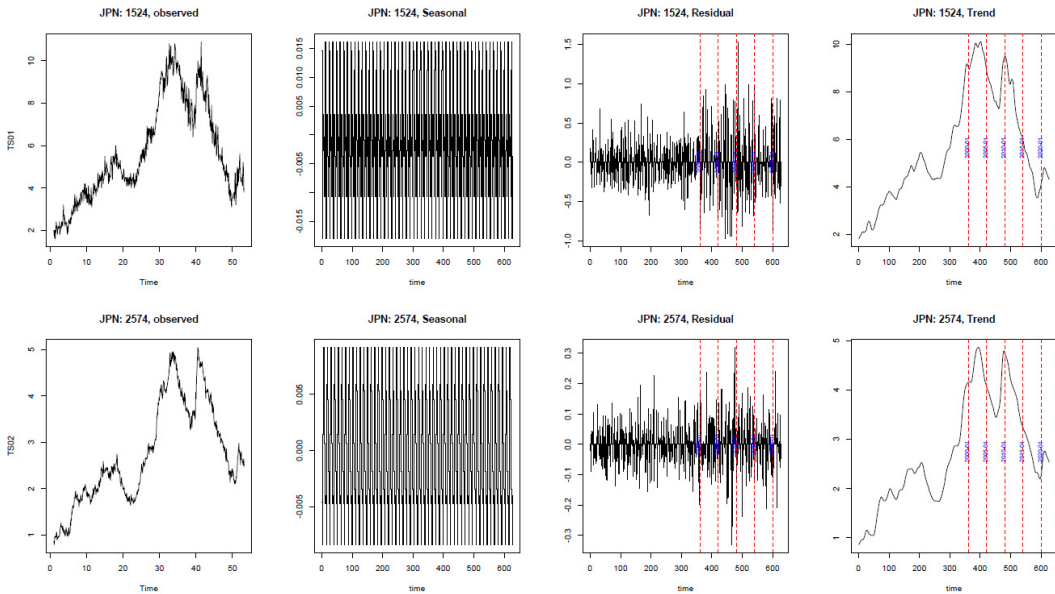
[그림 5-8] 연령집단별 실업률: 한국

한국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청년실업률과 기타 집단 실업률 추이의 유사성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2020년까지 높았던 실업률이 낮아지는 변화를 제외하고 양 지표의 변화 양상에는 차이가 관찰된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특징적인 모습이다. 추세뿐만 아니라 잔차 구조에서도 두 집단은 차이가 관찰된다. 청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잔차의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년실업이 변동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청년실업률이 여타 인구 집단의 실업률에 비해 높으나 한국의 경우 그 격차가 조금 더 크다는 점과 2000년 이후 실업률 회복 국면에서 청년실업률 회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특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20년 이후 두 집단 모두에서 실업률 지표가 일정 수준 개선되는 변화를 보인다. 특히 청년실업률의 감소가 두드러진 패턴이 나타났다. 다만, 이와 같은 추이가 일시적인 것인지 장기적인 추이 변동을 나타내는지 판단하려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나.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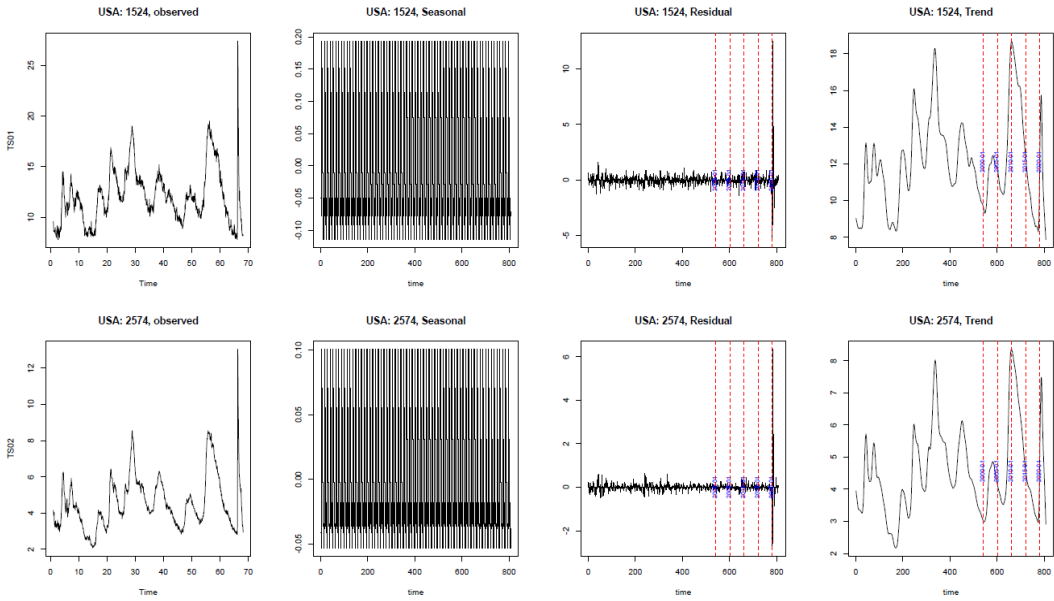
[그림 5-9]에서 나타나는 일본 연령집단별 실업률의 특징은 청년실업률과 기타 실업률의 추이가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점이다, 이는 한국과 대비되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두 지표 모두 2000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10년 이후부터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에는 두 지표가 모두 다시 상승하는 추이로 관찰된다.



[그림 5-9] 연령집단별 실업률: 일본

다.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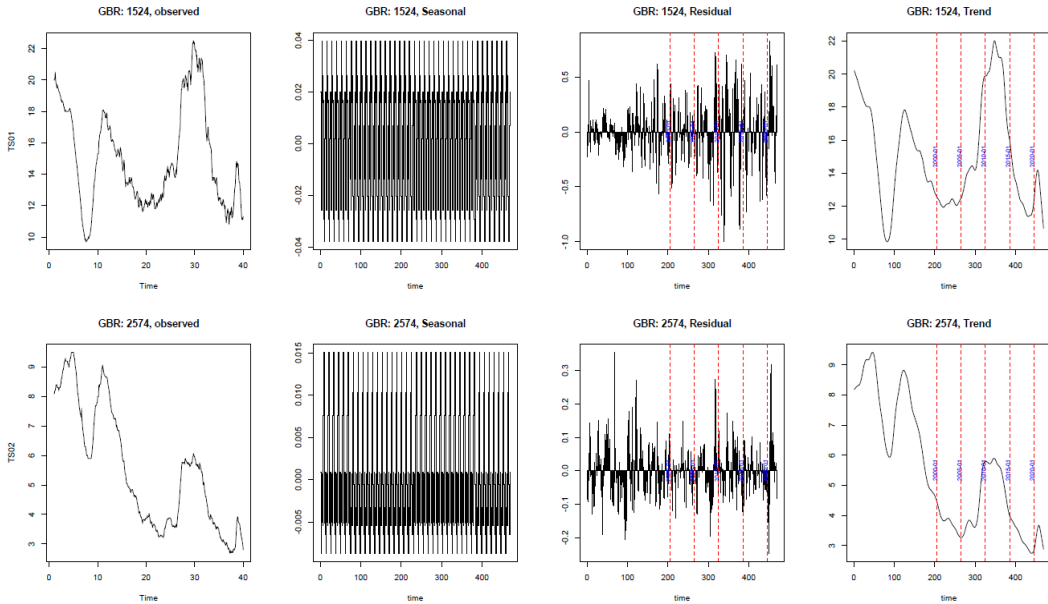
미국의 실업률 변화를 나타낸 [그림 5-10]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특징은 실업률 지표 변화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과 코로나19 확산 시점에서 지표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나빠지는 양상이 관찰되는 점이다. 잔차 구조 변화를 통해 2020년 초반이 상당한 이상치의 성격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미국 노동시장이 외부적 충격에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연령집단의 지표 변화는 유사한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0] 연령집단별 실업률: 미국

라.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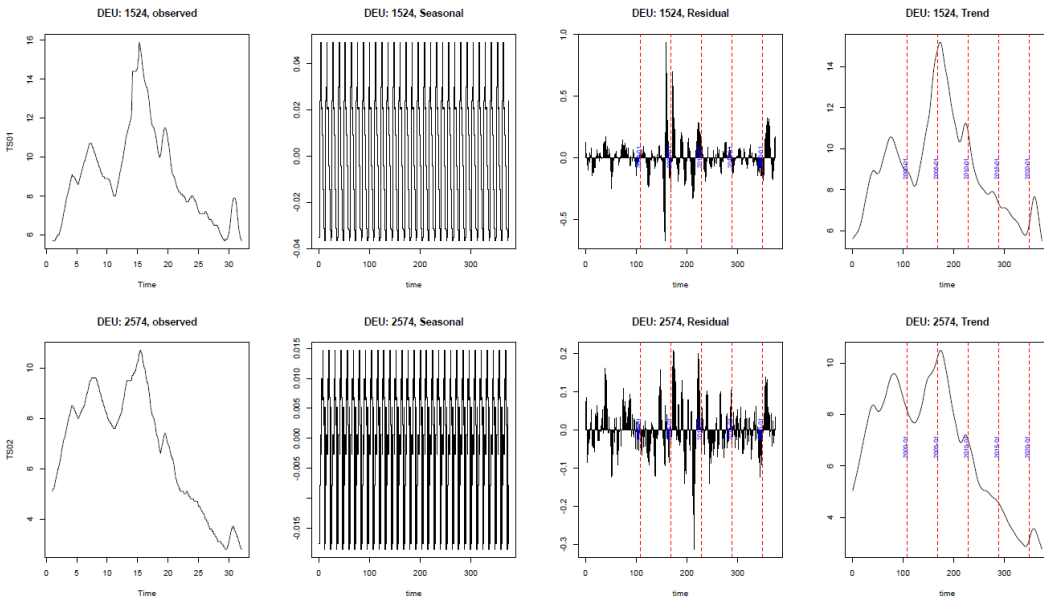
[그림 5-11]에서 나타나는 영국의 연령대별 실업률의 추이 또한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년 실업과 기타 집단의 실업률 변화의 방향이 비슷하지만 청년실업률은 그 폭이 훨씬 크고 평균적인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 등락이 있기는 하나 기타 연령대의 실업률은 관측 시점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청년실업률에서는 그와 같은 추세 관찰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잔차 구조의 경우 청년실업의 경우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그 폭이 점점 커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 청년실업이 그 수준과 불안정성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11] 연령집단별 실업률: 영국

마.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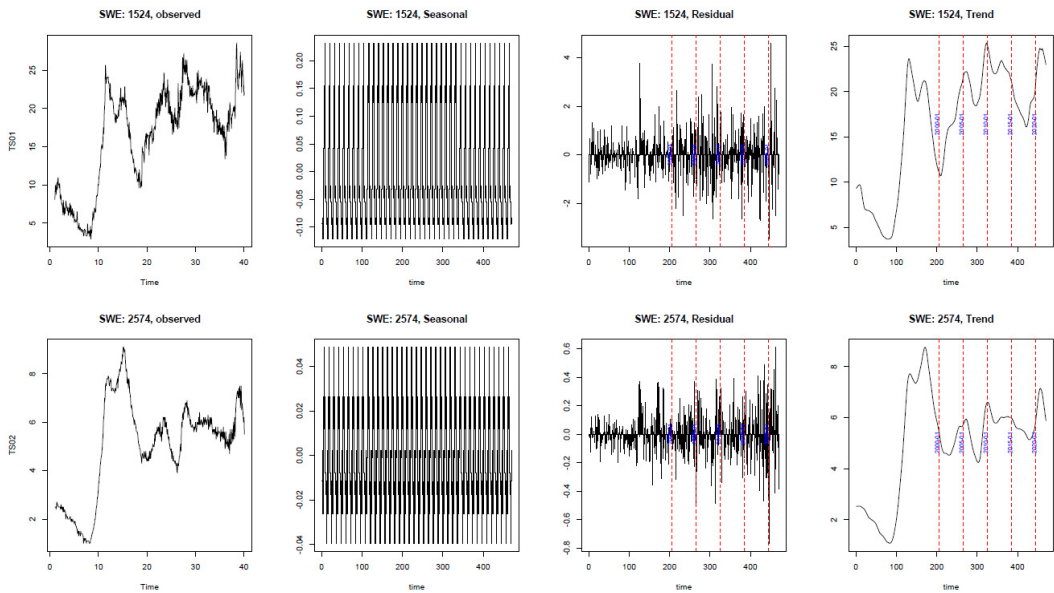
[그림 5-12]는 독일의 실업률 추이를 검토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두 연령 집단의 시계열이 유사한 변화를 보이는데, 청년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진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표 모두 2005년을 정점으로 최근 시점까지 지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2020년 초입에서 두 지표 모두 부분적인 악화가 관찰되나 곧 회복된다. 실업률의 가파른 증가를 보인 2005년을 살펴보면 잔차의 규모도 포착되었는데, 특히 청년실업의 경우 더 명확하게 포착되었다.



[그림 5-12] 연령집단별 실업률: 독일

바. 스웨덴

[그림 5-13]은 스웨덴의 연령집단별 실업률 추이를 분해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영국과 유사하게 스웨덴 또한 청년 실업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보일 때는 25%에 육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잔차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두 연령 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높고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변화의 폭 또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웨덴의 실업률 구조가 시기에 따른 높은 변동성을 지님을 의미한다. 기타 연령 집단의 경우 2000년 이후 6% 전후 수준에서 등락을 유지하나, 청년실업률은 점점 높아지는 패턴이 관찰된다.



[그림 5-13] 연령집단별 실업률: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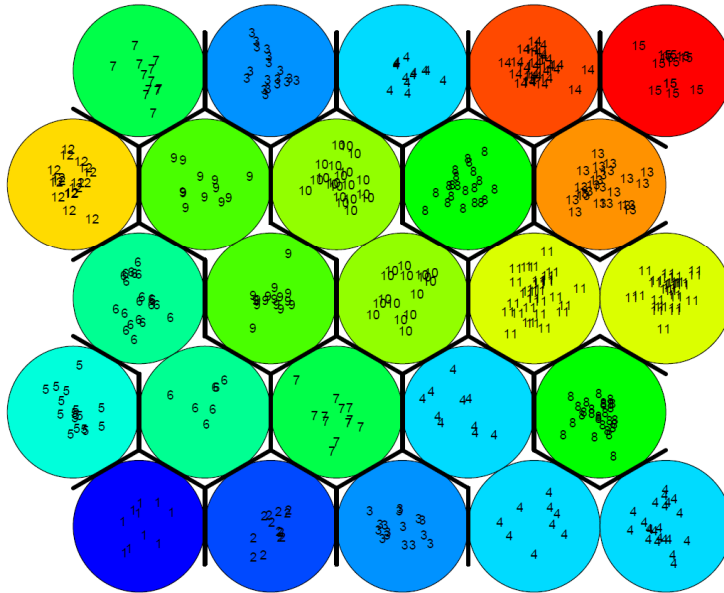
제4절 유형화 결과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자기조직화지도(SOM) 분석 결과

[그림 5-14]는 자기조직화지도(SOM)를 활용한 유형화 결과를 5*5 그리드 상에 배치한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굵은 선은 유형을 나누는 경계를 의미하며 각 사례의 군집 번호를 숫자로 제시하였다. 본 분석의 목적은 엄밀한 유형수를 도출하는 데 있기보다는 실업률과 관련된 주요 제도 변인의 구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형 수를 15개로 설정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Mapping plot



[그림 5-14] SOM을 활용한 유형화 결과

[표 5-1]은 탐색적으로 도출한 15개 군집의 특성을 유형화에 투입한 변수를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는 변수별로 상위 10%(“+++”), 상위 25%(“++”), 상위 40%(“+”), 상위 65%(“=”), 상위 70%(“-”), 상위 85%(“--”), 상위 85% 이상(“---”) 순으로 급간을 나누어 표기하였다. [표 5-2]에는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집단별로 각 변수의 평균을 제시했다. 두 연령별 실업률 가운데 평균이 상위 40%에 속하는 군집은 굵은 글씨로 별도 표시했다.

[표 5-1] 군집 특성 비교

변수	군집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C14	C15
실업률_1524	--	---	-	+	---	---	=	=	-	+	+++	--	++	++	+++
실업률_2574	---	---	-	+	---	--	=	+	-	=	+++	--	++	++	+++
GDPpc	+++	++	=	-	+++	++	=	--	+	-	--	+	---	---	---
출산율	--	++	+++	-	++	=	=	-	+	+++	---	+	---	--	---
노령화	--	++	-	=	--	+++	+	-	+++	=	+	++	---	---	---
서비스산업	+++	-	=	-	=	++	+	--	+	++	--	+++	---	---	---
고용률	=	+++	+	-	+	+++	=	--	++	-	---	++	---	--	---
총사회지출	--	++	=	-	=	+++	+	-	++	+	--	+++	---	---	---
실업지출	=	--	++	++	--	=	+++	-	+++	+	-	+	---	---	---
노령지출	-	-	--	=	---	+	+	++	+++	++	+++	=	--	---	---

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군집 13, 14, 15는 변수별 수준 차이만 있을 뿐 거의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집 15변이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였고 군집 13과 14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그림 5-14]에서 이들 세 집단은 유사한 성격에 따라 공간상에 밀접하게 자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업 수준이 가장 높은 이들 집단은 OECD 국가 가운데서 경제인구학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후발 국가의 특성을 보인다. 1인당 GDP 수준과 노령화, 서비스산업 비중(탈산업화), 총사회지출을 포함한 공공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후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나 고용률 등의 지표도 낮은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유형화 분석의 특성상 한 국가도 연도에 따라 다양한 군집에 속할

수 있다. 이들 군집 대부분은 최근 시점에서는 많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는 이들 군집에 속하는 전형적인 국가로서 2010년 전후에는 군집 15에 속하다가 최근 시점(2015-2017년)에서는 군집 14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시점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군집 13과 군집 14에 번갈아 가며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세 군집과는 별도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군집 11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노령화 수준과 가장 높은 수준의 노령 지출 수준을 보이는 나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에서 총사회지출이 중위 이하 수준임을 고려할 때, 노령 지출(특히, 연금)의 비중이 사회복지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군집에는 비교적 다양한 나라들이 시기에 따라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는데, 2000년 초부터 2010년 사이 기간에는 라틴 국가(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주요국으로 분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최근 시점에는 그리스와 헝가리(2014-2016년), 터키(2016-2017년) 등이 이 군집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제시한 군집 수준은 아니나 중위 수준 이상의 청년실업률을 보이는 군집은 군집 4와 군집 10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군집 4는 다른 사회지출에 비해 실업 관련 지출의 비중이 큰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해당 국가는 노령 지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연금과 같은 현금성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개혁이 있었거나 연금의 실질적인 성숙에 앞서 실업문제에 직면한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주로 북유럽 국가(스웨덴, 핀란드)와 일부 대륙 유럽국가(벨기에, 프랑스 등)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시점에는 에스토니아와 포르투갈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군집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인구 집단에 대한 실업률 지표가 전반적으로 정적 상관성이 높은 반면에 군집 10은 두 실업률 지표 가운데 상대적으로 청년실업률 지표가 더 악화된 특성을 보인다. 2010년 이전 시점에 이 군집에는 주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빈번하게 속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013년과 2014년에 이에 속했다. 분석의 최근 시점인 2017년에는 체코와 슬로베니아가 이 군집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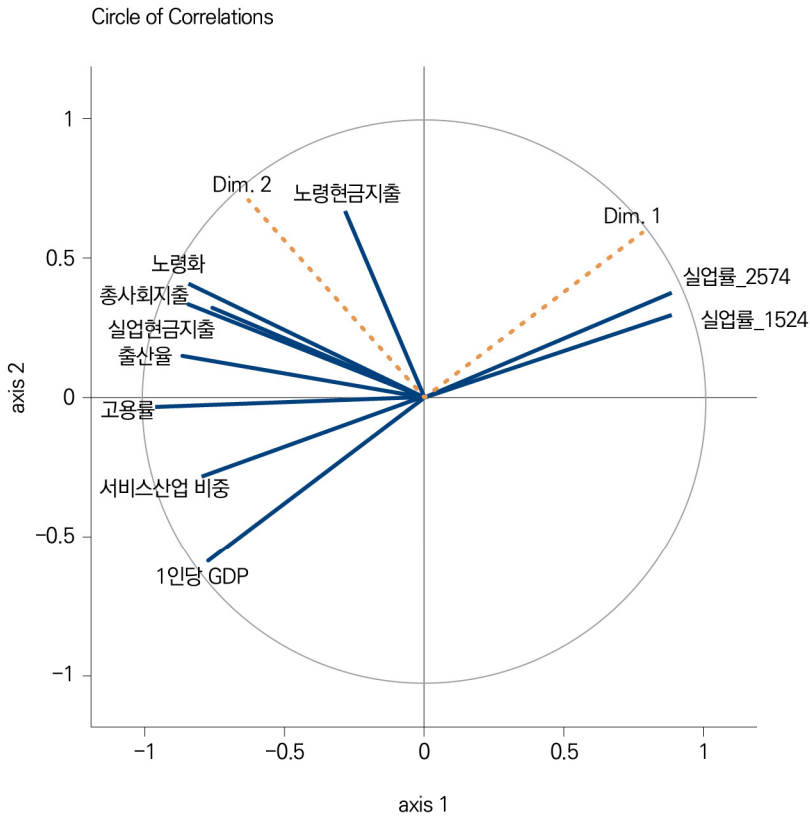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청년 실업을 포함하여 실업률이 높은 사례 다수는 총사회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노령 지출 비중은 비교적 높은 나라였다.

[표 5-2] 군집 속성 비교

변수	군집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C14	C15
실업률_1524	15.98	12.66	16.92	18.76	12.3	13.99	17.94	18.26	16.36	19.25	23.29	15.56	20.55	19.62	28
실업률_2574	4.29	4.76	5.84	7.07	3.79	5.52	6.39	6.75	5.61	6.31	9.16	5.54	7.96	7.52	11.8
GDPpc	72802.55	54399.07	38237.37	32304.54	61666.8	49047.7	40602.93	28997.17	43122.48	35559.52	25941.77	46009.29	19878.29	22782.6	15066.71
출산물	1.56	1.76	1.86	1.67	1.75	1.71	1.71	1.57	1.73	1.76	1.5	1.75	1.47	1.55	1.46
노령화	14.46	16.18	15.08	15.77	14.86	17.35	16.05	15.72	17.1	15.74	15.83	16.81	13.28	13.56	11.08
서비스산업	72.86	64.11	64.35	63.42	64.51	67.01	64.78	61.23	65.21	65.23	61.12	67.12	57.41	58.7	55.59
고용률	67.44	71.68	68.87	66.38	69.95	71.58	68.11	64.87	69.95	66.72	62.15	70.69	60.9	62.44	55.54
총사회지출	17.92	23.1	22.12	20.68	20.76	24.8	22.74	19.19	24.12	22.69	18.71	24.73	15.33	16.15	15.11
실업지출	1.06	0.77	1.18	1.19	0.66	1	1.31	0.81	1.19	1.09	0.8	1.12	0.48	0.56	0.34
노령지출	6.31	6.54	6.17	6.64	5.64	6.83	6.73	7.08	7.51	7.15	7.65	6.69	6.14	5.59	5.95

2 차원 축약 결과

[그림 5-15]는 변인 간 상관구조를 원형으로 제시한 것이다. 변인이 서로 가깝게 위치할수록 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반대 방향에 위치하는 경우는 음의 상관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두 변인의 상관성이 관찰되지 않으면 방향을 직교하게 된다. 여기서는 주 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을 활용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잠재차원을 함께 위치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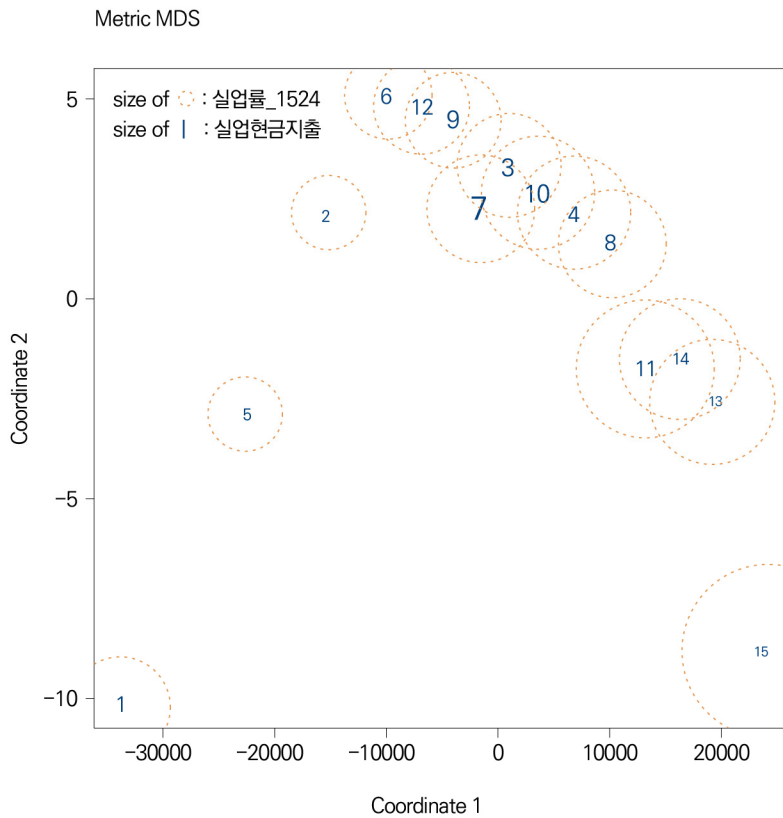


[그림 5-15] 실업률 관련 변인 간 상관구조 검토

그림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잠재차원 1(dim.1)과 가깝게 두 실업률 지표가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형화에 포함된 변인 가운데 국가 간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변수가 실업률이라는 점과 두 실업률이 높은 정적 상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1인당 GDP는 이들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성장과 실업률 간에 일정한 부적 상관성이 있음을 뜻한다. 서비스산업 비중 또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 서비스산업 비중과 실업률 간에는 부적 상관성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잠재차원(dim.2)에는 노령연금지출, 노령화, 총사회지출, 실업현금지출 등이 비교적 가깝게 위치한다. 두 잠재차원의 방향이 거의 수직을 이루고 있어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개별 변수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실업률과 부분적인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6]은 다차원 척도법을 활용하여 15개 군집의 특성을 2차원의 평면에 제시한 것이다. 두 차원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청년실업률에 따라 원의 크기를, 실업에 대한 공적 현금 지출에 따라 군집 번호의 크기를 조정하였다. 첫 번째 차원(coordinate 1)은 청년실업률의 차이를 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차원(coordinate 2)은 실업에 대한 현금 지출 수준과 주로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양자는 일정한 부적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16] 다차원척도법(MDS)을 활용한 차원 축약 결과

그런데 이와 같은 관련성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군집 1, 군집 5, 군집 2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추세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 가장 큰 특이성을 보이는 군집 1은 앞서 살펴본 집단 간 차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군집은 높은 경제성장 수준과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산업 비율을 보이면서 공공지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업률 또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다소 예외적 특성을 보이는 군집 1에는 주로 룩셈부르크가 포함된다. 룩셈부르크는 거의 모든 조사 기간에서 해당 군집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인 예외성이 확인되는 군집 5에는 비교적 다양한 시기에 걸쳐서 국가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양상이 관찰되는데, 룩셈부르크가 2000년대 초반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미국이 최근 시점에 들어서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실업률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면서도 실업에 대한 공공 지출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구조를 보이며, 노령 지출 등의 여타 사회보장지출도 낮은 수준을 보인다.

제5절

고용 없는 성장사회와 변동성이 큰 청년실업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장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시계열 분석과 유형화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관계는 국가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과 실업이 부적 상관을 보이는 국가도 있었으며, 비교적 안정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국가도 있었다. 한 국가 내에서도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실업률을 설명하는 공통 요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실업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국가별 제도적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흔히 언급되는 ‘고용 없는 성장’이 국가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최근 들어 경제성장과 실업률이 높은 양의 상관을 유지하며 성장과 노동시장의 지표 개선이 유리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독일, 일본은 전반적으로 높은 음의 상관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높은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빠르게 탈산업화로 이행하면서 경제성장이 고용을 견인하지 않는 구조로 변화했지만,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 부분이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고용 없는 성장’이 대부분의 경제대국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일부 국가에 한정된 사회현상일 수 있다는 점이 관찰된 것이다.

셋째, 유형화 분석 결과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예외적인 사례가 있지만, 사회보장 지출과 실업률 간에는 일정한 부적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공적 사회보장 지출의 구성에 따라 그와 같은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관찰했다. 실업에 대한 보장 수준과 실업률 간에는 부적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보장 지출에서 상대적으로 노령 지출이 많은 국가의 경우 실업률이 높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은 사회보장 지출의 양적 측면과 별개로 그 구성과 성격에 따라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업률 변화 경향과 관련된 요인에서 한국은 상당히 독특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관련성에 변동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강한 정적 상관성을 보이며 그러한 성격이 고착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비교 연구에서 다른 여타의 사례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특징이었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이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타당성을 지닌다는 것을 함의한다. 한국은 다른 인구 집단의 실업률과 청년실업이 독립적으로 변동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실업률의 변동이 청년실업의 경향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는 다른 국가 사례와는 구별되는 특성이다. 이 차이의 성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률의 독자적 성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제6장

성인 이행기 역할 구조와 인식 구조 비교

이상직·사사노미사에

제1절 성인 이행기 역할과 인식의 관계

제2절 분석 대상과 자료

제3절 역할 구조

제4절 성역할 태도

제5절 전환기 역할-인식의 괴리

제 1 절

성인 이행기 역할과 인식의 관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장에서는 4장에서 확인한 성인 이행 체제의 성격이 청년층의 역할 구조와 인식 구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비교 대상 국가는 7개국이다. 7개 국가는 영국과 미국, 스웨덴, 독일과 프랑스, 한국과 일본이다. 영국과 미국, 스웨덴, 독일과 프랑스는 ‘자본주의 다양성론’이나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이념형적 유형을 각각 대표하는 사례 국가다. 영국과 미국은 자유주의 유형을, 독일과 프랑스는 보수주의 유형을, 스웨덴은 시민주의(또는 보편주의) 유형을 대표하는 사례로 소개된다. 그만큼 관련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론이나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일본과 한국은 주요 사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두 국가 사례를 어느 유형에 포함할 것인가’의 쟁점은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고, 그런 만큼 이 두 국가의 특징도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배열에 대한 논의를 기본으로 성인 이행기에 확인되는 사회적 역할 구조와 인식 구조의 특징을 포착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말해 라이프 코스 구조의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각국의 제도적 맥락 차이를 드러내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 ‘성인 이행기’는 만 13세부터 29세까지를 의미한다. 이 시기 구조는 역할과 인식이라는 두 차원에서 측정한다. 역할 구조는 근대 산업사회를 양분하는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맡은 역할 지위 분포로 확인할 수 있다(이상직, 2022a). 인식 구조는 성역할 태도로 확인할 수 있다. 비교 시점은 2018년이다. 연구 질문은 2018년 시점에서 7개국의 성인 이행기 구조는 서로 얼마나 다른가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일본 내각부에서 수집한 ‘일본과 외국 여러 나라의 청년 의식에 관한 조사, 2018’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여러 나라 청년의 가치관을 비교하여 청년 정책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일본 내각부가 2013년도부터 5년마다 수집하는 조사 자료다. 이 자료를 활용해 2018년에 만 13세에서 29세 사이의 해당 인구집단이 언제(몇 살) 누구(혼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살면서 무슨 일(학업, 노동, 기타)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했다.

다음으로 성역할 태도를 묻는 세 문항으로 인식 구조를 확인했다. 비교 차원은 젠더다. 각국의 역할 구조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비교하고, 인식 구조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확인했다. 그 결과를 사회경제제도 유형론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청년이 자리한 사회적 위치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학교-직장 이행 양상이나 가족 이행 양상 각각에 초점을 맞춘 국가 비교 연구는 상당수 있다. 그러나 둘을 결합한 시각에서 포착한 성인기 이행 국면을 보는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 사례를 포함한 연구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Park and Sandefur(2005)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국내 연구로 한정하면 소수의 비교 연구는 노동이력과 가족이력을 따로 본다. 반면, 노동이력과 가족이력을 같이 보는 소수의 연구는 한국 사례만 본다(이병희 외, 2010; 이승렬, 2015).³⁴⁾ 따라서 한국이 비교국가 관점에서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국가 단위 자료를 조직해 한국의 성인 이행 체제를 국제 지형에 자리 매긴다.

이 장에서도 4장에서 제시한 성인 이행 체제 개념을 분석틀로 삼는다. 그렇지만 일정한 한계도 의식한다. 기존 성인 이행 체제 유형론의 한계는 제도 배열을 논의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 실제 각국의 성인기 이행의 패턴 혹은 구조를 사회조사 자료로 실증 분석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작업은 대체로 인구나사회학적 지표를 비교하는 수준에서 정리된다. 이 연구는 제도 배열의 맥락을 감안하되 실제 성인 이행기의 구조를 역할 지위 분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비교한다. 이는 기존 유형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장의 분석이 성인 이행 체제 관련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지점은 성인 이행기의 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축으로 ‘인식 구조’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성인 이행 체제론은 성인기 역할 배열을 뒷받침하는 문화론적 요소나 인식론적 요소에 주목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성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인식만 비교하는 데에 그친다. 인식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일종의 문화론적 설명으로 그친다. 인식 연구에서 특히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묶여서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비교가 그리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사사노, 2021)에 주목할 필요

34) 소수의 예외적 연구로는 안선영·Cuervo·Wyn(2010)의 연구나 조성호·菅桂太·渡邊雄一·四方理人·김유경·김지민(2017)의 연구가 있다. 전자는 호주와 비교했고, 후자는 일본과 비교했다. 이병희 외(2010)의 연구에서도 분기 행위를 국제 비교하고 있다.

가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사회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사례에서는 연령대별 분포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문화론적 설명은 일종의 순환 논리의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구조와 인식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전제하에 둘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제2절 분석 대상과 자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7개 국가의 청년

조사대상국과 응답자 수는 한국이 1,064명, 일본이 1,134명, 미국이 1,063명, 영국이 1,061명, 독일이 1,049명, 프랑스가 1,060명, 스웨덴이 1,051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자료는 일본 내각부가 조사한 ‘일본과 외국 여러 나라의 청년 의식에 관한 조사, 2018’이다. 이 자료는 여러 나라 청년의 가치관을 비교하여 청년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 일본 내각부가 2013년도부터 5년마다 조사해 얻은 결과물이다. 조사 영역은 ‘(1) 인간관계 (2) 국가·사회관계 (3) 지역사회·봉사관계 (4) 직업관계 (5) 학교관계 (6) 가정관계’이다. 조사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각국 모두 1,000개의 샘플 회수를 원칙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은 2018년 당시 13세에서 29세인 1989년생부터 2005년생이다. 표본추출에 있어서는 각국의 통계 데이터에 근거한 인구구성비로 성별, 연령 구분별로 표본 수가 할당되어 있으며 아울러 국가마다 지역 구분을 설정하고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른 할당 수도 설정했다. 또 회수 시에는 성별·연령 구분과 지역 구분에 따라 할당한 각각의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했다.

2 역할 지위

이 연구에서 성인기 역할 구조는 두 차원으로 측정한다. 하나는 교육·노동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차원이다. 만 13세에서 29세에 이르는 각 분석 사례는 교육·노동 차원과 가족 차원에서 특정한 지위를 갖는다. 이 연구는 앞서 소개한 자료를 활용해 2018년에 만 13-29세 인구집단이 언제(몇 살) 누구(혼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살면서 무슨 일(학업, 노동, 기타)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했다. 이들 지위의 분포가 이 연구에서 말하는 성인 이행기 역할 구조다. 아래에서는 두 차원에서 지위를 측정한 방식을 소개한다.

가. 학업·노동 지위

교육·노동 차원에서 역할 지위는 학업과 노동 범주의 교차에 따라 도출되는 ① ‘학업’, ② ‘노동’, ③ ‘기타’의 세 범주로 구성하였다. 학업·노동지위를 구성하기 위해 활용한 조사 문항은 ‘취업 유무’를 묻는 문항(F7)을 사용했다. 여기서 ‘풀타임으로 일한다’와 ‘학교에 다니면서 풀타임으로 일한다’, ‘파트타임이나 파견사원, 계약사원으로 일한다’를 ② ‘노동’으로 구분하였으며, ‘학교에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알바 포함)’, ‘학교에 다니며 파트타임 노동은 안한다’는 ① ‘학업’으로, ‘실업 중’, ‘전업주부(專業主婦·主夫)’, ‘무직’은 ③ ‘기타’로 구분하였다.

나. 가족 지위

가족 지위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3개 범주로 구성했다. ① ‘가족’, ② ‘혼자’, ③ ‘혼인’이 그것이다. 가족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동거자에 관한 문항(F4)으로 확인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은 ① ‘가족’ 범주로, ‘혼자’, ‘애인’, ‘친구’, ‘룸메이트’, ‘기타 사람’과 사는 사람은 ② ‘혼자’ 범주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당신의 자녀’와 사는 사람은 ③ ‘혼인’ 범주로 구분하였다.

다. 결합 지위

학업·노동 지위 세 가지와 가족 지위 세 가지를 결합한 변수를 다음 9가지로 구분하였다. ① ‘가족·학교’, ② ‘가족·일’, ③ ‘가족·기타’, ④ ‘혼자·학교’, ⑤ ‘혼자·일’, ⑥ ‘혼자·기타’, ⑦ ‘혼인·학교’, ⑧ ‘혼인·일’, ⑨ ‘혼인·기타’이다.

3 성역할태도

7개국 청년의 성역할태도에 대하여 다음 3가지 문항을 토대로 비교분석했다. 하나는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이며 다른 하나는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이다. 각각 이 문항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성별, 연령별로 구분해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를 묻는 문항에 대해 ‘결혼해야 한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로 대답한 사람들의 성별 비율과 연령별 비율을 확인했다.

4 분석 절차

이 연구의 1차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의 성인 이행기 역할 구조를 포착하고 비교함으로써 한국 청년 집단의 사회적 생애 시간표의 특징을 확인하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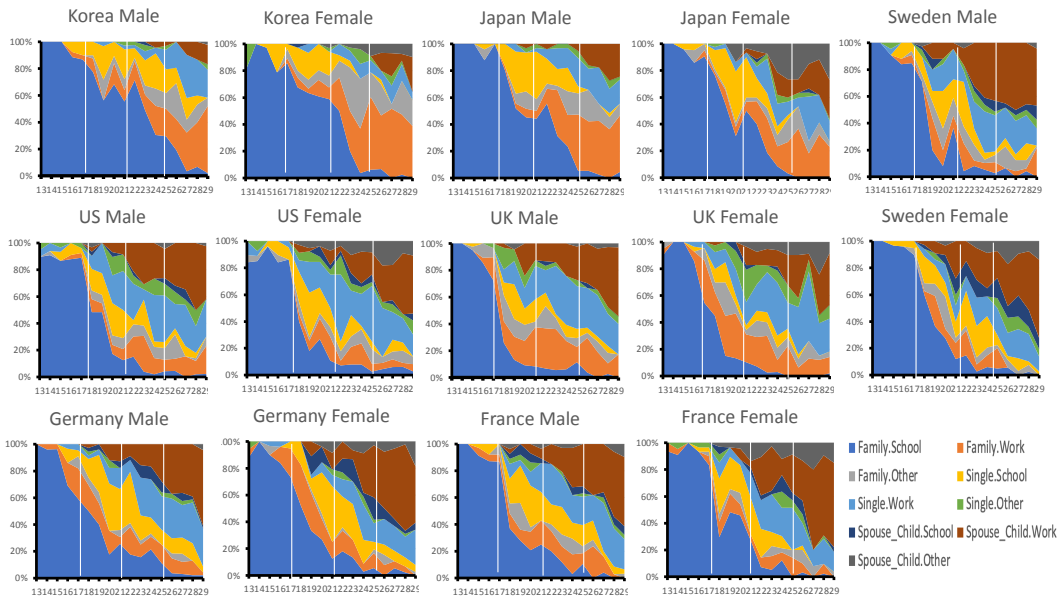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각 시점에서 만 13세-29세가 생산 영역(학업·노동지위)과 재생산 영역(가족 지위)에서 차지한 결합적 지위를 확인해 역할 구조를 도식화한다. 다음으로 성역할 태도 문항 2개와 결혼 가치 문항 1개에 대한 성별·연령별 응답 비율을 국가별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역할 구조와 인식 구조의 관계를 확인한다.

제3절

역할 구조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그림 6-1]은 성인 이행기 역할 구조를 국가와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각 범주가 나타내는 것은 학업·노동지위와 가족지위를 결합한 ‘결합지위’다.



[그림 6-1] 성별 7개국 성인 이행기 역할 구조 비교

우선 가족주의 유형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은 다른 서구 국가와 비교해 분가(leaving home) 시점이 매우 늦고 교육기간이 길며 결혼으로의 이행이 매우 늦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흥미롭게도 일본 남성과 한국 여성의 생애과정이 다소 유사하게 나타난다. 두 집단 모두 22세까지 부모와 살면서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이후 29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살면서 일하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20대 중반에 부모와 살면서 일자리를 찾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일정 수준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한국 남성은 군복무를 하는 관계로 20대 중반까지 부모와 살거나 혹은 혼자 살면서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대략 절반을 차지한다. 혼자 살면서 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한국보다 일본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혼자 살면서 일하는 사람이 한국 여성 중에는 거의 없다는 사실도 눈에 띈다. 결혼으로의 이행은 한국이 일본보다 늦다. 25세가 되었을 때 일본 여성의 40% 정도가 결혼을 하고 일하거나 전업주부로 지내는 반면에 한국 여성은 25세에 결혼으로 이행한 여성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후 29세까지 조금씩 결혼 비율이 증가하지만 그 시점에서 70% 정도는 결혼으로 이행하지 않는다.

한일 모두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으로의 이행이 더 늦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 남성에 비해 한국 남성이 결혼이 더 늦다. 마지막으로 전업주부가 제도적으로 보호 받는 일본에서는 결혼하고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여성이 7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다.³⁵⁾ 결혼하기 전에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고 학교 졸업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일하는 생애과정이 가족주의 국가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한국 여성 사이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부모와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양국 모두 일정 정도 있는데 혼자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다음으로 자유주의 유형에 들어가는 미국과 영국을 비교해 보자. 가족주의 유형에 들어가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분가가 빠른 부분이 눈에 띄고 늦은 나이까지 교육을 받는 인구도 적다. 영국은 미국에 비해 17세 이후 교육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낮고 18세가 되면 남성은 혼자 살면서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다소 있어도 여성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에 비해 미국에서 대학교까지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18세 이후에는 집을 떠나 혼자 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결혼으로의 이행도 빠르다. 양국 모두 18세가 지나면 집을 떠나 일을 하거나 결혼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

35) 일본에서는 '생계부양자인 남편과 전업주부인 아내'라는 남녀역할 분업형 가족모델이 1970년부터 1980년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전업주부를 보호하는 정책이 이때 잇달아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배우자인 아내의 법적 상속 비율 조정(인상), 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을 두는 아내의 연금 보험료 면제(배우자특별공제: 1985년), 부양배우자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세금 경감 조치(소득세의 배우자 공제: 1986년), 후생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 제도 등이 있다. 1980년대부터 만들어진 이러한 일련의 제도로 인해 오늘날도 대부분 기혼여성이 배우자특별공제로 인해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 노동시간을 조절한다. 그것은 전업주부가 파트타임 노동에서 기준으로 두는 금액이 103만엔(오늘날 150만엔)이기에 '103만엔의 벽'으로 불려 왔다. 연간 소득이 이 범위를 넘으면 배우자 회사에서 나오는 부양수당이 없어지며 소득세, 주민세를 지불할 의무가 생긴다. 이전에는 103만엔 초과에서 공제액이 감액되었는데 2018년에 150만 엔으로 인상되었다. 이후 150만 엔까지 단계적으로 공제가 없어진다. 2019년 총무성 '노동력조사'를 보면 일본 맞벌이 가구의 절반 이상이 150만엔 이내로 일하고 있다(久我, 2019).

이 많으며 여성의 경우 결혼 후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여성이 10% 정도 존재하는 데 비해 남성의 경우 결혼한 사람은 모두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에 비해 남성의 분가 시점이 조금 더 늦고 29세 시점에서 부모와 사는 여성은 거의 없는데 남성의 경우 각각 20~30% 정도 존재한다.

가족주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20대 이후에는 혼자 살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결혼도 빠르기에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하고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복지정책이 거의 없고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학교 졸업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이 일정 수준에 달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 그리고 부모와 살면서가 아니라 혼자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많다. 이러한 사람들의 비중이 특히 21세 전후의 영국 여성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보수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독일과 프랑스를 살펴보자. 이들 국가의 청년들이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청년보다 더 일찍 부모로부터 독립한다. 29세 시점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양국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혼자 살면서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 모두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영미에 비해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에 비해 독일 여성이 혼자 살면서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더 높다는 점도 확인된다.

독일은 17세의 젊은 나이에 부모와 살면서 일을 하다가 20대 이후부터 혼자 살면서 학교로 가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결혼으로의 이행 또한 빠르다. 25세 이후에는 많은 사람이 결혼하면서 일을 하고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독일보다 프랑스의 여성이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사는 사람이 조금 더 많다. 프랑스에서는 17세가 지나면 대부분 집을 떠나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이 급감한다. 독일은 같은 시기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일하는 사람이 다소 늘어나고 이후에는 혼자 살면서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는 생애과정을 밟는다.

마지막으로 사민주의 유형을 대표하는 스웨덴을 살펴보자. 스웨덴은 18세를 지나면 집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혼자 살면서 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다소 있는데 남성이 대부분 20세까지 집을 떠나고 혼자 살면서 학교에 다닌다면, 여성의 경우 21세가 지나서부터 혼자 살면서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늘어난다. 결혼으로의 이행 또한 빠르다. 21세 이후에 결혼으로 이행한 사람이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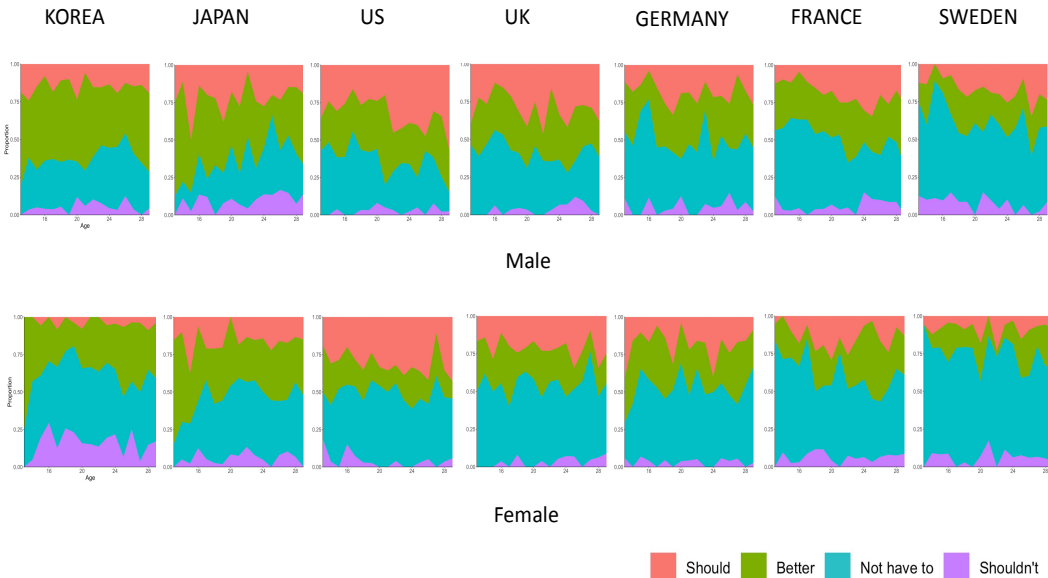
서히 늘어나고 29세 시점에서 미혼인 사람은 남자의 경우 절반 정도 있으나 여성의 경우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가족주의 유형인 한국과 일본은 7개 국가 중에서 분가가 가장 늦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20대 후반에서도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 여성은 가장 긴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일을 하거나 기타 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도 많고 교육기간이 길지만 연령 규범에 따른 역할규범이 강하여 교육을 받는 연령이 20대 중반까지로 한정되고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반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교육기간도 짧고 분가도 빠르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 수준이 높지 않고 가족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분가와 결혼이 빠르지만 여성이 가족 형성 후 일하지 않고 기타 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다.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이 다른 서구 국가와 달리 20-30% 정도 남아있다. 보수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주의 국가와 달리 20대 후반에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이 남녀 모두 존재하지 않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혼자 살면서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 가족 형성 또한 빠르고 20대 후반에는 남녀 모두 60% 이상이 가족 형성을 한다. 마지막으로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분가와 혼인으로의 이행이 빠르는데 늦은 나이에 가족 형성 후 학업에 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연령 규범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어 늦은 나이에든 필요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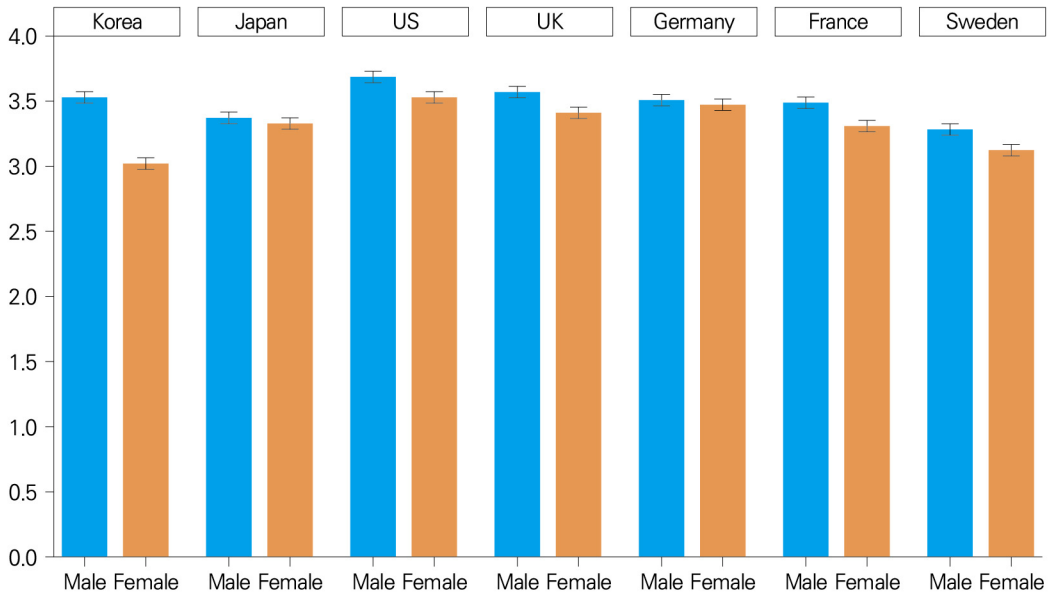
제4절 성역할 태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다음으로 성역할 태도를 비교해보자. 우선 결혼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그림 6-2]와 [그림 6-3]을 살펴보자. [그림 6-2]는 연령별 찬반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령이 13세로부터 29세로 올라간다. 위에서 순서대로 ‘결혼해야 한다’(빨간색), ‘결혼하는 것이 좋다’(초록색),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파란색), ‘결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보라색)로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6-3]은 ‘결혼해야 한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결혼 하지 않는 것이 좋다’의 순서대로 4점에서 1점을 주어 평균값이 낮을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 가치를 나타내도록 그린 것이다. 두 그림 모두에서 남녀를 구별했다.



[그림 6-2] 성별 7개국 청년 결혼가치 비교 ①



[그림 6-3] 성별 7개국 청년 결혼가치 비교 ②

결혼에 대한 가치 규범에서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 사이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강한 반대의견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특히 반대 경향은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일본 남성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보다 많고 의견이 나뉘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더 많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성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가 아주 약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영미권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역시 여성보다는 남성이 지지한다. 앞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과 영국의 남자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 규범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보수주의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영미 국가 다음으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은 전체적으로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가 돌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혼제도에 들어가야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남자들이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성들이 남자

에 비해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도 확인된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비혼율이 여성보다 남성 사이에서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남자들은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여성은 어느 나라보다도 결혼에 부정적이어서 결혼관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성역할구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사회 전체로는 보수적인 가부장 문화가 유지되고 있으나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 여성들은 부모세대와는 달리 남녀평등한 역할 수행을 선호한다(사사노, 2021). 그러나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나 다수 사회구성원의 인식에서는 남녀역할 분업을 지지하는 경향이 여전히 결혼을 하고 가족형성을 하면 여성에게 일정한 역할이 부과된다. 그로 인해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고학력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삶이 충돌한다.

[그림 6-3]에서 보이는 한국 여성의 극단적인 결혼 부정 태도는 여성에게 부과되는 희생적인 역할 수행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결혼하지 않으면 [그림 6-1]에서 확인되었듯이 한국 여성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산다. 취업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와 동거하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무료로 제공받으면서 본인의 커리어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결혼을 하면 가정에 책임을 져야 하고 가사일도 부모 대신 본인이 해야 하며 월급도 결혼 전처럼 본인을 위해 쓸 수 없게 된다.

야마다(2004)는 1990년대 일본 경제호황기에 부모와 동거하면서 개인의 소비생활을 즐기는 젊은이를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불렀다. 야마다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동거라는 생활기반으로 인해 의식주 걱정 없이 월급을 명품소비나 여행, 취미 생활에 쓸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혼은 생활 수준의 하락을 의미한다. 부모에 비해 소득이 낮은 배우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자유로운 시간과 사치스러운 소비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에 결혼을 미루거나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동거보다 나은 조건을 제공해 줄 배우자를 만나기 어렵기에 결혼이 지연되거나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경제가 성장했기에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부모의 생활 수준만큼은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야마다의 주장은 고도성장기 일본의 젊은 세대 생활 세계를 잘 분석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잃어버린 30년의 경제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일본에서는 자립을 안하는 것이 아니

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坂本, 2011; 鈴木, 2012). 야마다가 이야기한 패러 사이트 싱글은 1960년대에 태어나고 1985년 이후 버블 시대를 20대에 맞이한 세대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들은 경제호황기를 즐기며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그 부모 세대 역시 고도성장기 일본 경제 호황 속에서 고용이 안정적이었기에 자녀에게 좋은 교육과 좋은 생활을 제공할 수 있었다(北村·坂本, 2003).

이 1980년대 후반의 일본 청년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청년과 유사해 보인다.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멈춘 일본과 달리 2000년 이후에도 물가와 임금이 매년 빠른 속도로 상승해 왔다.³⁶⁾ 이 연구의 대상인 1990년대생 여성은 고등교육을 많이 받았고 고위직 전문직 진출도 활발하다. 게다가 1990년대생은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남녀 출생 비율 왜곡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다.³⁷⁾ 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적는데 교육수준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구조적 배경은 결혼시장 ‘미스매치’(mismatch)를 확대시킨다. 고학력 여성들이 부모보다 나은 조건을 가진 남자는커녕 본인과 동등한 조건을 가진 남자를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면 고학력 여성들은 월세와 가사부담에서 해방되어 개인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리어 형성에 집중할 수 있다.

36) 1965년 기준 물가상승률을 보면 1990년에는 40%, 2000년에는 60%, 2022년에는 100% 이상 상승해 왔다(TREND ECONOMICS.COM. <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consumer-price-index-cpi>, 출처: 한국 통계청). 최저임금 역시 1990년 이후 매년 평균 10% 이상 상승해 왔다(1990-2006년은 고용노동부 통계 참조 http://www.moel.go.kr/local/ansan/info/dataroom/view.do?jsessionid=VWZ1rqiCBvDmrhTlnrX5llmexnH91gElcjKNQU9UedEuOngDVqd6kErOkOUrF6i3.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bbs_seq=64479). 2013-2022년 사이에도 매년 평균 5% 이상 상승해 왔다(e나라 지표 통계 참조.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2).

37)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1990년의 출생성비는 116.50이며 둘째 셋째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올라가고 셋째아는 193.7, 넷째아는 209.9까지 상승한다. 이러한 경향이 1990년대 내내 계속 지속되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완화되어 2005년 이후가 되어야 서서히 사라졌다. 자연상태에서 출산아의 출생비는 여자 100명에 비해 남자가 105명 내외이며 남자가 원래 조금 더 많다. 이러한 한국의 1990년대 남녀 출생비율의 왜곡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남아선호사상의 산물이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관찰된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9&conn_path=I2

더욱이 한국의 경우 다른 선진 국가에서 관찰되는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의 가치 이행이 관찰되지 않는다.³⁸⁾ 여전히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만연해 있는 한국에서는 경쟁을 이겨내고 좋은 일자리를 얻은 여성이 부모와 살면서 개인 소비를 즐기고 커리어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그들에게는 보다 좋은 조건과 대우를 받으며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커리어가 중요하다. 그렇기에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과 기회비용이 여성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의 여성 청년 모두가 엘리트 코스를 걷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입시경쟁에 참여해 왔고 대부분 대학을 간 이들에게,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출세해야 행복하다는 신화를 믿는 이들에게 사회적으로 제시된 삶의 목표는 그 폭이 넓지 않다.

그러한 모습이 [그림 6-4]와 [그림 6-5]에서 제시한 또 다른 성역할 태도 측면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림 6-4]는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에 대한 찬반 의견을, [그림 6-5]는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에 대한 찬반 의견을 연령별로 나타낸 것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령이 13세로부터 29세로 올라가는 것이며 빨간색은 찬성 의견을, 파란색은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다른 선진 국가와 달리 모두가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의 1990년대생들은 연령에 따른 생각 차이는 관찰되지 않고 모두가 비슷한 가치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반면 영미 국가에서 가족 형성 지향적인 가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복지 책임을 국가가 맡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결혼으로 가족을 형성해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분가가 결혼 타이밍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38) 세계 가치관조사 자료를 이용해 1986-2015년의 약 30년 동안 선진국과 한국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비교한 장덕진(2017)은 한국은 과거 30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오지부동으로 물질주의적 가치가 제 자리를 지켜왔다고 한다. 그가 분석한 세계가치관조사 웨이브 5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강한 물질주의적 가치가 55.06%, 약한 물질주의적 가치가 30.54%를 차지해 둘을 합치면 무려 85.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물질주의적 가치는 미국이 20.87%, 일본이 24.95%, 스웨덴이 5.07%, 멕시코가 19.51%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장덕진, 2017: 309). 세계가치관조사 2-6차 자료를 분석한 양해만·조영호(2018)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탈물질주의를 이끌어가는 요인들은 물질주의를 유지하는 요인들을 압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4] 성별 7개국 청년 성역할 태도 비교: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에 대한 찬반 의견**

흥미로운 점은 복지국가 유형별로 성역할 태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림 6-4]의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보면 가족주의 유형에 들어가는 한국과 일본에서 반대 의견이 강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강한 반대 의견을 표하는 태도를 보인다.³⁹⁾ 일본 남성은 이 중에서 가장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남성의 경제적인 책임 의식이

39) 일본 내각부가 2006년도에 ‘저출산 사회에 관한 국제의식조사’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중 5개국(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이 조사에서는 20~49세 남녀(각각 약 1,000 명씩)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48.6%, 일본에서 57.1%, 미국 43.1%, 프랑스 25.8%, 스웨덴 8.7%로 나타난다. 남녀역할 분업에 대해 각 나라가 빠른 속도로 남녀평등적인 가치로 변화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한국의 세대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 전체 평균값에서 2006년 당시 절반의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으나 2018년 본 자료에서 20대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2012년 자료를 분석해 한국에 가족가치가 코호트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부각시킨 사사노(2021)의 연구 결과와 함께 그 만큼 한국사회가 압축적 사회변동 속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남녀평등 지향적인 가치로 규범이 변화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한국과 일본만이 2006년도 조사와 이번 2018년도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급격하게 변화한 점이 확인된다(일본 내각부 2006년도 「저출산사회 백서. 우리나라의 자녀양육 의식의 특징」).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06/18webhonpen/html/i1512000.html>. 이 같은 결과는 인구구조 변동에 주목해 한국을 ‘압축적 근대’, 일본을 ‘반압축적 근대’라고 명명한 오치아이(Ochiai, 2014)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사회변동과 인구구조 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일 차이는 일본 여성의 취업 형태가 대부분 파트타임 노동인 점을 감안하면 모순적이지 않다. 한국은 여성의 취업 형태가 단시간 노동이 아니고 여성 스스로도 일본 여성에 비해 커리어 지향이 높아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이제 주부 역할에 전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의 체제인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남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역할 분업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으며 영국 남성 또한 여성에 비해 높은 찬성률을 보인다. 이 국가들에서는 시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기에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엘리트들을 제외하면 현실에 부딪치게 되는 연령이 될수록 분업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보수주의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를 살펴보면 한일과 영미의 중간 정도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국가들은 복지체제의 목표가 남성 가장의 지위를 보호하는 데에 맞춰져 있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높지 않기에 남성이 여성보다 가장으로서 남자가 돈을 버는 역할을 강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스웨덴은 사민주의 체제 국가로 남녀평등 지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의외로 남자의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아동의 돌봄 책임도 국가가 지기에 여성들은 성역할 분업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남성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찬성 비율이 높아진다.

화 그리고 그로 인한 가치변화가 비슷한 속도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5] 성별 7개국 청년 성역할 태도 비교: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에 대한 찬반 의견**

다음으로 [그림 6-5]의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보면 여기서도 복지국가 체제별로 유사한 가치 규범을 공유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가치 규범은 일본에서 ‘3세아 신화’라고 불린다.⁴⁰⁾ 그러나 그러한 가치 규범이 젊은 세대에서는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젊은 여성은 어머니의 자녀 양육 전념 책임을 강하게 부정한다.⁴¹⁾

40)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가 5년마다 조사하는 「출생동향 기본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까지만 해도 독신 여성들이 가장 이상적인 생애과정으로 고르는 게 아이가 어릴 때 한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재취업 하는 ‘재취업 코스’였다. 그러나 지난 9월 9일에 발표된 최신통계에 따르면 그러한 가치 규범이 변화하기 시작해 2020년에 처음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향하는 ‘양립코스’가 ‘재취업 코스’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한 경향이 남성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나며 파트너에게 ‘양립 코스’를 원하는 남자가 약 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제16회 출생동향기본조사, 2022년 9월 9일 발표 개요. <https://www.ipss.go.jp/ps-doukou/j/doukou16/JNFS16gaiyo.pdf>). 본 연구 결과에서도 젊은 세대에서 더이상 이러한 가치 규범이 지지받지 않은 경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41) 각주 39에서 언급한 2006년도의 같은 질문을 한 조사에서 한국의 찬성 의견이 가장 높다. 2006년도 20-49세 남녀 중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은 한국이 85.5%, 일본이 67.8%, 미국이 62.7%, 프랑스가 46.8%, 스웨덴이 31.8%로 나타난다. 한일 외 서구 사회는 이번의 조사 결과와 2006년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찬반의견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에서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2006년 당시 20-49세인 사람들은 1957-1986년생들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1989~2005년생인데 동아시아 국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여성의

자유주의 국가인 영미권에서는 의견이 절반 정도로 나뉜다. 연령이 젊을수록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 남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여성 또한 아이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수주의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다. 특히 독일은 젊은층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젊은 성인일수록 찬성하는 경향성을 띤다. 흥미로운 점은 성역할의 다른 측면인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반대하지만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에 대해서는 강한 찬성 의견을 보인 점이다. 노동시장에서 남녀 모두가 경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육아 역할은 여성에게 있다는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 점이 관찰된다. 서구 사회에서도 완전한 남녀평등으로 향하는 젠더 혁명이 여전히 완성되지 않는다고 지적되어 왔는데(Cotter et al., 2011; Brinton and Lee, 2016; Goldin, 2006; Goldin et al., 2015; England, 2010; Esping-Andersen, 2009; Hochschild and Machung, 2012) 그러한 측면이 이번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지위를 보호 받고 있기에 자녀 양육을 여성이 전담하는 것으로 인식한 결과로 추정된다.

사민주의 사례인 스웨덴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보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 남자도 여자도 40%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가족이 복지 책임을 져야 하는 가족주의 국가에서 이 문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다만 같은 문항에 대한 찬반 의견에서 세대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의 가치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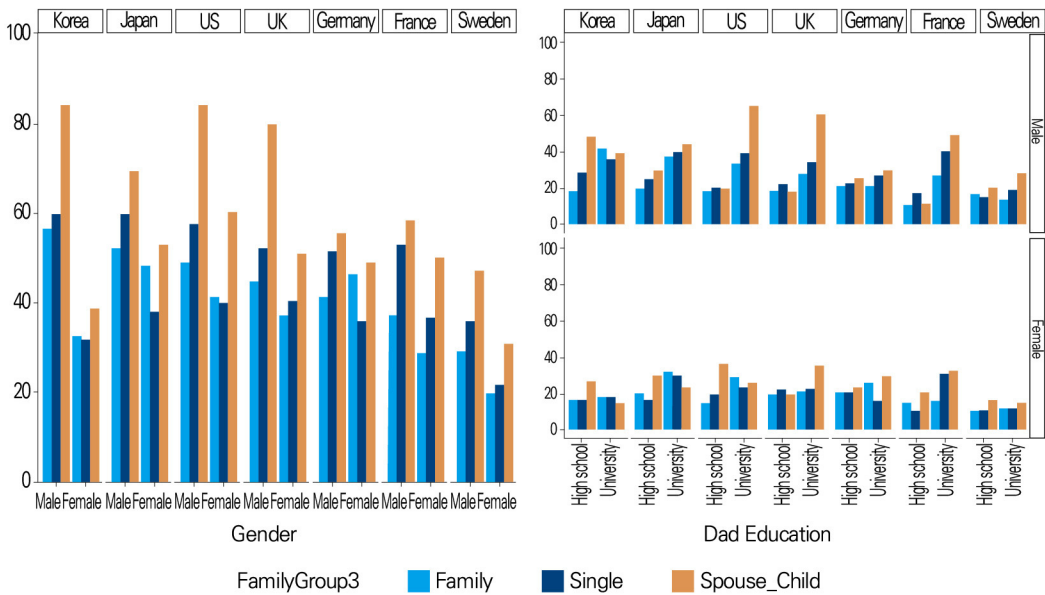
고학력화가 이루어진 만큼 가치 변화도 빠른 속도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동아시아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일본 내각부 2006년도 「저출산사회백서, 우리나라의 자녀양육 인식의 특징」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measures/w-2006/18webhonpen/html/i1512000.html>).

제5절

전환기 역할-인식의 괴리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그렇다면 성인 이행기 역할 구조와 인식 구조는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림 6-6]은 성역할 태도의 첫 번째 측면인 결혼에 대한 찬반 의견과 청년이 놓여 있는 가족 지위와의 관계를 교차표로 그린 것이다. '결혼해야 한다'와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는 대답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은 부정적 태도로 코딩하여 긍정적 가치를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과 역할 구조의 관계를 나타내 보았다. 오른쪽 하위 그림은 더 나아가 응답자 청년의 아버지 교육수준을 추가해 3차원 교차표를 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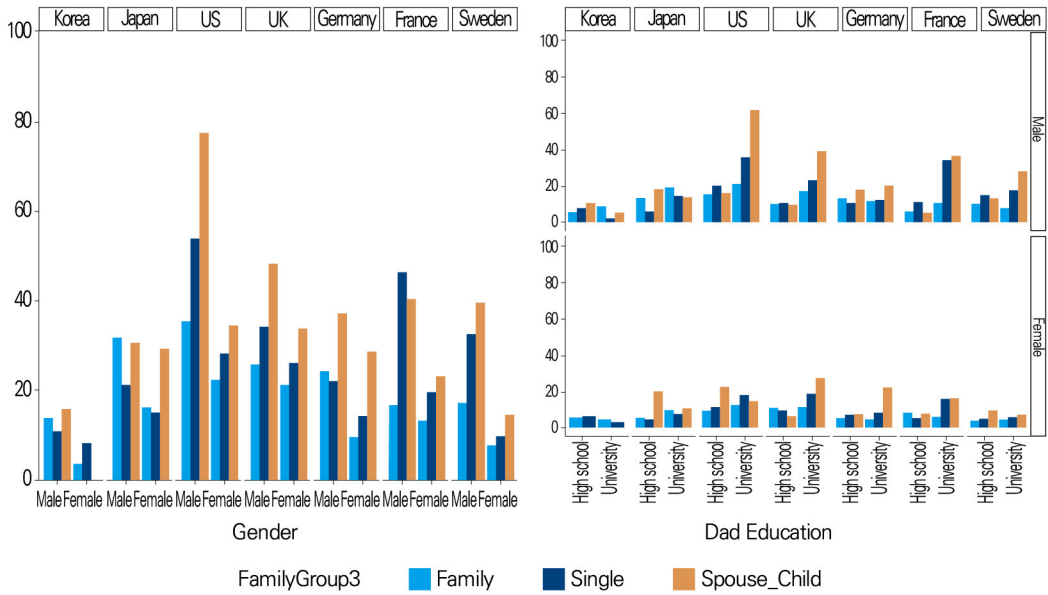


[그림 6-6] 결혼에 대한 태도와 역할지위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한국 남자가 7개국 중에서 결혼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다. 다음으로 미국 남자 영국 남자 그리고 일본 남자가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 규범에서 남녀 차이가 매우 큰 점도 눈에 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여성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가족 형성을 실제로 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다. 그다음으로는 싱글이다.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가장 지지하지 않는다. 서구의 경우 결혼하지 않고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은 젊은층은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 보지 않아 결혼 가치를 낮게 여길 수도 있다. 부모와 오랫동안 동거하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동거문화가 보편적이지는 않아 분가와 결혼이 맞물리게 된다. 결혼을 해야 집을 떠나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이미 독립한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아무래도 자유롭기에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짐작된다. 대체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추가한 3차원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 규범을 가지는 것이 확인된다. 여성들은 남자만큼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근대가족을 형성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남성부양자 모델을 수행할 수 있었던 1990년대생의 부모세대(1960년생 전후 세대)는 중산층 화이트칼라 노동자일 경우 성별 역할 분업에 근거한 근대가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블루칼라 노동자는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했고 그에 따라 자녀는 비교적 불안정한 역할 분업을 수행해 온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 환경이 본인 결혼에 대한 가치 규범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해석된다. 서구 사회에서도 남녀 평등으로의 이행이 1970년대 이후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들 부모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안정적인 중산층이란 대부분이 성별 분업에 근거한 근대가족이 있을 것이다.

[그림 6-7]은 성역할 태도의 두 번째 측면인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에 대한 찬성 의견과 청년이 놓여 있는 가족 지위와의 관계를 교차표로 그린 것이다. [그림 6-7]의 오른쪽 하위 그림은 응답자 청년의 아버지 교육수준을 추가해 3차원 교차표로 그린 것이다.



[그림 6-7] 성별 역할에 대한 태도와 역할지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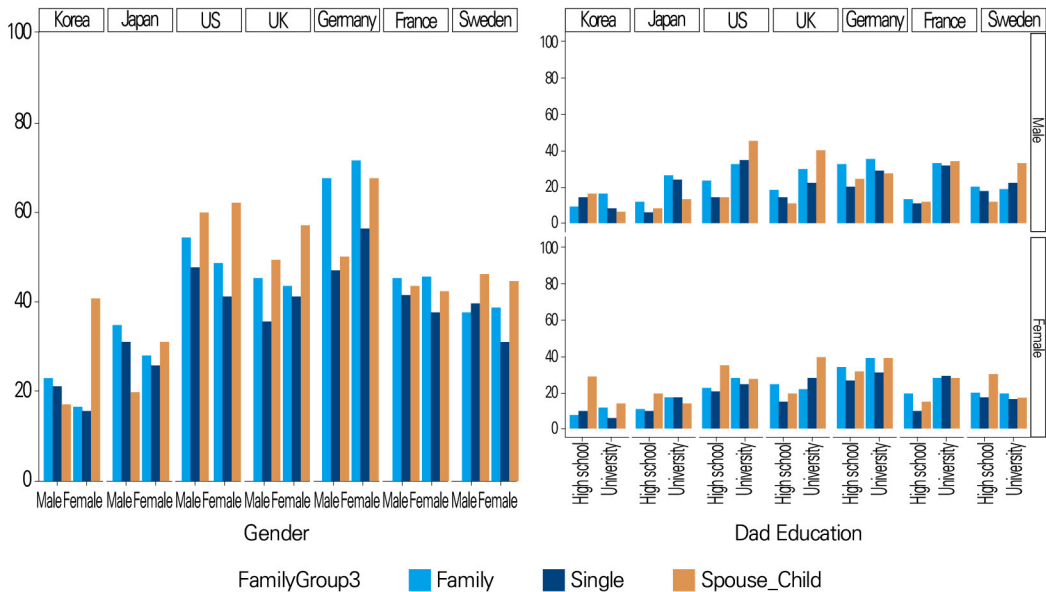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서구 국가에서는 가족을 형성한 사람들이 이 질문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찬성했다. 그 다음으로 싱글인 사람과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 순이다. 결혼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가족을 형성한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도 역할 분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이가 있거나 결혼한 사람들은 싱글보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보다 부부가 역할 분업 관계에서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게 낫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신이 자리한 지위와 가치 규범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서구 사회에서도 완전한 남녀 평등은 실현되지 못했으며 그것은 성역할 지체 혹은 성역할 본질주의의 유지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Brinton and Lee, 2016; Cotter et al., 2011; England, 2010). 그 과정은 ‘미완의 (젠더) 혁명’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Esping-Andersen, 2009).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독립한 싱글 사이에서 가장 지지도가 낮다. 이 두 나라는 동거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결혼을 안 한 싱글이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성역할 분업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가족형성을 한 여성 사이에서 이 가치 규범에 대한 찬성 수준이 낮다는 것 또한 매우 흥미로운 결과다. 결혼을 하면 아직까지 가정일

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여성이 집에서 희생적으로 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버지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보면 여기서도 결혼 가치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비교적 성역할 분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화이트칼라 중산층인 아버지를 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역할 분업 관계를 보고 자라왔기에 본인도 근대가족적 가치를 당연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 다만 여기에서도 한국은 예외적으로 고졸인 부모를 둔 자녀가 대졸 부모를 둔 집단보다 약간 더 지지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찬성 수준 자체가 매우 낮기에 차이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그림 6-8]은 성역할 태도의 세 번째 측면인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에 대한 찬성 의견과 청년이 놓인 가족 지위와의 관계를 교차표로 그린 것이다. 오른쪽 하위 그림은 응답자 청년의 아버지 교육수준을 추가해 3차원 교차표로 그린 것이다.



[그림 6-8] 성별 역할에 대한 태도와 역할지위 ②

서구 사회보다 가족(여성)이 육아를 맡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성역할 분업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서구에서는 가족형성을 한 사람들이 이 문항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가족형성을 한 사람보다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더 지지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남자도 마찬가지다. 보수주의 국가와 가족주의 국가는 복지의 일차적 책임이 가족(여성)에게 있기에 실제로 가족을 형성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성별 분업을 환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 여성은 이 문항에 대한 찬성 수준 자체가 서구 사회 여성보다 낮는데 결혼을 한 사람은 이 문항에 대해 크게 찬성한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관찰된다. 자녀 교육책임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이 강한 한국에서는 가족을 가졌으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즉 어머니의 전적인 희생을 어느 나라보다 지지하지 않지만 한번 그 역할을 맡은 여성은 스스로 그 역할을 인정하고 관련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교육수준과의 관계에서는 아버지 교육수준이 높은 중산층 가정 청년이 고졸 아버지를 둔 청년보다 어머니의 양육 책임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3가지 성역할 태도는 서로 연동되는 가치 규범인 것으로 여겨진다.

* * *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자. 각국의 차이를 전적으로 복지국가 유형론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별로 생애 과정과 성역할 인식이 유사하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미국 그리고 스웨덴이라는 복지국가 유형을 대표하는 사례 국가의 청년이 보인 역할 구조와 인식 구조는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일정 수준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는 같은 보수주의 국가임에도 고등교육 이수 수준에 큰 차이가 있어 이 연령대 청년의 취업률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세대 청년들이 수행하는 역할 구조를 보다 자세히 구분해 연령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같은 복지국가 유형끼리 매우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각국의 제도가 청년층의 생애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크며 그것이 구성원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인식이 모여서 제도에 반영될 수도 있고 제도가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둘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확인했다. 언제 집을 떠나 누구에게 기대며 고등교육을 받고 가족형성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관한 가치 규범은 각국의 정책적 배경과 가족문화 차이로 생애 과정에 반영되어 있었다.

서구 중심 이론에서 제시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는 보수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므로 저출산 경향이 나타난다’는 명제와 달리 한국과 일본은 서구 사회보다도 성역할 분업에 대한 반대 인식이 많았다. 서구 사회는 동아시아 사회보다 훨씬 남녀 평등 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진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서구 사회에서 성역할 태도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 책임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로 나타났다. 1970년대 이래 페미니즘 열풍 속에서 남녀 평등 가치를 지향해 왔으나 서구 사회에서도 완전한 남녀 평등은 실현되지 못했다. 오늘날 젠더 혁명이 ‘미완의 혁명’(Esping-Andersen, 2009)이나 ‘정체된 혁명’(Cotter et al. 2011; England, 2010)으로 표현되는 이유다.

고학력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오늘날 ‘남자-일’, ‘여자-가정’이라는 성역할 규범에 찬성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다. 그런데 또 다른 성역할 규범인 어머니의 양육 책임에 대해서는 서구 사회가 동아시아 국가보다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 결국 1970년대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공사 영역에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이 청년들에게 젠더 백래시(backlash)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서구 사회처럼 일찍부터 양성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해왔고 21세기에 들어서 급속도로 인식이 변화해 왔는데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급진적인 가치 변화를 겪는 것으로 이해된다(최선영, 2020). 장경섭과 오치아이 에미코의 논리처럼 한국의 사회변동 속도가 ‘압축적’(Chang, 1999; 2010; 2022)이라면 일본은 ‘반압축적’(Ochiai, 2011; 2014)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성역할 태도에서 한국에 비해 급진적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사회변동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청년 세대의 가치 규범이 기존 사회 제도 및 규범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환기에 청년 세대가 가족 형성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청년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짐작된다.

서구 사회가 반세기에 걸쳐 양성 평등의 지향으로 천천히 변화해 온 것과 달리 한국은 여성에게 전적으로 양육 책임을 맡기는 가족주의적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런 가운데 압

전환기 청년의 미래 ...

축적으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했고 여성의 고위직 직업군으로의 진입도 활발해졌다.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이 급진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이 한국 청년의 급진적인 성역할 거부 현상의 한 배경으로 짐작된다.

제3부

삶의 구조와 인식

제7장 청년의 공간 분포와 주거 이동

제8장 청년의 불평등 인식

제9장 청년의 행복감

제7장

청년의 공간 분포와 주거 이동

민보경

제1절 청년의 거주 공간 및 로컬 장소 선택

제2절 청년의 공간적 분포

제3절 청년의 주거 이동

제4절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

제1절

청년의 거주 공간 및 로컬 장소 선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지금까지 한국 청년 문제의 성격을 역사적 관점과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오늘날 청년의 삶의 조건을 탐색한다. 이 장의 목표는 청년의 삶의 구조를 거주 지역의 맥락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다. 핵심 질문은 ‘청년은 어디에서 살고, 어디로, 왜 이동하는가’이다. 청년이 거주 공간을 선택하는 과정과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문제를 고찰할 수 있다.

인구이동은 지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사회현상이기도 하다. 인구이동은 전출지역의 압출요인(pushing factor)과 전입지역의 흡입요인(pulling factor)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전출지역과 전입지역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거주환경을 포괄하는 공간의 매력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이정희 외, 2017).

이 장에서는 청년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주 지역 선택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력 이동, 일자리, 주거여건, 교육환경, 지역의 매력도’ 등을 청년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1 일자리와 노동력 이동

인구이동의 전통적 모델은 경제적 관점에서 인구이동을 설명한다. 즉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이 지역 간 경제적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사람들은 두 지역 간의 소득차이에 의해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Lewis, 1954; Todaro, 1969). 최근의 인구이동 관련 연구는 생애주기별 특성과 이동 성향을 연계하여 분석하기도 한다. 청년층은 사회에 진출하고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로 일자리는 청년층 유입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고용중심지 주변에서의 청년층 주거수요는 높아지고 있다(김리영, 2019).

청년 인구의 로컬 장소 선택은 가장 주된 요인으로 일자리의 관점에서 인구 유입과 유출의 원인을 찾는다. 일자리는 청년 문제의 주요 이슈로 대부분의 청년 연구는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청년층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김유빈 외, 2018), 청년층의 주거 이동도 일자리 측면에서 살펴보는 연구들이 많다(임재빈·정기성, 2021; 이정은, 2022; 김준영, 2016). 지역적으로 인구이동 요인을 실증 분석한 연구는 지역의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규모별 종사자 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제시하였다(오은열·문채, 2016).

최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대도시 또는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을 일자리에서 찾는 연구도 있다. 취업 가능성, 일자리의 양과 질, 기업 규모 등 경제적 변수들을 비교하면 지역의 노동시장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대도시로의 청년유출이 발생하게 된다(엄창옥 외, 2018). 이찬영(2018)은 시도 간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이동의 핵심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임을 확인하였다.

경제적 이유에서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데, 이동으로 인한 이익은 도시와 지방 간 취업확률의 차이, 기대임금의 차이 등과 관련 있다(박진경·김도형, 2020). 청년의 이동은 불경기에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에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가 있어 지방에서 취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지방에서의 취업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집적한 도시로 청년들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엄창옥 외, 2018). 수도권의 풍부한 일자리는 청년들을 유인하는 흡인요인(pulling factor)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지방의 경제 쇠퇴는 압출요인(pushing factor)으로 작용한다. 지역의 사업체 수가 줄어들어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이 부진하게 되면 청년 세대의 유출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다(임재빈·정기성, 2021).

2 주거 여건

인구이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주택가격이 인구전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였다(천상현 외, 2014; 김리영, 2019). 김상원·이훈래(2016)는 주택가격, 전세

가격, 도로, 지하철역 수, 주택보급률, 주택공급, 도시공원 등이 수도권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한다.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최근 경기도의 인구증가는 서울 대비 낮은 거주비용과 전국 대비 높은 고용률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김을식·김정훈, 2014). 이찬영 외(2018)의 연구는 30대 인구가 주택가격이 낮고 문화기반시설 수가 많은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박부명·김성아(2020)의 연구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변화와 주택보급률과 같은 주택시장의 특성이 수도권 청년층 인구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택과 주거환경은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모든 연령층에게 해당되지만 연령별로 이동패턴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생애주기별로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 청년층은 취업을 하는 시기에는 직장이 가까운 주거지를 선택하기 위해 도심 지역으로 이동하며 결혼과 출산을 하는 시기에는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의 더 넓은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이동한다. 노년층은 자녀들이 분가한 후 주택 규모를 줄여 도심에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김리영, 2019).

3 교육 환경

본인의 학업을 위해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고려하는 교육 여건은 거주 이동의 핵심 사유이다.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주거이동에 있어 교육의 영향력이 더 높다(신정철, 2019). 특히, 청년층의 이동은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왔다.

대학진학과 인구이동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수도권의 풍부한 교육 기회가 이동의 흡인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권오규·마강래, 2012). 대학진학과 관련된 우리나라 인구이동에 관한 논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을 보인다(김영철·이민환, 2003; 최은영, 2004).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역의 교육 기회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권오규·마강래, 2012).

청년층의 경우 주로 진학을 위한 이동과 취업을 이한 이동으로 구분되는데 대학의 소재

지가 졸업자들의 취업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청년층은 대학진학으로 수도권에 이동한 후 수도권 내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권오규·마강래, 2012). 그러므로 대학의 공간적 분포는 대학진학을 위한 인구이동 뿐 아니라 고용을 위한 인구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년에게 있어 고용의 기회는 대학의 선택만큼 중요성을 가지며 대학진학을 위한 거주 이동을 할 때 졸업 이후의 취업까지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다(권오규·마강래, 2012).

자녀를 둔 30대 청년층은 양질의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교와 학원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거주지를 선택한다. 오은열·문채(2016)는 전라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이동 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시설과 같은 교육적 요인이 지역 인구이동에 변화를 가져옴을 확인하였다. 김을식·김정훈(2014)은 경기도의 인구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을 살펴본 결과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증가와 인구 순유입 간의 높은 상관성을 확인하여 교육이 인구 유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송용창·김민곤(2016)은 수도권 내 인구이동에 있어 사설학원 수가 전입인구와 전출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와 학원이 밀집한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는 유자녀 가구 거주비율이 높으며 인구의 전출입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를 위한 교육여건이 주거이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민보경·변미리, 2017).

4 지역 매력

인구이동과 관련된 전통적 연구들은 주거 이동의 원인으로 일자리 등 경제적 요인, 주택 등 환경적 요인, 학교·학원 등 교육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늘날 청년 세대의 이동을 기존의 전통적 이유로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일과 경제적 소득보다 여가를 중시하면서 그 여유를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자신만의 삶을 가지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청년의 지역 유출입을 경제적 요인과 같은 전통적 모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실 인구이동은 다양한 변수로 구성된 복잡한 방정식의 결과다. 헤도닉 인구이동 모델은 기후, 사회적 환경, 공공재, 편의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 차이가 지역 어머니티를 형성하여 인구이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김현우·강명규, 2020).

청년들의 경우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요인들이 주거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커피숍의 수와 25-29세 청년층의 이동이 정(+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김현우·강명구, 2020)는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에게 커피숍이 문화, 여가, 학업 활동과 결부된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청년의 이동은 단일의 특정 요인으로 설명되기보다 삶의 만족도, 삶의 질과 연계하여 해석되기도 한다. 엄창욱 외(2018)의 연구는 지방의 청년 노동력을 지역으로 귀환시키는 데에 삶의 만족도가 핵심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지역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게 하는 구심력은 첫째, 취업의 용이함이나 생활비 절약 등의 경제적 요인, 둘째, 편안함과 애향심, 문화의 친숙성 등 문화적 요인, 셋째, 부모와 친구 등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사회관계적 요인, 넷째, 정체성과 주민의식 그리고 자아실현과 같은 주제적 요인 등이다(엄창욱 외, 2018).

[표 7-1] 청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매력 요소

경제적 요건	문화적 조건	관계적 조건	주체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가구소득 - 월지출 - 적정 연봉수준 - 부모의 경제적 수준 - 부채 비율 - 고용상의 신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 - 여가의 만족도 - 직장에서의 만족도 - 만족스러운 문화활동 - 지역문화 활성화 - 정보 서비스 - 일과 삶의 밸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거주기간 - 초중고 졸업여부 - 부모와의 동거 여부 - 부모 거주지 - 친구관계 - 인턴 경험 - 근무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의지 여부 - 지역청년정책 참여의지 - 청년센터 활용의사 - 청년관련 지원 프로그램 요구 - 지역청년정책에의 관심

자료: 엄창욱 외(2018)

문화적 환경과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도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의 열악한 문화시설 인프라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임재빈·정기성, 2012). 도쿄에 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본의 연구결과(마쓰나가 게이코, 2015)는 주거 이동의 사유로 직업(직장), 자녀양육, 결혼 이외에 여유로운 삶(slow life)을 제시한다. 여유로운 삶이라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이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박진경·김도형, 2020).

제2절

청년의 공간적 분포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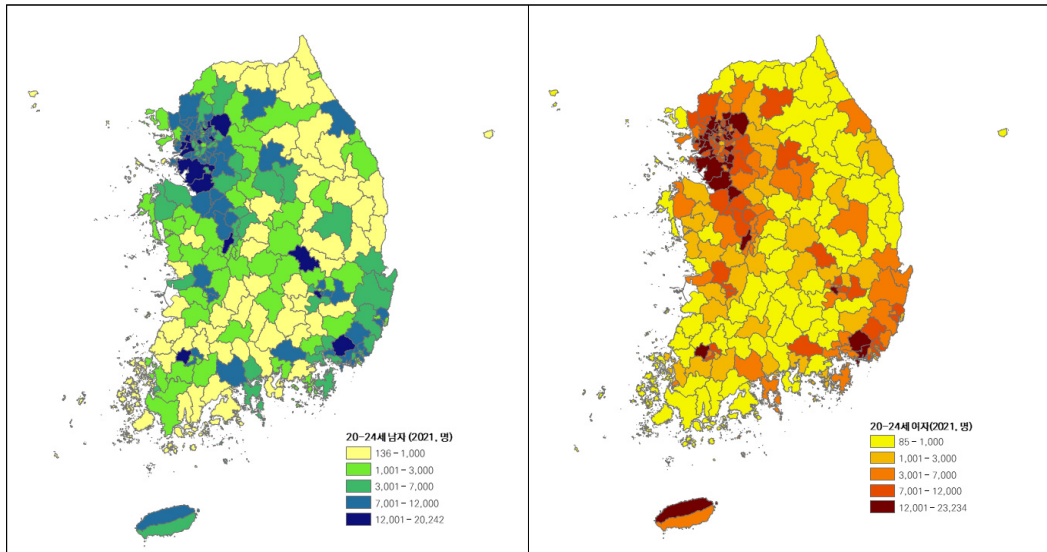
1 연령별 지역 분포

청년의 공간분포를 검토하기 위해 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21)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별,⁴²⁾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일반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며, 집단가구, 특별조사구(군인 등), 외국인 가구는 제외한 것이다. 다만 내국인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은 일반가구인으로 집계하였다. 청년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등으로 나누어 각각 남성과 여성에 따른 지역 분포를 살펴보았다.

42) 본 연구는 행정구 단위로 제공된 인구통계를 활용하였다.

먼저, 20-24세의 남자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은 경기 부천시(20,242명)였다. 이어서 경기 화성시(18,959명), 경기 남양주시(16,587명), 대구 달서구(16,354명), 대전 서구(15,393명), 대구 북구(15,094명), 경남 김해시(14,467명), 경기 평택시(14,438명), 서울 관악구(14,384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4세의 여자 청년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경기 부천시(23,234명)이며, 그 밖에 경기 화성시(20,853명), 서울 관악구(20,219명), 서울 성북구(18,724명), 경기 남양주시(18,698명), 서울 송파구(17,948명), 대구 달서구(17,506명), 서울 노원구(17,287명), 대전 서구(17,261명)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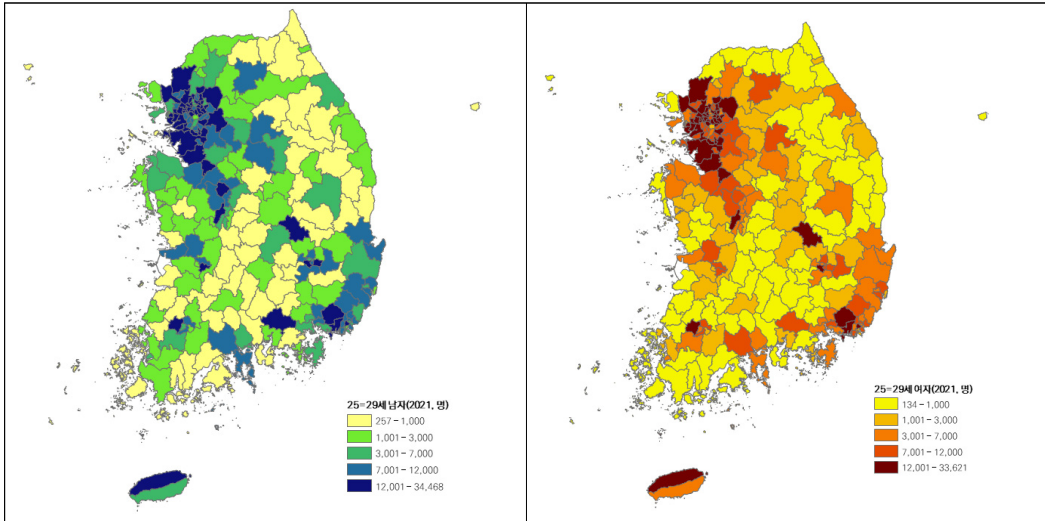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그림 7-1] 20-24세 남녀 인구 분포(2021년)

25-29세 청년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서울 관악구(34,468명)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경기 화성시(31,971명), 경기 부천시(30,943명), 경기 평택시(22,935명), 서울 강서구(22,822명), 서울 송파구(22,689명), 경기 남양주시(20,958명), 대전 서구(19,772명), 대구 달서구(19,769명), 경기 시흥시(19,539명) 등에 많이 거주하였다.

25-29세 여자의 경우, 서울 관악구(33,621명)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으며 경기 부천시(29,099명), 서울 강서구(28,022명), 서울 송파구(26,536명), 경기 화성시(26,043명), 경기 남양주시(19,698명), 서울 영등포구(19,218명), 서울 마포구(19,145명), 서울 강남구(19,137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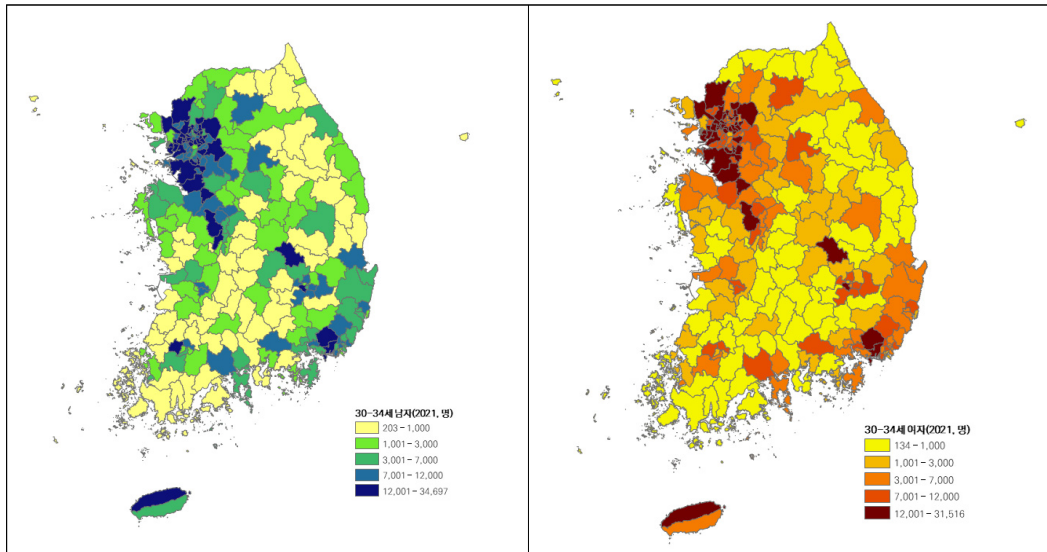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그림 7-2] 25-29세 남녀 인구 분포(2021년)

30-34세 청년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경기 화성시(34,697명)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경기 부천시(27,513명), 서울 관악구(26,787명), 서울 강서구(24,217명), 서울 송파구(23,795명), 경기 평택시(22,065명), 경기 시흥시(18,718명), 경기 남양주시(18,398명), 인천 서구(18,153명) 등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34세 여자의 경우, 남자와 마찬가지로 경기 화성시(31,516명)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으며, 경기 부천시(26,284명), 서울 송파구(26,139명), 서울 강서구(24,881명), 서울 관악구(21,454명), 서울 강남구(18,881명), 경기 남양주시(18,416명), 인천 서구(17,807명), 서울 영등포구(17,790명) 순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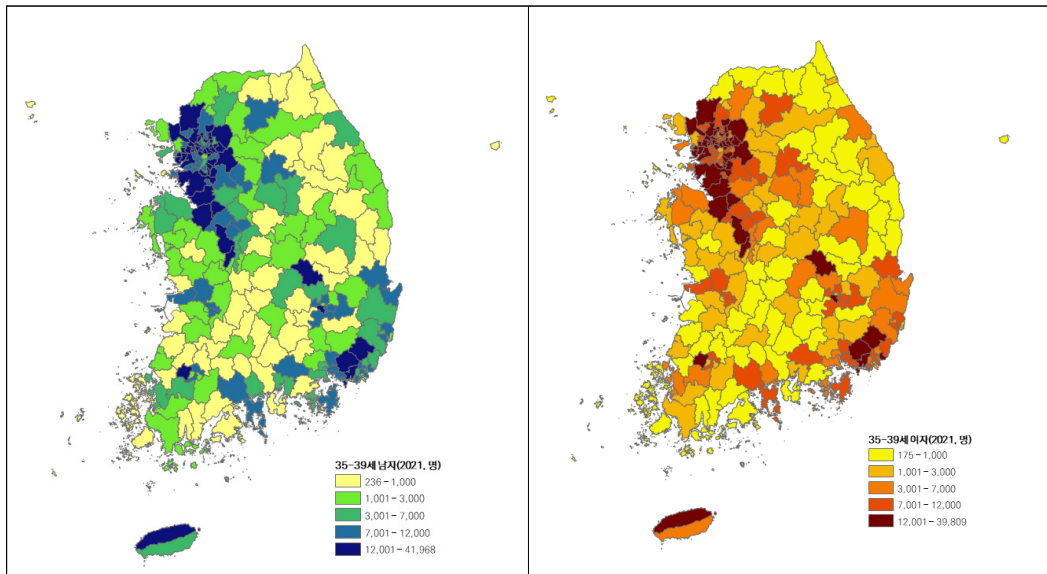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그림 7-3] 30-34세 남녀 인구 분포(2021년)

마지막으로 35-39세의 청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는 경기 화성시(41,968명)에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경기 부천시(28,845명), 서울 송파구(24,477명), 경기 남양주시(23,905명), 서울 강서구(23,200명), 경기 평택시(23,198명), 경기 시흥시(22,442명), 인천 서구(21,720명) 순으로 많이 거주하였다.

35-39세 여자의 경우, 경기 화성시(39,809명)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으며, 경기 부천시(27,201명), 서울 송파구(26,756명), 경기 남양주시(25,573명), 서울 강서구(2,210명), 경기 김포시(21,887명), 인천 서구(21,002명), 경기 평택시(20,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그림 7-4] 35-39세 남녀 인구 분포(2021년)

2 청년 분포와 지역 특성과의 관계

청년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전체 지역 인구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과 지역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연령별 청년의 비율, 사설 학원 수, 재정자립도, 교원 1인당 학생 수, 녹지율, 지역내총생산, 인구성장률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시군구 단위로 분석하였으며(N=229), 각 변수의 설명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2] 청년인구 비율과 지역특성 변수 개요

변수	변수설명, 단위	출처
20-24세 청년 비율	20-25세 청년/전체 인구,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25-29세 청년 비율	25-29세 청년/전체 인구,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30-34세 청년 비율	30-34세 청년/전체 인구,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35-39세 청년 비율	35-39세 청년/전체 인구,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사설학원 수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 수	통계청, 통계정책과(2021)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의 세외수입의 비율, %	통계청, 통계정책과(2021)
교원 1인당 학생 수	1명의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 수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통계청, 통계정책과(2021)
녹지율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2021)
지역내총생산	일정기간 해당 시군구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가치의 합, 백만원	통계청, 통계정책과(2021)
인구증가율	자연증가율과 사회적증가율의 합으로 전년대비 인구변화율, %	통계청, 통계정책과(2021)

상관분석 결과, 지역의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사설학원 수, 재정자립도, 교원 1인당 학생 수, 지역내총생산, 인구증가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녹지율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역의 사설학원 수와 인구증가율은 35-39세 인구 비중과 상대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재정자립도는 30-34세, 25-29세 인구 비중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5세 인구 비중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표 7-3] 청년 인구 비율과 지역 특성 간 상관분석 결과

구분	20-25세	25-29세	30-34세	35-39세
사설학원 수	0.427**	0.378**	0.411**	0.529**
재정자립도	0.353**	0.583**	0.747**	0.787**
교원 1인당 학생 수	0.848**	0.645**	0.617**	0.638**
녹지율	-0.311**	-0.490**	-0.427**	-0.293**
지역내총생산(GRDP)	0.311**	0.474**	0.580**	0.564**
인구증가율	0.135*	0.163*	0.322**	0.458**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

제3절 청년의 주거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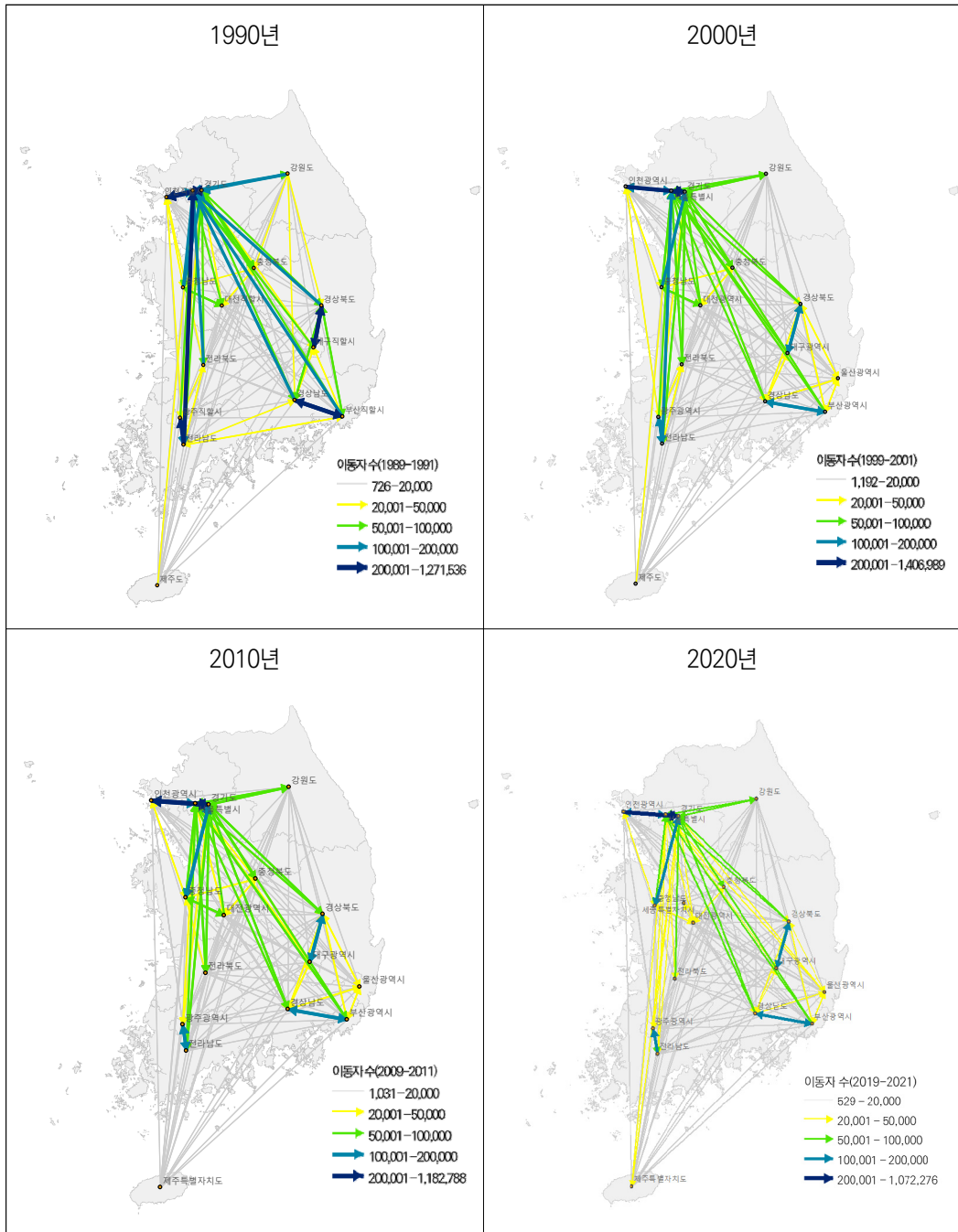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절에서는 청년의 이동 패턴과 전출입 사유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 통계 원자료를 활용한다.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는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주민등록상 인구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전입지(Designation)와 전출지(Origin), 전입사유 등을 분석한다.

1 청년의 주거 이동 패턴

가. 전체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1990-2020년)

1990년도 이후 최근까지 30여년 동안의 시도간 인구이동의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의 시도간 인구이동 패턴을 검토하기 위해 3개년도 자료를 합산하였다. 각 연도 별 자료는 개발사업과 같은 특정 사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1990년도의 이동자 수는 1989-1991년 이동자 수를 합산한 값이다.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년도

[그림 7-5] 시도 간 전출입 이동(1990-2020년)

1989-1991년 3개년의 시도간 이동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출발해 경기도로 도착한 사람들이 1,271,5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를 출발해 서울시로 전입(884,357명)하거나, 부산시에서 전출하여 경상남도로 전입(282,606명)하거나,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전입(257,486명)하는 순으로 이동 규모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1999-2001년 3개년의 시도간 이동을 분석한 결과, 1989-1991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동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서울시에서 출발해 경기도에 도착하는 이동 규모(1,406,989명)는 10년 전인 1989-1991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에서 전출해 서울시로 전입하는 이동규모(973,007명) 역시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큰 규모는 인천시에서 전출해 경기도로 전입하는 이동(212,746명)이고, 부산시에서 경상남도로 이동한 인구이다(195,190명).

2009-2011년 3개년의 시도간 이동 네트워크를 보면, 서울시에서 전출해 경기도에 전입하는 이동(1,182,788명)은 지속적으로 큰 규모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에서 전출하여 서울시로 전입하는 이동(876,322명) 역시 크게 나타나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구이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전출해 인천광역시로 전입하는 이동(216,099명)이나, 인천광역시에서 경기도로 전입하는 이동(206,837명)이 많았다. 이어서 부산시에서 전출하여 경상남도로 전입(188,966명)하거나, 경상남도에서 전출하여 부산시로 전입(151,485명)하거나, 대구광역시에서 전출하여 경상북도로 전입(146,483명)하는 순으로 이동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통상적으로 인접해 있는 시도 간에 이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2019-2021년 3개년 시도간 이동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유입된 인구(1,072,276명)의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경기도에서 전출하여 서울시로 전입하는 인구(745,920명) 역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시도간 이동 규모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으며 원거리 시도간 이동은 크게 줄었다. 그 다음으로 인천시와 경기도의 이동이 활발하여 인천시에서 경기도로 이동(220,345명)하거나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이동(197,590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시에서 경상남도로 이동(157,630명)하거나 경상남도에서 부산시로 이동(143,257명)하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하면, 시도간 인구이동을 살펴본 결과 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인접한 시도간의 이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경기도와 인천시 간의 인구이동도 많았다. 수도권 내에서의 시도간 이동이 가장 많이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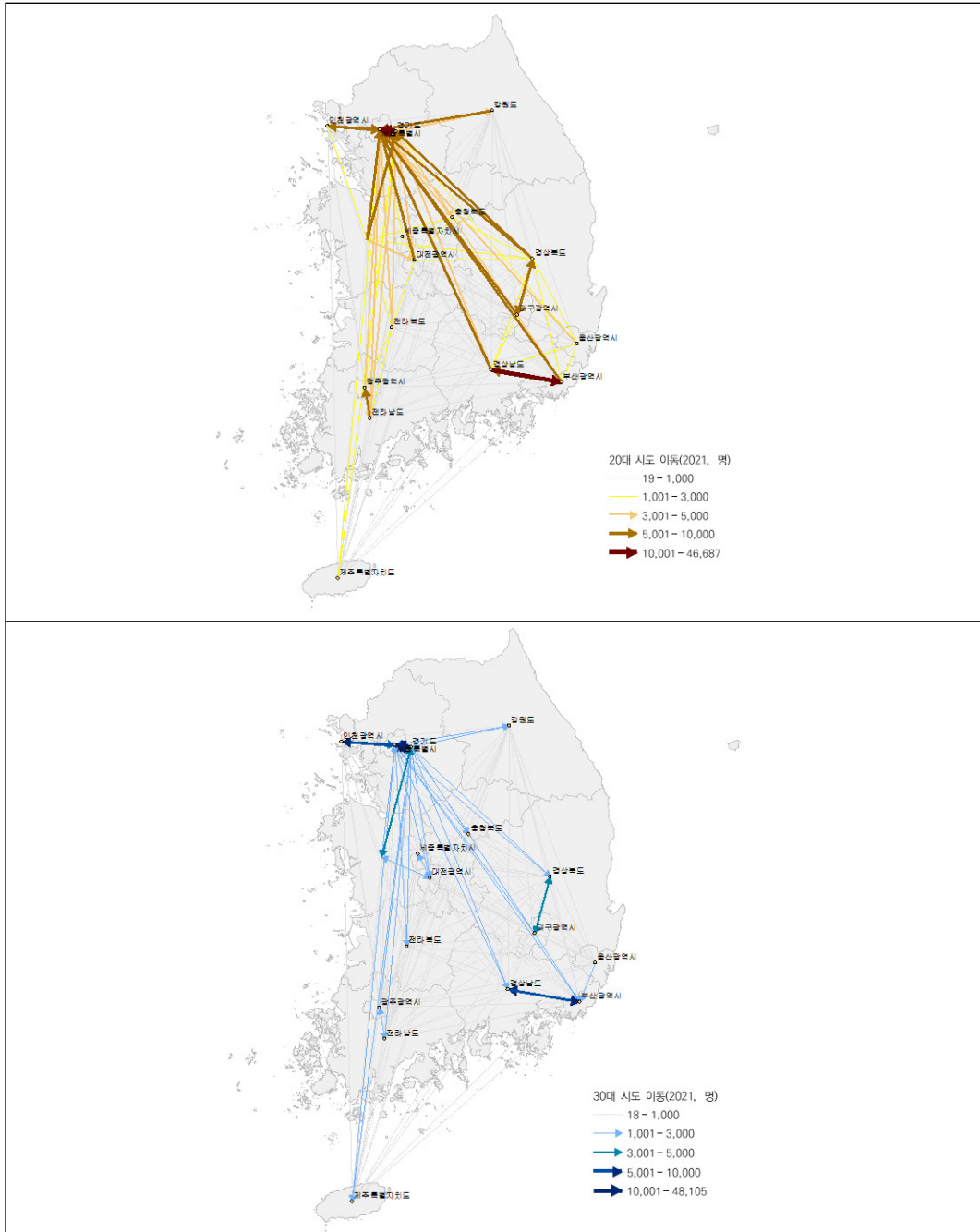
타났다. 그리고 부산시와 경상남도, 대구시와 경상북도,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남도과 광주시, 경기도와 강원도 등 인접한 시도 간의 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났다. 인접한 시도간의 이동 이외에 원거리 이동을 살펴보면([그림 7-5])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 대부분의 지방에서 서울과 경기도로의 이동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1990년대에서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원거리 이동 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연령별 청년 가구이동 네트워크

앞에서 전체 인구의 이동 패턴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20대와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이동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한다. 20대와 30대 청년의 인구이동을 살펴보기 위해 20대와 30대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이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내인구이동통계는 전입신고서에 기반하여 생산되는 자료인데,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서는 가구 단위로 작성하고 있어 20대와 30대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의 이동을 청년의 이동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2021년 20대 청년 가구의 시도간 이동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출발해 서울시로 도착하는 가구 이동(46,687가구)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에서 출발하여 경기도에 도착한 가구(34,616가구)도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에서 출발해 부산시로 도착(10,648가구)하거나, 인천시에서 출발해 경기도로 도착(9,157가구)하거나, 경기도를 출발해 인천시로 도착(8,702가구)하는 가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천시(8,551가구)나 부산시(8,385가구), 경상남도(7,757가구)에서 출발해 서울시로 도착하는 네트워크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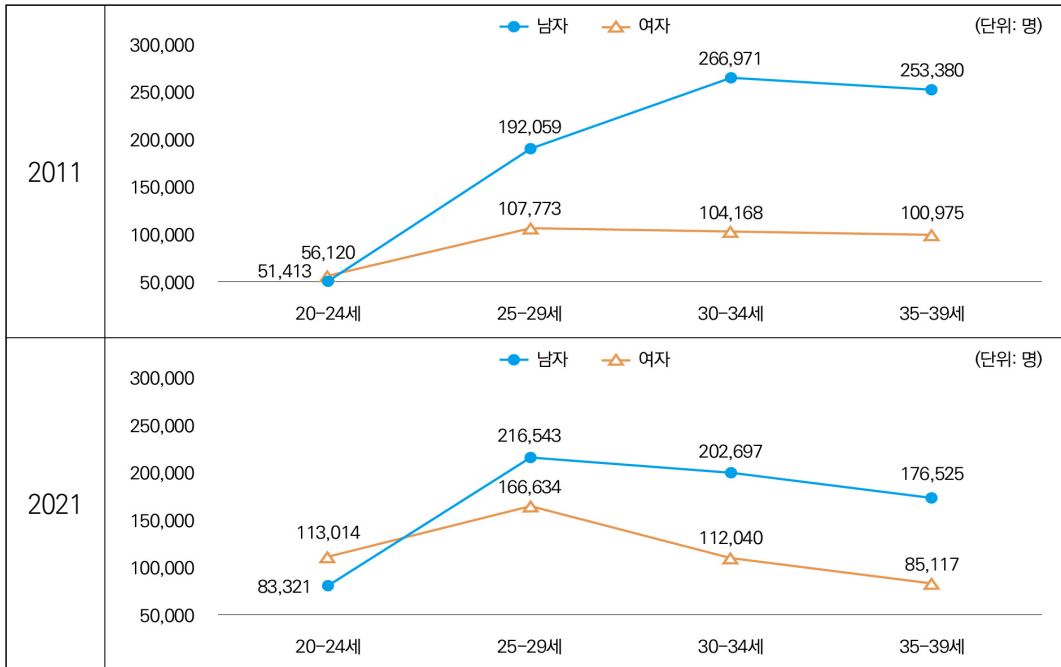
30대 가구의 이동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출발해 경기도로 도착하는 네트워크(48,105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경기도를 출발해 서울로 도착하는 네트워크(29,694가구)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출발해 인천광역시로 도착(8,964가구)하거나, 인천시에서 출발해 경기도로 도착(8,423가구)하거나, 서울시에서 출발해서 인천시로 도착(6,457가구)하거나, 부산시에서 출발해 경상남도로 도착(5,231가구)하거나, 경상남도에서 출발해 부산시로 도착(5,012가구)하는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는 인접한 시도간 이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20대 가구이동과의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2021)

[그림 7-6] 청년 가구 이동(2021년): 20대와 30대 비교

2021년의 20대와 30대의 가구이동을 살펴본 결과, 20대는 지방에서 출발해 서울로 도착하는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시기가 20대에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도권 전입 청년 인구를 연령별·시기별로 구분해 나타낸 것이 [그림 7-7]이다.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2011, 2021)

[그림 7-7] 수도권 전입 청년 가구이동(2011년, 2021년)

2011년의 경우 청년들이 수도권에 진입하는 시기로 남자는 30-34세, 여자는 25-29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패턴으로 판단된다.

2021년의 청년의 수도권 전입 시기를 살펴보면,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해 수도권에 도착하는 청년의 시기가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동규모가 10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세에 수도권에 전입하는 가구 수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자 20-24세 가구의 수도권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5-29세 청년 가구의 수도권 이동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들은 인구이동 방향에 따른 인구 규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2021년과 2011년의 청년 가구이동의 상위 네트워크를 정리한 것이다. 각년도의 이동 네트워크를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의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수도권 시군구⁴³⁾로 전입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이 활발하였으며 특히, 서울 관악구,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등으로의 이동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비수도권에서 출발하여 수도권으로 도착하는 경우 관악구로 도착하는 흐름이 가장 많았다. 두 시기 각각의 연령대별, 성별 흐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7-4] 20-24세 가구이동의 수도권 이동 상위네트워크(2021년)

순위	수도권 내 이동		비수도권 전출 수도권 전입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서울→관악구 (2,136가구)	서울→관악구 (3,852가구)	경북→관악구 (267가구)	경남→관악구 (385가구)
2	경기→화성시 (1,745가구)	서울→강서구 (1,838가구)	부산→관악구 (261명)	부산→관악구 (346가구)
3	경기→평택시 (1,630가구)	경기→화성시 (1,723가구)	충남→관악구 (223명)	충남→관악구 (338가구)
4	서울→동대문구 (989가구)	서울→동대문구 (1,716가구)	전북→관악구 (202명)	경북→관악구 (332가구)
5	경기→시흥시 (988가구)	서울→마포구 (1,685가구)	강원→관악구 (196명)	전북→관악구 (271가구)
6	경기→수원시 장안구(981가구)	서울→광진구 (1,536가구)	광주→관악구 (177명)	대구→관악구 (267가구)
7	경기→파주시 (954가구)	서울→성북구 (1,520가구)	대전→관악구 (177명)	대전→관악구 (258가구)
8	경기→관악구 (940가구)	경기→관악구 (1,466가구)	전남→관악구 (160명)	충북→관악구 (250가구)
9	경기→안산시 상록구 (906가구)	서울→동작구 (1,443가구)	경남→동대문구 (157명)	전남→관악구 (234가구)
10	경기→수원시 영통구 (834명)	경기→평택시 (1,434가구)	대구→동대문구 (154명)	부산→동대문구 (214가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원자료

43)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행정구 단위로 제공된 통계청의 2021년도 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임.

[표 7-4]는 2021년 한 해 동안 20-24세의 청년 가구이동의 수도권 전입을 보여준다. 20-24세 남자(2,136가구)와 여자(3,852가구) 모두 서울 지역에서 서울 관악구로 이동하는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비수도권 시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경우 남녀 모두 관악구로 진입하는 규모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 경상북도에서 관악구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267가구), 부산에서 관악구로 이동하는 네트워크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346가구). 여자 가구 이동은 경상남도를 출발해서 관악구에 도착하는 네트워크(385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부산에서 관악구로 이동하는 네트워크(346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25-29세의 가구 이동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 내 이동의 경우 남자는 경기 지역에서 경기 화성시로 이동하는 규모(7,593가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서울에서 관악구로 도착(6,799가구)하거나 경기에서 경기 평택시로 전입(5,718가구)하는 순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 관악구로 이동하는 규모(5,948가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서울에서 서울 강서구(4,603가구)로의, 경기에서 경기 화성시(4,179가구)로의 이동이 확인되었다.

25-29세 청년 가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부산에서 전출하여 관악구로 전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남자 522가구, 여자 319가구), 그 다음은 경남에서 관악구로의 이동(남자 399가구, 여자 242가구)이 많았다.

[표 7-5] 25-29세 가구이동의 수도권 이동 상위네트워크(2021년)

순위	수도권 내 이동		비수도권 전출 수도권 전입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경기→화성시 (7,593가구)	서울→관악구 (5,948가구)	부산→관악구 (522가구)	부산→관악구 (319가구)
2	서울→관악구 (6,799가구)	서울→강서구 (4,603가구)	경남→관악구 (399가구)	경남→관악구 (242가구)
3	경기→평택시 (5,716가구)	경기→화성시 (4,179가구)	경북→관악구 (316가구)	충남→평택시 (214가구)
4	서울→강서구 (3,632가구)	서울→송파구 (3,321가구)	충남→관악구 (300가구)	충남→관악구 (201가구)
5	경기→수원시 영통구 (2,908가구)	서울→영등포구 (3,167가구)	대전→관악구 (280가구)	대구→관악구 (187가구)
6	서울→영등포구 (2,875가구)	서울→마포구 (3,010가구)	전북→관악구 (272가구)	강원→관악구 (185가구)
7	경기→시흥시 (2,780가구)	경기→ 평택시 (2,868가구)	충남→화성시 (257가구)	경북→관악구 (178가구)
8	서울→송파구 (2,772가구)	서울→강남구 (2,762가구)	경남→평택시 (245가구)	대전→관악구 (164가구)
9	경기→파주시 (2,768가구)	서울→동작구 (2,629가구)	충북→관악구 (233가구)	충북→관악구 (164가구)
10	경기→부천시 (2,619가구)	서울→광진구 (2,609가구)	경북→평택시 (222가구)	전북→관악구 (157가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원자료

30-34세의 청년 가구는 남자(7,833가구)와 여자(3,247가구) 모두 경기 지역에서 경기 화성시로 이동하는 네트워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 충남 지역에서 전출하여 경기 평택시로 전입하는 이동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남자 517가구, 여자 163가구), 그 다음으로 충남 지역에서 화성시로 이동하는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남자 246가구, 여자 76가구).

[표 7-6] 30-34세 가구이동의 수도권 이동 상위네트워크(2021년)

순위	수도권 내 이동		비수도권 전출 수도권 전입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경기→화성시 (7,833가구)	경기→화성시 (3,247가구)	충남→평택시 (517가구)	충남→평택시 (163가구)
2	경기→평택시 (5,374가구)	서울→강서구 (3,027가구)	충남→화성시 (249가구)	충남→화성시 (76가구)
3	서울→강서구 (4,213가구)	서울→송파구 (2,835가구)	경북→파주시 (219가구)	부산→관악구 (75가구)
4	서울→관악구 (4,203가구)	서울→관악구 (2,453가구)	경남→평택시 (152가구)	부산→강남구 (65가구)
5	서울→송파구 (3,722가구)	서울→강남구 (2,383가구)	충북→평택시 (134가구)	부산→강서구 (63가구)
6	경기→파주시 (3,248가구)	경기→평택시 (2,178가구)	부산→평택시 (131가구)	대구→관악구 (54가구)
7	서울→영등포구 (3,122가구)	서울→영등포구 (2,017가구)	경남→관악구 (130가구)	충남→관악구 (51가구)
8	경기→부천시 (3,069가구)	서울→마포구 (1,924가구)	부산→관악구 (128가구)	부산→마포구 (51가구)
9	경기→남양주시 (3,048가구)	서울→강동구 (1,819가구)	경북→평택시 (121가구)	대전→강서구 (46가구)
10	서울→강남구 (3,021가구)	경기→부천시 (1,730가구)	경북→화성시 (114가구)	부산→송파구 (44가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원자료

35-39세의 이동 네트워크를 살펴본 결과 남자(7,197가구)와 여자(2,672가구) 모두 경기 지역에서 전출하여 경기 화성시로 전입하는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 충남 지역에서 경기 평택시로 도착(남자 450가구, 여자 133가구)하거나 충남 지역에서 전출하여 화성시로 전입(남자 198가구, 여자 43가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기] 35-39세 가구이동의 수도권 이동 상위네트워크(2021년)

순위	수도권 내 이동		비수도권 전출 수도권 전입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경기→화성시 (7,197가구)	경기→화성시 (2,672가구)	충남→평택시 (450가구)	충남→평택시 (133가구)
2	경기→평택시 (4,829가구)	서울→송파구 (2,242가구)	충남→화성시 (198가구)	충남→화성시 (43가구)
3	경기→남양주시 (3,626가구)	서울→강남구 (1,988가구)	경남→평택시 (167가구)	충북→평택시 (41가구)
4	서울→송파구 (3,600가구)	경기→평택시 (1,819가구)	경북→파주시 (165가구)	부산→강남구 (34가구)
5	서울→강서구 (3,213가구)	서울→강서구 (1,786가구)	충북→평택시 (122가구)	경남→평택시 (34가구)
6	경기→파주시 (3,074가구)	경기→남양주시 (1,762가구)	부산→평택시 (100가구)	충남→강남구 (30가구)
7	인천→미추홀구 (3,033가구)	경기→부천시 (1,516가구)	경북→평택시 (97가구)	강원→강남구 (28가구)
8	경기→시흥시 (2,979가구)	서울→강동구 (1,419가구)	경북→화성시 (91가구)	부산→관악구 (27가구)
9	경기→성남시 분당구 (2,825가구)	서울→마포구 (1,347가구)	충북→화성시 (74가구)	강원→송파구 (27가구)
10	서울→강남구 (2,819가구)	경기→성남시 분당구 (1,339가구)	강원→평택시 (73가구)	경북→파주시 (26가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원자료

이를 10년 전인 2011년의 이동 네트워크와 비교하면 차이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11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지역에서 경기 파주시로 이동(남자 2,137가구, 여자 1,641가구)하는 네트워크가 활발하였으며, 2021년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서울 관악구로 이동(남자 1,065가구, 여자 1,641가구)하는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 관악구로 도착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8] 20-24세 가구이동의 수도권 이동 상위네트워크(2011년)

순위	수도권 내 이동		비수도권 출발 수도권 도착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경기→파주시 (2,137가구)	서울→관악구 (1,641가구)	경남→관악구 (250가구)	부산→관악구 (263가구)
2	서울→관악구 (1,065가구)	경기→파주시 (1,500가구)	부산→관악구 (219가구)	경남→관악구 (248가구)
3	경기→수원시 장안구 (925가구)	서울→강남구 (1,148가구)	경북→관악구 (184가구)	충남→관악구 (243가구)
4	경기→시흥시 (614가구)	서울→광진구 (747가구)	강원→관악구 (163가구)	경북→관악구 (231가구)
5	경기→평택시 (536가구)	서울→성북구 (709가구)	대구→관악구 (158가구)	강원→관악구 (221가구)
6	경기→안산시 상록구 (512가구)	서울→마포구 (671가구)	충남→관악구 (156가구)	전북→관악구 (196가구)
7	서울→강남구 (502가구)	서울→동작구 (667가구)	전남→관악구 (149가구)	전남→관악구 (178가구)
8	서울→성북구 (485가구)	경기→수원시 권선구 (605가구)	전북→관악구 (133가구)	충북→관악구 (171가구)
9	경기→화성시 (484가구)	서울→송파구 (593가구)	전북→파주시 (118가구)	대전→관악구 (159가구)
10	인천→남구 (468가구)	경기→관악구 (563가구)	경남→동작구 (114가구)	대구→관악구 (154가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원자료

2011년의 25-29세 청년 가구는 남자의 경우 서울에서 출발하여 서울 관악구로 도착(5,310가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 지역에서 경기 파주시(5,293가구)나 경기 화성시(3,335가구)로 이동하는 네트워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역시 서울에서 관악구로 이동하는 네트워크(3,754가구)가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으나 그다음은 서울에서 강남구(3,601가구)나 송파구(2,475가구), 마포구(2,026가구) 등으로 이동하는 등의 서울 지역 내 이동 네트워크가 상위를 차지했다.

[표 7-9] 25-29세 가구이동의 수도권 이동 상위네트워크(2011년)

순위	수도권 내 이동		비수도권 출발 수도권 도착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서울→관악구 (5,310가구)	서울→관악구 (3,765가구)	부산→관악구 (540가구)	부산→관악구 (264가구)
2	경기→파주시 (5,293가구)	서울→강남구 (3,601가구)	경남→관악구 (397가구)	경남→관악구 (187가구)
3	경기→화성시 (3,335가구)	서울→송파구 (2,475가구)	경북→관악구 (350가구)	경북→관악구 (182가구)
4	서울→강남구 (3,079가구)	서울→마포구 (2,026가구)	대구→관악구 (320가구)	충남→관악구 (175가구)
5	서울→송파구 (2,940가구)	서울→강서구 (1,888가구)	강원→관악구 (319가구)	강원→관악구 (158가구)
6	경기→시흥시 (2,742가구)	서울→광진구 (1,886가구)	충남→관악구 (300가구)	대구→관악구 (149가구)
7	경기→평택시 (2,580가구)	서울→동작구 (1,740가구)	전북→관악구 (294가구)	부산→강남구 (148가구)
8	경기→수원시 권선구 (2,549가구)	서울→서초구 (1,583가구)	경북→파주시 (293가구)	충북→관악구 (135가구)
9	경기→안산시 상록구 (2,520가구)	서울→성북구 (1,561가구)	대전→관악구 (253가구)	전북→관악구 (134가구)
10	서울→강서구 (2,511가구)	서울→강동구 (1,520가구)	전남→관악구 (245가구)	대전→관악구 (131가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원자료

2011년의 30-34세 청년 가구 이동은 남성의 경우 경기 지역에서 출발하여 경기 화성 시로 도착(6,275가구)하는 네트워크가 가장 상위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서울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남구(3,273가구)로 도착하는 네트워크가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의 지방에서 출발하여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충남 지역에 경기 평택시로 이동하는 네트워크(남자 264가구, 여자 81가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 30-34세 가구이동의 수도권 이동 상위네트워크(2011년)

순위	수도권 내 이동		비수도권 출발 수도권 도착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경기→화성시 (6,275가구)	서울→강남구 (3,273가구)	충남→평택시 (264가구)	충남→평택시 (81가구)
2	서울→송파구 (5,495가구)	서울→송파구 (2,483가구)	충남→화성시 (212가구)	부산→강남구 (76가구)
3	서울→관악구 (5,407가구)	서울→관악구 (2,419가구)	경북→파주시 (210가구)	부산→관악구 (70가구)
4	서울→강남구 (4,747가구)	서울→강서구 (1,926가구)	부산→관악구 (195가구)	충남→관악구 (58가구)
5	서울→강서구 (4,526가구)	서울→마포구 (1,780가구)	경남→관악구 (154가구)	경남→관악구 (57가구)
6	경기→파주시 (4,358가구)	서울→강동구 (1,729가구)	충남→관악구 (115가구)	강원→관악구 (51가구)
7	인천→남동구 (4,351가구)	서울→서초구 (1,626가구)	경북→관악구 (108가구)	부산→마포구 (47가구)
8	경기→시흥시 (4,255가구)	인천→남동구 (1,613가구)	부산→강남구 (108가구)	경북→관악구 (45가구)
9	서울→강동구 (4,055가구)	서울→은평구 (1,590가구)	전북→관악구 (106가구)	경남→강남구 (43가구)
10	경기→평택시 (4,053가구)	서울→광진구 (1,569가구)	대구→관악구 (99가구)	광주→강남구 (43가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원자료

2011년의 35-39세 가구 이동을 살펴본 결과 남자는 경기 지역에서 경기 화성시로 이동하는 네트워크(5,857가구)가, 여자는 서울 지역에서 서울 강남구로 도착하는 네트워크(2,427가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 충남에서 출발하여 경기 평택시로 도착(남자 175가구, 여자 80가구)하는 네트워크가 가장 많음을 확인하였다.

[표 7-11] 35-39세 가구이동의 수도권 이동 상위네트워크(2011년)

순위	수도권 내 이동		비수도권 출발 수도권 도착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경기→화성시 (5,857가구)	서울→강남구 (2,427가구)	충남→평택시 (175가구)	충남→평택시 (80가구)
2	서울→송파구 (5,298가구)	서울→송파구 (2,106가구)	충남→화성시 (129가구)	부산→강남구 (41가구)
3	경기→남양주시 (5,125가구)	경기→남양주시 (2,051가구)	경북→파주시 (99가구)	강원→남양주시 (40가구)
4	인천→남동구 (4,418가구)	인천→남동구 (1,769가구)	강원→남양주시 (78가구)	충남→화성시 (38가구)
5	경기→시흥시 (4,355가구)	서울→강서구 (1,699가구)	충남→안성시 (77가구)	충남→안성시 (32가구)
6	서울→강남구 (4,339가구)	서울→관악구 (1,663가구)	부산→관악구 (69가구)	충남→남동구 (27가구)
7	인천→서구 (4,302가구)	서울→은평구 (1,656가구)	충남→오산시 (67가구)	충남→강남구 (24가구)
8	서울→관악구 (4,078가구)	경기→화성시 (1,597가구)	경남→관악구 (66가구)	강원→송파구 (23가구)
9	경기→안산시 상록구 (4,019가구)	경기→안산시 상록구 (1,580가구)	충남→시흥시 (66가구)	충남→안산시 상록구 (23가구)
10	경기→파주시 (4,015가구)	경기→파주시 (1,543가구)	충북→오산시 (66가구)	경북→강남구 (22가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원자료

2 청년의 이동 사유

청년 가구의 주거 이동 사유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를 활용하였는데,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는 전입 시 작성하는 전입신고서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전입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전입신고서상에 제시된 사유는 [표 7-12]에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표 7-12] 전입신고서 상의 이동 사유

이동사유	전입신고서 상 사유	설명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취업, 구직과 관련하여 이사한 경우 - 직장이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이사한 경우 - 사업 때문에 이사한 경우 등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결혼, 이혼, 별거, 사별로 이사한 경우 - 분가 또는 독립을 위해 이사한 경우 - 가족과 가까이 또는 같이 살기 위해 이사한 경우 등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 - 전세, 월세 등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한 경우 - 주택규모 변경, 집세 때문에 이사한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이사한 경우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진학, 학업 때문에 이사한 경우 - 자녀교육 때문에 이사한 경우 등
주거환경	교통, 문화·편의시설 등	- 지하철역 근처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한 경우 - 문화,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한 경우 등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또는 요양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 - 더 나은 주거환경(신선한 공기, 오염지역 탈피)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 등
기타	위의 사항 이외의 사유	- 위에 열거한 요인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자료: 행정안전부의 전입신고서 양식, 통계청 자료 재정리

2021년 기준 청년 가구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전입하는 사유에 있어 연령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20-24세, 25-29세의 이동 사유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직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29세 청년 가구의 약 40% 이상이 직업을 이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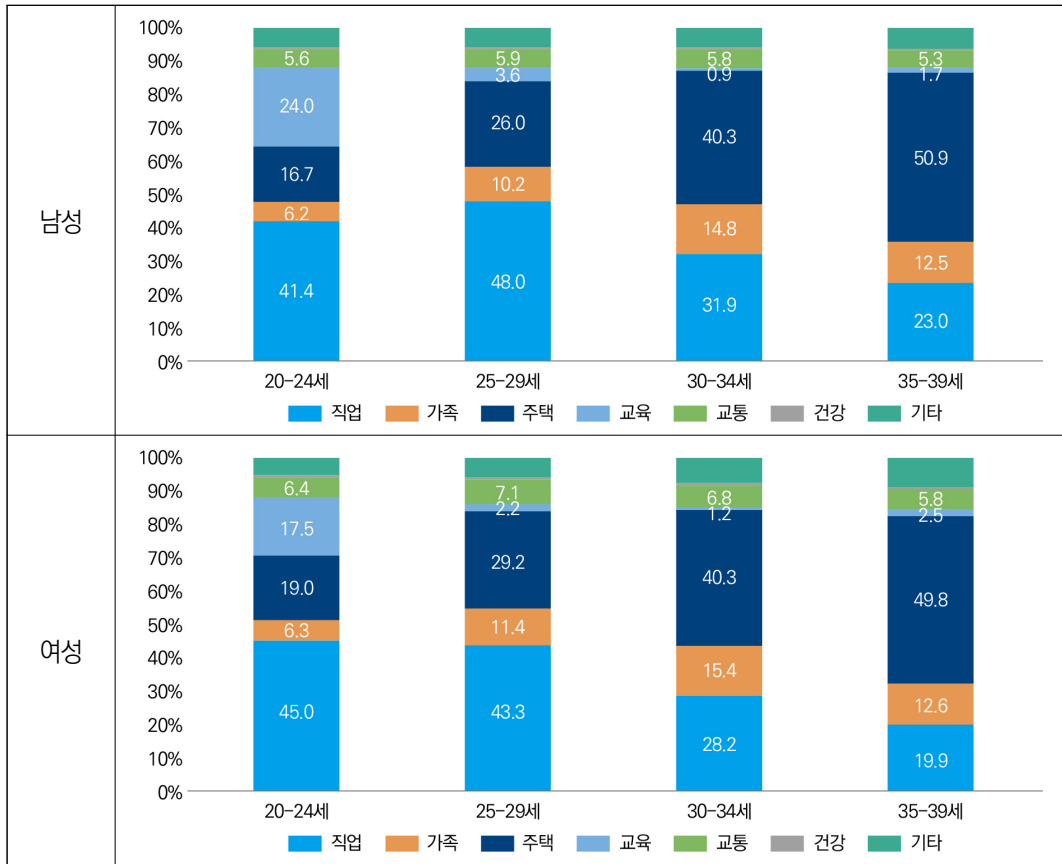
주거지를 옮겼다. 남자의 경우는 25-29세(48.0%)에서 직업으로 인한 이동 비중이 20-24세(41.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20-24세(45.0%)에서 25-29세(43.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20-24세에서 직업 다음으로 남자는 교육(24.0%)-주택(16.7%) 순으로, 여자는 주택(19.0%)-교육(17.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0-39세의 경우 남성(30-34세 40.3%, 35-39세 50.9%)과 여성(30-34세 40.3%, 25-29세 49.8%) 모두 주택으로 인한 이동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직업으로 인한 이동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표 7-13] 청년 가구 수도권 전입 사유(2021년, %)

	남성				여성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직업	41.4	48.0	31.9	23.0	45.0	43.3	28.2	19.9
가족	6.2	10.2	14.8	12.5	6.3	11.4	15.4	12.6
주택	16.7	26.0	40.3	50.9	19.0	29.2	40.3	49.8
교육	24.0	3.6	0.9	1.7	17.5	2.2	1.2	2.5
교통	5.6	5.9	5.8	5.3	6.4	7.1	6.8	5.8
건강	0.3	0.2	0.3	0.5	0.2	0.3	0.5	0.6
기타	5.9	6.0	6.0	6.2	5.7	6.5	7.7	8.9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원자료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원자료

[그림 7-8] 청년 가구의 수도권 전입 사유(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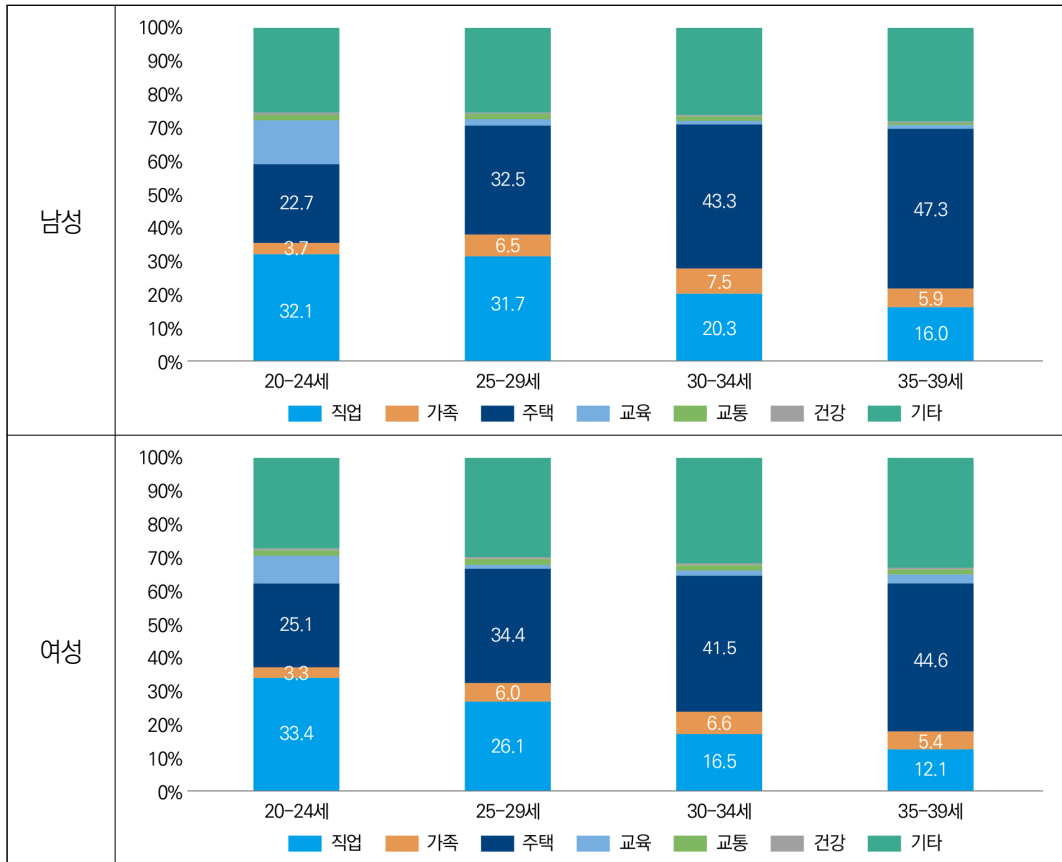
10년 전인 2011년 청년 가구의 주거 이동 사유와 비교하면, 2021년에 청년들의 직업으로 인한 이동 비중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20-24세의 직업으로 인한 이동 비중은 남자 32.1%, 여자 33.4%로 2021년의 각각 41.4%, 48.0%와 비교할 때 규모가 작다. 25-29세의 경우 2011년 남성은 주택으로 인한 비중이 32.5%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은 직업으로 인한 이동(31.7%)이 컸다. 여자 25-29세의 경우 2011년에 가장 큰 이동 사유 비중은 주택(34.4%)으로, 직업(2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20-29세 청년들의 이동을 비교할 경우 과거와 달리 직업으로 인한 이동 비중이 커지고 주택으로 인한 이동의 비중은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1년의 30-39세 청년 가구이동을 살펴보면, 주택으로 인한 이동이 남자(30-34세 43.3%, 35-39세 47.3%)와 여자(30-34세 41.5%, 35-39세 44.6%)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직업(남자 30-34세 20.3%, 35-39세 16.0%; 여자 30-34세 16.5%, 35-39세 12.1%)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7-14] 청년 가구 수도권 전입 사유(2011년, %)

	남성				여성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직업	32.1	31.7	20.3	16.0	33.4	26.1	16.5	12.1
가족	3.7	6.5	7.5	5.9	3.3	6.0	6.6	5.4
주택	22.7	32.5	43.3	47.3	25.1	34.4	41.5	44.6
교육	14.1	2.3	0.7	1.5	8.8	1.5	1.6	3.2
교통	1.3	1.3	1.2	1.0	1.7	2.0	1.6	1.1
건강	0.2	0.2	0.2	0.3	0.2	0.3	0.4	0.5
기타	25.9	25.6	26.6	27.9	27.5	29.8	31.7	33.1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원자료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1) 원자료

[그림 7-9] 청년 가구의 수도권 전입 사유(2011년)

제4절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장에서는 청년의 공간 분포와 주거 이동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년 인구의 지역적 편재를 확인하였다. 전체 인구로 보면 과거에 비해 이동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5-29세의 이동이 활발하다.

먼저, 청년의 공간 분포 현황을 행정구 단위로 제공된 인구통계로 살펴본 결과 20-39세의 청년이 밀집된 지역은 서울(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과 경기(화성시, 부천시,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인천 서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과 대전 서구, 대구 달서구, 경남 김해시 등을 중심으로 한 지방 대도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 분석을 위해 1990년도 이후부터 최근 2020년의 시도간 이동 네트워크를 살펴본 결과 시도간 이동 규모는 크게 줄었으며 특히 1990년에 지방에서 서울로의 네트워크가 활발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인접 시도간의 이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에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원거리 이동이 크게 감소한 반면, 청년층에서는 지방을 출발해서 수도권으로 도착하는 인구이동이 여전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에서는 수도권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청년의 이동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의 시도간 이동이 30대에 비해 활발했으며, 특히 서울로 도착하는 네트워크의 규모가 컸다.

2021년 청년의 수도권 전입시기를 살펴보면,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해 수도권에 도착하는 시기가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동 규모가 10년 전에 비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세에 수도권에 전입하는 가구 수는 과거에 비해 남녀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20-24세 여자 가구의 수도권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5-29세 청년 가구의 수도권 이동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전입 이동을 지역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수도권 내에서 이동이 활발하고, 특히 서울 관악구,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등으로 이동이 많은 것이 확

인된다. 비수도권에서 출발하여 수도권으로 도착하는 경우 서울 관악구로 도착하는 흐름이 가장 많았다. 특히 20-24세 청년 가구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와 비수도권에서 출발하여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 모두 관악구로 진입하는 규모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25-29세 가구이동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서는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서울 관악구 등으로 이동하는 네트워크가 상위를 차지하였으며 지방에서 출발하여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경우에서는 경남이나 부산에서 출발하여 관악구로 도착하는 네트워크가 상위로 나타났다. 20대 청년 가구의 관악구로의 유입이 많은 이유는 관악구의 특징—1인 가구 등 소가구 중심 주택환경과 저렴한 주택가격, 일자리⁴⁴)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등으로의 지리적 접근성 및 교통 편의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도착하는 청년의 이동 사유는 대부분 ‘직업’과 ‘주택’이었다. 청년 가구이동의 연령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20-29세는 직업으로 인한 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주택과 교육이 주요한 이동 사유였다. 30-39세의 경우 주택으로 인한 이동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의 전입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특히 30-39세의 주택 이동은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전세난 등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주택으로 인한 이동의 경우가 많은 것을 반영한다.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나 역세권 등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비롯한 민간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김리영, 2019).

2011년과 2021년의 청년 가구 수도권 이동 사유를 비교한 결과, 최근 20대 청년들의 직업으로 인한 이동 비중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25-29세 여성이 직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2011년에는 26.1%였으나 2021년에는 43.3%로 크게 높아졌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최근 지역산업, 지역경제의 쇠퇴로 인해 취업을 목적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비해 여성이 사회활동이나 구직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청년은 다른 인구집단보다 이동이 활발하며 수도권 지향

44)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체 사업체는 2020년 기준 1,211,053개이다. 강남구(115,054개), 송파구(76,412개), 중구(76,129개), 서초구(75,858개), 영등포구(74,060개) 등이 사업체가 밀집한 주요 지역이다(서울특별시 기본통계, 사업체 현황, 2021).

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및 대도시의 경우 전 연령의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인구는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양상을 나타낸다(이상립 외, 2018). 본 연구의 분석으로 지방의 20대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네트워크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 이는 25-29세 연령대에서 수도권 집중이 뚜렷함을 확인한 기존의 연구결과(김준영, 2016)와 일치한다. 최근 들어 수도권에 진입하는 시기가 과거보다 더 빨라져 20-24세 청년의 수도권 진입이 눈에 띄게 증가한 점도 발견하였다. 이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방의 쇠퇴와 지방대학의 위기와의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생애과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청년과 지역의 상호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의 삶과 지역과의 연계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후속 연구로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후 추가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은 대학진학 시기와 대학졸업 후 취업 시기에 주로 발생한다. 김준영(2016)의 연구는 1986-1990년에 태어난 연령 집단이 10-19세인 시기까지는 광역 시도별 인구 규모의 변화가 크지 않다가 이들이 20-24세인 시기에 지역별 인구규모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대학졸업 시기인 25-29세에는 광역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청년층의 인구 규모가 급속히 감소하고 수도권 청년층의 인구 규모는 증가한다고 보고한다. 요컨대 청년들이 태어나서 자란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청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대책이, 오늘날 당면한 지방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8장

청년의 불평등 인식

이상직·김미선·김동규

제1절 불평등 인식과 불공정 인식

제2절 한국인의 분배 기준 인식

제3절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평가

제4절 선발 시스템의 빛과 그늘

제 1절

불평등 인식과 불공정 인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장에서는 자원분배기준 인식 및 불평등 인식을 살펴본다. 최근 불평등 연구에 있어 인식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불평등의 객관적 지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 비해 불평등 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 장에서는 불평등 인식을 분석함에 있어 개인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불평등 인식은 불공정 인식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의 결과를 개인 책임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회의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약할 것이다. 그러한 개인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불평등 자체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개인능력주의에 대한 믿음과 역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변수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실시한 2021년도 한국인의 행복조사 1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개인능력주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청년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능력주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부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분배된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기에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지하는 데 둔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정도는 나이가 어릴수록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 경험의 부족이다. 실제 사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개인능력주의가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현실감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젊음의 순수 효과로,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이 믿는 것을 순수하게 투영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통해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이 두 변수의 관계가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특히 기성 세대와 청년층의 인식 차이에 주목했다.

불평등 인식과 능력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배경적 논의로 2절에서는 한국인의 자원분배기준 인식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연령대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불평등 인식과 능력주의 인식의 관계를 살펴본다. 4절에서는 분석 결과의 함의를 정리한다.

제2절

한국인의 분배 기준 인식⁴⁵⁾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절에서는 자원분배기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이상과 현실 차원으로 검토해 ‘능력’의 의미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 한국인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둘째, 한국인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자원이 분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1 네 가지 분배 기준

가.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국회미래연구원이 2021년에 수집한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문항 두 개에 대한 17,375명의 응답 값이 담겨 있다.⁴⁶⁾ 한 사회에서 부와 지위를 분배하는 기준을 자원분배기준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 문항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자원분배기준과 실제로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자원분배기준을 묻고 있다.⁴⁷⁾

45) 이 절은 이상직(2022b)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6)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8,162개이다. 이들 가구의 가구원 19,465명 중 만 15세 이상 가구원 18,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중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17,357명이다(허중호 외, 2021: 36). 데이터셋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허중호.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1 [데이터 세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자료제공기관], 2022-05-09, <https://doi.org/10.22687/KOSSDA-A1-2021-0003-V1.0>.

47) 이 문항은 일본에서 195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마다 조사된 ‘사회계층과 사회이동 조사’(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Survey, SSM)에서 활용된 문항을 참조한 것이다. 이 절의 테마 및 분석 방식은 SSM 자료로 일본 사회의 계층 구조를 분석한 사토 도시키의 저서(2014)를 크게 참고해 정했다.

[표 8-1] '자원분배기준' 인식을 묻는 문항(이상과 현실)

D17. 높은 지위와 경제적 풍요를 누가 얻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과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
① 성과를 올린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누구든 동일하게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D18. 그렇다면,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우리 사회의 현실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성과를 올린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고 있다 ② 노력한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고 있다 ③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얻고 있다 ④ 누구든 동일하게 얻고 있다

출처: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조사) 조사표(허중호 외, 2021: 674)

‘보기 1번’은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 떠올리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일 수 있다. ‘결과로서의 능력’을 뜻한다. ‘보기 2번’은 많은 사람이 능력이라는 말에서 기대하는 것이지만 능력과 같은 말로 보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일종의 ‘과정으로서의 능력’을 뜻한다. 근대사회의 신념 체계에서는 ‘노력하면 이를 수 있다’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노력이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능력이라는 말의 모호함이 생겨난다. ‘보기 3번’은 자원분배기준으로 ‘필요’를 표현한 것이고, ‘보기 4번’은 ‘균등’을 표현한 것이다. 필요와 균등은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일 수도 있으나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제’ 사회에서는 앞의 네 가지 기준이 어느 정도 혼용되어 적용되고 있다(마일즈, 1992). 복지국가의 논리에도 ‘필요’와 ‘균등’의 기준이 일정 수준 포함되어 있다(에스핑-안데르센, 2007). 네 가지 기준은 서로 결이 다르지만, 네 가지 모두 자원분배기준으로 ‘신분’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나. 측정: 자원분배기준에 대한 인식

이 장에서 보려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인식’이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현실의 분배 기준은 이렇 것이다’라고 떠올리는 이미지를 측정한 것이다. “한국은 능력주의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내릴 수는 없으나 인식을 ‘이상’과 ‘현실’로 구분해 측정함으로써 ‘능력’의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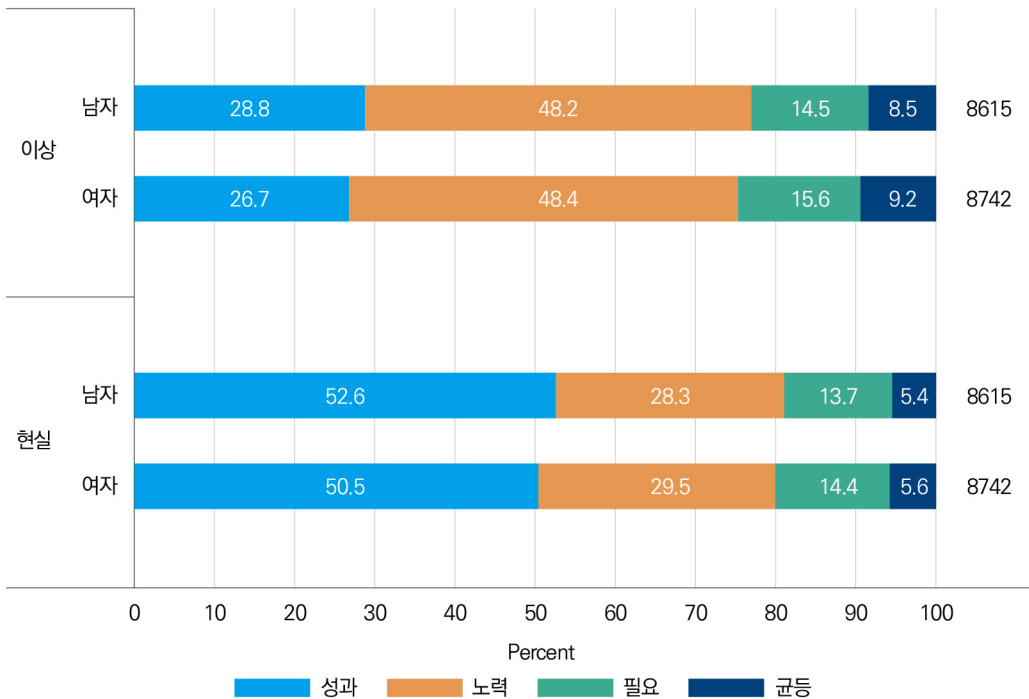
실적과 노력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조건을 요구하는 반면 필요와 균등은 “현재 어떠한가”라는 상태가 기준이 된다. ‘성과’와 ‘노력’은 엄연히 다른 기준이지만 조건부라는 의미에서 둘은 동일한 가치를 지향한다. 의도와 결과의 차이, 또는 과정과 결과의 차이일 뿐 대상의 어떠한 의지나 행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조건부이기 때문이다. 반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이나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을 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것을 뜻한다.

앞의 둘과 뒤의 둘은 각각 자유주의의 논리와 민주주의의 논리에 대응한다. 다른 말로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와 대응한다(마일즈, 1992). 자유주의 논리에서 부의 분배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전제로 한다. 즉 노동력의 상품 가치에 따른 분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민주주의 논리에서 개개인은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상품이 아닌, 필요나 형평의 기준이 인정되는 사회구성원으로, 즉 시민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전제에서 부의 분배는 개인의 시장 내 위치가 아닌 권리라는 보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성과 대 노력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15세 이상 한국인 4명 중 1명은 이상적 분배 기준으로 ‘필요’나 ‘균등’을 꼽았다(그림 8-11). 약 4명 중 1명이 필요나 균등을 이상적인 분배 기준으로 본다. 필요나 균등을 꼽은 이들의 비중인 25%라는 수치의 많고 적음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으나 한국사회가 경쟁을 주된 가치로 삼는다고 알려져 있는 것을 감안(김희삼, 2018)하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⁴⁸⁾

48) 이러한 응답은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보편 대응의 필요를 체감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비교할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향후 좀 더 체계적인 비교 연구의 맥락에서 이 숫자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비교 사회적 맥락에서도 볼 필요가 있고, 역사적 변화 맥락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1995년에 일본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그림 8-1]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과 현실(성별)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이상적 분배 기준으로 ‘노력’을 꼽은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되고, 다른 25% 가량이 ‘성과’를 꼽았다. 즉 이상적 분배 기준의 주류는 ‘성과’와 ‘노력’이다.

‘성과’와 ‘노력’을 함께 봤을 때에 남녀 차이는 크지 않으나 ‘성과’에 한정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응답 비중이 다소 높다. 대신 여성은 남성보다 ‘필요’를 꼽은 이들이 많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넓게는 근대사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성과’의 주체로 인정받아 온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1]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성과’와 ‘노력’을 둘러싸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성과’를 현실의 분배 기준으로 답한 사람은 절반 이상인 데 비해 이

같은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남녀 평균 약 15%가 ‘필요’나 ‘균등’을 이상적인 자원 분배 기준으로 꼽은 바 있다(도시키, 2014: 24). 한편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라는 문장에 반대하는 비율이 2009년 이래 낮아지고 있다(2009년: 78.3%, 2014년: 65%, 2021년: 31.3%). 상세 정보는 “2003-2021 KGSS 누적 코드북” 참조(<https://kgss.skku.edu/>).

상적 분배 기준으로 답한 사람은 30%가 되지 않는다. '노력'을 현실의 분배 기준으로 답한 사람은 30% 정도 되는 데에 비해 이상적 분배 기준으로 답한 사람은 절반 가까이 된다. 요컨대 이상적으로는 노력에 따른 분배가 옳으나 현실에서는 성과 기준이 통용된다는 것이 일반 인식이다. 노력에 따라 자원이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현실에서는 성과에 따라 자원이 분배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⁴⁹⁾

3 패자의 우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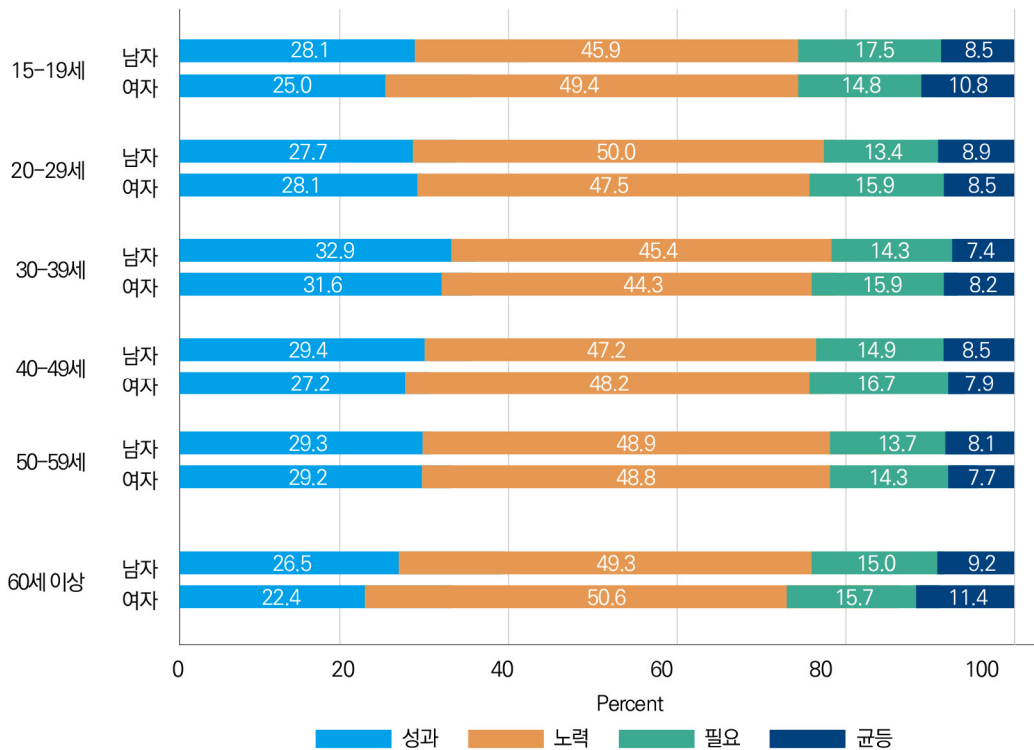
노력이 이상적이라는 응답은 '노력으로 평가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결과가 흑여 좋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라든지, 절대 점수가 낮더라도 '지난번 보다는 잘했다'라는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보통은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만 때로는 운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의도와 과정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성과와 노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치관이 더 반영되어 있는 이상적 자원분배기준 인식에 초점을 맞춰 자원분배기준 인식과 몇 가지 변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 노력주의자 가설 1: 구조적 제약에 대한 문제제기

먼저 남녀 차이다. 기본적으로 남녀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앞서 여성이 약간이나마 '성과'를 덜 강조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여성이 구조적 불평등 조건에 처해 있는 집단임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나이 차이다. 같은 식으로 나이 변수와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젊은 집단이 노력-성과의 괴리를 느낄 수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감각을 청년이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노오력'이라는 표현(조한혜정 외, 2016)이 이를 반영한다. 다른 한편으로 특히 여성의 경우 과거로 갈수록 구조적·사회적 제약(일례로 교육 기회의 제약)이 강해 고령 집단에서 노력과 성과의 괴리를 더욱 크게 체감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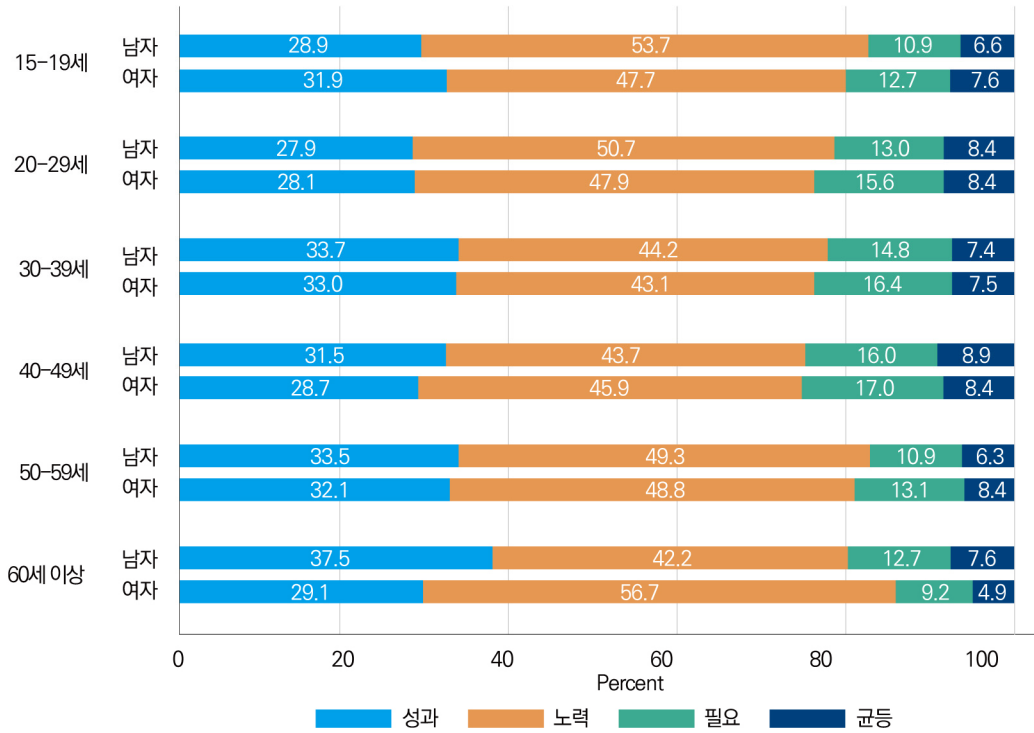
49) 이상 인식에서 남녀 차이가 다소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상-현실 간격은 상대적으로 여성에게서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2]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연령대별, 성별)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결과([그림 8-2])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크지는 않다. 성과와 노력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능력을 강조하는 연령대는 20-50대로 주된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이들이다. 이들에게는 일정한 사회생활 경험이 이상적 분배 기준의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성과'를 가장 강조하는 집단은 30대 남성이고 가장 적게 강조하는 집단은 10대 후반 여성과 60세 이상 여성이다. 남녀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연령대는 20대와 50대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 연령대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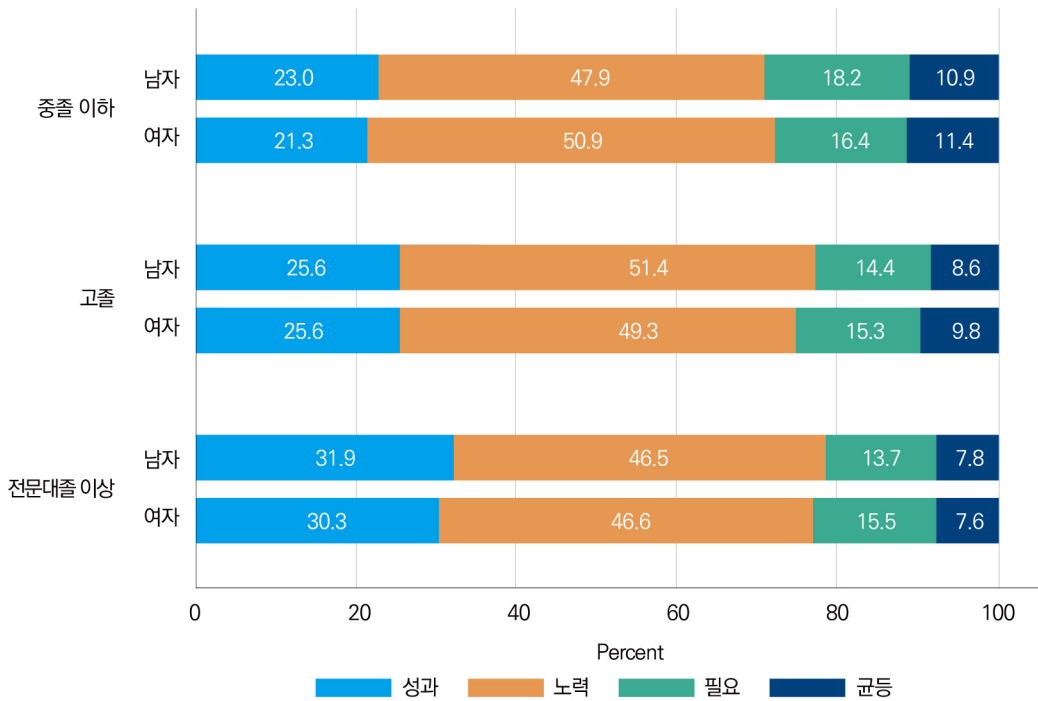
[그림 8-3] 대출자의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연령대별, 성별)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그림 8-3]은 상대적으로 ‘성과’를 이룬 집단으로 볼 수 있는 대출자에 한정된 그림이다. 전반적으로, 특히 50대 이상에서 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대출자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에 더 높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1970년 대생인 40대에서 능력 강조 경향이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들 중 25%는 ‘필요’와 ‘균등’ 기준을 지지한다. 이에 비해 30대 이하에서는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나. 노력주의자 가설 2: 성과를 올리지 못한 집단의 변명

구조적 불평등 조건에 처해 있는 집단으로 ‘노력주의자’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경쟁 체제의 경계나 그 밖에서 이른바 회피적 의미로 노력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애당초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의 변명이라고 더 강하게 말할 수도 있다. 이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올 수 있는 입장으로 최근 들어 ‘능력(에 따른 차별)’을 강조하는 이들이 은연중에 가정(오찬호, 2013)하고 있는 전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설을 염두에 두고 교육 지위와 소득 지위, 직업 지위에 따른 인식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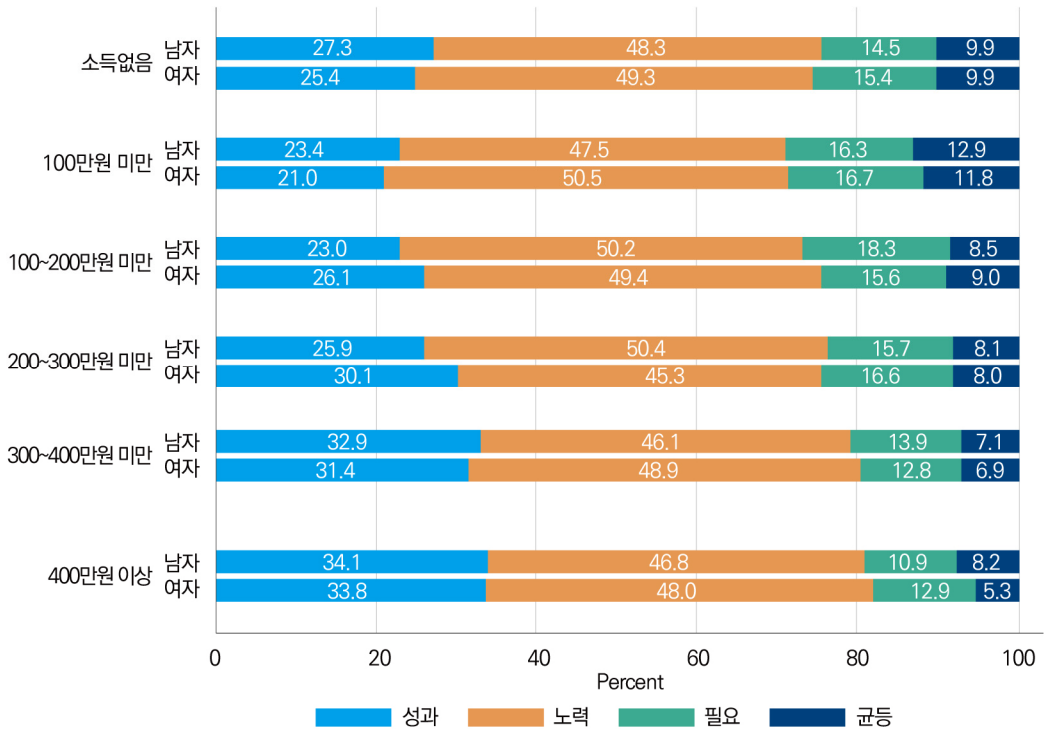


[그림 8-4]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교육수준별, 성별)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먼저 교육 지위에 따른 인식 차이는 [그림 8-4]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과’와 ‘노력’을 합한 비중이 크다. 특히 ‘성과’ 비중이 커진다. 남녀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고졸자를 제외한 두 집단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성과’를 강조하는 비중이 약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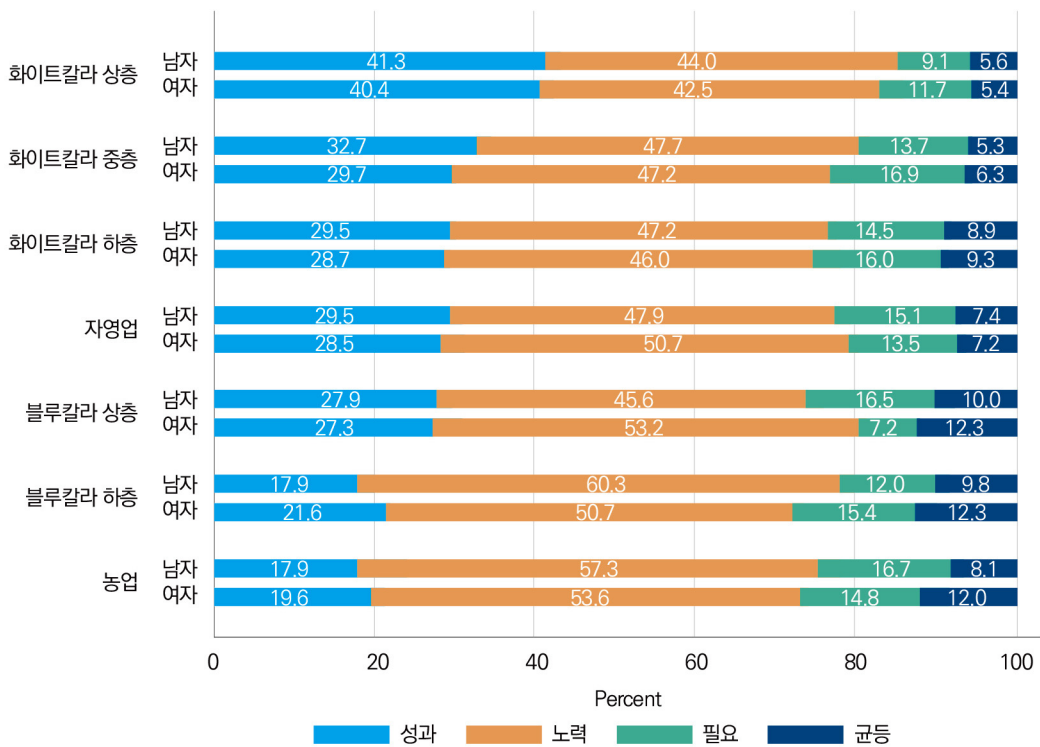
다음은 소득에 따른 차이다([그림 8-5]).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능력' 강조 경향이 나타나고, 특히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 흥미로운 것은 중간 수준 소득 구간(200~300만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같은 수준의 소득 구간일 때에 여성이 남성보다 '성과'를 더욱 의식하고 있음을,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분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8-5]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소득수준별, 성별)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다음은 직업 지위에 따른 차이다(그림 8-6). 직종과 고용상태 변수를 조합해 직업 지위를 7개 범주로 구분했다. 1) 화이트칼라 상층(전문직과 관리직 임금노동), 2) 화이트칼라 중층(사무직 임금노동), 3) 화이트칼라 하층(판매직과 서비스직 임금노동), 4) 자영업자, 5) 블루칼라 상층(숙련직 임금노동), 6) 블루칼라 하층(비숙련직 임금노동), 7) 농업(농림수산업)이다.⁵⁰⁾ 결과를 보면, 화이트칼라층에서는 성과주의 경향이 많으며 특히 상층에서 그러하다. 블루칼라층은 상대적으로 노력에 대한 인식에 더 치우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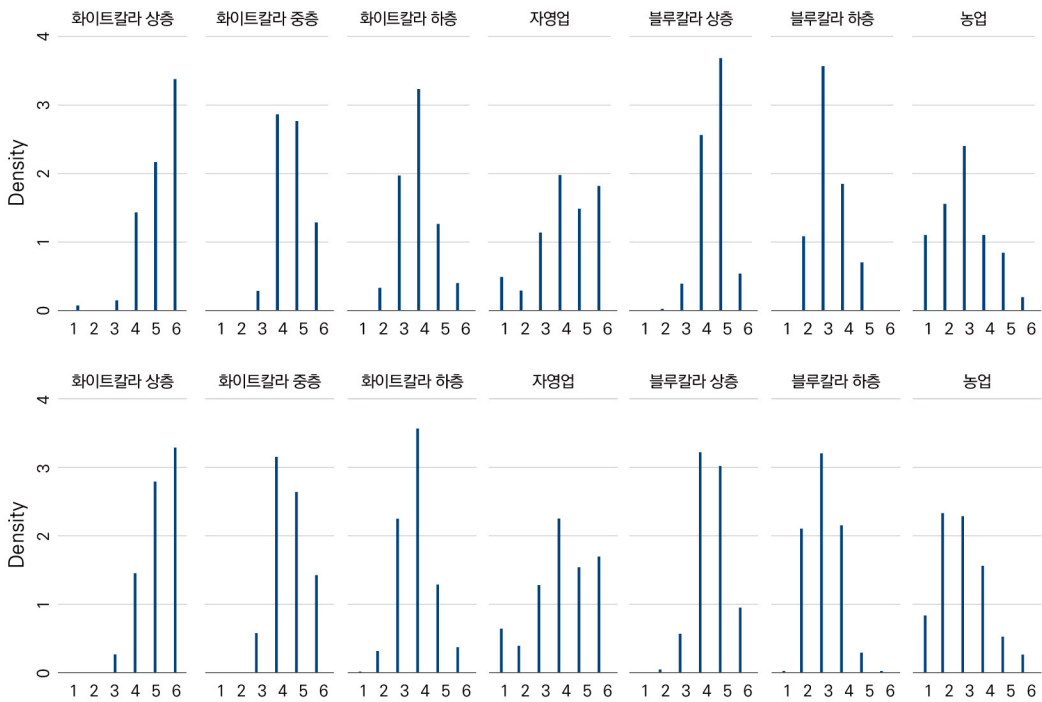


[그림 8-6] 자원분배기준 인식: 이상(직업지위별, 성별)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50) 여기서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따른 것이다. '고용상태'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구분된다. 직종이 '농업'인 경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별하지 않았다. 직업 지위를 '상', '중', '하'로 구분한 것은 '직종'이 교육수준과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계적으로 위치할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직업 지위 체계상에서 각 직종의 위치는 윤희준·김월화(2006)의 연구를 참조.

[그림 8-7]은 같은 직종 내에서 ‘성과’를 택한 이들과 ‘노력’을 택한 이들의 소득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성과주의자가 꼭 소득이 높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 수준이 높은 곳에서 ‘노력’을, 경쟁 수준이 낮은 곳에서 ‘성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경쟁이 낮은 곳에서 성과를 말한다는 것은 그 경쟁의 성격이 전적으로 시험을 매개로 하는 ‘시험주의’(양승훈, 2021)에 가깝다는 것을, 그에 따른 성과라는 것이 일종의 “지대”(박권일, 2021: 124)와 유사하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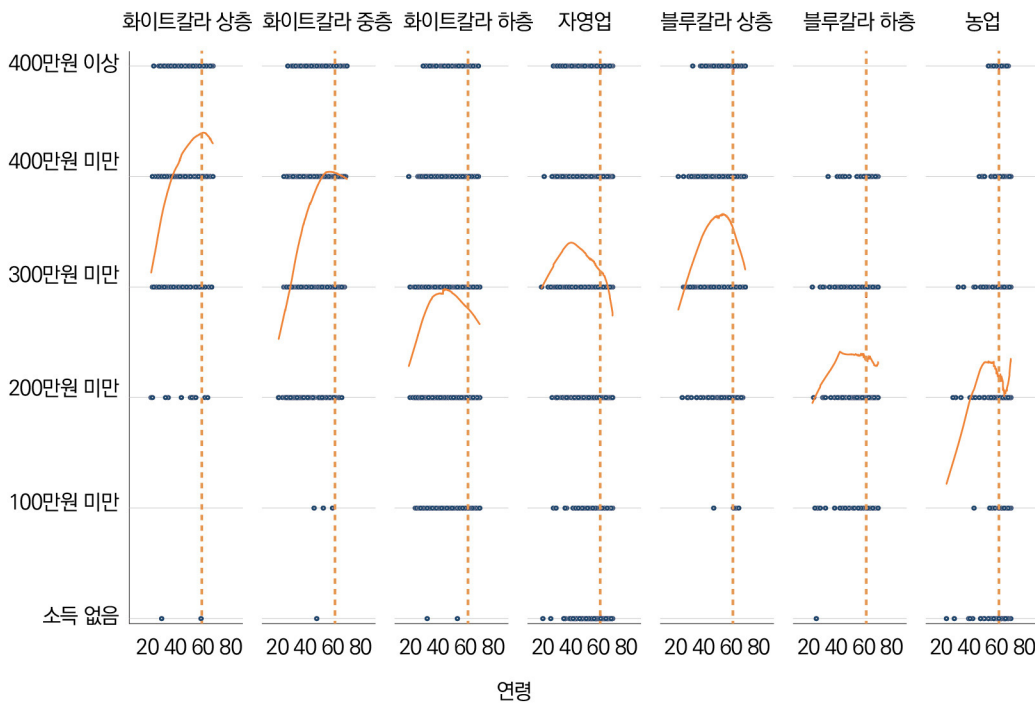


[그림 8-7] 직업지위별 소득 분포

주: 위쪽은 이상적 자원분배기준으로 ‘성과’를 꼽은 집단이고, 아래쪽은 이상적 자원분배기준으로 ‘노력’을 꼽은 집단임.

주: 1. “소득없음”, 2. “100만원 미만”, 3.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6. “400만원 이상”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그림 8-8] 연령과 소득 수준의 관계(직업지위별)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그림 8-8]은 직업 지위별로 연령과 소득수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화이트칼라 상층의 특수성이 나타난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월수입의 최저선이 올라간다. 그에 반해 자영업은 물론이고 화이트칼라 하층에서도 월수입 최저선은 크게 변화가 없다. 화이트칼라 상층에서 연공서열 경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화이트칼라 상층에서는 60대까지 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다른 직업 지위에서는 소득 증가세가 그만큼 가파르지 않고 증가세가 꺾이는 시점도 이른다.

사람들의 수입이 정말 실력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연공제는 나이를 먹으면 실력도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연령과 소득이 비례한다고 해서 소득 증가가 성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령과 실력을 비례관계로 보아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실력이 일관되게 늘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직업 지위별로 경쟁 환경이 어떤지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관리직이나 전문직에서 사무직이나 블루칼라로 ‘추락’

하는 경우는 드물다. 화이트칼라 상층 지위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 결과에서 도출해 볼 수 있는 함의 한 가지는 ‘성과’라는 것이 일정 수준에서만 지위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위가 높은 이들이 ‘성과’를 강조하는 것을 자신의 지위를 일정 수준에서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들의 지위가 성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8-2] 남성 유직자 전체

단위: %

성과주의		본인			Total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아버지	중졸 이하	1.9	19.4	17.0	38.3
	고졸	0.1	3.7	41.1	44.9
	전문대졸 이상	0.1	0.3	16.5	16.8
Total		2.0	23.4	74.6	100.0 (1,275)

노력주의		본인			Total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아버지	중졸 이하	3.6	23.2	17.5	44.3
	고졸	0.2	3.4	39.6	43.2
	전문대졸 이상	-	0.5	12.0	12.5
Total		3.7	27.1	69.1	100.0 (1,960)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주: 괄호 안은 사례 수

한국사회에서 학력을 쌓는다고나 좋은 직종에 종사한다고 하는 경로는 ‘노력하면 되는’ 길로 여겨져 왔다. 이런 점에서 화이트칼라 상층 대부분이 성과주의를 표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아버지와 본인 모두 학력이 높은 사람 중에 노력을 택한 이도 많고 필요를 꼽은 이도 상당 비중으로 있다. 이상적 자원 분배기준 문항에서 성과주의를 표방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아버지 교육 수준이 높다 ([표 8-2]). 그들의 고학력은 아버지의 고학력을 이어받은 것이다. 교육사회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들도 다른 자산의 ‘상속자’인 것이다.

제3절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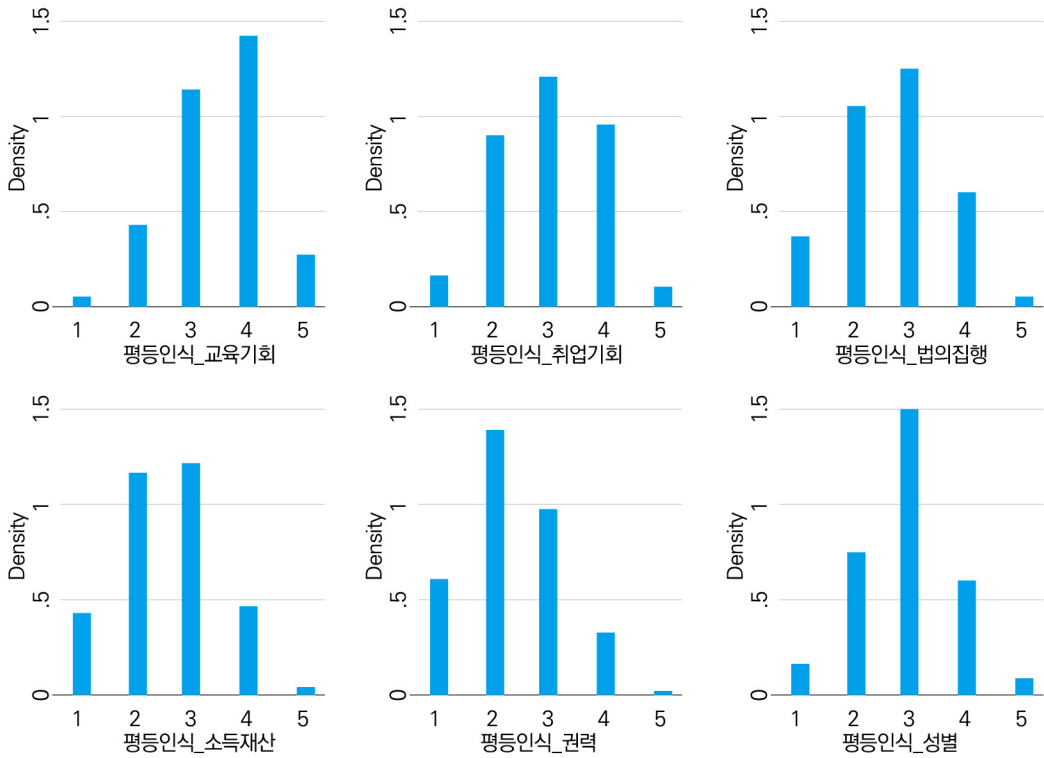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측정

이 절에서는 불평등 인식과 능력주의 인식의 관계를 살펴본다. 특히 둘의 관계가 연령 대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많은 선행 연구가 불평등 개념을 소득 불평등으로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가 보여주듯이(Kim et al., 2021), 불평등 개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불평등 인식 척도를 구성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의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개인의 평등 인식을 6가지 질문으로 측정한다. 응답자들은 총 6가지 측면(교육기회, 취업기회, 법의 집행, 소득과 재산, 권력, 그리고 성별)에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평등한지를 5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평가하였다(1 매우 불평등-5 매우 평등).

[그림 8-9]는 한국인의 행복조사에 포함된 여섯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등인식을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의 기회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여섯 항목 중 유일하게 4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최빈수를 나타냈으며, 50% 이상의 응답자가 교육의 기회가 ‘평등’ 또는 ‘매우 평등’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부정적인 응답은 약 15% 정도에 불과하였다. 취업의 기회에 대한 평등인식 또한 교육의 기회에 이어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중립적 응답(3 “보통”)이 약 36%로 최빈수 값을 기록했지만, 부정적 응답과 긍정적 응답, 중립적 응답 모두 약 1/3씩 고르게 분포해 있다.



[그림 8-9] 교육기회, 취업기회, 법의 집행, 소득 및 재산, 권력, 성별에 대한 평등인식

주: 1 “매우 불평등”, 2 “불평등”, 3 “보통”, 4 “평등”, 5 “매우 평등”

자료: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

이와는 반대로 가장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진 항목은 권력에 대한 평등인식이였다. ‘매우 불평등’과 ‘불평등’이 60%에 달하는 반면, 긍정적 응답을 한 사람은 10%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소득 및 재산과 법의 집행에 대한 평등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 48%의 응답자가 한국 사회의 소득 및 재산의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였고, 약 15%만이 평등하다는 긍정적 대답을 하였다. 법의 집행에 대한 인식에서는 약 42%의 부정적 응답과 약 19%의 긍정적 응답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대한 평등의식은 여섯 가지 항목 중 중립적 의견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49%) 성별에 대한 평등이 ‘보통’이라고 생각했으며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각 29%와 21%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였다. 특히 ‘매우 불평등’과 ‘매우 평등’의 의견은 각각 5%와 2%로 절대 다수가 성별 평등 인식에 있어 중립 및

온건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등인식이 대체적으로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운 응답 분포율을 보이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 항목에 따른 평등인식이 유의미하게 다르다. 이는 각 항목이 한국 사회의 평등 또는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틀 아래 서로 상관성이 있는 개념을 내포하면서 동시에 불평등의 다양한 면들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즉 청년들의 능력주의 인식이 불평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각 항목이 불평등의 다른 면들을 살펴보는 것을 감안할 때, 이 6가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표 8-3]을 보면, 성불평등 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 인식의 척도를 계산함에 있어 성평등에 관한 변수는 제외하였다.

[표 8-3] 평등인식 항목 간 상관관계

	교육기회	취업기회	법의 집행	소득&재산	권력	성별
교육기회	1					
취업기회	0.5434*	1				
법의집행	0.3454*	0.4720*	1			
소득&재산	0.2990*	0.4078*	0.5153*	1		
권력	0.1783*	0.3481*	0.4995*	0.5917*	1	
성별	-0.2772*	-0.2851*	-0.2868*	-0.3246*	-0.3095*	1

* p<0.05

먼저 각 변수의 항목들을 재배열하여 불평등 인식 변수로 만들어 주었다. 요인 분석에 따르면, 총 다섯 가지 변수의 첫 번째 공통 요인의 고유값이 2.695로 유일하게 1보다 크며, 두번째 요인은 1보다 작은 0.988의 고유값을 가진다. 이는 총 5개의 불평등 변수들이 하나의 불평등 요인을 공통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결과다. 총 5개 변수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7849로, 측정된 불평등 척도의 신뢰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총 5개의 변수의 공통요인을 종속변수로 채택했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개인능력주의에 대한 인식을 채택하였다. 개인능력주의는 응답자

들이 “남보다 뒤쳐진 사람은 제도보다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는 질문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로 측정하였다. 앞서 설명했듯이, 경제적 불행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우리 사회에 대한 불평등 인식이 저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응답자들에게는 총 5개의 응답이 주어졌다(1 전혀 동의 안함, 2 동의 안함, 3 보통, 4 동의함, 5 매우 동의함). 개인능력주의 질문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평균값은 3.21이며, 중위수는 4로 한국사회가 개인의 경제적 불행의 원인을 제도적·구조적 불평등보다는 개인의 책임에 두는 경향이 다소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차이는 t-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남 3.22, 여 3.21). 하지만 수도권(서울과 경기도)과 지방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수도권 3.27, 지방 3.28). 따라서 회귀분석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 다른 독립변수는 나이다. 행복조사 1차 자료에서 나이는 15세에서 107세까지의 값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가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나이 변수가 교육수준 변수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연령대 변수를 채택하였다. 연령대 변수는 나이 변수를 10대에서 시작하여 60대 이상 범주로 총 6개의 연령대로 나눈 순서형 변수이다. 청년의 범위는 20대 혹은 20에서 30대를 포함한 범주로 정할 수 있겠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가구소득, 응답자의 최종학력, 그리고 고용 상태 변수를 채택하였다. 여성을 더미변수로 측정해 여성의 불평등 인식이 남성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가구 소득은 지난 1년의 세전 월평균 총소득을 측정한 것으로 ‘소득 없음’에서 시작해 100만원을 단위로 총 12개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총 7개의 범주형 변수로, 1은 초등학교, 2는 중학교, 3은 고등학교, 4는 대학교(4년제 미만), 5는 대학교(4년제 이상), 6은 대학원 석사과정, 그리고 7은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측정되었다. 고용 상태는 노동지위 변수를 사용해, 임금 근로자를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개인능력주의가 연령대별로 어떻게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가 불평등 인식의 척도로서 연속변수이므로 선형회귀분석 모델을 채택하였고, 좀더 엄격한 검정을 위해 강건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전체 17,357명의 응답자들이 17개의 지역으로 배타적으로 군집되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통계적 검증을 위해 다층회귀분석모델 또한 채택하였다.

2 분석 결과

[표 8-4]는 선형회귀분석과 다층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모델 (1)과 (2)는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적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모델 (3)과 (4)는 17개 지역을 고려한 다층회귀분석의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첫 번째 모델은 연령대와의 상호작용항이 없는 기초모델이다. 여기에서 개인능력주의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인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인식하는 데 있어 둔감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층회귀분석을 적용한 세 번째 모델에서도 개인능력주의 변수는 불평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여준다.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뒤처지는 것은 개인 책임이다’라는 인식이 클수록 불평등 인식 자체가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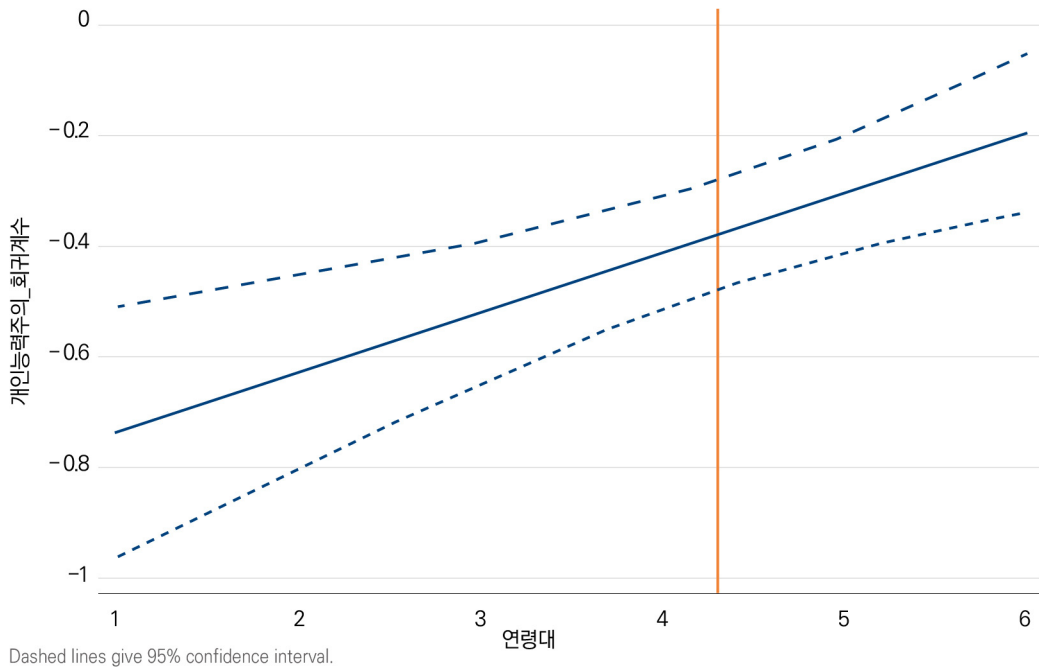
[표 8-4] 개인능력주의, 청년, 그리고 불평등 인식: 회귀분석 결과

	불평등인식 (1)	불평등인식 (2)	불평등인식 (3)	불평등인식 (4)
여성	0.002 (0.010)	0.002 (0.010)	0.001 (0.010)	0.001 (0.010)
가계소득	-0.014*** (0.003)	-0.014*** (0.003)	-0.017*** (0.003)	-0.017*** (0.003)
최종학력	-0.021*** (0.006)	-0.021*** (0.006)	-0.019*** (0.005)	-0.019*** (0.005)
임금노동자	0.007 (0.011)	0.007 (0.011)	0.005 (0.011)	0.006 (0.011)
개인능력주의	-0.044*** (0.005)	-0.094*** (0.016)	-0.038*** (0.005)	-0.085*** (0.014)
연령대(1-6)	0.003 (0.004)	-0.034*** (0.012)	0.001 (0.004)	-0.034*** (0.011)
개인능력주의 × 연령대		0.012*** (0.003)		0.011*** (0.003)
상수	3.482*** (0.037)	3.644*** (0.062)	3.465*** (0.056)	3.617*** (0.071)
표본수	17,134	17,134	17,134	17,134
(수정된) 결정계수	0.0103	0.0110	0.0101	0.0109

주: 로버스트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표시; *** p<0.01, ** p<0.05, * p<0.1

두 번째 모델은 개인능력주의의 불평등 인식에 대한 효과가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해 개인능력주의와 연령대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것이다. 상호작용이 없는 모델에서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계수를 가지지 않지만, 상호작용항이 포함되면 연령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짐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개인능력주의 변수 회귀계수의 음수가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항이 적용된 회귀분석에서 개인능력주의 변수의 회귀 계수는 상호작용항이 0의 값을 가질때, 즉 연령이 0일 때의 불평등 인식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연령대가 0의 값을 가지지 않으므로 개인능력주의 변수의 회귀 값은 사실 가상의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호작용항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능력주의의 불평등 인식에 대한 음의 효과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상쇄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능력주의가 불평등 인식에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은 젊은 연령대에 좀 더 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동일한 패턴이 다층회귀모형을 채택한 네 번째 모델에서도 확인된다.

최근의 많은 문헌이 보여주듯이 다중경쟁 상호작용모델(multiplicative interaction model)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상호작용의 평균적인 효과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호작용하는 변수의 어떤 값에서 종속변수의 계수 값이 변화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Brambor et al., 2006; Braumoeller, 2004; Solt et al., 2014). 다층회귀분석을 적용한 네 번째 모델을 바탕으로 편도함수를 개인능력주의에 적용하면, 개인능력주의의 회귀계수가 연령대의 값의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림 8-10] 연령대에 따른 개인능력주의의 불평등 인식에 대한 효과

[그림 8-10]은 그 결과값을 95%의 신뢰구간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전 연령층에 있어서 개인능력주의는 불평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가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이러한 음의 상관계수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개인능력주의가 불평등 인식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표 8-5]는 앞서 이루어진 회귀분석 모델을 20대와 30대로 한정해 다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적용한 OLS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첫번째 모델은 20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두 번째 모델은 30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0대의 개인능력주의 변수의 회귀변수는 -0.067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값이다. 30대만을 대상으로한 두 번째 모델에서 개인능력주의의 회귀계수는 -0.076으로,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응답자들이 20대에서 30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개인능력주의 변수의 회귀계수 크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0.01로 그렇게 크지 않다. 더 정확하게 개인능력주의의 효과 차이를 살피고자 세 번째 모델에서는 30대 더미변수를 포함하였고, 네 번째 모델에서는 30대 더미변수와 개인능력주의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였다. 네 번째 모델의

개인능력주의 회귀변수는 20대의 효과를 나타낸다(30대 변수가 0일 때). 20대의 개인능력주의 변수는 -0.0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하지만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다시 말해 개인능력주의의 불평등 인식에 대한 효과에 있어 20대와 30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 8-5] 개인능력주의, 청년, 그리고 불평등 인식: 20대와 30대 회귀분석 결과

	불평등인식 20대 (1)	불평등인식 30대 (2)	불평등인식 20-30대 (3)	불평등인식 20-30대 (4)
여성	0.013 (0.028)	0.005 (0.028)	0.005 (0.020)	0.005 (0.020)
가계소득	-0.020*** (0.007)	-0.011 (0.007)	-0.016*** (0.005)	-0.016*** (0.005)
최종학력	-0.026 (0.022)	-0.029 (0.020)	-0.023 (0.015)	-0.023 (0.015)
임금노동자	-0.084*** (0.029)	-0.016 (0.034)	-0.053** (0.021)	-0.053** (0.021)
개인능력주의	-0.067*** (0.015)	-0.076*** (0.015)	-0.072*** (0.011)	-0.068*** (0.015)
30대 청년			0.032 (0.021)	0.057 (0.073)
개인능력주의 × 30대				-0.008 (0.021)
상수	3.690*** (0.114)	3.666*** (0.106)	3.652*** (0.078)	3.640*** (0.084)
표본수	2,206	2,315	4,521	4,521
결정계수	0.022	0.016	0.019	0.019

주: 로버스트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표시; *** p<0.01, ** p<0.05, * p<0.1

제4절

선발 시스템의 빛과 그늘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한국인은 능력주의에 대해 양가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현실은 성과주의, 이상은 노력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인 전체로 보면 이상으로는 노력주의가 다수파인데 현실의 이미지로는 성과주의가 다수파이다. ‘현실은 성과주의, 이상은 노력주의’라는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성과 지향의 표명이 오늘날 한국인이 떠올리는 ‘능력주의’의 모습이다.

이것은 ‘노력하면 어떻게든 된다’는 신앙이 백 퍼센트 믿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주의 신앙이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노력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의혹을 품고 있으면서도 노력하면 어떻게든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학교나 회사의 선발 레이스에 자신과 자녀를 참가시켜온 것이 전후 한국인의 모습이다.

이러한 양가적 모습은 시험주의의 빛과 그늘과도 관계 있다. 형식적 기회를 확장할 수 있었던 과거에는 능력주의가 정치 참여나 효능감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표준화된 경쟁에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한국사회는 사람들의 사회이동의 열망을 키우고 사회적으로 역동을 창출해 왔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중간 수준의 일반적인 숙련을 갖춘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표준화된 방식의 선발 체제가 일정한 순기능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능력주의는 곧 시험주의(박권일, 2021)가 되었다. 형식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은 넓어졌으나 경쟁 조건이 평등해진 것은 아니다.

최근에 능력주의라는 말이 비판을 받는 것은 능력이 근대 초기에서와 같은 의미를 더 이상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가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가운데 단일한 경쟁 체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과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긴 실질적 기회 격차 증대 경향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에 따른 자원 분

배 논리를 맥락 없이 강조하는 것은 결과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동시에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명분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동일 가치 체계로 편입시켜 사적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장 제3절의 분석 결과는 이 점을 일정 부분 보여준다.

제9장

청년의 행복감

이상직·김동규·김미선

- 제1절 가족배경과 삶의 태도
- 제2절 한국인의 행복조사
- 제3절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행복감 차이
- 제4절 불평등 인식과 여타 요인들
- 제5절 부모 학력의 또 다른 의미

제 1절 가족배경과 삶의 태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장에서는 청년의 행복감,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부모 학력의 평균값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 통용되는 수저론이나 위대한 개츠비 커브의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은 단순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를 이어 넘어가는 것 이상의 동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행복감이 높고, 자신들이 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또한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대두되는 소위 ‘수저론’은 한국사회의 사회이동에 대한 청년층의 암울한 사회 인식을 보여준다. 수저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흙수저나 금수저로 대변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저변에는 부모의 부유한 배경이 없는 인생에 성공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이동에 대한 청년의 부정적인 인식은 최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개츠비’ 커브의 주장과 많이 닮았다. Corak(2013)에 따르면, 한 시점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은 후대의 사회 이동성을 저해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회경제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해 기회의 불균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Andrews & Leigh, 2009; Bloome, 2015; Durlauf & Seshadri, 2018). 소득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년의 사회적 이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의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사회 전체의 소득 분포와 세대 간 이동을 연구하는 것으로 거시적인 분석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다양한 불평등 지수와 세대 간 소득 및 학력 이동성 지수의 관계를 보는 거시적 연구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들의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삶에 대한 자세와 만족도에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김석호 외, 2017; 김지경, 2018; 이순미,

2018; 김석호 외, 2019; 변금선·김기현, 2019; 박민진·민보경·이민주, 2021; 박해남·박미희, 2021; 이민주·박민진, 2022; 정우연·조하영·김석호, 2022; 정윤진·김현정, 2022). 이 장에서 우리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실시한 2021년도 한국인의 행복조사 1차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삶에 대한 자세와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한국인의 행복조사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측정

가. 부모의 학력

부모의 학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한 단면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주요 변수일 수 있다. 첫째로, 한국은 소위 학력사회로, 사회적 지위를 달성함에 있어 학력이 가장 중요시된다. 학력이 높다고 해서 소득이 꼭 높은 것은 아니지만 교육은 사회이동의 고리로 여전히 작동한다(여유진, 2008). 둘째로, 부모의 학력은 많은 학자가 사회이동의 동력의 하나로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타고난 학습능력을 측정하는 좋은 변수가 된다. 물론 타고난 학습능력이 개인의 특성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Brezis & Hellier, 2018), 학생들의 학업능력은 부모의 학업능력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Eccles, 2005). 따라서 부모의 학력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배경을 넘어 간접적인 요소까지를 포함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2021년도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부모 각자의 최종학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응답자들은 총 7가지의 응답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년제 미만 대학, 4년제 이상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로 부모의 최종학력을 기록하였다. 전체 응답자들 17,357명을 대상으로 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 간의 상관계수는 0.91로 양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강함을 알 수 있다. 청년의 범위를 20대에서 30대까지로 한정해 볼 때, 부와 모의 최종학력 변수들의 상관계수는 0.74로 여전히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 상관계수가 청년 샘플에서 낮아진 이유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부모 교육수준의 다양성이 증가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표 9-1] 부모의 최종학력: 응답자 20-39세

	최종학력(부)	%	최종학력(모)	%
초등학교	167	3.78	193	4.36
중학교	260	5.88	313	7.08
고등학교	2,567	58.08	2,894	65.42
대학교(4년제 미만)	570	12.90	498	11.26
대학교(4년제 이상)	834	18.87	516	11.66
석사/박사과정	22	0.50	10	0.23
응답자 수	4,420	100.00	4,424	100.00

청년층의 부모 최종학력의 분포는 [표 9-1]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부모 최종학력의 최빈 값은 모두 고등학교로 아버지의 58%와 어머니의 65%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박사과정의 빈도수가 청년층을 통틀어 3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부모의 학력변수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합해 총 6가지의 응답지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한 부모 최종학력의 양의 상관관계가 상당함을 고려해, 부모 최종학력 값들의 평균을 구해 부모의 학력변수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최종학력 변수는 1에서 6까지 0.5씩 증가하는 11개의 값을 가진다.

나. 행복감, 삶의 의미 인식, 삶에 대한 만족도

부모의 학력이 자녀들의 미래 사회이동을 이끌 수 있는 삶의 자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종속변수들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20대와 30대의 청년들에게 있어 어떠한 삶의 자세나 생각들이 이후의 사회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청년들의 삶에 대한 자세나 정서로 이후의 삶의 성공을 판단하기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할뿐더러, 삶에 대한 태도나 행복감 자체도 사회적 성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미래에 성공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가정한다. 물론 행복과 성공의 관계를 파악하는 어려운 문제이지만(Lyubomirsky et al., 2005),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 경우 청년시기에 행복한 사람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첫 번째 종속변수는 전반적인 행복감이다. 행

복조사는 응답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물었다. 0부터 10까지의 응답지가 주어졌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행복감을 나타낸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다. 행복조사는 “전반적으로 볼 때,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라는 문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 변수 또한 0부터 10까지의 응답지가 있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삶의 의지를 나타낸다.

[표 9-2] 전반적인 행복감과 삶의 의미 빈도 분포

	전반적 행복감	%	삶의 의미	%
0	3	0.07	3	0.07
1	3	0.07	7	0.15
2	6	0.13	24	0.53
3	55	1.22	97	2.15
4	112	2.48	181	4.00
5	544	12.03	562	12.43
6	902	19.95	952	21.06
7	1,532	33.89	1,476	32.65
8	1,144	25.30	979	21.65
9	190	4.20	213	4.71
10	30	0.66	27	0.60
응답자 수	4,521	100.00	4,521	100.00

20-30대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청년 개념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행복감은 평균 6.78이며, 최빈값은 7이다. 한국 청년의 행복감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행복감을 떨어지는 패턴을 보인다(40대 6.70, 50대 6.60, 그리고 60세 이상이 6.29). 20대(평균 6.78)와 30대(평균 6.78) 사이의 행복감 차이는 없어 보인다($t = 0.06$, $p = 0.953$). 여성의 행복감(6.84)이 남성(6.92)의 행복감보다 낮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t = 3.1178$, $p < 0.002$).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사는 청년의 행복감(6.66)이 지방 청년의 행복감(6.91)보다 약 0.25 포인트 정도 낮으며, 이 또한 t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 = 6.6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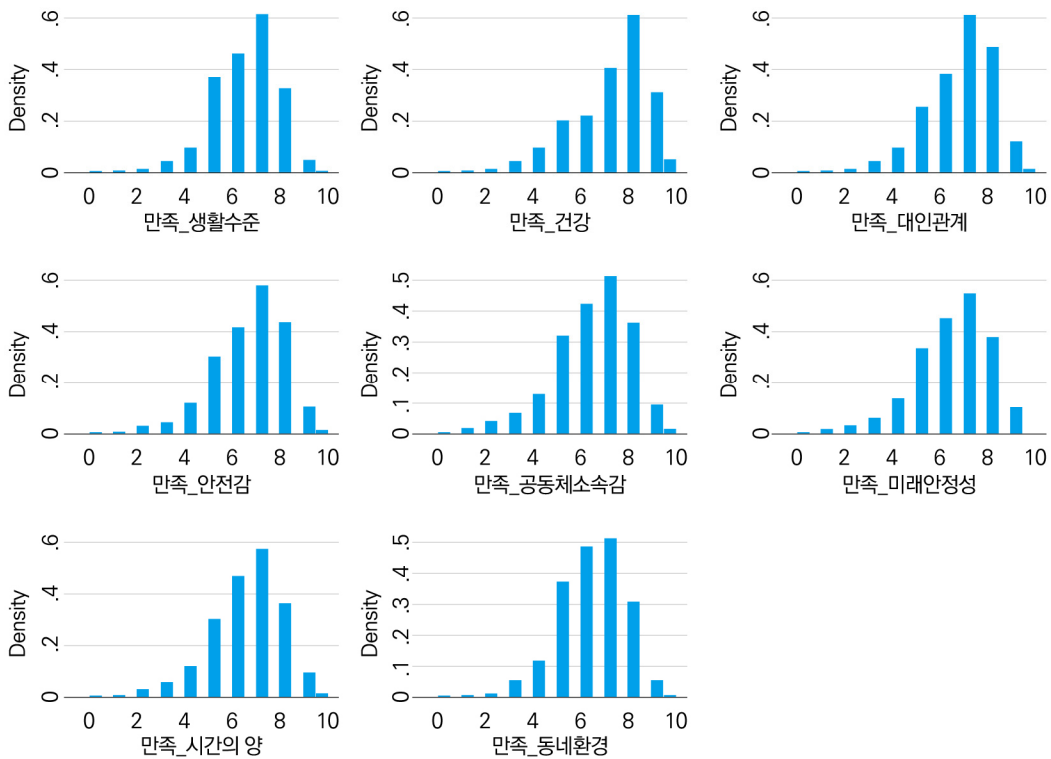
$p < 0.000$). 청년의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7.47)였으며, 부산광역시(7.33), 대전광역시(7.10), 그리고 충청북도(7.03)가 뒤를 이었다. 전체 청년 샘플 중에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약 62.1%를 차지하며, 자영업자가 5.7%, 무급가족종사가 0.9%, 무응답자가 31.3%를 차지한다. 임금근로자의 행복감(6.81)이 그렇지 않은 경우(자영업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6.72)보다 약 0.09 포인트 높았다.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 변수의 빈도 분포는 앞의 [표 9-2]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 행복감 변수와 동일하게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0에서 10까지의 11가지 값으로 답하였다. 20대에서 30대 사이 청년의 평균값은 6.62로 행복감과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높다. 행복감과 삶의 의미 변수의 상관관계수는 0.67로 양의 상관관계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행복감과 동일하게 본 연구는 자신들이 하는 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청년들이 그 삶에서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행복감과 다르게, 삶의 의미 인식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었다(남 = 6.61 & 여 = 6.63).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6.49)보다는 지방에 사는 청년들(6.76)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d = 0.267, t = 6.470, p < 0.000$). 행복감과 동일하게 임금노동을 하는 청년들이 삶에 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20대(6.62)가 30대보다 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는 않았다(6.61).

[표 9-3] 삶의 주변 환경 만족도 응답 문항과 평균값

주변환경	질문지	응답자수	평균값
생활수준	자신의 삶에 있어 생활수준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4,521	6.33
건강	자신의 삶에 있어 건강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4,521	7.14
대인관계	자신의 삶에 있어 대인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4,521	6.66
안전감	자신의 삶에 있어 안전감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4,521	6.49
공동체 소속감	자신의 삶에 있어 공동체 소속감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4,521	6.26
미래안정성	자신의 삶에 있어 미래의 안전성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4,521	6.31
자유시간	자신의 삶에 있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4,521	6.35
동네환경	자신의 삶에 있어 동네 환경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4,521	6.23

세 번째 종속변수로는 삶에 대한 만족도 변수를 채택하였다.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주변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총 8가지의 질문을 받았다. [표 9-3]은 삶의 주변 환경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 문항 8개와 응답 평균값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각 변수의 히스토그램은 [그림 9-1]에 표시되었다.



[그림 9-1] 삶의 주변 환경 8가지에 대한 만족도: 히스토그램

행복감 및 삶의 의미 변수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건강(7.14)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대인관계(6.66), 안전감(6.49), 생활수준(6.33) 만족도가 뒤를 잇고 있다. 전체 평균값은 6.40으로 한국 청년들의 삶에 대한 주변 환경 만족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행복감과 마찬가지로, 8가지 항목에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값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전감에 있어 청년의 평균값은 6.49인 것에 반해, 40대는 6.33, 50대는 6.25, 그리고 60

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5.98의 평균값을 가진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총 8개의 변수를 채택하기보다 요인 분석으로 추출한 만족도 변수를 종속변수로 삼았다.

[표 9-4]는 요인 회전 이후의 요인부하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총 8개의 요인 중에 1 이상의 고유값(eigenvalue)을 가지는 요인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8개의 만족도 변수들이 하나의 잠재변수를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표 9-4]에 요인회전으로 표시된 요인부하값을 보면, 8개 변수 전체가 최소 0.6 이상이므로 모든 요인이 하나의 잠재요인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4] 삶의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요인부하값

주변환경	요인 1	독자성
생활수준	0.6778	0.5406
건강	0.6891	0.5251
대인관계	0.7948	0.3683
안전감	0.8115	0.3414
공동체 소속감	0.7780	0.3947
미래안정성	0.8064	0.3498
자유시간	0.7605	0.4217
동네환경	0.6936	0.5190

삶의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8개 변수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측정하는 크론바흐 알파값(Cronbach's alpha)은 0.8899로 상당히 높다. 삶의 만족도 변수는 0.875에서 10까지의 값을 가지며 평균값은 6.472이다. 남녀의 삶의 만족도 차이는 없어 보인다(남=6.492, 여=6.451). 또한 수도권(6.45)과 비수도권 지역(6.50)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d = 0.046$, $t = 1.3421$, $p < 0.1796$). 하지만 임금노동자의 경우(6.52)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6.40)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3.383$, $p < 0.0007$). 마지막으로 20대 청년(6.42)의 삶의 만족도가 30대 청년(6.5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0.11 포인트 차이에 대한 t-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청년의 전반적인 행복감,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만족도의 세 가지 종속변수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성공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을 측정하고자 했다. 위

대한 개츠비 곡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 부분에 관해 논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청년의 사회적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청년이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여길수록, 그리고 삶의 전반에 만족할수록,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용이할 것이라 가정한다. 물론 이 세 종속변수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한 가지 종속변수만 채택하는 것이 분석상 용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 가지 종속변수가 측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최종학력이 청년 심리의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 통제변수

본 연구는 총 세 가지의 종속변수(행복감, 삶의 의미, 삶에 대한 만족감)를 부모의 평균 학력으로 설명하는 데 여러 가지 통제변수를 고려하였다. 먼저 월평균 총 가구소득을 고려하였다. 응답자들은 지난 1년간 세금 납부(공제) 전을 기준으로 월평균 총 가구소득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총 12개 항목의 선택지가 주어졌다. ‘소득 없음’(1)에서 시작하여 100만원 단위로 1씩 올라가는 변수로, 최댓값은 ‘1000만원 이상’의 월 총 가구소득이다. 즉 1-12의 값을 가진다. 부모의 학력이 높다고 해서 항상 가구소득이 높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힘들다. 일단은 부모 개인의 학력과 부모의 소득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특정 학력과 가구소득이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년 샘플을 살펴보면, 총 가구소득과 부모 학력의 상관계수는 0.253으로 그렇게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규모에 따라 가구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의 전반적인 행복감,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살펴봄에 있어 가구의 총소득을 통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성별을 통제하였다. 삶의 의미나 만족도에서는 남녀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행복감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확실히 존재한다. 따라서, 분석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여성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통제변수로 채택하였다.

셋째, 청년의 최종학력을 통제하였다. 이 변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총 7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변수로, 부모 최종학력 변수와의 상관계수는 0.3694이다.

네 번째 변수는 노동지위 변수로, 임금근로자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더미변수를 채택

하였다. 노동지위 변수는 총 4개의 응답지를 갖는다. 임금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이다. 더미변수는 임금근로자 응답자를 1의 값으로, 그 외의 응답을 0으로 하는 변수이다. 임금근로자는 전체 응답자의 41%다. 20-30대 청년 사례 중에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약 62.1%이며, 자영업자가 5.68%, 무급가족종사자가 0.91%, 무응답자가 31.28%를 차지한다. 임금근로자는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행복도,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9-5] 통계 요약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반적 행복감	4,521	6.778589	1.272876	0	10
삶의 의미	4,521	6.623092	1.396246	0	10
삶의 만족도	4,521	6.472324	1.156774	0.875	10
가구소득	4,521	6.653838	2.125137	1	12
최종학력	4,521	4.539261	0.698494	1	7
20대	4,521	0.487945	0.499910	0	1
여성	4,521	0.496793	0.500045	0	1
수도권	4,521	0.515152	0.499826	0	1
임금	4,521	0.621323	0.485111	0	1
혼인	4,521	0.273612	0.445862	0	1

다섯 번째 통제변수는 혼인변수이다. 결혼한 청년은 삶에 대한 자세나 행복감이 다를 수 있다. 혼인상태 변수는 총 5개의 응답지를 가진다: 비혼(26.5%), 혼인(62.3%), 사별(7.5%), 이혼(3.5%), 그리고 별거(0.3%). 혼인변수는 이중 혼인의 응답지를 중심으로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여섯 번째로, 20-30대 청년 응답자의 나이를 통제하였다. 나이 변수는 혼인상태와 상당한 양의 상관관계(0.5307)를 가지는 변수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제했다. 나이 변수를 20대 응답자들을 1로 코딩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20대의 한국 청년은 현 대학생을 포함하는 그룹으로 본 연구가 종속변수로 채택한 행복감, 삶에 대한 의미 그리고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더미변수를 통제하였다.

지역변수는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총 17개의 권역에 대한 지역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사는 1,39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도권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앞서 종속변수와 t-검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도권 변수는 본 연구가 채택한 세 가지 종속변수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함된 전체 변수들의 통계 요약은 [표 9-5]와 같다.

2 분석 방법

부모의 최종학력이 20-30대 청년의 전반적인 행복감, 삶의 의미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회귀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표 9-5]가 보여주듯이 본 연구가 채택한 세 가지 종속변수는 연속형 변수이기에 최소자승법(OLS)을 활용한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은 부모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20-30대 청년의 전반적인 행복감, 삶의 의미에 대한 자세, 그리고 삶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먼저 OLS 회귀분석 방정식의 오른쪽에 포함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9-6]에 정리되어 있다.

[표 9-6]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부모학력	가구소득	최종학력	20대	여성	수도권	임금고용	혼인
부모학력	1							
가구소득	0.2528*	1						
최종학력	0.3694*	0.2543*	1					
20대	0.2286*	0.0695*	0.0585*	1				
여성	0.0175	0.0247	-0.0331*	0.0142	1			
수도권	0.1720*	0.1463*	0.0659*	0.0032	-0.0071	1		
임금고용	-0.0511*	0.1364*	0.0458*	-0.2131*	-0.0570*	0.0501*	1	
혼인	-0.1606*	-0.0929*	-0.0817*	-0.4711*	0.0957*	-0.0519*	-0.0262	1

* p<0.05

일반적으로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0.6을 넘지 않으면 회귀분석에 포함되기에 적합하다. 가장 높은 상관계수는 20대와 혼인의 음의 상관계수(-0.475)로 부모학력과 응답자 최종학력의 상관계수(0.369)가 뒤를 이었다. 따라서, 이 총 8가지의 변수들이 OLS 회귀 분석에 포함되었다.

회귀분석은 총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사용한 OLS 회귀분석을 채택하였다. 로버스트 표준오차는 OLS 회귀분석에 있어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를 고려해 기존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수정해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 표준오차를 더욱 크게 함으로써 통계 유의성 검정을 보다 강건하게 하는 방식이다.

둘째, 동일한 모델을 바탕으로, 17개 권역을 바탕으로 한 군집 표준오차를 사용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표준오차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의 한 종류로서, 데이터 전반의 이분산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질성이 전체 데이터의 표준오차를 줄여주는 것을 막아주는 방식으로 고안된 표준오차이다. 앞서 각 종속변수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살펴본 바와 같이 어디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종속변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다. 응답자들의 군집 경향성을 수정해주는 군집 표준오차를 사용해 첫 번째의 회귀모형을 재추정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민감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유지하면서 각 권역의 독특한 특성들을 고정효과(fixed effects)로 통제해주는 방식의 회귀분석을 채택해 보았다. 이 방식은 데이터의 군집효과를 표준오차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각 군집에 대한 더미변수를 직접 넣어 군집효과를 통제해 분석 결과의 민감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특색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다층모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4,521명의 청년 응답자들이 17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주지 않으면 정확한 표준오차의 추정이 어려워진다(Gelman & Hill, 2007; Snijders & Bosker, 2011). 이 모델은 이론적으로는 고정효과를 통제해주는 세 번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고정효과가 오차항에서 통제되기 때문에 자유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에서 보다 정확한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총 네 가지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20-30대 청년 샘플 4,521명을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최소 한 가지의 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로 확인된 72명은 회귀분석에 제외하였다. 따라서 회귀분석은 20-30대 청년 4,448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절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행복감 차이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행복감, 삶의 의미 인식, 삶의 만족도

[표 9-7]은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를 부모의 최종학력과 앞에서 논의한 통제 변수들로 설명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처음 세 모델은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채택한 OLS 회귀분석의 결과(방식 1)를, 마지막 세 모델은 17개 지역을 바탕으로 한 군집 표준 오차를 채택한 OLS 회귀분석의 결과(방식 2)를 나타낸다.

[표 9-7] 부모의 최종학력과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OLS 회귀분석

	OLS 회귀분석 & 로버스트 표준오차			OLS 회귀분석 & 군집 표준오차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
	(1)	(2)	(3)	(4)	(5)	(6)
부모학력	0.066*** (0.025)	0.069** (0.028)	0.090*** (0.022)	0.066** (0.023)	0.069** (0.026)	0.090*** (0.024)
가구소득	0.043*** (0.010)	0.039*** (0.011)	0.054*** (0.009)	0.043*** (0.013)	0.039** (0.015)	0.054*** (0.011)
학력	0.172*** (0.031)	0.224*** (0.033)	0.151*** (0.027)	0.172*** (0.034)	0.224*** (0.050)	0.151*** (0.048)
20대	0.168*** (0.045)	0.182*** (0.050)	0.153*** (0.041)	0.168*** (0.044)	0.182*** (0.028)	0.153*** (0.024)
여성	0.073** (0.037)	-0.023 (0.041)	-0.060* (0.034)	0.073** (0.030)	-0.023 (0.027)	-0.060* (0.029)
수도권	-0.308*** (0.038)	-0.336*** (0.041)	-0.125*** (0.035)	-0.308** (0.117)	-0.336** (0.115)	-0.125 (0.134)
임금노동	0.120*** (0.041)	0.154*** (0.045)	0.119*** (0.037)	0.120* (0.062)	0.154* (0.083)	0.119** (0.052)
혼인	0.474*** (0.049)	0.483*** (0.053)	0.204*** (0.043)	0.474*** (0.066)	0.483*** (0.042)	0.204*** (0.023)
상수	5.332*** (0.148)	4.997*** (0.164)	5.026*** (0.131)	5.332*** (0.251)	4.997*** (0.364)	5.026*** (0.253)
표본수	4,448	4,448	4,448	4,448	4,448	4,448
결정계수	0.055	0.053	0.043	0.055	0.053	0.043

주: 로버스트 표준오차는 괄호에 표시; *** p<0.01, ** p<0.05, * p<0.1

[표 9-7]의 결과를 보면,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년의 전반적인 행복감이 높고, 자기가 하는 일이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삶의 여러 분야에 있어 더 높은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부모 최종학력의 회귀계수는 이 세 모델에서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마지막 세 모델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모 최종학력의 세 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그 다음의 세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로버스트 표준오차로 보든 17개 행정구역 군집 표준오차로 보든, 부모의 최종학력은 청년의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표 9-8] 부모의 최종학력과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OLS 고정효과 회귀분석과 MLM

	OLS 회귀분석 고정효과			다층모형 회귀분석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
	(1)	(2)	(3)	(4)	(5)	(6)
부모학력	0.072*** (0.025)	0.072*** (0.028)	0.095*** (0.022)	0.070*** (0.023)	0.071*** (0.025)	0.095*** (0.021)
가구소득	0.044*** (0.010)	0.038*** (0.011)	0.060*** (0.009)	0.044*** (0.009)	0.038*** (0.010)	0.059*** (0.008)
학력	0.160*** (0.031)	0.204*** (0.033)	0.134*** (0.026)	0.161*** (0.029)	0.206*** (0.032)	0.135*** (0.026)
20대	0.150*** (0.044)	0.173*** (0.050)	0.130*** (0.040)	0.152*** (0.044)	0.174*** (0.048)	0.131*** (0.040)
여성	0.079** (0.037)	-0.019 (0.040)	-0.051 (0.033)	0.079** (0.037)	-0.019 (0.040)	-0.052 (0.033)
임금노동	0.102** (0.041)	0.131*** (0.044)	0.132*** (0.036)	0.104*** (0.040)	0.134*** (0.044)	0.129*** (0.036)
혼인	0.487*** (0.048)	0.499*** (0.053)	0.224*** (0.042)	0.486*** (0.048)	0.499*** (0.052)	0.221*** (0.043)
상수	4.913*** (0.197)	4.652*** (0.232)	5.300*** (0.180)	5.281*** (0.151)	4.966*** (0.164)	4.981*** (0.143)
고정효과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표본수	4,448	4,448	4,448	4,448	4,448	4,448

주: 로버스트 표준오차는 괄호에 표시; *** p<0.01, ** p<0.05, * p<0.1

동일한 결과를 [표 9-8]에서도 볼 수 있다. [표 9-8]은 앞서 설명했듯이 로버스트 표준 오차를 채택한 회귀분석 모델에 17개 행정구역의 고정효과를 포함한 세 모델(방식 3)과 다층모형을 통해 응답자들의 군집패턴을 고려한 세 모델(방식 4)의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부모의 최종학력이 20대 및 30대 자녀들의 전반적인 행복감, 삶의 의미 인식, 그리고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학력 회귀계수는 여섯 개의 모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

2 어느 정도의 부모 학력에서 차이가 나는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학력이 되어야 부모의 최종학력이 세 가지 종속변수에 대해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의 학력을 고정효과로 삼고 [표 9-7]의 두 회귀분석 모델을 다시 검토하였다. 부모의 최종학력 변수는 부와 모의 평균값으로, 1부터 6까지 0.5 단위로 총 11개의 값을 가지므로, 고정효과를 살펴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20대와 30대 청년 부모의 최종학력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r = 0.74$), 어느 부모의 학력을 쓰든 결과는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최종학력을 고정효과로 사용하여 어느 정도의 학력에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나머지 학력 카테고리의 더미변수를 넣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9]가 그 결과다. 각 학력 카테고리의 회귀변수는 초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가 초등학교 최종학력을 가진 청년과 비교했을 때, 부모가 중학교 최종학력을 가진 청년은 행복감,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있어 차이가 없다. 중학교 졸업 학력의 회귀계수는 그 어떠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버지 최종학력의 양의 회귀계수는 고등학교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계수가 석사과정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 다시 말해 부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인 청년에 견주어 볼 때, 부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청년은 행복감,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양의 효과는 부의 최종학력이 올라갈수록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표 9-9] 아버지 최종학력과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아버지 최종학력 고정효과

	OLS 회귀분석 & 로버스트 표준오차			OLS 회귀분석 & 군집 표준오차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
	(1)	(2)	(3)	(4)	(5)	(6)
중학교	-0.118 (0.137)	0.179 (0.153)	-0.097 (0.120)	-0.118 (0.132)	0.179 (0.193)	-0.097 (0.103)
고등학교	0.304*** (0.111)	0.478*** (0.136)	0.308*** (0.103)	0.304** (0.117)	0.478** (0.176)	0.308*** (0.098)
대학교(4년제미만)	0.246** (0.123)	0.440*** (0.148)	0.330*** (0.113)	0.246** (0.105)	0.440*** (0.140)	0.330*** (0.101)
대학교(4년제이상)	0.317*** (0.121)	0.473*** (0.146)	0.355*** (0.112)	0.317** (0.141)	0.473** (0.207)	0.355*** (0.111)
석사과정 이상	0.577** (0.287)	0.846*** (0.312)	0.804*** (0.197)	0.577 (0.401)	0.846** (0.395)	0.804*** (0.191)
가구소득	0.045*** (0.010)	0.043*** (0.011)	0.056*** (0.009)	0.045*** (0.013)	0.043** (0.015)	0.056*** (0.011)
학력	0.159*** (0.032)	0.207*** (0.033)	0.141*** (0.027)	0.159*** (0.033)	0.207*** (0.053)	0.141*** (0.048)
20대	0.078** (0.037)	-0.013 (0.041)	-0.052 (0.034)	0.078** (0.032)	-0.013 (0.025)	-0.052 (0.030)
여성	-0.314*** (0.038)	-0.343*** (0.041)	-0.131*** (0.035)	-0.314** (0.120)	-0.343*** (0.116)	-0.131 (0.136)
임금노동	0.070* (0.040)	0.096** (0.044)	0.072** (0.036)	0.070 (0.056)	0.096 (0.079)	0.072 (0.055)
혼인	0.392*** (0.043)	0.389*** (0.046)	0.127*** (0.037)	0.392*** (0.053)	0.389*** (0.048)	0.127*** (0.021)
상수	5.470*** (0.171)	4.984*** (0.196)	5.192*** (0.157)	5.470*** (0.236)	4.984*** (0.416)	5.192*** (0.274)
표본수	4,420	4,420	4,420	4,420	4,420	4,420
결정계수	0.057	0.054	0.044	0.057	0.054	0.044

주: 로버스트 표준오차는 괄호에 표시; *** p<0.01, ** p<0.05, * p<0.1

한편, 부의 최종학력 효과가 어느 지점부터 나타나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준거 범주를 고등학교 졸업과 석사과정 졸업으로 바꾸어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최종학력 효과는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나타난다. 즉 고등학교 졸업 이상 수준에서는 부의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결과표는 생략). [표 9-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버지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사례는 10% 정도 된다.

제4절

불평등 인식과 여타 요인들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불평등 인식과 행복감

마지막으로 독립변수는 아니지만 20-30대 청년의 행복감 등과 관련 있는 주요 변수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 절에서 특히 주목하는 변수는 8장에서 검토한 불평등 관련 인식이다.

[표 9-10]은 8장에서 구성한 불평등 인식 변수와 개인능력주의 변수와 행복감 등의 관계를 나타낸다. 불평등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각 항목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혹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교육기회, 취업기회, 법집행, 소득과재산, 권력, 성별)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5점 척도로 동의 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변수다. 개인능력주의 변수는 “남보다 뒤처진 사람은 제도보다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라는 문장에 대한 동의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했다.

다른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확인한 두 변수의 회귀계수를 해석하면, 첫째, 20-30대 청년은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할수록 행복감 수준이 낮다. 둘째, 뒤처짐의 원인이 (제도가 아닌) 개인에게 있다는 말에 동의할수록 행복감 수준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감 등 삶의 태도나 인식이 불평등 인식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9-10] 불평등 인식과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OLS 회귀분석

	OLS 회귀분석 & 로버스트 표준오차			OLS 회귀분석 & 군집 표준오차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	행복감	삶의 의미	삶의 만족
	(1)	(2)	(3)	(4)	(5)	(6)
부모학력	0.057** (0.024)	0.060** (0.027)	0.080*** (0.022)	0.057** (0.027)	0.060* (0.029)	0.080*** (0.018)
가구소득	0.037*** (0.010)	0.033*** (0.011)	0.049*** (0.009)	0.037** (0.015)	0.033* (0.016)	0.049*** (0.013)
20대	0.154*** (0.044)	0.167*** (0.049)	0.138*** (0.040)	0.154*** (0.043)	0.167*** (0.030)	0.138*** (0.027)
학력	0.167*** (0.030)	0.218*** (0.032)	0.146*** (0.026)	0.167*** (0.031)	0.218*** (0.045)	0.146*** (0.045)
여성	0.078** (0.037)	-0.018 (0.040)	-0.055* (0.033)	0.078** (0.029)	-0.018 (0.026)	-0.055* (0.027)
수도권	-0.289*** (0.037)	-0.317*** (0.040)	-0.105*** (0.034)	-0.289** (0.106)	-0.317*** (0.103)	-0.105 (0.124)
임금노동	0.090** (0.040)	0.124*** (0.044)	0.093*** (0.036)	0.090 (0.060)	0.124 (0.084)	0.093* (0.051)
혼인	0.445*** (0.048)	0.452*** (0.052)	0.175*** (0.042)	0.445*** (0.072)	0.452*** (0.050)	0.175*** (0.029)
불평등인식	-0.356*** (0.029)	-0.367*** (0.031)	-0.333*** (0.026)	-0.356*** (0.037)	-0.367*** (0.067)	-0.333*** (0.038)
개인능력주의	0.075*** (0.020)	0.074*** (0.022)	0.040** (0.019)	0.075** (0.034)	0.074 (0.044)	0.040 (0.034)
상수	6.340*** (0.188)	6.046*** (0.209)	6.070*** (0.165)	6.340*** (0.226)	6.046*** (0.407)	6.070*** (0.317)
표본수	4,448	4,448	4,448	4,448	4,448	4,448
결정계수	0.096	0.089	0.083	0.096	0.089	0.083

주: 로버스트 표준오차는 괄호에 표시; *** p<0.01, ** p<0.05, * p<0.1

2 여타 요인들과 행복감

나머지 통제변수와의 관계도 살펴보자. 부모 학력과 동일하게 세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우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청년의 전반적인 행복감, 삶의 의미 인식, 그리고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모델에서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30대 청년 본인의 학력이 올라갈수록 세 가지 종속변수의 값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대가 30대보다 행복감, 삶의 의미 인식, 삶의 만족도에서 높은 값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20대는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혼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삶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혼인 변수의 회귀계수는 모델의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진다.

임금노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 세 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양의 회귀계수를 가지기는 하지만, 군집 표준오차를 채택한 회귀분석에서는 전통적인 수준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임금노동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적 이질성을 고려한 표준오차를 고려했을 때 민감하게 변하는 것으로 보아 그 영향력에 지역적 편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회귀분석에서 통제된 변수 중에 수도권 변수만이 유일하게 총 세 가지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행복감, 삶의 의미 인식, 삶의 만족도가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과밀의 현상을 보이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의 삶에 대한 태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고우림 외, 2020). 마지막으로, 젠더 변수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남성에 비해 여성 청년이 행복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의미나 삶의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회귀분석의 모델에 따라 불안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제5절

부모 학력의 또 다른 의미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장에서는 부모 학력이 자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부모의 학력이 청년의 행복감과 삶의 의미 인식, 만족감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수저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행복감이 높고, 자기가 하는 일이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삶의 여러 분야에 있어 더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과 세대 간 사회 이동성에 관한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준다.

첫째, 이 장의 연구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자원이 자녀의 소득이나 직업 등과 같은 물질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행복감 등 근원적인 심리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방증한다. 고르지 못한 사회경제적 자원 분배가 물질적 측면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의 불평등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물론 최근 일부 연구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개인의 행복 및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바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국가별 비교와 같은 거시적 분석에 그치고 있다(OECD, 2018). 혹은 개인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분석일지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 분석이 아닌 국가의 소득 불평등이 각 개인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에 그친다(Yu & Wang, 2017).

둘째, 이 장의 연구 결과는 기존의 많은 연구가 수량적으로 증명했던 ‘위대한 개츠비 가설’에 대한 새로운, 구체화된 이론적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개인의 사회이동성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은 다양한 국가별 비교 연구 및 시계열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검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심리적 자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삶에 대한 행복감,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 만족감 등은 진취적으로 본인의 삶을 개척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이러한 심리적 자원이 풍

부한 사람은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사회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수월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심리적 자원이 개인들 간에 무작위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대한 개츠비 가설에 적용해 본다면,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후대의 심리적 자원 불평등을 초래하는 식으로 세대 간 사회이동성 수준을 낮춘다.

셋째,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이것이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개인의 행복감, 성취감, 만족감을 고취하는 심리적 지원정책이 사회이동성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르지 못한 개인의 심리적 자원 분배에 대한 국가의 효과적인 개입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심리적 불평등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를 약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4부

정책 지형

제10장 청년정책 현황

제11장 정책 효과 분석: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0장

청년정책 현황

이채정·조소연

- 제1절 청년정책의 개념
- 제2절 청년정책의 유형
- 제3절 유형별 청년정책 현황
- 제4절 취업지원 중심의 청년정책

제 1 절

청년정책의 개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장에서는 청년정책의 현황을 개괄하고 주요 특징을 확인한다.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오수연·김성엽·박성민, 2021).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김기현 외, 2020). 청년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범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⁵¹⁾

한국의 경우 문민정부에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설되며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는 2013년에 청년 미취업자를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지자체에 청년청이 신설되는 등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청년정책의 기반을 다루고 있는 ‘청년기본법’은 2020년에 제정되어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정부는 해당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해당 기본계획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의 분야에서 중점 추진과제들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청년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지만 공통적으로 독립으로의 이행 과정에 있는 연령 집단으로서의 청년, 즉 한 시민이 사회적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행 과정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를 실현시켜 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정책기획위원회, 2019).

51)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오수연 외, 202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정책은 정책 분야별로 크게 5개의 분야—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복지·문화), 참여·권리—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5개의 대분류는 15개의 중분류로 세부 유형화된다.

최근 한국의 청년정책은 2020년 179개 과제 16.9조원에서 2021년 270개 과제 22조 여 원으로 확대되었다(오수연 외, 2021).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은 기존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삶의 전 영역에 대해 지원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청년정책을 특정 분야 정책이 아닌 종합정책으로 인식하고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지휘 본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현재 청년정책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고용·주거·교육·복지 등 개별 부처 위주로 추진된다는 한계도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표 10-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비전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방향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		
3대 원칙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5대 정책방향 및 중점 과제	일자리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주거부담 완화' - 청년 주택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청년 집중 지원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교육		복지·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 - 고른 교육 기회 보장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언택트 교육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생활 개선' - 사회출발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 청년건강 증진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참여·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출처: 관계부처합동(2020)

제2절 청년정책의 유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정부는 온라인청년센터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유형별로 소개한다. 온라인청년센터는 청년정책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한다. 청년정책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논문마다 법령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장에서는 온라인청년센터의 유형 분류를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제시하는 청년정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10-2] 청년정책의 유형

정책 유형	정책 참여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전문분야 취업지원	해외진출
창업지원	R&D 지원	경영 지원	자본금 지원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	주거 지원	학자금 지원	
정책참여	정책제안	권리보호	지역발전	
생활·복지	건강		문화	

출처: 온라인 청년센터

온라인청년센터의 청년정책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크게 5개의 대분류와 15가지 중분류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청년정책은 크게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정책참여, 생활·복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및 ‘교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은 교육훈련·체험·인턴,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전문분야 취업지원, 해외진출 등의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창업지원은 R&D 지원, 경영 지원, 자본금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해당 분야는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역량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고른 교육 기회 보장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훈련 및 교육 지원, 지원금 부여, 일자리 마련 등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정책을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주거'에 해당하는 주거·금융 유형에서는 생활비 지원 및 금융 혜택, 주거 지원, 학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복지·문화'에 해당하는 생활·복지 유형에서는 건강과 문화 분야로 나누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두 분야는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 및 청년의 생활 개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참여·권리'에 해당하는 정책 참여 유형으로 정책제안, 권리보호, 지역발전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온라인청년센터에서 분류한 청년정책의 유형은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유형 분류는 다양한 논문 및 보고서에 인용되면서 분류의 정당성 또한 일부분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청년정책 유형 분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청년' 개념의 정의 문제이다. 청년정책은 대상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대상 중심 정책과 달리 임의로 대상을 정의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청년을 포함한 유아, 아동, 청소년, 중년, 장년, 노년 등 특정 시기의 연령 집단을 다루는 정책들은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또 국가별·시대별로 정의가 달라 정책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김기현 외, 2020). 실제 청년정책 중에서는 신청 자격 중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와 같이 명시하는 정책이 있는 반면, 청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연령'을 '제한 없음'으로 표시하는 정책도 있다. 즉, 온라인청년센터는 위와 같이 청년정책을 유형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대상을 확인했을 때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온라인 청년 지식센터의 분류는 중복 문제가 존재한다. 청년정책 중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자산형성을 도와 청년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어 정책 분류상 일자리 범주 및 생활 범주의 중복이 발생한다(정책기획위원회, 2019). 특정 정책을 어느 하나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 유형 명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의 일반화이다.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청년정책을 비교해보면 해당 분류 문제가 더 명확히 드러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주거지원 및 건강보험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대신 졸업-취업-결혼-육아-은퇴 등으로 이어지는 이행 과정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한국금융연구원, 2022). 한국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존재하는 한편 굳이 ‘청년 정책’으로 나누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넓은 집단을 위해 마련된 정책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주거·금융 분야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제도’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지만 해당 정책의 내용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건강보험의 제도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청년정책’이라는 특별한 코호트 집단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음에도 다수의 정책이 ‘청년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제3절 유형별 청년정책 현황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어서 청년정책 유형별로 주요 청년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 다섯 가지 대분류로 이루어지는 청년정책에는 다양한 청년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년정책은 성격에 따라 영역이 중복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청년센터의 청년정책 유형 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중앙부처의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청년정책은 제외하였다.

1 취업지원

취업지원 정책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총 97개 정책이 포함된다. 취업지원 정책은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이라는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청년의 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지원금 제공, 일자리 제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제시한 취업지원 분야의 청년정책과 각 정책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3] 취업지원 청년정책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2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일정 요건 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2	국민내일배움카드	1. 기본 30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2. 훈련비 지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저소득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년 및 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72.5~92.5% 지원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1. 청년: 5년 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x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2.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x60개월) * 세제혜택: (청년)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퍼센트), (기업)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퍼센트) * 중견기업은 세액공제 불가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3. 정부: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 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4	청년내일 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 형성 1. 청년: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매월 12.5만원) 2.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및 지원방식 구분(총 300만원) - 30인 미만: 면제 - 30인~49인: 20% 부담 - 50인~199인: 50% 부담 - 200인 이상: 100% 부담 3. 정부: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2년간 5회)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200만원 목돈 마련
5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 감면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3.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 감면 4. 이전 최대 3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던 근로자는 최신 양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 적용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6	청년도전 지원사업	2~3개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이수 1.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 및 개별 맞춤형 상담 등 제공 2. 이수 시 1회 20만원 지급
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고용 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 창업지원, 일경험 등 지원
8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1. 신흥국 분류국가 (지원금 우대국가) 6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3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200만원 지급 2. 선진국 분류국가 4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2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100만원 지급 * 지원금 우대국가: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 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국가 - 선진국 분류 2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9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급 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10만원)를 추가 지원
10	참 관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1.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및 맞춤형 조건에 기반한 우수기업 정보제공 -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내 주변 우수 중소기업의 확인 및 구직자 맞춤형 검색 가능 - 지역별·조건별 우수기업의 소재 및 채용현황 확인 가능 2. 일자리 정보제공 - 별도 로그인 없이 다양한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정보 확인 가능 - 재직자 기업평가·임금/복지 수준·재무정보·근무환경·채용공고 등 객관적 수집정보 제공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11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청년동행카드)	<p>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 원씩 교통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및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 체크)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단,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 문의)
12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2.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2호, 73호)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 지원
13	NCS기반 능력 중심 채용 및 공공/민간 블라인드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17.7월) 발표. 부문별 가이드라인 제공 및 공공/민간 컨설팅, 정보제공 등 지원 - 지방공기업(행정안전부), 공공기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공무원(인사혁신처)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
14	청년여성 멘토링	<p>그룹멘토링 및 멘토링의 날 운영(멘토별 공개강좌 운영, 권역별 실무 멘토링 진행)</p>
15	테크노파크	<p>지식기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및 정책기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기획,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기획
16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연계 (매칭) 청년인턴 지원사업	<p>전국 200여 개 공공데이터 기업연계(매칭) 과제에 배치되어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진단, 실측 등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면 약 2주간의 온라인 기본교육 제공 - 업무수행 완료 후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의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제공 - 근무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로, 1일 8시간 전일제이며, 월 1일 유급 휴가 부여 - 수료자에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과 함께, 참여기업 명의의 경력증명서 발급 - 공공데이터 청년인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끝장토론(해커톤), 공모전, 취업 자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예정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17	취업특강	<p>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 향상, 취업활동 지원 및 기타 직업, 고용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2시간 내외의 특강 프로그램 지원</p> <p>- 특강 주요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공적인 취업준비 전략,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2.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요령: 면접의 중요성, 면접의 종류, 면접준비 전략, 면접최종점검 등 3. 성공하는 취업정보 수집: 고용시장 동향, 효과적인 취업·직업정보 수집방법, 허위구인광고 대처 등 4. 여성·주부를 위한 취업특강: 여성, 주부의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5. 고령자를 위한 취업특강: 고령자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6.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 직업심리검사 절차·방법, 직업탐색·선택에 도움이 되는 검사 등 7.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이해, 임금·근로시간, 부당해고·구제 등 8. 자녀진로지도: 부모 돌아보기,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 진로지도 포인트
18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p>초기중견기업에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 포함)의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기업별 최대 2명까지 지원 - 기간: 최대 3년으로, 최초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연장 가능 * 최초 2년도 1년 단위로 계속 지원 여부는 평가 2.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액/연: 계약 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 최소 기준연봉: 별도 기준 없음 * 최대 지원한도: 2,800만원
19	청년재단 멘토링	<p>멘토 특강, 현직자 멘토링, 면접/스피치 컨설팅, 모의면접 및 코칭,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등</p>
20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내용: 창작소재 개발, 조사연구 과정 및 작품제작 발표활동 지원 2.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비(200만원 내외), 창작지원금(800~3,000만원) 지급 - 강의, 멘토링, 워크숍, 합평회, 통합홍보, 네트워킹 등 간접지원 제공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21	청년 고용증대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한 청년 정규직·장애인 근로자 1인당 기업 규모별 세금 공제 - 증가한 청년정규직·장애인 근로자 1인당 기업 규모별로 年 최대 300~1,600만원의 세액 공제
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고용서비스(고용센터), 지역 맞춤 고용서비스(지자체 일자리센터), 복지서비스(시·군·구 복지지원팀), 서민금융 서비스(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 등) 및 대상별 특화 고용서비스(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제공 2.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고용서비스 고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및 재취업 지원, 구인·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전 사업 등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 (복지상담 복지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및 신청·접수, 공공·민간 복지 지원을 연계하고 영유아기부터 노년기,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맞춤 복지혜택 상담·제공 (지역맞춤 고용서비스 시·군·구 일자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 취업지원(면접기술 코칭, 동행면접 등) 및 일자리 발굴, 채용행사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서민금융 상담 서민금융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나 영세상공인, 저신용·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층 저리자금,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대상별 특화 고용서비스 새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연계 등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 지원,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서비스 제공 (제대군인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복무(5년 이상) 제대(예정) 군인에게 진로 상담, 취·창업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23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1.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관참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된 우수 중소기업의 “연봉 2,700만원 이상”, “신입”, “정규직”을 채용하는 우수공고 선별 -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전용채용관을 통해 채용공고 게시(참 관참은 중소기업, 워크넷, 기업인력애로센터, 잡코리아 홈페이지) 2. 우수 중소기업-청년구직자 매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코리아) 인재열람권 무료 제공을 통한 맞춤형 인재 검색 서비스와 직무, 지역 등 조건별 우수공고 제공 - (워크넷) 청년 구직자 대상 맞춤형 우수기업 일자리 매칭 및 컨설팅 진행 - (기업인력애로센터) 채용공고별 인재 추천 및 컨설턴트를 활용한 일자리 매칭
24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 취업에 필요한 역량 교육프로그램 무료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로계획 수립 2. 이력서 작성법 3. 영문 인터뷰, 모의면접 도움 4. 비즈니스 영어, 독일어, 일본어 교육
25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주) 형태의 현장실무 기회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지원금(매월 120만원, 1인 X 3개월)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무교육시에 한함 2. 참여기업 취업연계 기회 제공 3. 워크숍 발표 우수자 상금 지급 4. 상해보험 가입, 유지 지원 등
26	청년고용 지원	1.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정책 심층 모니터링,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팅 및 운영지원, 청년고용 정책참여단 기수별 운영, 청년 사회생활 실태조사, 청년고용인식 및 정책 인식 조사를 통한 분석 및 제언, 대학 진로취업 관련 콘텐츠 개발 보급 2. 전달체계: 한국고용정보원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27	금융교육	<p>강의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금융에 내재된 위험과 기회를 인지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p> <p>- 실용금융 강좌의 구성: 총 15~16주차 수업(2~3학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융의 개요: 금융시장의 구조와 금융회사의 종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학습 ② 금융상품의 이해: 저축, 투자, 보험, 대출 등과 관련한 금융상품의 특성 및 활용시 유의사항에 대한 학습 ③ 부채와 신용관리: 올바른 부채 사용법 및 신용관리 방법 등에 대한 학습 ④ 생애금융설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무설계 기초지식, 고령화 사회의 특성 및 연금활용법 등에 대한 학습 ⑤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이 금융시장에 가져온 변화 및 다양한 핀테크 사례, 기대효과와 위험요인 등에 대한 학습 ⑥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불완전 판매 및 금융사기 등과 관련한 다수 사례 및 피해 예방방법 등에 대한 학습 <p>- 실용금융 강좌 지원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융교재 제공: 금융현장에서 축적해 온 금융정보, 사례, 금융소비자 대응 방안 등을 담아 금감원이 개발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책자 무료 지원 ② 금감원의 전문강사 지원: 대학교가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 및 검사 경력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 중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위요건 및 강의 스킬을 갖춘 강사 지원 ③ 금융전문가 특강 지원: 개설된 실용금융 강좌에는 금융진로 특강 및 금융분야별 금융전문가가의 심도 있는 특강 지원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28	Hi(고졸자취업지원)프로그램	<p>취업 의욕을 제고하며 취업기술과 직장적응력 강화를 위한 아래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 미래설계! 나를 위한 현명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삶의 투자수익률 계산, 취업 및 직장생활의 장점 * 나의 35살에 길을 묻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살의 나를 위한 고민, 다양한 자기개발 방법 이해 * Hi, 일터이해! 일터와 채용정보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조직 이해, 채용정보 탐색 * 맞아맞아, 자화자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직업에 비춰본 나의 강점, 나의 강점 자찬릴레이 * Hi, 취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Job-Go! - 서류 작성의 주요 요점과 사례 - 1분 스피치로 자신감 UP - 자기소개 1분 스피치 * Hi, 취업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Job-Go! - 면접의 유형과 준비, 면접 답변 요령 - 각인각색 면접답변 - 각인각색 1문1답 면접연습 * Hi, 취업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퀴즈, 취업상식! - 취업역량 등 기초취업상식 퀴즈 - 퀴즈, 직장인상식! - 직장예절 등 기초직장인업상식 퀴즈 * Hi, 직장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풍파 비켜가기 - 취업후 어려움과 고민에 대한 이해, 고민별 해결방안 모색 - 최강적응 나의 비법 - 직장생활의 최강적응리포트 작성, 미래의 나를 위한 다짐
29	allA (청년진로역량 강화)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생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협력적 문제 해결 관련 능력 향상 - 취업 의욕과 자신감 제고 및 생애비전 설계 지원 -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취업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30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한 청년문화예술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가 있는 날 정규공연 5회 및 추가로 1~2회 특별공연 기회를 제공 - 공연 당 지원액(70만원~210만원)을 지급 - 사례비 외 무대, 조명, 홍보, 음향 등 장비 및 현장 진행 스태프 지원 - 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홍보 지원 - 권역별 우수 공연 팀에 대해서는 시상 및 다음연도 연속 지원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31	K-Move 스쿨	<p>교육 프로그램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실무 교육) 어학, 직무, 현장실습 및 기타교육 등 현지 실무 교육 제공 - (전문 직무 교육) IT, 경영사무, 의료, 패션, 디자인, 호텔서비스, 조리, 기계설계 등 다양한 직무 교육 <p>프로그램별 지원자 부담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정: 지원자 부담 없음 - 일반과정: 지원자 부담 일부 있음(정부지원금의 10~20% 수준) <p>프로그램별 참여 비용 지원(참여하는 기간별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 지원금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프로그램(200시간 이상): 1인당 최대 580만원 지원 - 장기 프로그램(600시간 이상): 1인당 최대 800만원 지원 - 트랙Ⅱ(1,000시간 이상): 1인당 최대 1,350만원 지원
32	항공분야 취업지원	<p>취업박람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채용관리시스템 등 항공산업분야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취업컨설팅(상시 멘토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프로그램 무료 제공 *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전현직 전문가 멘토링 제공 및 개별 맞춤형 취업, 진로 정보 제공 *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연 1회 정례 개최 * 항공일자리 채용정보 상시 제공 * 공항 내 상주기업 채용 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 진행 * 항공일자리 멘토데이 개최 * 릴레이 지방공항 일자리 취업설명회 개최 * 항공일자리 대학생 서포터즈 개최 * 찾아가는 멘토스쿨(중고등학교) * 항공분야 주요 직무별 취업특강 * 해외 취업 영어 특강 및 채용설명회 * 공항 내 기업 탐방 및 견학 * 진로체험관(꿈길 등) 운영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33	일학습병행	1. 학습근로자 -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 훈련 수료 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2. 학습기업 -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 간의 미스매치 해소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 현장훈련비용 - HRD 담당자 수당 지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 - 각종 가점 적용 1) 병역 특례업체 지정가점(병무청) 2) 물품구매 등 적격심사 가점(조달청) 3) 품질보증 조달물품 심사 가점(조달청) 4) 클린사업장 우선지정 가점(산업안전보건공단)
34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	전문 컨설턴트에게 진로·취업·창업 상담 가능 교육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취업컨설팅 등에 참여 가능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진로·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안내 진로취업전담교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지도 제공 최대 5년간 운영비·프로그램 지원, 3회 우수평가 시 1년 연장 * 대형: 연 사업비 지원 3억, 자대생 +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수행 * 소형: 연 사업비 지원 1억, 자대생 중심, 거버넌스 기능은 자율
35	행복내일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의욕강화와 취업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강점 발견,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이해 등을 통해 취업능력 향상 지원 - 4일 과정(중식 및 간식 제공)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36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학사) 사업	1. 연수기간 및 대상 - 연수기간: 최대 6개월(전문연수 4개월 + 기업연수 2개월) - 연수대상: 이공계 대졸(전문대졸 포함) 미취업자로 86.1.1 이후 출생자(만34세) 2. 주요 내용 - (전문 연수) 4개월 이내, 교육운영 관련 제반경비(전담인력 인건비, 강사료, 교육재료비 등) 지원, 전문분야 이론 및 실습교육 - (기업체 실무 연수) 2개월 이내, 교육운영 관련 제반경비(전담인력 인건비, 강사료, 교육재료비 등) 지원, 주관기관과 채용약정된 기업에서 채용을 전제로 현장실무 교육 3. 사업비 - 연수생 1인당 560만원 지원(연수수당 300만원+교육지원금 260만원) * 연수수당: 전문연수(4개월, 월40만원/인)+기업연수(2개월, 월70만원/인) - 사업계획서 작성시 정부출연금의 사업비 편성기준은 연수인원×560만원 - 주관기관은 현물(강의장, 참여인력, 연구시설 등) 및 현금을 총 사업비의 25% 이상 출자 * 교육기간은 연수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에서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 4. 연수분야 - 이공계 분야 심화 교육과정(카티아, 3D모델링, 에너지기술 등) - 단순 기능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참여 불가(포토샵 기본과정 등)
37	청년취업 아카데미	1. 참여학생: 교육무료수강, 학점인정(협약대학에 한함), 취업연계 지원 2. 운영기관: 교육비 지원(80%), 운영기관 매칭(20%)
38	내일채움 공제	1. 기업 지원: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2. 핵심 인력: 핵심인력 -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39	청년 해외진출 멘토링	해외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하여 해외 진출에 필요한 역량, 사전준비, 현지 취업, 생활정보 등 해외진출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해외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가를 선발하여 멘토단을 구성,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콘텐츠를 개발하고 멘티와 소통하며 해외진출 희망 청년들에게 멘토링 제공
40	2022년 내일이름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직업훈련 제공 - 훈련생 자립장려금 지급(출석률에 따라 월 30만원 한도) - 기숙사(숙식), 기숙사 미보유 기관은 교통비 및 식대 지급(출석률에 따라 월 최대 16만원 한도) -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직업훈련교육 수료 후 취업처 연계 및 취업 정보 제공 - 훈련기관별로 배치된 전담상담사를 통해 심리상담 제공
41	성취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가자간의 밀접한 의식 교류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취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
4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p>고용 창출 우수기업에게 대출 금리 우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60억원 * 지방소재 기업은 70억원까지 가능 - 대출금리: 분기에 따라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 차감(2019년 1분기 2.3%),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한 금리 적용 - 이자환급안내: 향후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 포인트 이내에서 5,000만원까지 이자 환급
43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p>유형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지도자 인건비, 지도자 교육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지도자 인건비 지원, 지역 노인시설 방문 지도 및 노인 생활 체육 대회 준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2. 근무장소: 시·군·구 체육회 3. 주요업무: 지역 주민 생활체육활동 지도 및 프로그램 기획·보급 등 4. 지도종목: 전공 종목과 지역주민 선호종목을 함께 지도 5. 지도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정부 정책 사업을 우선 고려하여 지도활동 수행 6. 급여: 월 2,274천원/법정부담금 포함
44	기업인력 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	장병교육(취업맞춤특기병 취업컨설팅, 현장 탐방, 직무교육, 중소기업 취업연계) 및 취업상담, 대중소상생교육,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 등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45	KF 글로벌 챌린저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p>1. KF 싱크탱크 인턴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해외 정책연수 프로젝트 및 연구소에서 개최되는 각종 학술행사 인턴 연구원으로 참여 - 기간: 6개월간 활동 - 파견지: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 애틀란틱카운슬,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 연구소 (총 1개국 4개처). <p>2. KF 박물관 인턴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한국실 전시,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한국 미술 소장품 연구 등 - 기간: 6개월간 활동 - 파견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 보스톤미술관, 스미스소니언프리어 새클러갤러리, 시카고미술관, 필라델피아미술관(총 1개국 5개처). <p>3. KF 도서관 인턴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한국학 자료 관리, 자료 안내 및 기타 특별 프로젝트 수행 - 기간: 10개월간 활동 - 파견지: 미국 UCLA 동아시아도서관, UC어바인 랭슨도서관, 남가주대 한국학도서관, 미시건대 아시아도서관, 시카고대 동아시아도서관, 워싱턴대 동아시아도서관, 컬럼비아대 동아시아도서관, 하와이대 한국학센터도서관, 하와이대 해밀턴도서관, 프랑스 콜레주드프랑스 한국학연구소도서관(총 2개국 10개처). <p>4. KF 주니어 프로페셔널 프로그램(도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10개월간 활동 - 파견지: 미국 의회도서관 <p>5. 경제적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왕복항공권 지원 - 해외여행자보험 지원 - 체재비(지역별 상이)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46	온라인 청년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간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로바로 궁금증 해결! - 카카오톡과 게시판을 통해 청년정책과 공간에 대해 실시간 상담 가능 - 카카오톡 예약 심층상담을 통해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한 심층 상담 2. 청년정책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청년정책을 한눈에 확인 - 정책 키워드 및 유형과 지역별 청년정책 검색으로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확인하고, 비슷해 보이는 청년정책 비교를 통해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3. 청년공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공부, 그룹스터디, 조모임, 공연장소 등 청년 이용 가능한 전국의 공간정보 확인 - 청년들을 위해 전국에 200여 곳의 청년 공간 위치 확인 가능 및 지역별 프로그램 정보 제공
47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인력양성 (2년제 학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 후 산업학사학위 수여 - 정부지원에 의한 부러운 학비(2년제 사립대학의 1/3수준) - 입학생 전원 2년간 등록금 전액 100% 장학혜택 부여(단,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 기숙사 시설완비(신입생 희망자 전원 입사 가능, 한학기 20만원) - 졸업생 희망자 전원 취업 및 사후지도 - 교육기간 중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 4년제 대학 3학년 편입 및 육군 3사관학교 지원 가능 - 교육기간 중 군 입영 연기 및 예비군 훈련보류 가능 - 재학 중 취업맞춤형 특기병 지원가능 - 졸업 후 기술부서관 입대 가능
48	청년귀농 장기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탐색 및 농촌이해, 품목탐색 및 이론교육, 실습, 영농기술 및 마케팅 전략 습득, 귀농 정착 컨설팅 지원 등 - 세부교육내용은 교육 기간별 상이 - 교육비 지원(국고 70%) - 농식품부 지원사업 신청 시 귀농, 영농 교육시간 인정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용자 심사 시 가점 5점 부여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49	청년친화 강소기업	1. 청년 지원내용 - 강소기업(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최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우수한 중소기업) 중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을 평가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관련 정보 제공 2. 기업 지원내용 1) 기업 홍보: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워크넷 강소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2) 재정·금융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선정 시 우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산정시 우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공유재산 수의계약 임대 및 임대료 감경,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3) 선정·선발 우대: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우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선정 관련 우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산업 선정 시 우대, 중소기업 탐방 기업 선정 시 우대,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4) 세무조사 제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 조사 대상 제외 시 우대 5) 병역특례 지원: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선정심사 시 가점
50	항공정비 인력양성 채용	1. 한국에어택항공직업전문학교 - 항공정비사 면허 자격 시험 응시시 작업형 실기시험 면제 혜택 - 자체항공기 운영: 직접 운항되는 항공기로 김포공항 RAMP 주차장내(Parking Lot)에서 다양한 실습 실시 - 산학협약 및 교육연계 협약기관과의 MOU를 통해 진로지원 2.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 과정 이수시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과목면제 혜택 - 실기시험: 구술면접(실작업형 면제 혜택) - 항공정비기능사(기관/기체/장비/전자), 항공산업기사, 항공정비사(비행기) 자격증 취득 가능 3.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 과정 수료시 훈련이수 증명서 수여 - B737 기종교육 필수장비(1. 엔진 2. 랜딩기어 3. 도어 4. 시뮬레이터) 모두 보유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51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한도 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사용 가능한 50만원 추가 지원(훈련비 10% 자부담 결제 필요, 과정 수수료 시 자부담금 전액 환급)
52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BoB)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정보보호 최고 전문가 멘토링 중심의 도제식 교육 및 프로젝트 수행 등 리더급 화이트해커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생 전용 학습공간 - 최신 IT 기기 참고서적 - 교통비 지원 및 수강료 무료 - 프로젝트 활동지원 - 지방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지원 - 수료자 특전(사후보안 연구모임, 맞춤형 진로연계) - 인증자 특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서, 국외연수, 창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 사업수행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관,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수행 주요내용: 취약점분석, 디지털포렌식, 보안컨설팅, 개발 등 분야별 도제식 교육
53	청년 취업역량 프로그램	<p>청년 취업준비생의 능력중심채용제도 및 역량채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합한 기업 및 직무탐색 및 취업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p> <p>프로그램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채용 동향 - 역량채용 및 NCS능력중심채용의 이해 - 기업 및 직무와 역량 - 능력중심채용시대의 입사지원서 이해 - 능력중심채용시대의 서류작성 실습 - 능력중심채용시대의 면접 전형 이해 - 능력중심채용시대의 면접 실습 - 역량개발계획 수립
54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CAP@)	청년 취업준비생의 직업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취업서류 작성 및 면접기술 강화 등 구직기술 강화 지원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55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p>(고용의무) 공공기관 등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과</p> <p>(적용범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p> <p>(적용제외)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p> <p>①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②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 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③ 전문적인 자격, 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p> <p>(이행수단) 청년 신규고용률이 3퍼센트 미만인 기관에 대하여 명단 공표(제5조제4항), 청년 신규고용 실적의 경영평가 반영(제5조제5항)</p>
56	생물자원전문 인력양성사업 (생물다양성 협약 대응 전문인력 양성사업)	<p>생물다양성협약 대응 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의 선정 대학원, 기관 및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전문인력 양성사업) 박사학위자 3명(월 200만원), 박사과정 대학원생 7명(월 120만원) 정액지급 -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학부 3-4학년생 그리고/또는 석사과정 전일제 대학원생 10명에게 경비(시내교통비, 학습모임 참가비) 지원 - 기타 지원 - 정기 학습모임 운영비 지원 - 보고서 및 단행본 발간을 위한 인쇄비 지원 - 북콘서트, 세미나, 생물다양성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 등 참여 지원
57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교재,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수인력 확충(연구교수, 겸임 교수 포함), 기자재 구입비 등 - 스마트시티 필수(공통)과목을 마련하고, 인력양성 대학 간 공동 교재 개발 등 협업 프로그램 개발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58	단기집단 상담 프로그램	<p>취업의욕 및 기초 직업능력 향상과정과 구직기술 향상과정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장기간(3일~5일)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단기(3~4시간)로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수강 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금·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가 단기집단프로그램, 취업특강 등에 2회 이상 참여할 경우 5만원의 수당 추가로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참여자는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또는 취업특강 참여 시 추가 지급액 없음 2. 공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면접, 취업전략수립 등을 지원
59	스마트농업 전문가 육성	<p>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 작물특성, 현장애로기술, 빅데이터 분석 방법 등 주요 농작물의 환경, 생육상황 등을 조사 분석하여 농업빅데이터 구축</p>
60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석·박사)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9개월간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에게 실무 경험 훈련 기회 제공 - 현장맞춤형 R 능력 개발 기회 제공 - 주관기관 패밀리기업 등에 연수생 취업 연계 - 4대 보험 적용,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2. 연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의 기업지원 과제 등에 인턴 연구원으로 참여 3. 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연구원에게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합니다. 주관기업 인턴 연구원 인건비 지원 - 기업 지원과제 등 인턴연구원 연수기회 제공 및 연수수당 지급 - 석사 월 250만원/박사 월 350만원
61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지원 사업	<p>학기 동안 대학생이 자기주도적 진로 활동을 스스로 설계 및 수행하고, 이를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확산 추진(10개교x40백만원)</p>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62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 (해외연계)	1. 지원내용: 해외 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현장을 경험하거나 공동연구에 참여하도록 1년 이내 해외 파견 지원 2. 지원분야: 10대 혁신성장 관련 산업(미래자동차, 로봇, 산업용임베디드SW, 엔지니어링, 차세대반도체, 차세대항공, 첨단소재, 첨단제조공정장비, 친환경 스마트조선해양플랜트, 혁신형디자인) 3. 과제당 총 지원 규모: 30억 원 내외(36개월 기준) *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과제당 총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기업 참여 시 민간부담(현금+현물) 20% 이상 의무 4. 과제당 당해년도 지원규모: 10억 원 내외(10~15명, 12개월 기준) 5. 파견연구자 1인당 지원규모: 12개월 기준 96백만원 내외 * (예시) 인건비 및 체재비 45백만원, 연구활동비 45백만원, 간접비 6백만원 이내
63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청년에게 우수 중소·강소기업 탐방기회(5일 이내 프로그램)를 제공하여 다양한 직업정보 및 경험 습득 지원 - 참여자: 참가비 무료 - 운영기관: 2일 이하 과정(1일 1인당 10만원) - 2박3일 이상 과정: 1일 1인당 17만원
64	관광전문 인력포털 관광in 운영	관광분야 관련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광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 경제적 지원 - 정부에서 교육비 무료 또는 교육비 일부 부담을 통해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원 2. 교육적 지원 - 관광 관련 공공기관 및 주요 협회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대상별(관광안내인력, 관광통역안내사, 광고교과사 등) 맞춤형 교육과정 지속 개발·운영·배포 - 청년층 취업과 연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관광전문인력포털 운영 등 관광산업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3. 취업 지원 - 관광일자리센터에서 관광분야의 비전과 채용에 대한 교육 실시 - 관광인력 취업지원 사업 제공 - 관광 교육기관 인증·육성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65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다양한 분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온라인 공개 우수강좌900개 이상을 개발·제 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분야별 강좌, 묶음강좌, 학점은행과정 등
66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훈련	훈련기관: 훈련비 전액(NCS 300% 범위 내) 훈련생: 훈련장려금 최대 월 116천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67	직업심리 검사	1. 다양한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의 심리적인 특성들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수준 및 특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과학적인 방법 으로 측정하여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만족할 만한 직업들을 탐색하도록 지원 2. 검사종류 1)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고등학생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진로발달검사, 대 학전공(학과)흥미검사, 초등학교진로인식검사, 인성검사 등 2) 성인: 직업선호도검사(S형, L형), 직업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구직준비도 검사, 창업적성검사, 영업직무기본역량검사, IT직무기본역량검사, 준고령자직 업선호도검사, 대학생진로준비도검사, 이주민취업준비도검사, 중장년직업역 량검사 등 3. 검사 실시 후 전문 상담사에게 결과 해석 상담 가능
68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지원내용) 2년 비학위 과정의 교육(교육비 없음) 및 교육 지원금 제공 - IT환경 지원(데스크탑(아이맥) 775대 및 교육환경 구축) - 42서울 교육지원금: 교육과정 중(최대 2년) 월 최대 세전 100만원 - 멘토링: 소프트웨어개발, 컨설팅 등 최고전문가(멘토단)의 멘토링 제공 - 교육 및 개발공간: 24시간 개방형 교육생 학습공간 제공 - 기업, 커뮤니티와 협력 프로젝트 기회 제공 - 기타 42서울 교육생 베네핏 프로그램 - (전달체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전담), 비영리 법인(설립 중, 주관)
69	취업희망 프로그램	취업준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긍정적인 측면 을 찾도록 하여 자신감 회복과 취업 희망(인간관계 향상과 취업 및 원만한 사회 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참여기간: 4일 과정(중식 및 간식 제공)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70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1. 지원내용: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필요한 실습생 수당 등 지원 - 실습생 활동수당: 월 145만원(세전)/정부지원금 100만원+기업부담금 45만원 - 주거비지원: 최대 월 40만원(실습생 등본상 거주지와 연수업체 소재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상, 연수업체 주변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서 토대로 실비 지급) 2. 전달체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통한 사업 발주 및 개인 지원
71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훈련비 전액 및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지급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제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보안, 실감형 콘텐츠, 핀테크, 무인이동체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 지원
72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	19~20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올해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예정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 지원 1. 파견비용: 최대 200만원/인 - 왕복항공료(1회), 파견 관련 보험료, 비자발급 수수료 2. 훈련비용: 100만원/인, 월 - 기업, 개인 각 50만원/인, 월 지급 - 청년(OJT 시작 시점에 만 34세 이하) 채용기업에 50만원/월 추가 지급
73	20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초기 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 - 최대 5,000만원(1인당)의 지원금을 제공 - 사업선정 전/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경영역량을 강화 전문가 컨설팅 진행 -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진행
74	생물자원전문 인력양성사업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	연구인건비 지원 - 연구참여 학생에게 인건비 120만원 정액 지급 - 기타 지원 - 국외 연수 및 해외 전문가 초빙 지원 - 관련 학회 발표 및 논문 투고 지원 -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북콘서트, 학습모임, 온라인 북클럽, 세미나 등 참여 지원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75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 (AFLO)	청년들을 농식품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해외 신흥시장에 파견 후 현지 개척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 지원 - 연 3회 농식품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파견활동 실시
76	신진연구자 기초연구비 지원(신진·생애첫연구)	연평균 직접비 0.3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지급)
77	취업능력 향상 (행복오름) 프로그램 1	근로능력수급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경력설계를 돕기 위해, 대상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 - 매회 1.5시간 특강 형태로 진행 - 심리적 자립과 효율적 경력설계 노하우 습득을 지원하여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 - 프로그램 참여 후 고용복지+센터의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부, 행안부, 고용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활용 가능
78	취업능력 향상 (행복오름) 프로그램 2	근로능력수급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경력설계를 돕기 위해, 대상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 - 매회 1.5시간 특강 형태로 진행 - 심리적 자립과 효율적 경력설계 노하우 습득을 지원하여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 - 프로그램 참여 후 고용복지+센터의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부, 행안부, 고용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활용 가능
79	해외취업 알선	1. 구직자 지원내용 - 해외 일자리 정보 제공 - 필요시 상담 제공(홈페이지 해외취업상담에서 별도 신청) 2. 구인기업 지원내용 -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 모집, 알선 서비스 제공 - 요청 시 면접 지원서비스 제공(면접장소)
8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의식 확립 재취업분야 구체화 재취업 분야 진입을 위한 실행방안 모색 자신감 회복 및 취업 장애요인 극복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후속단계(전문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등)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81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p>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새일여성인턴: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고 직장적응기회를 제공한 기업과 해당인턴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구인·구직자의 취·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82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p>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훈련비 전액과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 장려금 지원 (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훈련비 지원 - 훈련비 전액 지원(국가에서 훈련기관에 바로 지급) 2. 훈련장려금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퍼센트 이상 출석한 경우 체크카드처럼 즉시 사용이 가능한 훈련장려금을 월 최대 116,000원씩 내일배움카드 계좌를 통하여 지급
83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p>중소기업 근로자의 인력 및 기술력에 대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직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제공하는 정책</p> <p>* 해당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고 산업계·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과정 운영 및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산업현장의 특화된 훈련 수요대응을 위해 표준적 훈련과정 설계 기준인 NCS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 공동훈련센터 내 교육 외에 해당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선도 사업장 위탁교육, 고급 교육 기자재 보유 훈련기관 방문 교육, 우수 숙련인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 방식 도입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84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1. 국내과정 - 연수업체: 인턴십 운영지원금(정부지원) 월 120만원 x 실습생 수 - 학생: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최저임금액(22년도 기준 1,914,440원)/월 이상 2. 글로벌과정 - 체제준비금(정부지원) 왕복 항공료, 비자발급 수수료, 의료보험 등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월 \$1,700이상 - 실습생 지원금(정부지원) 월 150만원(기업부담 금액별 상이)
85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입영전 자신의 진로, 적성을 고려 군 복무 및 전역후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86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산업별 협·단체(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가 청년층(청년 구직자, 재직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제공하는 제도 - (훈련대상) 청년 구직자, 청년 재직자 등 - (훈련내용) 전자, 전기, 기계, 정보 등 해당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고 산업계·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과정 운영 - (지원내용)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지원 - (전달체계) 산업별 협·단체 및 공동훈련센터
87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항해 기관부문의 선종별 공통 현장실무 교육 및 취업 알선
88	국가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	1. 공동훈련센터 지원: 운영비(연간 4억원 한도), 훈련시설 장비비(연간 15억원 한도),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연간 1억원 한도), 훈련과정의 운영 비용 2. 협약기업 지원: 재직근로자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채용예정자 훈련
89	해외농업 기술개발 지원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 파견전: 항공료, 해외여행자보험, 해외긴급지원서비스,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 파견후: 인건비,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주택지원비, 어학지원비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90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제공 -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6천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91	기업대학	1. 수강료 무료(전액 정부지원) 2. 숙련향상학과, 인재육성학과별로 구분하여 훈련수당 및 숙식비 일부 지원 * 연간 지원액(채용예정자의 수업료 및 인프라 구축비용은 제외함)은 기업대학 이외의 훈련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비용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심사를 통과하고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기업대학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
92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	1.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1) 다양하고 쉬운 상담 창구를 통한 무료 근로 상담 지원 - 전화상담(1644-3119)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온라인상담(www.youthlabor.co.kr) / 365일 24시간 등록가능 - 카카오톡상담(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상담 후 진정이 필요한 상담의 경우, 지역보호위원 배정 후 진정 대리 등 구제 지원 2.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1)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교육 사각지대 지원 3) 표준 교안 및 교재, 활용자료 제작 및 배포 3. 대외협력 및 홍보: 청소년근로권익보호 클러스터 구축 1)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클러스터 구축 2) 권역별 구두캠페인 등 오프라인 홍보활동 3) 취업 포털사이트 및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93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현장실무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학은 기업수요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여 기업에 인재를 공급하는 제도 - 1학년: 필요경비를 정부지원에서 지원(학기당 최대 400만원 이내) - 2~3학년: 산업체에서 50% 이상 부담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94	Wici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다양한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 취업을 원하는 모든 결혼이민여성에게 자기이해 및 직업탐색의 결과를 토대로 직업의사결정 및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이후 실제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95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방위산업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 및 기업 실무연수 등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능력을 강화하여 방위산업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생) 방위산업 전문교육 6개월 과정(이론 4개월, 현장체험 2개월) (기관) 교육운영 관련 제반경비(전담인력 인건비, 강사료 등) 지원 - 교육생 1인당 560만원 지원(교육수당 300만원, 교육지원금 260만원) - 교육수당: (전문교육) 4개월×월 40만원/인 (기업 실무연수) 2개월×월 70만원/인
96	데이터 청년 캠퍼스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관련 기업이 빅데이터 직무 취업을 지원하는 데이터 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 - 교육비 전액 지원 - 맞춤형 채용 정보 제공 - 취업클리닉 - 대학별 우수 프로젝트 선정 및 시상 - 전문가 자격증 취득 지원 - 채용박람회 개최
97	산업기능 요원 편입	병무청장이 지정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근무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2 창업지원

창업지원 정책으로는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LH 희망상가, 실전창업교육 등을 비롯한 총 20개 정책이 있다.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실전 훈련,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수수료 경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제시한 창업지원 분야의 청년정책을 정리하고 각 정책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4] 창업지원 청년정책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1	청년전용 창업자금 (창업기반지원 자금)	1. 대출한도: 연간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2. 대출기간 - (시설 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 자금 사용: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소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서 평가 소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설치 소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 구입비, 임차보증금 소요 자금, 사업장 확보 자금, 창업 소요비용,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 경영 소요 자금 등 - 대출금리: 2.0%(고정) - 대출방식: 직접대출
2	LH 희망상가	-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 - 최장 10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 - 6년 기간 이후에는 소득수준 등에 따라 갱신시점 감정평가금액의 80% 혹은 100%로 임대조건 등을 조정하여 갱신 계약 예정
3	실전창업 교육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지원 1. 온라인 교육: 창업 관련 기초 역량 함양 교육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지원 2. 오프라인 교육: 최소요건제품 제작, 고객 및 시장검증,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지원
4	온라인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PG 결제를 통해 온라인 가맹점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인하하여, 인터넷 영세상 인의 부담 완화하기 위한 제도 - 0.8~1.3 퍼센테이지 우대 수수료를 적용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청년 창업공간+기반시설+문화체험+지역민 생활·편의시설 등이 융합된 복합쇼핑몰 조성 - 몰당 10~30억원(기반시설, 인테리어, 임차료 보조, 창업교육, 홍보·마케팅 등) 지원
6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까지 지원 - 1등급 월 40,950원, 2등급 월 46,800원×50%=23,400원, 3등급 월 52,650원×30%=15,795원, 4등급 월 58,500원×30%=17,550원
7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	1. 신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 사회적 경제 영역 예비창업자 발굴 - 잠재적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2. 기 지정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 기업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경쟁력 강화 지원 - 네트워킹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전환 지원
8	도전! K-스타트업	1. 각 부처가 운영하는 예선리그를 거쳐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 선발 후 통합본선 진출팀을 추천 2. 본선 진출팀 중 창업 여부(통합 공고일 기준)에 따라 창업리그·예비창업리그로 구분, 본선·왕중왕전 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자 선정 - 통합본선 진출팀 *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를 중심으로 선배 스타트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 본선 평가 시, 일반평가단 외에 벤처투자자가 평가에 참여하여 투자매칭 기회 제공 - 왕중왕전 진출팀 * 투자자(VC, 액셀러레이터 등)를 매칭하여 사업아이템 고도화, 투자유치 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 - 최종 수상자(팀) 혜택 * 상금 최대 3억원, 대통령상 등 상장 수여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9	TIPS (민간투자 주도형기술 창업지원)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 2. 창업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및 해외마케팅자금(최대 1억원) 연계지원 3. 엔젤투자매칭펀드(최대2억원, 지분투자) 추가지원 가능 4.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BI)에 입주하여 보육, 멘토링 등 종합적 밀착 지원 제공
10	국가식품 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L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센터의 시설, 장비(연구개발 및 파일럿플랜트)를 활용, 실습형 및 체험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4개월 + a) - 아이디어 및 창업구상 단계에 있는 가공식품의 원시 시제품 제작 지원 - 창업관련 교육 및 멘토링, 제품화를 하기 위한 인허가 및 안전성 검사 등 - 로컬 매장 등 판매 유통망을 알선하여 창업초기 시장진입 지원
11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청년창업, 푸드트럭, 나이트카페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2년 추가 지원 가능(최대 3년) - 매장 기본 설비는 휴게소 운영업체에서 제공, 집기류 등은 창업자 부담 2. 초기 임대료 12개월 면제 3. 창업매장 운영 컨설팅 지원 4. 창업자금 저리 대출 지원(1천만원 한도)
12	소셜벤처 경연대회	<p>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셜벤처 아이디어 발굴/확산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저변 확대 및 공감대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대회: 전국대회 진출권 + 상금 30만원, 자치단체장상 수여 - 전국대회: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후원사 포상 등 수상 팀에 100~2,000만원 상당의 상금 제공
13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채용공고 홍보(벤처전문 취업포털 공동채용관을 통한 구인공고 지원, 주요 취업포털 사이트 유료채용상품 무료지원, 신문 채용공고 지면 무료광고 지원, 온라인 취업커뮤니티 무료 기업홍보, 전국 주요대학 및 특성화고 연계 인재 추천) - 채용박람회, 설명회 참여(대학교 방문하여 기업 홍보를 통한 인재 채용) - 신입직원 공동훈련 지원(신입직원의 업무적응력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교육 연수프로그램 지원) - 연계사업(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연계,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공제 사업연계)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14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무료법률구조 지원: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15	청년 콘텐츠기업 투자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45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콘텐츠 기업에 투자재원 공급 * 19년 결성펀드로 22년까지 투자 예상 - 전달체계: 모태펀드 운용기관(중기부산하 한국벤처투자)을 통한 간접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파악
16	수산모태 펀드	<p>정부와 민간이 매칭펀드(자펀드)를 결성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수산업체에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총 700억 규모 수산펀드 조성 예정 - 정부와 민간이 매칭펀드 결성 후, 수산업체에 투자
17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스톱 서비스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 멘토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 제공: 사업화, 경영, 법률, 특허, 금융, 노무, 세무 등 상담 zone 운영 - 지역혁신센터별로 운영되는 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사업화 지원, 교육, 멘토링, 마케팅, 수출, 판로확대 등 - 지역혁신센터별 협력기관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제공
18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p>농식품 기업의 인턴 실습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경영, 마케팅 등 현장 실무지식 습득 및 성공창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실습: 최소 2개월 최대 3개월 이내, 주 30시간 이내의 인턴 기회 지원 - 지원금 지급: 실습기간 동안 보고서 제출 시, 참여인턴에게는 월 115만원(인턴활동비), 참여기업에게는 월 40만원(멘토링비)지원(팀으로 참여하는 경우, 팀원 수 관계없이 팀 1개당 월 115만원 지급) - 교육멘토링: 창업, 기업경영 실무교육, 참여인턴 통합 워크숍, 인턴과 선배 창업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제공 - 보험가입: 현장 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산업재해에 준하는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지원 - 연계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연수 - 인턴 우수 수료자를 선발, 농식품 창업 환경이 활성화된 선진국 해외연수 기회 제공) (학점부여 - 사전협약이 완료된 대학교 재학생(건국대, 인덕대, 평택대)에 한해 사업참여시 현장실습형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계) (후속지원 - 인턴 종료 후 최우수 수료자 중 선정 절차에 따라 농식품 벤처육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추천))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19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농업법인 풀과 농업법인에서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원 금액: 농업법인이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급여의 80%를 지원: 월 급여가 202만원 초과할 경우 정액(161.6만원) 지급, 최대 6개월, 법인당 최대 3명 가능
20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기업가 창업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창업 지원 - 창업 자금 지원(창업팀별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 멘토링 - 창업공간 지원 - 교육 - 자원연계 - 성장지원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3 주거·금융

주거·금융 정책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사회적 주택(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내일키움통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총 41개의 정책들이 자리하고 있다. 주거·금융 정책은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라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 주택공급 확대 및 취약 청년을 위한 월세 비용 경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아우른다. 다음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제시한 주거·금융 분야의 청년정책을 정리하고 각 정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이다.

[표 10-5] 주거·금융 청년정책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1	청년희망 키움통장	1. 저축액 적립/지원. 3년 만기일시지급식 - 월 저축액: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 3년 후 평균 15백만원 적립 2.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우대금리: 최대 3.3%(연 6백만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 비과세: 연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 단, 22년부터 소득기준 완화 (기존) 연 3,000만원 → (변경) 연 3,600만원 - '22년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 고시
3	내일키움통장	본인 저축액이 월 5만/10만/20만원일 경우 1. 정부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 2.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차등 매칭) 3.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원) 지원
4	청년 사회적 주택 (청년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사회임대주택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퍼센트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 지급
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자금	1. 대출한도: 7천만원 이하(임차보증금의 80프로 이내) 2. 대출금리 - 2천만원 이하: 연1.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1.8% -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연 2.1%
7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8	청년형ISA 운영	ISA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금융상품별 손익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세제혜택 부여 (의무가입기간) 3년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천만원 이하 사업자 및 농어민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9	청년행복주택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전세 임대주택) 사업과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청년매입임대_다가구) 사업 실시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 등을 보장
10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1.2퍼센트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 전세금액의 80~100퍼센트 대출, 최대 1억원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11	주거안정 월세대출	<p>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당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12	인문100년 장학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공탐색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대학교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학년 재학생 - 등록금 전액 지원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 생활비 지원: 학기당 2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지원 기간: 대학 재학 중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2. 전공확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대학교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 등록금 전액 지원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 생활비 지원: 학기당 2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지원 기간: 대학 재학 중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학기)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13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소득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상향 조정됨 2. 근로인센티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4월부터는 수급자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키움 통장' 시행 등을 통해 근로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3. 취업에 따른 자립지원별도가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수급가구 자녀일 경우 취업 후 가족과 동거 유지 시 소득·재산 분리 기간을 기존 3년에서 고교 졸업후 7년, 대학 졸업후 5년으로 연장 가능 4. 부양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중인 부양의무자로서 월 소득 258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주에 대해서는 부양비 면제 5. 학비 대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대학생·청년에 대해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의 부담 경감 6.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배치가 필요한 모든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자활지원계획수립 상담을 통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60점 이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에 의뢰가능
14	햇살론 유스	<p>신용이력이 부족해 금융접근성이 낮은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저리대출 서비스 정책</p> <p>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 대출 대학생, 미취업청년 4.0%, 사회초년생 4.5%,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 3.6%</p> <p>(* 사회적 배려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p>
15	입학금 지원 장학금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p>입학금 폐지 합의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p> <p>※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p> <p>등록금 내 필수경비(수업료+입학금) 중 입학금 한도 내에서 지원</p> <p>단, 입학금 감축 조기이행 또는 조기폐지 등의 사유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액이 입학금을 초과한 경우, 수업료 항목 지원 인정</p>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16	사회주택 도입을 통해 신진예술가 주거공간 마련	1.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 입주 2. 사회주택 입주를 통해 수혜
17	청소년자립 지원관	시설(쉼터, 회복지원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기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청소년에게 주거안정에 기반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18	실업급여	※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2017년 1~3월은 46,584원/2016년은 43,416원/20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19	국가근로 장학금	<p>(시급단가) 교내근로 9,000원, 교외근로 11,150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2. 1~2월 교내/교외 시급단가 조정 가능</p> <p>(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p> <p>장애대학생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p> <p>장애대학생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근로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p>
20	청년 신용회복 지원(대학생 미취업청년 지원)	채무연체 중인 대학생,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시까지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
21	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생활관	<p>납부금액: 1개월 기숙사비 150,000원*거주 개월수, 보증금 150,0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 거주기간별 납부총 금액 상이 - 가상계좌(기업, 신한, 우리, 하나) 입금 또는 신한카드(무이자 2~3개월) 결제 가능
22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II유형)	<p>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고졸 후 학습자(선취업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재직자: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 학기당 등록금 50% 지원
23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퍼센트(경감)]+소득월액보험료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24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무료로 상담
25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저렴(시세 85% 수준)하게 공급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26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p>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960만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40만원 이내)</p> <p>*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1.0%/월세금 연 1.5%</p> <p>*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p> <p>* 대출한도: 대출금액(보증금 대출 + 월세금 대출)이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보증금 35백만원, 월세금 960만원(월 40만원 이내)</p> <p>*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5개월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p> <p>*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p> <p>*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고객부담비용: 보증료</p>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27	군복무이자 면제	<p>1.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금액: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2012.01.01.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해당) - 제도 안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군 복무자에 대하여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면제 - 면제 방법: 이자면제(0% 대출금리 적용) * 2014.11.까지 군복무 중 발생한 이자는 사후지급방식으로 대출금상환 처리 - 면제 기간: 정상 군 복무 기간 <p>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금액: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재단법 개정안 시행일(2013.05.10.) 이후 청구되는 이자부터 해당) - 제도 안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 중 군 복무자에 대하여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면제 - 면제 방법: 이자 면제(0%대출금리 적용) * 2014.11.까지 군복무 중 발생한 이자는 사후지급방식으로 대출금상환 처리 - 면제 기간: 정상 군 복무 기간 <p>3. 보증부 대출 이자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금액: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 - 제도 안내: 보증부대출 이용자 중 군 복무자에 대하여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면제 - 면제 방법: 대출금 상환 또는 개인계좌 입금-유예대출, 보증부대출 구상 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 연체계좌, 일반 상환 학자금 부실채권 순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계좌로 입금(단, 유예대출이 없고 재단 내 모든 계좌가 정상이거나 완제 시 고객 개인계좌로 입금) - 면제 기간: 정상 군 복무 기
28	직업훈련 생계비 용자	<p>취약계층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 대부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 대부한도: 1인당 2천만원 이내(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2) 월별 대부 한도액: 50~200만원 이내 3) 이자율: 연 1% 4) 보증요건: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를 연 1퍼센트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29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30	장병내일준비적금	<p>군 복무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해 제대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표 정책 금융 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수준의 고금리 이자 제공(은행이자 5% 수준 + 국가지원이자 1%) * 5% 은행금리는 15개월 이상 적금 가입 유지시 이율 * 이율은 은행별, 가입 기간별로 상이 <p>- 3:1 매칭지원 정책: 원리금(원금+이자)의 33% 해당금액을 전액 시 국가가 추가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대상 * 신규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22년도 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p>- 이자소득 비과세</p>
31	개인신용평가체계 (신용점수제)	신용점수제(1~1000점)을 도입하여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
32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 지원형)	<p>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차상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35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700만원) - 기초/차상위(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전액*), 연간 최대지원금액(전액*) - 1~3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26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520만원) - 4~6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195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390만원) - 7~8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175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350만원) <p>*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p>
33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 지원형)	<p>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p> <p>※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p>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34	다자녀 국가장학금	<p>1.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차상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1~3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260만원), 연간 최대 지원금액(520만원) - 4~8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225만원), 연간 최대 지원금액(450만원) <p>2.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지원구간 모두 전액(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지원 <p>※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p>
35	청년고용 우수기업 및 청년기업 조달 우대	<p>(1) 청년고용우수기업 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및 일반용역 입찰(적격심사) 시 청년고용우수기업 가점 강화(2018.04.~) - 물품: 신인도 가점 1.25점 신설(2018.04.) 및 1.5점 확대(2019.01.) - 용역: 신인도 가점 1.0에서 1.5점으로 확대(2019.04.) - 다수공급자계약(MAS)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경쟁 평가 시 우대 강화(2018.04.~) - 2단계 경쟁 평가 시 가점 0.5점 신설(2018.04.) 및 가점 0.5에서 1.0점으로 확대(2019.01.) <p>(2) 청년기업 우대: 3억원 이하 건축 설계 공모에 대하여 청년건축사 제한 공모 도입(2018.01.)</p>
36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p>1.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p> <p>2.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0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37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1인 기준 월 35만원 지원 - 검정고시학습비 1인가구 기준 연 154만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1인가구 기준 월 10만원 지원
38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0만원 지급
39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 ※ 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지역별 차등지원) 2. 주거환경조성: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호당 50만원)을 지원 3. 사례관리: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40	손해금 (지연배상금) 감면제도	상환능력은 부족하지만,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 해주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 감면 내용: 1. 손해금률 구상채권, 유예대출(대출미취업, 군복무): 연 9% → 4.5% 특수채권: 연 9% → 2% 2. 지연배상금률 기한이익상실채권(대출실행연도 기준)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2019년 이전: 연 6% → 4.5% 2020년 1학기: 연 대출금리+2.5% → 대출금리+1% 2020년 2학기: 연 대출금리+2.0% → 대출금리+1% * 2020년 이후 실행된 대출 건부터 연체가산금리 적용 특수채권: 연 6%, 대출금리+2.5%(1.85%) → 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부터 부과) 2020년 1월 1일 이전: 9% → 4.5%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41	지역인재 장학금	1.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2. 지원기간 - '22년 신규선발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 '22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Ⅰ 유형과 동일)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예시: 4년제 →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 '22년 이전 계속지원 '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18년 이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4 생활·복지

생활·복지 정책으로는 2030 무료 건강검진(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알뜰교통카드, 직업트라우마 센터 운영 등 총 7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생활·복지 정책은 ‘청년의 생활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건강 증진과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아우른다.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제시한 생활·복지 분야의 청년정책과 각 정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6] 생활·복지 청년정책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1	2030 무료 건강검진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대 건강검진 항목: 비만, 시간/청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 이상지질혈증, 폐결핵/흉부 질환 등 *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단,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2	알뜰교통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 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혜택 강화: 마일리지 제도를 다양한 정책, 제도 및 민간 기업 등과 연계하여 30%+α의 추가 혜택이 가능 * 미세먼지 정책 연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마일리지를 2배로 적립 * 민간기업 협업: 영화관, 커피숍 등과 협업하여 알뜰카드 이용자 혜택 확대 * 지자체: 차량 2부제 등 환경친화적 정책과 연계하여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저소득층 마일리지 상향 지원: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	<p>참여자 선택한 지급 수단으로 개인별 포인트 지급(1인당 최대 7만 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공단 → 참여자) * 민간기업 카드사 포인트(공단 → 민간운영사) <p>[실천 항목에 따른 포인트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최대 지급액: 70,000원 - 전자영수증·단가: 100원/회 - 리필스테이션·단가: 2,000원/회 - 다회용기(환경부 MU 배달업 2개)·단가: 1,000원/회 - 무공해차 대여·단가: 5,000원/회 - 친환경 제품 구매(그린카드)·단가: 1,000원/회 -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 상장 및 상금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4	직업 트라우마 센터 운영	전문가 상담 및 사후관리 - 사고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 관리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 직/간접 사고 피해자의 심리 안정 - 일상 직장생활 복귀 도모 - 필요시 전문치료 연계
5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사업 청년층 참여 확대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통해 생생한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보훈 정신 계승·발전 탐방비 지원(지역별 상이) - 숙박비: 1인 1박 5만원이내(실비 지급) - 교통비: 1인 1일 10만원이내(실비 지급) - 일비: 1인 1일당 2만원 - 식비: 1인 1일당 2만원
6	병역 이행 중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정부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기준: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중 휴직자 - 지원금액: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10만원까지/전액지원 관련 법안 발의 중) - 지원시기: 지역가입자(매월), 직장가입자(복직 시 일시금) * 군사교육소집 기간, 복무이탈, 분할복무 등 복무중단 기간은 지원 제외
7	병무청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활용도가 많은 서비스를 모아 스마트폰에서 쉽게 활용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5 정책 참여

정책 참여 정책에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형/맞춤형 이동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총 4개의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정책참여 정책은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이라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성을 확대하고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며 청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아우른다. 다음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제시한 정책 참여 분야의 청년정책을 정리하고 각 정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이다.

[표 10-7] 정책 참여 청년정책

순번	청년정책명	내용
1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팀별 과업수행비(8백만원 지원), 멘토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주요 활동 홍보 지원, 청년공동체 간 교류 및 협력지원
2	국가연구개발 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선)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이라는 통합 관리제도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미비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고시) 및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고시) 개정 -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처우개선) 학업과 연구에 몰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처우 개선을 위해 출연연의 학생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과기원의 학생연구원은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 도입 - (학생연구원의 발명자 권리 보호)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이를 기관에 승계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3	지역형/맞춤형 이동신문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형 이동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공공행정부야에 대한 위법·부당한 고충 뿐만 아니라 생활 속 고충 문제(생활법률, 긴급 복지 지원, 소비자피해 등)를 상담 2. 맞춤형 이동신문고 사회적 약자(예, 복지사각 계층,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찾아가 특정 분야에 대한 고충 상담
4	국민생각함	아이디어를 통해 카드뉴스 제작 및 정책제도에 기반 마련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제4절 취업지원 중심의 청년정책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장에서는 정부의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청년정책의 대분류와 그에 따른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유형의 청년정책이 수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취업지원 유형의 정책이 97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정책 참여 유형의 정책은 4개로 가장 규모가 작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대부분이 취업과 창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이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돕기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취업에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많지 않다. 정책 효과성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과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수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책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청년정책의 범주화 및 유형화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고려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청년정책을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정책참여, 생활·복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유형간 독립성이 완전하지 않아 일부 정책은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당초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설정한 청년의 연령대가 정책별·부처별로 상이하여 청년정책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효율적·효과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의 범주 및 유형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미래 청년정책은 단순히 매해 산출될 청년 실업자 수를 낮추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 청년정책은 청년이 원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수도권 밀집 현상, 수도권과 지방의 분열이 심각해지는 현상, 청년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 등을 해결할 정책이 필요하다.

제 11 장

정책 효과 분석: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채정·노법래·조소연

제1절 국민취업지원제도

제2절 취업 결정 요인

제3절 성향점수매칭 방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시간을 준다는 의미

제 1절 국민취업지원제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앞서 청년정책을 검토한 결과 청년정책이 일자리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장에서는 청년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주요 노동시장 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를 탐색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책대상 상당 수는 청년이다. 이 점에 주목해 신규 도입된 실업부조제도가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층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시간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실업부조제도로, 2020년에 종료된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한 제도로 볼 수 있다(김종수, 2019).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이행 확보,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각지대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증가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근로빈곤층 고용 개선과 빈곤가구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제도 도입 후 한 해 동안 약 42.3만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았다(고용노동부, 2022).

취업성공패키지와 마찬가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유형이 두 가지(유형 I, 유형 II)로 구분된다. 정책 참여자들은 나이와 소득, 취업 경험 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취업지원서비스란 과거 취업성공패키지가 실행했던 직업훈련에 더하여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선발된 인원은 고용센터 상담자와 협의해 개인별 취업 능력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형 I 은 크게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청년)으로 나누어진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의 대상은 15~69세 이하의 연령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과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재산을 충족하고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반면, 선발형(청년)은 취업 경험 미충족자를 위한 구분으로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미충족자 및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재산을 충족하는 자를 일컫는다.

유형 I 에 속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참여자 소득이 월수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유형 II 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크게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누어진다.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등이다.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조건은 없다. 청년의 경우 18~34세 연령의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조건은 없다. 중장년은 35~69세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이나 취업경험 조건은 없지만 소득 조건은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유형 II 에 속하는 경우 유형 I 과 동일하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지만 구직촉진수당은 받지 못한다. 다만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에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선발된 인원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 또는 사후관리기간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는다. 취업성공수당 금액은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이고, 지급 이후 추가적으로 6개월 근무 시 100만원이다. 즉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표 11-1]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 자격과 지원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1-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비교

구분	유형 I				유형 II		
	요건 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 활동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세~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 수당	O		X		
		취업활동 비용	X		O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Cn.do>)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활급여나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보다 적용 대상 범위가 넓어 실업보험(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한, 직업훈련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던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제도에 비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한계도 지적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구직을 돕기 위해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한다. 하지만 제도의 취업지원 기간은 1년인데 비하여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만 지급된다(김종수, 2019).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를 유형 I 과 유형 II로 나누어 유형별 취득 자격을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험으로 구분한다. 특히 유형 I 의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의 경우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

간 이상이라는 세부적인 취업 경험을 요구한다. 이는 청년 등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에 대한 적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김종수, 2019).⁵²⁾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상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비율을 살펴본 이병희(2021)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선발형(청년)은 70%를 넘지만 저소득층인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의 경우 그의 절반 정도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 취약성이 높은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돕는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모순된다(이병희, 2021).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촉진수당을 취업성공패키지와 다르게 지급함에 따라 고용센터의 업무량이 과다해지는 문제나 수당만을 목적으로 참여한 수급자들이 일부 유입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인해 취업 의지가 낮은, 수당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급자들이 일부 유입되어 고용센터 취업지원관들의 업무가 과다해졌다(김혜원, 2021)는 것이다.

52) 국민취업제도 유형 I 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유형 II 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금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유형 I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제2절 취업 결정 요인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장의 목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2021년에 도입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어떠한 요인이 청년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취업 성공패키지의 효과성 분석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 효과성 분석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11-2]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가장 도움이 된 부분

단위: 건, %

응답 유형	응답 수(비율)
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음	7,384(81.7)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하였음	842(9.3)
구직 관련 스펙을 보완할 수 있었음	239(2.6)
포기했거나 엄두를 내지 못한 취·창업 계획을 시도하였음	218(2.4)
나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되었음	197(2.2)
자신감, 적극성, 추진력이 높아졌음	74(0.8)
진로·취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행할 수 있었음	69(0.8)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었음	11(0.1)
기타	4(0.0)
합 계	9,038(100.0)

자료: 고용노동부(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

취업취약계층 및 구직자는 금전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을 갖기 위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2019년에 도입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은 청년 구직자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제공하여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2019)에 따르면 참여자의 99.7%가 진로 및 취업 목표 성취에 지원금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음(81.7%)’을 꼽았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분석을 진행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2012)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구직자가 겪는 애로사항이 생계 문제임을 밝히며, 훈련 기간 중 다른 가구원의 소득에 의지하는 이들은 저축을 사용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에 비해 취업 경험률 및 현재 취업률이 낮다고 분석하였다. 이후 취업성공패키지는 세부적인 직업훈련과 함께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취업률이 2009년 36.3%에서 2010년 43.9%로, 2011년 52.6%로 증가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직접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한 학술논문은 드물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김혜원(2021)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고용센터 취업지원관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병희(2021)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하연·이영민(2022)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 경험 프로그램의 만족도 영향요인과 효과성을 분석하였고, 이승호(2021)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요건심사형 참여자의 특성과 만족도를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효과성 분석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라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취업성공패키지는 실업부조제도와 같이 참여자에게 현금 급여는 지급하지 않지만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여 유인을 높이고자 했다. 지원은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 집단상담, 직업훈련, 디딤돌 일자리 및 창업지원, 3개월 간의 취업알선 집중 실시의 3단계로 나누어 실행되었다(신명호 외, 2012).

취업성공패키지의 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2012)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 성과는 신청 시부터 약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양(+)으로 변화하였으며, 신청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취업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취업확률과 미선정자들의 취업확률을 비교해 본 결과 약 8%p의 취업 효과가 나타났다. 참여자의 취업지원 종료 6개월 내 일반사업장의 고용보험 일자리로의 취업률을 분석해 본 결과, 2009년 36.3%에서 2010년 43.9%와 2011년 52.6%로 증가하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2019~2020년에 걸쳐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18~34세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한 정책이다(고재성 외, 2021). 해당 정책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지 않고 졸업 혹은 중퇴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매월 50만원이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구직준비도에 따라서 고용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고용노동부, 202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모니터링과 단기 성과를 분석한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2019)는 심층인터뷰와 면접을 통해 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참여자 다수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구직활동지원금이 참여자들이 진로 변경에 필요한 금전적·시간적 비용을 감당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혼합한 실업부조의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정책대상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할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책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3절

성향점수매칭 방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본 연구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과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청년들의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여 청년 관련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부터 수행되고 있는 횡단조사이다.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700명 내외의 표본을 설계하여 매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대상인 15~39세 공통사항은 일반사항, 결혼 및 자녀관, 교육 관련 인식, 일자리 관련 인식, 주거 및 가구취득 관련 인식, 건강 및 스트레스, 행복과 가치관, 인간관계 및 사회참여 등이다. 이에 더하여, 19~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대학생할, 취업준비 및 직업 훈련, 경제활동상태 등의 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대한 설문 문항은 두 시점 모두 동일하였다. 다만 연도에 따른 이상성을 모형에서 다루기 위해서 조사 시점에 대한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 모형에서 다루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 문항을 정책 경험 변수로 활용하였다. 2020년의 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경험 여부를 따로 설문하였는데, 분석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활용했다.

본 분석에서 정책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결과변수는 취업 준비를 위한 시간 투입 수준(일평균 시간), 취업을 위해 수강료나 응시료, 도서 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액수(단위, 만 원), 전체 생활비 가운데 가족(부모 혹은 친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적 이전의 비율을 활용하기로 한다. 기타 속성 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 학력, 혼인 상태에 대한 설문 결과를 활용했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 “전문대 재학 이상”,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전문대 재학 이상”과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은 각각 해당 교육 기관에서 재학, 퇴학, 졸업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한 특성 변인으로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에는 “휴가 및 일시 휴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응답자 수가 매우 적어서 고용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건강 수준은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5점 척도로 구성된 주관적 건강에 대한 평가 항목을 변수로 활용했다.

2 통계 분석

본 분석은 정책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활용하기로 한다. 정책효과 검토에 있어 중요한 난점 가운데 하나는 실험(처치)집단, 즉 정책을 경험하는 집단에 분석 사례가 무작위로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 경험과 결과변수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교란변수(confounding variable)가 있는 경우 정책 효과 추정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케이스의 속성 변인을 활용해 처치(정책 경험)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성향 점수(propensity score, PS)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구성을 유사하게 만드는 매칭(matching) 과정을 통해 선별한 케이스를 대상으로 효과 추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PSM의 이와 같은 과정은 무작위 선택(random selection)을 통한 실험 설계를 통계적으로 모방(mimic)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서 정책 경험 변수를 결과변수로 하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성향 점수를 우선 추정할 것이다. 정책 경험과 구직 노력에 공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속성 변인으로서 고용상태, 성별, 연령, 교육, 결혼 여부, 주관적 건강, 조사 시기를 모형에서 다루고자 한다. PS 추정 이후에는 최근접 매칭(nearest matching)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두 집단에 대한 매칭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때, 두 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게 1:1 매칭을 수행했다.

본격적인 정책 효과 추정 단계인 회귀분석에서는 매칭된 샘플에 대해서 최소자승법

(OLS)을 활용하여 계수를 추정했다. 이때 정책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앞서 성향점수 추정에서 활용했던 변수를 다시 모형에 투입하여 통제 변인으로 활용했다. 효과 추정은 ATT(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group) 방식을 따랐다. ATT는 정책 경험이 있는 집단 내에서 정책 경험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평균적인 차이를 추정한 결과를 의미한다. 데이터 가공과 분석은 R 4.1.1(R Core Team, 2021) 환경에서 수행되었으며, 성향 점수 추정과 매칭을 위해서 “MatchIt” 패키지(Daniel et. al., 2011)의 관련 함수를 활용했다.

제4절 분석 결과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PSM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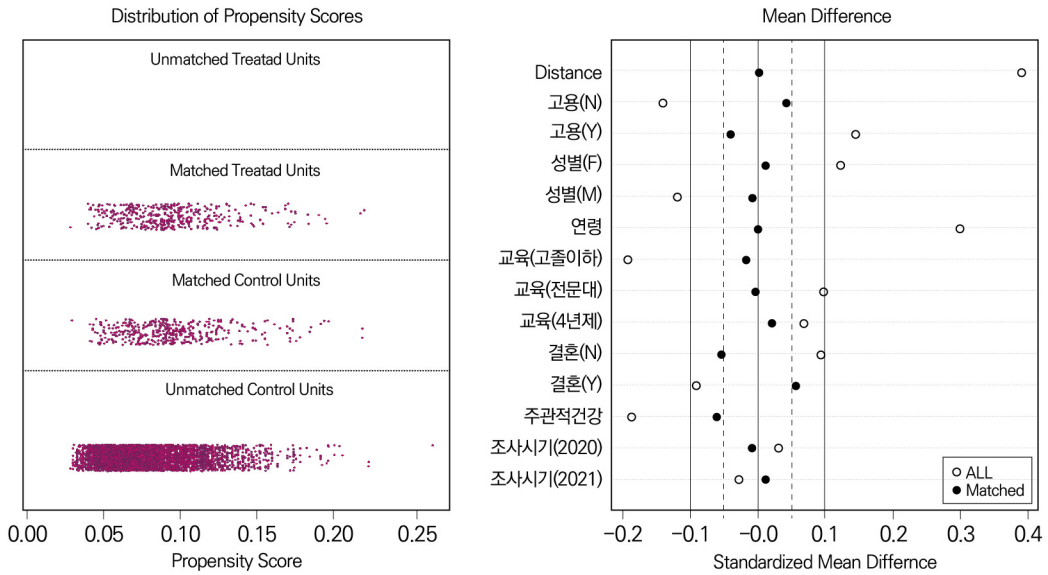
[표 11-3]은 PSM 전후 비교집단 속성 차이 변화를 비교한 표이다. 원데이터에서 정책 경험이 있는 케이스는 418건, 경험이 없는 케이스는 5,143건이었다. 평균 속성으로, 연속변수인 연령과 주관적 건강의 경우는 평균값을 활용했다. 팔호로 하위 범주가 표시된 명목 변수의 경우는 비율값을 활용했다. 예를 들어, 원데이터에서 정책 경험이 없는 집단(통제군)에서 공용된 바가(지난 일주일간 1시간 이상 임금 노동 경험) 있는 케이스는 69%이며, 정책 경험이 있는 집단(실험군)에서는 62%으로, 7%p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매칭 이후에는 두 집단에서의 비율 차이가 2%p 정도로 줄어든다. 연령의 경우 원데이터에서 통제군이 실험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살 정도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칭 이후에는 두 집단의 평균값이 거의 동일하게 집계되었다.

[표 11-3]에 제시되어 있는 거리(distance)는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화된 평균값을 전반적으로 취합한 값이다.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매칭 이후 해당 값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결과는 PSM을 통한 케이스 선택에 따라 비교하고자 하는 두 집단의 일반적인 속성이 상당히 유사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분석에서는 1:1 매칭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최종 분석에 활용된 케이스는 실험군과 통제군 각각 418건으로 총 836 케이스이다.

[표 11-3] PSM 이후 비교집단 평균 간 속성 변화

속성	원데이터		매칭데이터	
	실험군	통제군	실험군	통제군
고용상태(N)	0.31	0.38	0.31	0.29
고용상태(Y)	0.69	0.62	0.69	0.71
성별(여성)	0.53	0.47	0.53	0.52
성별(남성)	0.47	0.53	0.47	0.48
연령	27.31	26.21	27.31	27.31
교육(고졸이하)	0.18	0.26	0.18	0.19
교육(전문대)	0.26	0.22	0.26	0.26
교육(4년제)	0.56	0.53	0.56	0.55
결혼(N)	0.86	0.83	0.86	0.88
결혼(Y)	0.14	0.17	0.14	0.12
주관적건강	3.93	4.08	3.93	3.98
조사시기(2020)	0.65	0.63	0.65	0.65
조사시기(2021)	0.35	0.37	0.35	0.35
Distance	0.09	0.07	0.09	0.09
N	418	5,143	418	418

[그림 11-1]은 성향점수에 따른 매칭 결과를 시각적으로 구성한 결과이다. 좌측의 그림은 매칭 과정을 통해 분석에 포함된 두 집단(매칭된 처치집단, 매칭된 통제집단)의 성향 점수 분포를 2행과 3행에 걸쳐 각각 제시하고 있다. 1행과 4행은 분석에서 제외된 케이스의 성향점수 분포다. 다만 본 분석에서 정책 경험이 있는 집단(처치집단)의 경우 매칭 과정에서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에 1행에 제시된 케이스는 없다.



[그림 11-1] PSM 결과 검토

[그림 11-1]의 우측 그림은 전체 집단에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속성별 차이와 매칭 이후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변수 속성과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준화 과정을 거친 평균값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표 11-3]과 마찬가지로 명목 변수의 경우는 1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 비교에 활용되었다. 색이 칠해지지 않은 원은 원자료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비교집단 간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용 상태, 연령, 교육, 주관적 건강의 경우 차이가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따라서 원자료를 정책효과 분석에서 활용할 경우 추정 결과에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매칭 이후에는 속성 간 차이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여부와 주관적 건강에서 집단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전체 집단에서의 차이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회귀분석 결과

[표 11-4]는 성향점수에 따른 매칭된 샘플을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정책 효과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귀 모형에 성향점수 추정에 활용하였던 주요 개인 변수를 함께 투입하였다. 정책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투자, 비용투자, 사적이전 비율을 결과변수로 삼았다. 정책 경험 및 통계적 유의도가 포착된 속성 변수를 중심으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4] 회귀분석 결과

변수	(DV=시간투자)		(DV=비용투자)		(DV=사적이전)	
	b	p	b	p	b	p
(Intercept)	1.33	0.006	4.58	0.095	98.68	<0.001
정책경험(N)						
정책경험(Y)	0.31	0.002	0.87	0.112	-1.14	0.578
고용상태(N)						
고용상태(Y)	-1.07	<0.001	-3.05	<0.001	-42.13	<0.001
성별(여성)						
성별(남성)	0.26	0.011	0.90	0.113	4.07	0.056
연령	-0.01	0.619	-0.07	0.423	-2.05	<0.001
교육(고졸이하)						
교육(전문대)	-0.09	0.554	0.63	0.455	3.27	0.295
교육(4년제)	0.25	0.069	1.69	0.030	10.65	<0.001
결혼(N)						
결혼(Y)	-0.51	0.002	-1.55	0.094	-9.53	0.006
주관적건강	-0.11	0.087	-0.46	0.230	0.02	0.990
조사시기(2020)						
조사시기(2021)	0.68	<0.001	3.23	<0.001	-0.65	0.763
N	836		836		836	
R2 / R2 adjusted	0.184 / 0.175		0.084 / 0.074		0.368 / 0.361	

우선 고용지원 정책에 대한 경험은 시간투자를 결과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효과($b = 0.31, p < .01$)를 나타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효과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효과성을 일정 부분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 진입에 필요한 노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함에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이 있었음을 지지한다.

한편, 비용 투자와 사적 이전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포착되지 않은 점은 금전적 측면에서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근거로 우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같은 한정적 자원에 비해서 경제적 자원 투자는 정책 경험과 별개로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책 경험에 상관없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 두 집단 모두 일정한 수준의 비용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적 이전 비율의 경우도 정책 경험을 통해 확보된 자원을 바탕으로 사적 이전을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을 통한 자원 혼합을 시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이해일 수 있다.

기타 속성 변수와의 관련성을 간략하게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 상태에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구직과 관련된 노력을 유의미한 차이로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 모형 모두에서 동일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 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b = 0.011, p < .05$) 남성의 시간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사적 이전에의 의존과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관련성($b = -2.05, p < .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나 친지로부터의 사적 이전 수준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교육수준은 비용 투자 정도와 사적 이전 비율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의 학력집단에 비해서 4년제 재학 이상의 집단이 두 지표에서 모두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이는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큰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고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취업에 필요한 시간 투자 수준이 낮고, 사적 이전 비율 또한 낮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에 따른 가구 구성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자유도와 부모나 친지로부터의 사적 이전 정도가 줄

어드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시기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었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에 시간 투자와 비용 투자 수준이 각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인 수준에서 이를 정책의 누적 혹은 성숙에 따른 효과로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제5절 시간을 준다는 의미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장의 분석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책 효과를 개인 수준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정책 효과는 시간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자는 취업 준비에 할애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후자는 취업 준비에 투입하는 비용과 생활 비용에서 사적 이전 의존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취업과 관련한 시간과 경제적 투자는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중요한 요소이며 취업 준비 단계에서 사적 이전의 의존 감소 또한 공공 정책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정책 효과를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성향점수 추정과 매칭 분석을 수행했으며, 선별된 케이스를 활용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정책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취업 준비에 활용하는 시간이 많았다. 이는 취업 지원 정책이 다른 부수적인 활동을 줄이고 취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을 통한 지지 경험은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거나 취업준비 장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다.

다만, 취업과 관련된 경제적인 투입 수준이나 사적 이전의 의존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경제적인 투자나 사적 이전 의존이 공적 공여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공적인 공여를 받지 못한 집단의 경우라도 취업을 위해서 일정한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 집단의 지출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본 분석의 목적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취업 준비와 관련한 노력에 다양한 개인 속성이 관여할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취업 준비에 투입하는 비용과 사전 이전 비중이 커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 취업 성공과 질 높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 취업 준비 단계에서 교육 수준에 따른 투자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교육수준에 의한 노동시장 지위에서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혼인 상태는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시간 투입을 제한하고 사적 이전 수준도 감소시킨다. 새롭게 가족을 구성한 취업 준비 집단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와 같은 제약 요소가 미취업이나 추가적인 구직 과정을 요청하는 불안정 노동 상태의 청년들이 혼인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결론

전환기 청년의 미래

이상직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연구 함의

제 1 절

연구 요약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연구는 한국 청년 문제의 성격을 역사적·비교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 시도였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 청년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적 조건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청년의 삶의 특징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 즉 한편으로는 청년의 삶을 규정하는 구조와 제도를,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의 역할과 인식을 함께 보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가 줄곧 의식한 것은 비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보자.

1장은 오늘날 청년 문제가 등장한 맥락을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형성과 변화라는 맥락에 자리매김하는 작업이었다. 청년은 근대사회에서 삶이 생산기(성인기)를 중심으로 구획되는 맥락에서 등장한 생애 단계 개념이자 집단 개념이다. 이것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가족에서 생식가족으로의 이행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그러한 이행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청년기라는 개념 자체도 의문의 대상이 되었다. 청년 문제는 이러한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등장했다.

2장은 이러한 사회변동론을 배경으로 동아일보 기사를 분석해 20세기 한국사회에서 청년이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된 사회사적 맥락을 밝혔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용어가 정착한 것은 개항 이후 시기부터다. 청년이라는 단어는 1920-30년대에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지면으로는 사회면에 집중되었다. 이는 당시에 여러 청년 단체가 설립된 것을 반영한다. 해방 후에 청년 용어는 많이 사용되지 않다가 1970년대에 오면 사용 빈도가 많아진다. 이는 1970년대의 ‘청년문화’ 논쟁을 반영한다. 이 시기에는 문화면의 비중이 컸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오면 정치면에 청년 단어가 사용된다. 20세기 한국사회에서 청년 개념은 ‘사회’ 현상에서 ‘문화’ 현상으로, ‘정치’ 현상으로 바뀌어 왔다.

3장은 2000년대 이래 청년 담론 구조를 포착한다. 21세기에 한국사회에서 청년과 연결된 단어는 '실업'과 '취업'이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청년실업'이,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에는 '일자리'가,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취업'이라는 단어가 주요 연관어로 등장한다. 2010년대 후반에는 '취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 담론의 영역이 좀 더 넓어지는 현상도 확인된다. 청년이 '취업'이나 '일자리'와 연동되는 것은, 다시 말해 청년이 경제적 (비)주체로 인식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이러한 담론 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이행기적 맥락을 일부 반영한다. 4장은 1장에서 확인한 라이프코스 변화라는 일반적인 변화 과정의 국가 특수적 맥락을 확인하려는 작업이었다. 성인 이행 체제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독일보다는 미국이나 일본과 가깝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특징이 혼합된 사례로, 또는 특정 측면이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독자적인 사례로 규정될 수 있다. 교육 제도의 층화 수준이 낮고 교육 과정의 표준화 수준은 높다. 교육은 일반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학교와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고리는 없다. 공채 등 일반화된, 표준화된 입직 경로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교육기회를 빠른 속도로 확장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어느 수준까지는 계층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으나 형식적으로 기회를 확대할 여지가 없는 오늘날에는 경쟁을 격화하는, 결과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특징은 청년실업 구조 비교 연구에서도 확인된다(5장). 한국은 '고용 없는 성장'을 보이는 사례로, 최근 시점에 접어들어 경제성장과 실업률이 높은 양의 상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실업률을 낮추지 않는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경우 빠르게 탈산업화로 이행하면서 경제성장이 고용을 견인하지 않는 구조로 변화하였지만, 독일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 부분이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국면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이행기적 맥락은 청년의 역할 구조와 인식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장은 성인 이행기에 7개 국가의 청년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비교했다. 동아시아 국가는 보수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다는 통념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은 서구 사회보다 강하게 성역할 분업에 반대하고 있었다. 서구 사회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성역할 분업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 책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이 절반에 육박한다. 동아시아 사회의 성불평등 수준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실제와 인식의 괴리가 그만큼 클 것으로 짐작된다.

청년의 인구 이동을 역사적으로 검토한 7장의 연구 결과는 청년의 경쟁 구조가 일원화되고 있다는 점을 일정 수준 뒷받침하는 결과다. 전체 인구로 보면 과거에 비해 이동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5-29세의 이동이 활발하다.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에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원거리 이동이 크게 감소한 반면, 청년층에서는 지방을 출발해서 수도권으로 도착하는 인구 이동이 여전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에서는 수도권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도착하는 청년의 이동 사유는 대부분 '직업'과 '주택'이었다. 청년의 이동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의 시도간 이동이 30대에 비해 활발했으며, 특히 서울로 도착하는 네트워크의 규모가 컸다. 이러한 흐름을 추동하는 주체는 여성이었다.

이어서 청년층의 불평등 인식과 행복감 등 주관적 인식의 측면을 검토했다. 분배 인식에서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불평등 인식과 개인능력주의 인식의 상관관계는 청년층에서 높았다(8장). 한편으로는 부모 학력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행복감, 만족도, 삶의 의미 인식이 유의미하게 달랐다(9장).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년의 삶을 살펴볼 때에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인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한다.

청년 문제는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것이지만 청년 정책의 다수는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0장). 다양한 유형의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취업지원 유형의 정책이 97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정책참여 유형의 정책은 4개로 규모가 작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대부분이 취업과 창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이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돕기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책도 대부분은 그 대상이 기준중위소득으로 선별된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11장의 정책 효과 분석은 청년 정책이 보다 폭넓은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각지대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주목받

고 있으며, 근로빈곤층 고용 개선과 빈곤가구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은 일정 대상 범위에 속하면 소득이나 재산,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정책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취업 준비에 활용하는 시간이 많았다.

제2절 연구 합의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청년기에서 생애 전반으로

이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합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청년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취직시키고, 결혼시킬까’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취직과 결혼이 당연한 생애 경험이었던 이들의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이 관점은 생명을 도구적으로 보는 것이기도 하다. ‘어떻게 사회가 필요한 사람과 물건을 만들어내게 할까’라는 관점이다. 문제는 이런 식의 ‘사회화’가 오늘날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접근은 청년들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취직하고 결혼하고 싶어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들이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지원해 주면’ 된다는 논리다. 그런데 ‘청년 문제’는 물질적 지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기존의 논리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 ‘발전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되는 오늘날에 여전히 발전주의적 전제에 기초해 물질적 유인으로, 욕망과 공포의 논리로, 인구를 동원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한 시도가 오늘날 ‘청년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구적 시각은 삶에 대한 분절적 접근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청년에 대한 시각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국사회는 생애의 문제를 특정 국면의 문제로, 특정 측면의 문제로 다룬다. 유년은 유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본다. 우리 모두는 유년에서부터 노년으로 간다. 유년과 중년과 노년은 보통 가족관계를 매개로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보면 유년의 문제도 청년의 문제이고, 노년의 문제도 청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청년의 미래’라고 하면 ‘지금의 20대가 60-70대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미래의 청년’이라고 하면 ‘지금 태어난 이들이 20년 후에 어떤 모습을 살아갈까’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이 두 질문을 합하면 한국인의 생애 전체

에 대한 질문이 된다. 관계론적 시각과 생애사적 시각에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세대론이나, 계층론이나의 이분법적 구도에 빠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청년이 전환기에 있다는 의미는 유년과 노년도 전환기에 있다는 의미다. 근대사회는 연령을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해 왔다. 그것을 제도와 규범이 뒷받침했고, 그러한 패턴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평가했다. 1장에서 확인했듯이 ‘청년(기)’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의 산물이다.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가 구별되면서 그것의 이전 단계로서 청년기와 이후 단계로서의 노년기가 형성되었고 청년기의 주요 역할은 학생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연령-역할-제도-규범의 관계가 바뀌고 있다. 그렇기에 기존의 틀로 변화를 평가(좋다/나쁘다, 옳다/그르다)하려 하기보다는 연령체제 전체를 상대화해 볼 필요가 있다.

20대에 맞는 어떤 역할을 전제하고 그것을 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과 함께, 20대에 실제 사람들이 어떤 역할 관계망에 놓여 있는가를 충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른 연령대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계망의 구조 측면에서,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의 맥락에서 서로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만날 수도 있다. 20대와 50대의 특정 집단이 비슷한 정책 대상으로 묶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오늘날 사회구조에 맞는 연령대(청년기)의 의미를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령이라는 표식이 갖는 의미를 한 번에, 단번에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열린 관점에서 새로운 연결 방식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사회의 청년정책 영역에서 지금이 ‘전환기’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인식을 갖추려면 현재를 상대화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나 비교사회적으로 한국 청년의 위치를 맥락화하는 논의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여러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한 가지 함의는 이제는 청년기를 과도기적 단계로, 미숙한 준비 단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청년기의 생활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려고 하기보다 그들이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결정할 수 있는 통로와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으로

최근에 정책을 언급할 때 ‘다양성’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가치관의 변화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취직·결혼·출산의 경로를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밟지 않게 됨에 따라 확인되는 ‘다양화’ 경향에 주목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회조직 원리로서의 획일성/다양성 논의와 현상으로서의 획일성/다양성 논의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해서 그렇다는 것과 다양해져야 한다는 말은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

소비할 수 있는 것의 범위가 넓어졌고 그와 연관되어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졌을 수는 있으나 삶에 대한 태도나 삶의 형식과 생명이 제도화(의료화, 조직화, 시설화)되는 방식으로 보면 오늘날의 삶이 과거보다 획일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죽었다면, 오늘날에는 고도로 통제되고 조직된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대부분이 태어나고 죽는다. 일상과 생애도 통제되고 제도화된 환경(학교, 회사, 제도 등)에서 조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청년의 이행 지연, 또는 이행 경로의 해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형식이 비슷해진 것의 결과일 수 있다. 즉 더 많은 사람이 단일 경쟁 체제에 편입된 것의 결과일 수 있다. 이는 경제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요인의 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부모 세대와 비교한 사회이동의 수준도 낮아지지 않았다. ‘경쟁 참여의 기회’가 확장되었다. 그러면서 성패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커졌다. 책임의 주체도 분명해졌다. 역설적으로 삶의 조건이 비슷해지면서 상대적 비교의 가능성이, 차이의 감각이 커지고 높아졌을 수 있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것도 어떤 맥락에서는 비교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대안은 ‘기회의 평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결과의 불평등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가난한 집 자식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전자의 주장이라면, 소위 능력이라고 측정되는 잣대에 따른 결과의 격차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후자의 주장이다. 형식적으로 기회를 넓힐 여지가 줄어든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경쟁의 표준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경쟁의 수준을 심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시킨(2016)은 경쟁의 병목(Bottleneck) 자체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모든 계층이) 그것을 같은 확률로 통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접근법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회 구조 자체가 그러한 형태로 굳어진 맥락에 주목해 병목 자체를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길을 사회가 제시하고 동시에 병목(통과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책적으로는 다양한 삶의 영역(물리적, 물질적, 관계적)에서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해 줄 제도를 마련(주거권 보장, 소득 보장, 사회서비스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2021: 75-82). 이러한 관점에서 15세 이상 한국인의 4명 중 1명이 이상적 분배 기준으로 ‘필요’나 ‘균등’을 꼽았다는 점(8장)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오늘날 능력주의의 강조는 성과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아니라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바람의 반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들의 ‘공정’ 요구 담론을 마냥 보수화된 입장으로, 계도되고 계몽되어야 할 어떤 (잘못된) 이념으로 보지 않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동원해서 ‘성과주의’를 은연중에 부과하려는 시도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능력주의 논의에서 벗어나는 데에 중요한 것은 성과가 중요하냐 노력이 중요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력-성과의 관계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환경은 ‘노력하면 된다’라는 신앙을 강제하는 것으로는 만들 수 없다. 시험주의 체제에서 노력 강조는 결과적으로 승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각자의 자질을 나름의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능력주의는 결과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필요와 균등의 논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다시 말해 능력주의에서 ‘능력’이라는 조건을 떼어 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사회에서 다양성이라고 했을 때 특정한 집단을 분류하고 포착해 그들에게 맞는 어떤 것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한국의 이른바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도 이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최적화된 세밀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양한 경우의 수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다양성 자체를 목표로 정책을 세울 수는 없다. 정책이란 어쩔 수 없이 획일성을 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편성의 논리로 정책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보편성의 논리는 ‘기회의 평등’을 말할 때에만 사용된다. 이제는 ‘결과의 평등’의 맥락에서 보편성의 논리를 상상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편성의 정책/제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근대가족 모델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이고 비주류적인 것으로 배제되어 온 이들을 (보편성의 제도에) 포함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다양성을 지향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발전주의와 도구적 인간관을 넘어설 정책 논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청년정책, 여성정책, 가족정책이라는 말의 딜레마도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 관계가 다양해질 것이 예상된다면 가족보다는 개인 단위 사회정책을, 가족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 단위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령 육아수당을 돌봄수당으로, 육아시간을 돌봄시간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구직활동수당을 사회활동수당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집단으로 나눠서는 정책의 정당성을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요컨대 청년의 문제는 생애 전반의 문제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태어나고 죽는 문제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한국 사회는 인구와 생명을 여전히 생산인구나 부양인구로, 인력 문제로 생각한다. 생명을 도구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생명을 보살핀다는 관점에서 보편적인 정책의 논리를 상상해 보면 좋겠다. ‘취약한 생명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라거나 ‘서로 돌보는 사회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정책적 상상을 해 보았으면 한다. 아이를 돌보는 문제에서 사람을 돌보는 문제로, 사람을 돌보는 문제에서 생명을 돌보는 문제로 정책 기조가 확장되면 좋겠다. 생명은 기본적으로 다양하다. 보존되기만 한다면 생명은 다양하게 살아갈 것이다.

현재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라는 취지의 선언들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활동을 자신이 의미 있게 여기는 관계를 맺으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이다. 그것은 좁은 의미의 ‘특정 일자리’나 ‘특정 집’이, ‘특정 결혼’이 아닐 것이다. 취직과 결혼과 출산은 삶의 기본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각자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경험하는 것일 수 있다. 취직, 결혼, 출산의 의미는 이미 고정되어 있지 않다. 원래부터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도와줍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고정해 버리고 규정해 버리고 차별해 버린다.

그저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참여' 자체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령-역할-규범 체제를 다시 짜는 문제는 기존의 틀을 고수하는 한 혼란과 불안의 요인일 것이다. 성장과 공급, 확충을 목표로 숨 가쁘게 달려오는 가운데 왜곡된 사회 시스템을 재편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 과제는 혁신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돌봄의 문제, 국방의 문제, 교육의 문제, 주거의 문제 등 다양한 각론의 맥락에서 전환의 방향과 방식을 논의해 가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지금보다는 더 '청년'이라는 맥락이 아닌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일하는 문제에 대해, 돌보는 문제에 대해, 죽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청년이 노동자로, 주민으로, 시민으로 발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청년'으로 묶고 여러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특정한 사안에서 관련 역할을 가진 이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히려 청년의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야 이야기가 연속성을 갖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동아일보』(1920~1999)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고용노동부.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0.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고우림·조영태·차영재·장대익. 2020. “한국 합계출산율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인구밀도.” 『사회과학담론과정책』 13(2):129-153.

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2021.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국회미래연구원.

권오규·마강래. 2012. “대학진학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역연구』 28(4):65-77.

김기현·차세영·이승호·김문길·박미선. 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두순·이주현·이성재·김지은. 2011. 『2009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1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김두환. 2015. “한국 고등교육 팽창의 한계: 대학교육성과의 양극화.” 『사회사상과 문화』 18(3):139-186.

김리영. 2019. “지역 간 특성 차이가 서울시 청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연구』 35(2):29-57.

- 김상원·이훈래. 2016. “수도권 도시유형별 내부 인구이동 영향요인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9):737-744.
- 김석호·정우연·조하영·김지윤·김두환. 2019. “한국인의 꿈-자본과 가족관계의 질: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문화』 31(2):1-57.
- 김석호·주윤정·성연주·김지애·김은지·이상규·김홍중. 2017. “한국 청년세대의 꿈-자본 측정.” 『문화와사회』 24:289-331.
- 김선기. 2014.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사회』 24(1):5-68.
- 김영선. 2014. 『정상인간』. 오월의봄.
- 김영철·이민환. 2003. “지역인재의 수도권 대학 진학과 지역경제력 유출효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19(2):119-141.
- 김영화. 2000. 『한국의 교육과 사회』 교육과학사.
- 김유빈·강동우·오선정·유동훈·이지은. 2018. 『청년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을식·김정훈. 2014. “경기도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이슈&진단』 141:1-25.
- 김종성. 2020. “세습에 족벌 경영까지... ‘조중동’ 아닌 ‘방홍김’.” 『오마이뉴스』 (2020.2.29.)
- 김종수. 2019. “실업부조제도로써 자활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8(2):171-211.
- 김준영. 2016. “청년인구의 지방유출과 수도권집중: 5가지 특징.” 『지역고용동향브리프』 가을호:6-24.
- 김지경. 2018. “청년세대 삶의 인식 수준과 행복도의 영향요인.” 『한국사회정책』 25(3):209-245.
- 김창남. 2004. “청년문화의 역사와 과제.” 『문화과학』 37:173-185

- 김태봉·박근형. 2020.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한 청년실업과 경기상관분석.” 『경제분석』 26(2):43-71.
- 김현우·강명구. 2020. “삶의 자기결정권 선호에 따른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인구이동 특징.”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5):49-78.
- 김혜원. 2021. “고용센터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노동리뷰』 12월:47-62.
- 김홍중. 2015. “꿈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부르디외와 벤야민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08:32-72.
- 김희삼. 2018. “저신뢰 각자도생 사회의 치유를 위한 교육의 방향.” 『KDI Focus』 91:1-8.
- 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 남찬섭. 2002.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에스핑-앤더슨의 기준을 중심으로.” 『상황과복지』 11:163-202.
- 남춘호·유승환. 2021.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한국 언론의 청년담론 및 청년개념 분석.” 『지역사회연구』 29(4):237-26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국민취업지원기획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13. 『한·미·일·독 기업의 채용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 라이시, 로버트. 2001. 『부유한 노예』. 오성호 옮김. 김영사.
- 마쓰나가 게이코. 2015. 『로컬지향의 시대』. 이혁재 옮김. 알에이치 코리아.
- 마일즈, 존. 1992. 『복지국가의 노년: 공적 연금의 정치경제학』. 김혜순 옮김. 한울.
- 모리오카 고지. 2017. 『고용신분사회』. 김경원 옮김. 갈라파고스.
- 민보경·변미리. 2017. “서울인구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전출입이동의 공간 분석과 유형화.” 『서울도시연구』 18(5):85-102.
- 바우만, 지그문트. 2010. 『새로운 빈곤: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 이수영 옮김. 천지인.

- 박권일. 2021. 『한국의 능력주의: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 참는 것에 대하여』. 이데아.
- 박민진·민보경·이민주. 2021. “미래세대의 행복과 영향 요인 연구: MZ세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4(4):121-147.
- 박부명·김성아. 2020. “청년층의 인구이동과 주택정책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LHI 저널』 11(1):21-28.
- 박준식. 2001. 『세계화와 노동체제』. 한울.
- 박진경·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해남·박미희. 2021. “다중격차 시대 지역 청년의 자본과 아비투스.” 『경제와사회』 131:55-87.
- 베버, 막스. 2006. 『직업으로서의 학문』. 전성우 옮김. 나남.
- 벡, 울리히.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옮김. 새물결.
- 벡, 울리히. 1999.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홍윤기 옮김. 생각의 나무.
- 벡-게른스하임, 엘리자베트. 2005.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박은주 옮김. 새물결.
- 변금선·김기현. 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46(2):257-285.
- 부르디외, 피에르. 199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옮김. 새물결.
- 부르디외, 피에르. 2001. 『파스칼적 명상』. 김용권 옮김. 동문선.
- 사사노 미사에. 2021.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 성별 코호트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사토 도시키. 2014. 이경희 옮김. 『불평등 사회, 일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세넷, 리차드. 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조용 옮김. 문예출판사.
- 세넷, 리차드. 2009. 『뉴캐피털리즘: 표류하는 개인과 소멸하는 열정』. 유병선 옮김. 위즈덤하우스.

- 송용찬·김민곤. 2016.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0(3):151-179.
- 신명호·황덕순. 2012.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산업노동연구』 18(1):113-144.
- 신정철. 2019. “서울시 가구주 연령대별 주거이동거리 실증분석: 2005-2015년.” 서울 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아마노 이쿠오. 1992. 『교육과 선발』. 석태종·차갑부 옮김. 양서원.
- 아리에스, 필립. 2003. 『아동의 탄생』. 문지영 옮김. 서울: 새물결.
- 안선영·Hernan Cuervo·Johanna Wyn.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야마다 마사히로. 2004. 『패러사이트 싱글의 시대』. 김주희 옮김.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야마다 마사히로. 2010. 『희망격차사회』. 최기성 옮김. 아침.
- 양승훈. 2021. “한국의 능력주의는 ‘입신양명’이자 ‘합격주의’다.” 『시사인』 720호(7월 6일).
- 양재진. 2003. “노동시장 유연화와 한국 복지국가의 선택: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비정합성 극복을 위하여.” 『한국정치학보』 37(3):403-428.
- 양해만·조영호. 2018.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탈물질주의: 왜 한국인들은 여전히 물질주의적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2(1):75-100.
- 엄창욱·노광욱·박상우. 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대구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6(3):259-283.
- 오수연·김성엽·박성민. 2021. “청년정책 거버넌스 체계 현안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현대사회와행정』 31(4):141-178.
- 오은열·문채. 2016. “지역인구이동 변화에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9(4):67-92.
- 오찬호.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개마고원.

- 오치아이 에미코. 2004. 『21세기 가족에게』. 이동원 옮김. 양서원.
- 오치아이 에미코. 2012. 『근대가족, 길모퉁이를 돌아서다』. 전미경 옮김. 동국대학교 출판부.
- 와일, 데이비드. 2015. 『균열 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송연수 옮김. 황소자리.
- 유홍준·김월화. 2006. “한국 직업지위 지수: 과거와 현재.” 『한국사회학』 40(6):153-186.
- 에스핑-안데르센, 요스타. 2007.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박시종 옮김. 성균관 대학교출판부.
- 엘리아스, 노베르트. 1996. 『죽어가는 자의 고독』. 김수정 옮김. 문학동네.
- 앵겔스, 프리드리히. 2014.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 이재만 옮김. 라티오.
- 이기훈. 2014.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근대, 청년을 호명하다』. 돌베개.
- 이민주·박민진. 2022. “서울 청년의 행복격차: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적용.” 『도시연구』 21:227-271.
- 이병희.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차 고용안전망 역할 강화.” 『노동리뷰』 12월 호:35-46.
-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 연구 I: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실태』. 한국노동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상림·이지혜·Bernhard Köppen·임소정·성백선. 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직. 2020. “전환기 성인 이행 경로의 변화: 1970-1984년 코호트의 교육·노동·가족 이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상직. 2022a. “한국 청년의 성인기 역할 구조 변화, 1998-2018: 젠더와 계층 차이.” 『한국인구학』 45(1):33-72.
- 이상직. 2022b.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국가미래전략 Insight』 50:1-20.

- 이순미. 2018. “지방 중소도시 청년들의 다차원적 빈곤과 행복의 역설.” 『한국사회학』 52(4):243-293.
- 이승렬. 2015.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적 독립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영미. 2016. “청년문화는 왜 하필 1970년대였을까?” 『인물과사상』 2월:168-181.
- 이정은. 2022. “산업도시의 젠더 인식과 청년들의 이동.” 『경제와사회』 134:282-316.
- 이정희·이창수·이상경. 2017. “수도권의 도시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전입률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3):141-150.
- 이진구·이효중·박상훈. 2016. 『한국 인력채용 방식의 특성분석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구보고서.
- 이찬영. 2018.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1(2):707-729.
- 임재빈·정기성. 2021. “지역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부산 시 사례를 중심으로.” 『LHI 저널』 12(2):47-59.
-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 장덕진. 2017. “데이터로 본 한국인의 가치관 변동: 김우창, 송복, 송호근의 양적 변주.” 김우창 외. 『한국사회 어디로?』. 아시아. pp. 298-348.
- 장효진. 2017. “노동시장정책이 청년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고용보호, 직업교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3):325-358.
- 정성미. 2017. “가구소득계층별 미취업 청년 특성.” 『노동리뷰』 151:7-21.
- 정우연·조하영·김석호. 2022. “무엇이 청년의 꿈을 가르는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본인의 역량에 따른 꿈의 내용 차이.” 『조사연구』 23(1):107-130.
- 정윤진·김현정. 2022. “한국 청년세대의 행복조건: 부모의 소득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33(2):141-164.
- 정이환. 2013. 『한국 고용체제론』. 후마니타스.
- 정책기획위원회 국정연구국. 2019.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행연구』. 정책기획위원회.

- 조성호·菅桂太·渡邊雄一·四方理人·김유경·김지민. 2017.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 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영훈. 2001. “유교주의,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한국사회학』 35(6):169-191.
- 조한혜정·엄기호·최은주·천주희·이충한·이영룡·양기민·강정석·나일등·이규호. 2016. 『노오력의 배신: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창비.
- 주창윤. 2006. “1970년대 청년문화 세대담론의 정치학.” 『언론과사회』 14(3):73-105.
- 천상현·이연수·임이정·박성진. 2014. “주택의 매매 및 전세가격 증감률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9(5):151-172.
- 최경주. 2017. “청년실업률 왜 상승하는가?” 『KDI Focus』 88:1-7.
- 최선영. 2020. “한국 여성의 생애과정 재편과 혼인행동의 변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연구. 1990. “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적·조직적 발전과정.” 조희연 편. 『한국사회운동사: 한국변혁운동의 역사와 80년대의 전개과정』. 죽산.
- 최은영. 2004. “선택적 인구이동과 공간적 불평등의 심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7(2):57-69.
- 쿤츠, 스테파니. 2009. 『진화하는 결혼』. 김승옥 옮김. 작가정신.
- 틸리, 루이스 A.·조앤 윌라치 스콧. 2008. 『여성, 노동, 가족』. 장경선·박기남·김영 옮김. 후마니타스.
- 피시킨, 조지프. 2016. 『병목사회: 기회의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안』. 유강은 옮김. 문예출판사.
- 한국경제연구원. 2021. “청년 대졸자 고용률 75.2% OECD 37개국 중 31위.”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 고용노동부.
- 한영빈. 2020. “유럽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와 청년실업의 상관관계: 정치경제학적 고찰.” 『유럽연구』 38(2):1-28.

- 허만형. 2021. “광역자치단체의 청년실업 영향요인 분석: 청년지원 프로그램 도입의 실효성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1(1):23-49.
- 허종호·민보경·이채정·이상직. 2021.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 홉스봄, 에릭. 1997.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이용우 옮김. 까치.
- 황용주·최정도, 2016, “21세기 세종 말뭉치 제대로 살펴보기: 언어정보나눔터 활용하기.” 『새국어생활』 26(2):73-86.
- Aceleanu, M. I., Serban, A. C. and Burghilea, C. 2015. “Creating the youth employment: A ch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ility* 7:2623-2643.
- Allmendinger, Jutta. 1989. “Educational Systems and Labor Market Outcom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5(3):231-250.
- Anderson, Michael. 1985. “The Emergence of the Modern Life Cycle in Britain.” *Social History* 10(1):69-87.
- Andrews, D. and Leigh, A. 2009. “More inequality, less social mobility.” *Applied Economics Letters* 16(15):1489-1492.
- Bartholomew, D. J., F. Steele, J. Galbraith and I. Moustaki. 2008. *Analysis of Multivariate Social Science Data* (2nd ed.). CRC Press.
- Bayrak, R. and Tatli, H. 2018. “The Determinants of Youth Unemployment: A Panel Data Analysis of OECD Countries.” *Th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5(2):231-248.
- Betcherman, G., Olivas, K. and Dar, A. 2004. “Impact of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New Evidence from Evaluation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Developing and Transition Countries.”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Series* 0402.

- Betcherman, G., Godfrey, M., Puerto, S., Rother, F. and Stavreska, A. 2007. "A Review of Interventions to Support Young Workers: Findings of the Youth Employment Inventory." The World Bank Discussion Paper No. 0715.
- Bloome, D. 2015. "Income Inequality and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93(3):1047-1080.
- Brambor, T., Clark, W. R., and Golder, M. 2006. "Understanding interaction models: Improving empirical analyses." *Political Analysis* 14(1):63-82.
- Braumoeller, B. F. 2004. "Hypothesis Testing and Multiplicative Interaction Ter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4):807-820.
- Breen, R. and M. Buchmann. 2002. "Institutional Variation and the Position of Young People: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80(1):288-305.
- Brezis, E. S. and Hellier, J. 2018. "Social mobility at the top and the higher education syste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2:36-54.
- Brinton., Mary C. 2010. *Lost in Transition: Youth, Work, and Instability in Postindustrial Jap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inton, M. C. and Lee, D. J. 2016. "Gender-role ideology,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st-industrial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2(3):405-433.
- Bruckner and Mayer. 2005. "De-Standardization of the Life Course: What It Might Mean? And If It Means Anything, Whether It Actually Took Plac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9:27-53.
- Bruno, G. S. F., Tanveer, M. C., Marelli, E. and Signorelli M. 2017. "The Short- and Long-run Impacts of Financial Crises on Youth Unemployment in OECD Countries." *Applied Economics* 49(34):3372-3394.
- Brzinsky-Fay, C. 2007. "Lost in Transition? Labour Market Entry Sequences of School Leavers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409-422.

- Buchmann, M. C. 1989. *The Script of Life in Modern Society: Entry into Adulthood in a Changing Worl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chmann, M. and Irene Kriesi. 2011.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481-503.
- Chang, Kyung-Sup. 1999. "Compressed modernity and its discontents: South Korean society in transition." *Economy and Society* 28(1):30-55.
- Chang, Kyung-Sup. 2010. "The second modern condition? Compressed modernity as internalized reflexive cosmopolitization."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444-464.
- Chang, Kyung-Sup. 2022. *The Logic of Compressed Modernity*. Polity Press.
- Choi, Kyungsoo. 2017. "Why Korea's Youth Unemployment Rate Rises." 『KDI Focus』 88:1-11.
- Choudhry, M. T., Marelli, E. and Signorelli, M. 2012. "Youth Unemployment Rate and Impact of Financial Crises." *International of Journal of Manpower* 33(1):76-95.
- Christian Helms Jørgensen et al. 2019. "A Nordic transition regime? Policies for school-to-work transitions in Sweden, Denmark and Finland." *Europe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8(3):278-297.
- Corak, M. 2013. "Inequalit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United States in comparison," in Robert S. Rycroft ed. *The Economics of Inequality, Poverty, and Discrimination in the 21st Century*. Praeger. pp. 107-126.
- Corijn, M. and E. Klijzing eds. 2001. *Transitions to Adulthood in Europe*. Springer.
- Cotter, D., Hermsen, J. M. and Vanneman, R. 2011. "The end of the gender revolution? Gender role. attitudes from 1977 to 2008."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1):259-289.

- Crisp, R., & Powell R. 2017. "Young People and UK Labour Market Policy: A Critique of 'Employability' as a Tool for Understanding Youth Unemployment." *Urban Studies* 54(8):1784-1807.
- Durlauf, S. N., & Seshadri, A. 2018. "Understanding the Great Gatsby Curve." *NBER Macroeconomics Annual* 32:333-393.
- Eccles, J. S. 2005. "Influences of parents' education on their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s: The role of parent and child perceptions." *London Review of Education* 3(3):191-204.
- Emmanuel Todd. 2008[1990]. 『世界の多様性』(La diversite du monde). 荻野文隆訳. 藤原書店.
- England, Paula. 2016. "Sometimes the social becomes personal: Gender, class, and sexual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1(1):4-28.
- England, Paula. 2010. "The gender revolution: Uneven and stalled." *Gender & Society* 24(2):149-166.
- Esping-Andersen, G. 2009.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Polity.
- Eurofound. 2014. *Mapping youth transitions in Europe*.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Focacci, C. N. 2020. "'You reap what you sow': Do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lways increase job security? Evidence from the Youth Guarantee." *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9:373-429.
- Gelman, A. and Hill, J. 2007. *Data Analysis Using Regression and Multilevel/Hierarchical Mode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orge, L. K. 2003. "The Future of the Life Course: Late Modernity and Life Course Risks," in J. T. Mortimer and M. J. Shanahan eds. *Handbook of the Life Course*. New York: Plenum. pp. 671-680.

- Goldin, Claudia. 2006. "The quiet revolution that transformed women's employment, education, and famil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6(2):1-21.
- Goldscheider, Frances, Eva Bernhardt, and Trude Lappegård. 2015.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2):207-239.
- Hamilton, Stephen F. 1990. *Apprenticeship for Adulthood: Preparing Youth for the Future*. New York: Free Press.
- Hall, P. A and Soskice, David eds.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 P. A. and Taylor, R. C. R. 1996.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Political Studies* 44:936-957.
- Hochschild, Arlie and Anne Machung. 2012. *The Second Shift: Working Families and the Revolution at Home*. Penguin.
- Jimeno, J. F. and Diego, R-P. 2002. "Youth unemployment in the OECD: demographic shifts,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macroeconomic shocks."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155.
- Jonas Olofsson and Martin Kvist. 2020. "Is the Swedish transition regime still universalistic? A study on growing socio-geographical differences in youth establishment patterns." *Policy Futures in Education* 19(1):111-127.
- Jones, Catherine. 1993. "The Pacific challenge: Confucian welfare states," in C. Jones ed. *New Perspectives on the Welfare State in Europe*. Routledge. pp. 198-217.
- Kerckhoff, Alan C. 1996. "Building Conceptual and Empirical Bridges between Studies of Educational and Labor Force Careers," in Alan C. Kerckhoff ed. *Generating Social Stratification: Toward a New Research Agenda*. Westview Press. pp. 37-56.

- Kim, Doo Hwan and Choi Yool. 2015. "The Irony of the Unchecked Growth of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Crystallization of Class Cleavages and Intensifying Status Competition." *Development and Society* 44(3):435-463.
- Kim, D., Kim, M. and Lee, S.-J. 2021. "Income Inequality, Social Mobility, and Electoral Participation in the US Counties: Revisiting the Inequality-Participation Nexus." *Political Studies*, 00323217211059433. <https://doi.org/10.1177/00323217211059433>
- Kohli, Martin. 2007.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Life Course: Looking Back to Look Ahead."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4(3-4):253-271.
- Leisering, Lutz. 2003. "Government and the Life Course," in Jeylan T. Mortimer and Michael J. Shanahan eds. *Handbook of the Life Course*.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pp. 205-225.
- Lewis, A.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22:139-191.
- Lyubomirsky, S., King, L. and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803-855.
- Mahoney, J. and K. Thelen. 2010.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coni, G., Beblavý, M. and Maselli, I. 2016. "Age Effects on Okun's Law with Different Indicators of Unemployment." *Applied Economic Letters* 23(8):580-583.
- Mariana-Cristina, G. 2015. "Entrepreneurship, a solution to improve youth employment in the European Union." *Management Strategies Journal* 26(4):580-588.
- Maurice, Marc, Francois Sellier, and Jean-Jacques Silvestre. 1986. *The social foundations of industrial power: a comparison of France and Germany*. (translated by Arthur Goldhammer) Cambridge, Mass.: MIT Press.

- Mayer, K. U. 2005. "Life courses and life chanc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Stefan Svallfors ed. *Analyzing Inequality: Life Chances and Social Mobil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7-55.
- Mayer, K. U. and Urs Schoepflin. 1989. "The State and the Life Cours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1):187-209.
- Musgrove, Frank. 1965. *Youth and the Social Ord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Müller, Walter and M. Gangl eds. 2003. *Transitions from Education to Work in Europe: The Integration of Youth in EU Labor Marke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chiai, Emiko. 2011. "Unsustainable societies: The failure of familialism in East Asia's compressed modernity." *Historical Social Research/Historische Sozialforschung* 36(2):219-245.
- Ochiai, Emiko. 2014. "Leaving the West, rejoining the East? Gender and family in Japan's semi-compressed modernity." *International Sociology* 29(3):209-228.
-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COPE Policy Brief. <http://oe.cd/social-mobility-2018>
- Osterman, Paul. 1980. *Getting Started: The Youth Labor Market*. Cambridge, MA: MIT Press.
- Park, Hyunjoon and Gary Sandefur. 2005. "Transition to adulthood in Japan and Korea: An overview." *Sociological Studies of Children and Youth* 10:43-75.
- Patel, L., Graham, L. and Showa, G. 2020. "Evidence of Non-economic Indicators as Makers of Success for Youth in Youth Employability Programs: Insights from a South Africa Stud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8:1-8.
- Prarama, P. and Purmiyati, A. 2020. "Increasing Number of Young

- Unemployment due to Inflation,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Opcion* 36(91):296-308.
- Raffe, David. 2008. “The concept of transition system.”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1:277-296.
- Rosenbaum, James E. and Takehiko Tariya. 1989. “From High School to Work: Market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in Jap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6):1334-1365.
- Scholz, Ronny ed. 2019. *Quantifying Approaches to Discourse for Social Scientists*. Palgrave Macmillan.
- Selenko, E. and Pils, K. 2019. “The after-effects of youth unemployment: More vulnerable persons are less likely to succeed in Youth Guarantee programmes.”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40(2):282-300.
- Smelser, Neil J. and Sydney Halpern. 1978. “The Historical Triangulation of Family, Economy, and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Supplement):S288-S315.
- Snijders, T. A. B. and Bosker, R. J. 2011. *Multilevel Analysis: An Introduction to Basic and Advanced Multilevel Modeling*. SAGE.
- Solt, F., Kim, D., Lee, K. Y., Willardson, S. and Kim, S. 2014. “Neoliberal reform and protest in Latin American democracies: A replication and correction.” *Research & Politics* July-September:1-13.
- Speckesser, S. S., Gonzalez Carreras, F. J. and Kirchner Sala, L. 2019.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for young people and youth unemployment: An analysis based on aggregate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40(8):1510-1534.
- Todaro, P. 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59:138-148.

- Tomic, I. 2018. "What Drives Youth Unemployment in Europe? Economic vs Non-economic determinant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57(3):379-408.
- Wajid, A. and Kalil, R. 2013. "The Impact of Inflation and Economic Growth on Unemployment: Time Series Evidence from Pakistan."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Management. pp 1-22.
- Walther, Andreas. 2006. "Regimes of youth transitions: Choice, flexibility and security in young people's experiences across European contexts." *Young* 14(2):119-139.
- Wiedemann, Gregor. 2015. *Text Mining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Springer.
- Windolf, Paul and Stephen Wood. 1988. *Recruitment and Selection in the Labor Market: A Comparative Study of Britain and West Germany*. Avebury.
- Yu, Z. and Wang, F. 2017. "Income Inequality and Happiness: An Inverted U-Shaped Curve." *Frontiers in Psychology* 8. doi: 10.3389/fpsyg.2017.02052.
- 北村行伸, 坂本和靖. 2003. 「結婚問題を家族関係から考える：パラサイトシングルとノンパラサイトシングルの比較分析」(<https://www.ier.hit-u.ac.jp/~kitamura/PDF/P18.pdf>).
- 久我尚子. 2019. 「共働き世帯の妻の働き方：過半数が「150万円の壁」を超えないが、夫後年週ほど妻高年収」.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19年11月25日記事.
<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63067?pno=1&site=nli>
- 坂本和靖. 2011. 「パラサイト・シングル--親同居未婚者が抱える問題 (特集 あの議論はどこへいった)(雇用・就業と労働市場)」. *日本労働研究雑誌* 53(4):10-13.
- 鈴木亘. 2012. 「10年後のパラサイト・シングルとその家族」. 西村周三監修・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編 『日本社会の生活不安: 自助・共助・公助の新たなカタチ』 慶應義塾大学出版会, 177-200.
- 山田昌弘. 1999. 『パラサイト・シングルの時代』. ちくま新書.

Abstract

Future of the youth, youth in the futur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This study endeavors to critically analyze the youth problem in Korea by investigating the social conditions that influence their lives and thoughts. The research focuses the interplay between the societal structures that regulate the lives of young people and the roles and perceptions that the youth hold in the society in order to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youth experience in Korea.

This study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current situation surrounding the youth of Korea from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We tried to identify the social conditions that define the lives of today's youth in Korea,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lives. In other words, we attempted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system that regulate the life of young people on one hand and the roles and perceptions of young people on the other hand.

Chapter 1 places the context in which the current situation of young people emerged in the context of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modern life course. Chapter 2 traces how the concept of youth was formed and changed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Chapter 3 captures the structure of discourse on young people since the 2000s. In Korean society, the concept of youth has changed from a 'social' phenomenon to a 'cultural' phenomenon, to an 'economic' phenomenon. Chapter 4 checks how general changes in the modern life course are revealed in the context of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are also confirmed in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ucture of youth employment (chapter 5). Korea is an example of 'jobless

growth'. This transitional context seems to be reflected in the role structure and perception structure of young people. Chapter 6 compares the roles and thoughts of young people in 7 countrie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Chapter 7 historically examines the flow of the young population movement. Although the total population movement decreased, the movement of young people from the region to the metropolitan area increased. In Chapters 8 and 9, aspects of subjective perception, such as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and happiness among young people, were reviewed. Chapter 10 reviews policy on young people. Many of the policies focus on employment. The case analysis in Chapter 11 shows that policies need to consider the wider contex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to critically re-evaluate the way in which Korean society perceives and understands youth. Traditionally, the societal focus on youth has been centered on the notions of 'preparing young people for employment and marriage', which is based on the assumptions of those who view these events as natural life experiences. This perspective is instrumental in nature and may not be adequate in light of the current societal changes.

The implication of this recognition is that adolescence should no longer be viewed as a transitional stage, an immature stage, but rather as a life stage that is worthy of recognition in its own right. This shift in perspective calls for a move away from the notion of "doing something for young people" and instead, providing them with channels and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ng, voicing and decision-making.

전환기 청년의 미래

인 쇄	2022년 12월 26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현 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명문인쇄공사(02-2079-9200)

©2022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0858-84-7 (93300)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